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05-13-01
지역균형발전을 통한 도농간 소득격차 완화방안(2차연도)

농촌지역 노동시장과 고용기회: 통계분석과 사례분석으로부터 얻는 시사점

이승렬·박영구·최규성·윤미례

목 차

요 약	i
I. 서 론	1
1. 연구의 목적과 과제	1
2. 연구 방법	3
II. 농촌지역 노동시장의 고용기회	6
1. 농촌지역간 고용기회의 차이	6
2. 지역별 고용기회의 결정	40
III. 국가산업단지 사례조사를 통해 본 농촌지역 고용 :	
충청남도 당진군	46
1. 머리말	46
2. 산업의 변동	54
3. 고용과 인구의 변동	83
4. 맺음말	97
IV. 농공단지 사례조사를 통해 본 농촌지역 고용 :	
경상남도 함안군	100
1. 사례대상, 사례대상지 선택과 특성	100
2. 사전조사	105
3. 「군북농공단지」와 「산인농공단지」의 최근 변화와 동향	116
4. 사례조사 방법과 처리 방법	120
5. 대표이사와의 인터뷰 분석	123

6. 설문지 분석	130
7. 함안 사례조사 결론: 요약과 정책시사점	178
V. 결론 : 농촌지역의 고용기회 확대를 위한 제언	187
참고문헌	191
부록 : 종사자 설문지	193
대표이사 설문지	197

표 목 차

<표 II- 1> 지역별 종사자수(1999~2003)	6
<표 II- 2> 지역별 종사자수 변화(2000~2003)	7
<표 II- 3> 지역별·사업체규모별 종사자수 구성(2003)	7
<표 II- 4> 지역별·업종별 종사자수 구성(2003)	8
<표 II- 5> 최근 3년간 종사자수별 지역 분류	9
<표 II- 6> 최근 2년간 종사자수 변화율별 지역 분류	10
<표 II- 7> 300인 이상 종사자 비율 순위별 지역 분류	13
<표 II- 8> 제조업 비중 순위	14
<표 II- 9> 종사자수 증가율 상위 35위권의 종사자수 분류	15
<표 II-10> 종사자수 증가율 하위 35위권의 종사자수 분류	16
<표 II-11> 지역별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추이 (2001년 말~2004년 말)	19
<표 II-12> 지역별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변화율 추이 (2001년 말~2004년 말)	19
<표 II-13> 지역별·사업체규모별 피보험자 구성 (2004년 12월 31일 현재)	19
<표 II-14> 지역별·업종별 피보험자 구성 (2004년 12월 31일 현재)	20
<표 II-15> 최근 4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수별 지역 분류	21
<표 II-16> 고용보험 피보험자 제조업 비중별 지역 분류	23
<표 II-17> 지역별 일자리 창출·소멸·순고용변화 추이 (2002~2004)	24
<표 II-18> 최근 3년간 업종별 평균 일자리 창출(2002~2004)	26
<표 II-19> 최근 3년간 업종별 평균 일자리 소멸(2002~2004)	26
<표 II-20> 최근 3년간 업종별 평균 순고용변화(2002~2004)	27

<표 II-21> 3년 평균 일자리 창출수별 지역 분류	28
<표 II-22> 3년 평균 일자리 소멸별 지역 분류	30
<표 II-23> 3년 평균 순고용변화별 지역 분류	30
<표 II-24> 3년 평균 일자리 창출률별 지역 분류	33
<표 II-25> 3년 평균 일자리 소멸률별 지역 분류	33
<표 II-26> 3년 평균 순고용변화율별 지역 분류	35
<표 II-27> 지역별 특성과 일자리 창출률·일자리 소멸률· 순고용변화율의 상관관계	37
<표 II-28> 순고용증가율 상위권(1~35위) 특성	38
<표 II-29> 순고용증가율 하위권(106~140위) 특성	39
<표 II-30> 인구와 고용의 상호영향성 분석 결과(2003)	43
<표 III- 1> 아산항과 인천항의 시설 능력 비교 (2002년 말)	56
<표 III- 2> 당진군내 국가산업단지의 주요 내역	57
<표 III- 3> INI스틸 당진 공장의 연산 능력	63
<표 III- 4> 현대하이스코의 생산 품목과 연산 능력	63
<표 III- 5> INI스틸과 현대하이스코의 투자 계획(2005~2008)	64
<표 III- 6> 동부제강 아산만 공장의 생산 품목과 연산 능력	65
<표 III- 7> 당진군내 농공단지 현황	66
<표 III- 8> 고대/부곡지구내 가동 중 사업체의 업종별 분포	75
<표 III- 9> 고대/부곡지구 대규모(종업원수 40인 이상) 사업체	76
<표 III-10> 아산 국가산업단지내 가동 중 사업체의 업종별 분포	77
<표 III-11> 당진군 농공단지내 가동 중 사업체의 업종별 분포	78
<표 III-12> 당진군 농공단지의 대규모(40인 이상) 사업체	79
<표 III-13> 당진군 2005년 1/4분기 유치 사업체 내역	80
<표 III-14> 산업별 취업자수(2000년 말)	84
<표 IV- 1> 함안군 읍면별 인구(2005년 7월 31일 현재)	104
<표 IV- 2> 기업체 규모별 현황(2003~2004년 말 현재)	105
<표 IV- 3> 함안군 농공단지 현황(2005년 6월 30일 현재)	106

<표 IV- 4> 함안군 농공단지 고용 현황(2005년 6월 30일 현재)	109
<표 IV- 5> 단지별 고용관련 변수 1	110
<표 IV- 6> 단지별 고용관련 변수 2	111
<표 IV- 7> 사례조사 대상 농공단지 개요	115
<표 IV- 8> 최근 3년 「군북농공단지」와 「산인농공단지」 현황 (매년 6월 말 현재)	116
<표 IV- 9> 기숙사 수용비율과 가동률	117
<표 IV-10> 업종	133
<표 IV-11> 주관매시장	134
<표 IV-12> 입주 경과 연한	134
<표 IV-13> 입주 이유	135
<표 IV-14> 향후 가능한 노동자는 누구를 고용하겠는가	137
<표 IV-15> 가능하면 현지인을 고용한다고 한 이유	138
<표 IV-16> 가능하면 한국인 비농촌 외지인을 고용하는 이유	139
<표 IV-17> 향후 가능하면 외국인을 고용하는 이유	140
<표 IV-18> 입주기업을 늘리기 위한 정부 역할	141
<표 IV-19> 농촌 현지인 고용이 더 주는 이유	143
<표 IV-20> 현지인 고용을 늘리기 위한 필요한 정부정책	144
<표 IV-21> 농공단지에 사람이 모자라는 이유	145
<표 IV-22> 앞으로 3년 이내에 이 농공단지를 떠날 계획이 있는 기업	146
<표 IV-23> 3년 이내에 떠나려고 하는 이유 (떠난다고 응답한 사람 중)	146
<표 IV-24> 농공단지를 안 떠나겠다는 이유 (안 떠난다는 기업 중에서)	147
<표 IV-25> 지가가 공단 입주에 미친 영향	148
<표 IV-26> 외국인 근로자 비율	148
<표 IV-27> 성별 비율	150
<표 IV-28> 연령별 비율	150
<표 IV-29> 이전 직업	151

<표 IV-30> 현재 주거형태	152
<표 IV-31> 학력 비율	153
<표 IV-32> 결혼 여부	153
<표 IV-33> 과거 거주지	154
<표 IV-34> 현 거주지	154
<표 IV-35> 농촌 농공단지에 있는 이유	156
<표 IV-36> 1년 이내 농공단지를 떠날 사람	157
<표 IV-37> 1년 이내 떠나는 사람 : 성별 구성	158
<표 IV-38> 1년 이내 떠나는 사람 : 성별·연령별 구성	159
<표 IV-39> 1년 이내 떠나는 이유(떠나는 사람 중)	160
<표 IV-40> 안 떠나는 이유(안 떠나는 사람 중)	162
<표 IV-41> 가족이 함안군에 있는 사람 중 떠날 의사	164
<표 IV-42> 1년 이내 떠나겠다고 하는 사람의 학력	164
<표 IV-43> 학력별 떠나겠다는 의지 여부	165
<표 IV-44> 정부가 무엇을 도와주면 농공단지에 남겠는가	167
<표 IV-45> 주거 형태	168
<표 IV-46> 농공단지에 있는 이유(현지인)	169
<표 IV-47> 1년 이내 농공단지를 떠날 의사	171
<표 IV-48> 떠나고자 하는 이유(떠나겠다고 답변한 사람만 응답) ...	172
<표 IV-49> 안 떠나는 이유(현지인 중 안 떠나는 사람만 응답)	175
<표 IV-50> 정부가 무엇을 도와주면 농공단지에 남겠는가	177

그림 목차

[그림 II- 1] 최근 2년간의 종사자수 변화율과 사업체수 변화율	11
[그림 II- 2] 일자리 창출과 일자리 소멸의 상관도	29
[그림 II- 3] 3년 평균 일자리 창출과 순고용변화의 상관도	31
[그림 II- 4] 3년 평균 일자리 소멸과 순고용변화의 상관도	31
[그림 II- 5] 일자리 창출률과 일자리 소멸률의 상관도	34
[그림 II- 6] 일자리 창출률과 순고용변화율의 상관도	36
[그림 II- 7] 일자리 소멸률과 순고용변화율의 상관도	36
[그림 III- 1] ‘지역발전 모형’의 도해	50
[그림 III- 2] 당진군 읍면의 위치	55
[그림 III- 3] 아산국가산업단지 고대지구의 사업체 배치도	59
[그림 III- 4] 석문국가산업단지의 계획도	60
[그림 III- 5] IN스틸 당진 공장과 현대하이스코 당진 공장의 전경 ·	61
[그림 III- 6] 동부제강 아산만 공장의 전경	65
[그림 III- 7] 사업체수 변동 추이(1999~2003)	69
[그림 III- 8] 산업별 사업체수 변동 추이: 1999=100(1999~2003)	70
[그림 III- 9] 광제조업의 인당 연간 출하액 추이(1999~2003)	71
[그림 III-10] 광제조업의 인당 연간 부가가치액 추이(1999~2003)	72
[그림 III-11] 광제조업의 인당 연간 급여액 추이(1999~2003)	72
[그림 III-12] 광제조업 성과의 당진/충남 비율 변동 추이(1999~2003) ..	73
[그림 III-13] 산업별 취업자 구성(2000년 말)	84
[그림 III-14] 종사자수 변동 추이(1999~2003)	86
[그림 III-15] 산업별 종사자수 변동 추이: 1999=100(1999~2003)	86
[그림 III-16] 주민등록인구 변동 추이: 1994=100(1994~2004)	90
[그림 III-17] 주간 인구 지수의 변동: 상주 인구=100(1995~2000)	91

[그림 Ⅲ-18] 주간 인구 중 유입인구 비율 변동(1995~2000)	92
[그림 Ⅲ-19] 상주 인구 중 유출인구 비율 변동(1995~2000)	92
[그림 Ⅲ-20] 주간 인구 중 통근학 유입인구 비율 변동(1995~2000)	93
[그림 Ⅲ-21] 상주 인구 중 통근학 유출인구 비율 변동(1995~2000)	94
[그림 Ⅲ-22] 세대수의 변동 추이: 1994=100(1994~2004)	95
[그림 Ⅳ-1] 함안군 기업체 변화(1994~2004)	105

요약

이 연구는 고용기회의 창출이 도농간 소득격차의 완화와 해소에 중요한 결정요인인 것으로 이해하는 가운데 농촌지역이 도시지역과 비교할 때 고용기회의 창출과 소멸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실태를 파악하였다. 그리고 미시적 차원에서 충남 당진군과 경남 함안군의 사례를 조사하여 앞으로 필요한 정책방향을 모색하였다.

1. 농촌지역 노동시장의 고용기회

통계청의 ‘시·군·구별 주요 통계자료’에 따르면, 통합시를 포함한 농촌지역의 사업체에서 일하고 있는 종사자수는 2003년의 경우, 4,823천 명으로 종사자수 전체의 33.0%를 차지하고 있다. 농촌지역 종사자의 특징이라고 하면,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사업체의 종사자가 많다는 것이며, 업종별 구성에서 보이는 특징으로서 농촌지역에 제조업 종사자의 비중이 도시지역보다 높게 나타난다는 것을 들 수 있다.

최근 3년간(2001~2003)의 평균 종사자수를 보면, 경남 창원시, 경북 포항시, 충남 천안시, 경북 구미시, 경기 용인시 등 대체로 공단이 있는 지역에 종사자수가 많으며, 반대로 평균 종사자수가 적은 것으로 나타나는 지역으로서는 인천 옹진군, 경북 울릉군, 경북 영양군, 충남 계룡시, 강원 양구군 등 주로 해안, 도서, 산간 지역이 해당한다.

고용보험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하여 지역별 일자리 창출과 소멸을 추계하여 보면, 2004년 12월 31일 현재 농촌지역의 사업체에서 일하고 있는 고용보험 피보험자는 2,209천 명으로 피보험자 전체의 30.2%를 차지하고 있다. 그리고 최근 4년간(2001~2004년 말)의 고용보험 피보험자수를 보면, 대체로 3만 명 이상의 지역은 모두 통합시이며, 1만 명

이상의 지역은 충북 청원군, 경기 양주시, 충북 음성군 등 대부분 공단 지대이거나 인근에 대도시가 있는 경우이다.

농촌지역의 경우, 2002~2004년 일자리 창출이 각각 307천 명, 316천 명, 336천 명, 일자리 소멸이 각각 242천 명, 236천 명, 248천 명으로, 순고용변화가 각각 65천 명, 80천 명, 87천 명이었다. 도시지역과 농촌 지역을 비교하면, 일자리 창출에서 농촌지역이 29.5~31.2%를 차지하고, 일자리 소멸에서 28.4~29.7%를 차지하여 순고용변화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34.5~41.5%를 보이고 있다. 말하자면 일자리 창출보다 일자리 소멸이 상대적으로 낮게 발생함으로써 농촌지역이 순고용 증가에서 상대적으로 기여도가 높다고 할 수 있다.

최근 3년간(2002~2004) 업종별 평균 일자리 창출을 보면, 제조업 비중이 높은 지역인 경우에 일자리 창출과 일자리 소멸이 높으면서 순고용도 변화, 특히 증가할 가능성이 높았다. 참고로 3년 평균 일자리 창출수와 일자리 소멸수의 상관계수는 0.97로 일자리 창출과 일자리 소멸 사이에는 높은 상관관계가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3년 평균 일자리 창출과 순고용변화의 상관계수는 0.86이며, 3년 평균 일자리 소멸과 순고용변화의 상관관계는 0.71이었다. 아울러 일자리수를 가중치로 하여 구한 3년 평균 일자리 창출률과 순고용변화율의 상관계수는 0.72로 상당히 높으나 3년 평균 일자리 소멸률과 순고용변화율의 상관계수는 -0.37로 낮은 편이다. 이 결과에서 알 수 있는 것은 순고용의 증가가 일자리 창출과 관계가 있다는 사실이다.

지역별 일자리 창출률, 일자리 소멸률, 순고용변화율은 지역별 특성과 어떠한 관련이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각각에 대한 상관계수를 구하였으나 지역별 특성과는 상관성이 상당히 낮았다. 이는 지역별 특성을 설명변수로 하고, 일자리 창출률, 일자리 소멸률, 순고용변화율을 각각 종속변수로 한 회귀분석에서도 계수추정치의 계수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Carlino and Mills(1987)의 분석 모형에 따라 한국 농촌지역에서

“사람이 일을 따른다(people follow jobs)”라는 가설과 “일이 사람을 따른다(jobs follow people)”라는 가설 가운데 어떠한 가설이 타당한지를 검증하여 보았다. 이를 위하여 2003년의 인구와 종사자수를 동시적으로 결정되는 내생변수로 하는 동시결정방정식을 가정하였다. 설명변수로서는 인근지역 인구, 중졸 이하 학력자 비중(2000년)과 전문대졸 이상 학력자 비중(2000년), 전업농가비중, 300인 이상 사업체 비중, 인구 밀도(2003년), 1인당 주민세 부담액(2002년), 1인당 지방세 부담액(2003년)을 포함하였다. 그리고 고용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서 인구와 전년도 고용 이외에 인근지역인구, 중졸 이하 학력자 비중과 전문대졸 이상 학력자 비중, 전업농가 비중과 300인 이상 사업체 비중을 포함하였다. 이 밖에 2002년의 사업체수, 2003년의 사업체수 변화(= 2003년의 사업체수 - 2002년의 사업체수), 고용보험 DB에서 추계한 순고용증가율(2002~2004년의 평균)을 포함하였다.

분석 결과에서 알 수 있었던 사실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인구와 고용 기회는 상호 영향을 미친다. 둘째, 인근지역의 상황(인구를 대리변수로 한 경우)이 고용기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셋째, 지역의 인적자본 축적 수준, 특히 고학력자가 높을수록 고용기회가 늘어난다. 넷째, 300인 이상의 대규모 사업체가 입주하는 경우도 고용기회에 긍정적이다. 다섯째, 근로자의 증가가 지역 전체 취업자 증가와 연결된다.

2. 국가산업단지 사례조사를 통해 본 농촌지역 고용 : 충청남도 당진군

일반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지역발전 모형’은 제조업의 발전에서 시작해서 서비스업의 발전을 도모함으로써 지역경제를 발전시키는 전략이다. 이때 제조업이 먼저 발전하기 위해서는 선도적 역할을 할 대기업이 들어오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소규모 기업을 중심으로 한 지역발전 전략도 생각해 볼 수 있지만 현실성이 약하다. 지역경제에 뿌

리를 내린 소규모 기업의 발전은 소비 기반과 인구가 늘어나는 등 어느 정도 지역경제가 발전한 다음에야 가능한 일이기 때문이다.

지역경제의 기반이 약한 상태에서는 산업 입지를 조성해 생산 기반을 확대하는 데서부터 지역발전 전략을 시작할 수밖에 없다. 생산 기반이 늘어남에 따라 고용이 늘어나면 잠재인구가 늘어남에 따라 소비 기반이 늘어날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진다. 이 단계에서 산업 입지 조성 노력과 함께 문화시설 조성 노력이 정책적으로 뒤따라야 산업의 수요와 공급 조건이 개선되는 선순환 과정이 일어난다. 교육 여건이 개선되고 인구가 늘면서 기업의 인력 조달이 쉬워질 것이고, 인구가 늘고 소비 여건이 개선되면서 기업의 시장 접근이 쉬워질 것이다.

최근 10년간 당진군의 산업, 고용, 인구 변화에 대한 경험은 이 사례 연구의 ‘지역발전 모형’이 상정한 가설들에 부합한다. 최근 10년간 당진군의 지역경제는 한보철강이라는 지역 대표 기업과 함께 부침했다. 일반적으로 기업이 한 지역에 들어갈 때 중요하게 고려하는 요소는 산업 입지며, 지역경제의 전반적 수준은 부차적 요소다.

이 연구의 ‘지역발전 모형’에 따라 당진군의 지역발전 전략을 평가한다면, 산업 입지를 조성해 생산 기반을 확대하는 데까지는 갔지만, 이후 문화시설을 조성해 소비 기반을 확대하는 데까지는 가지 못했다고 할 수 있다. 이제 당진군은 INI스틸과 현대하이스코가 한보철강을 인수하면서 다시 지역경제가 활기를 되찾아가고 있다. 이 시점에서 소비 기반 확대 전략이 제대로 진행된다면 당진군의 지역경제는 크게 발전할 수 있을 것이다. 당진군에서는 이미 소비 기반을 확대해야 한다는 지역 공감대는 생기고 있는 듯하다. 최근 당진군이 시 승격을 추진하고 있는 것, 군내 대학이 산학협력 프로그램을 위해 대규모 펀드를 조성한 것, 아파트 등 지역 건설경기가 되살아나고 있는 것 등은 모두 이런 맥락에서 볼 수 있다.

3. 농공단지 사례조사를 통해 본 농촌지역 고용 : 경상남도 함안군

전체 농공단지 사례조사를 통해 농촌 현지고용을 늘리려면 다음의 4가지 전략 및 정책이 필요함이 확인된다. 첫째, 업종에서 높은 수준의 기술보다 평균화된 기술 혹은 자동화된 기술을 사용하는 섬유·의류 등의 공업을 농촌에 유치하는 것이 좋다. 둘째, 내수시장보다 발전도상국의 해외시장을 겨냥한 생산품목 공업이 좋다. 셋째, 도시와 바로 인접해 있지 않고 어느 정도 떨어져 있는 농촌지역으로 기업을 지가, 임금, 조세 등 유인으로 유도하는 것이 좋다. 넷째, 지역자치단체가 전략업종을 선택한 후 부지조성 사업비 자부담을 대폭 내려 정책적으로 유도하면서 현지고용을 중용하는 것이 효과를 가진다.

대표이사와의 인터뷰에서 공통적으로 지적된 인력 문제는 구인난과 기술난, 높은 피고용자 이동률이었다. 따라서 우선 농촌 공업지역 기술자 병역특례를 다시 늘려야 한다. 이를 통해 기업수지가 개선되고 고용효과가 증가하게 될 것이다.

노동공급자(피고용자) 조사를 통해 다음의 사실이 확인되었다. 첫째, 농촌 농공단지는 유휴노동력을 흡수하는 효과만 있는 것이 아니라 농촌 역류와 직업이동 면에서 효과가 크다. 둘째, 농촌지역일수록 고용을 늘리는 방법 중의 하나는 숙소 문제를 해결해 주어야 한다. 셋째, 단기적으로는 도시에서 먼 농촌지역일수록 자동화·평균화된 기술 사용 공업업종을 배치해야 하고 장기적으로는 이런 지역일수록 기술교육 등 평생교육의 필요성이 더욱 크므로 이를 강화해야 한다. 넷째, 현지 고용 효과 측면에서도, 농촌으로의 역류 이주 효과 면에서 보더라도 농공단지 위치가 도시와 먼 경우 효과가 높았고 도시와 가까운 경우 효과가 낮다. 다섯째, 도시에 가까울수록 피고용인들이 회사 요인 등 2차적 관계, 경제적 이익을 고려하고 움직이는 데 반해, 농촌지역화할수록 고향, 부모가족 등 1차적 관계 그리고 비경제적 요소가 더 중시되

고 있다. 여섯째, 장기적인 안정성에서 볼 때 도시와 가까운 공장보다 오히려 도시에서 먼 농촌지역이 훨씬 더 기업에도 이익되는 효과가 있다. 일곱째, ‘그냥 농촌이기 때문에 싫어서 떠난다’는 사람은 사실상 거의 없어 경제적으로 적절한 보장이 이루어지고 경제외적인 면에서도 만족도를 높일 수 있다면 농촌에서도 노동공급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여덟째, 고학력자의 농촌지역 이탈은 모든 지역에서 심각하며 지역에서 고학력 인적자본에 대한 유인책이 필요하다. 아홉째, 농촌지역의 임금과 교육과 교통시설, 그리고 이어 기술교육이 농촌잔류, 이탈의 주요 이유가 되며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 한편 피고용자 중 현지인(함안군 거주자) 피고용자 조사 결과는 단순 농가소득 보존이나 보상보다 직업 임금보조가 효율성을 높일 수 있으며 향후 개방사회에 대비하는 보다 선진적 방법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4. 농촌지역 고용기회 확대를 위한 제언

이 연구를 진행하면서 가장 힘들었던 것은 일자리 창출과 소멸이라는 재배분(reallocation) 기능이 뛰어나거나 순고용이 증가하는 등 양호한 지역을 어떤 공통된 특징으로 묶기가 어렵다는 사실이었다. 게다가 일자리 창출과 소멸 그리고 순고용변화를 결정하는 지역적 특성을 추출하기는 불가능함을 확인하였다. 이는 일자리 창출률과 소멸률 그리고 순고용변화를 종속변수로 하고, 지역적 특성을 설명변수로 한 회귀분석에서 유효한 결과를 얻지 못하였다는 사실과 사례조사 대상인 경남 함안군과 충남 당진군의 차이 그리고 경남 함안군 내에서도 군북농공단지와 산인농공단지의 차이에서 여실히 드러나고 있다. 이상의 사실은 지역별로 적합한 전략을 독립적으로 선택하여야 함을 간접적으로 증명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한계를 인정하는 가운데 이 연구의 분석 결과로부터 얻을 수 있는 몇 가지 시사점을 정리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고용기회

의 확보가 농촌지역 개발의 중요한 전제조건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다음으로 현재 농촌지역의 저학력자와 고령 여성 노동력에 대한 활용을 중단기적으로 검토하여야 할 것이다. 아울러 농촌의 유희노동력을 활용하는 방안으로만 기업의 농촌지역 진입을 도모하는 정책이 아니라 도시의 유희노동력을 연계하는 것도 생각하여야 할 것이다.

연구 결과에서 확인된 사실은 기존의 연구에서 낙후지역으로 분류된 농촌지역은 제조업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지 않으며, 아울러 대규모 사업체가 이들 지역에 기반을 두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이를 역으로 해석한다면, 농촌지역 개발에는 이 두 가지 사실이 전제조건이 될 수 있다는 점이다. 그리고 대규모 사업체가 역내에 기반을 두도록 하는 것이 고용기회 창출과 관련하여 중요하다. 특히 이는 중소기업의 사업체와 연계를 가지도록 하여 생산네트워크를 형성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의 협조가 수반되어야 한다.

그렇지만 이러한 일반적 요건이 충족된다고 해서 개별 농촌지역 개발이 바로 성공으로 연결되는 것은 아니다. 다시 말하면, 대규모 사업체와 생산네트워크를 형성하는 것은 필요조건이지 충분조건이라 하기는 어렵다. 이 생산네트워크란 지역의 중소기업이 서로 위험을 분산하도록 형성되어야 하고, 이 네트워크가 대규모 사업체와 상호 연결되는 방식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I. 서론

1. 연구의 목적과 과제

최근 지역간 균형발전이 주요한 사회적 논제가 되고 있다. 단기간에 걸쳐 급속히 진행되었던 경제성장이 수도권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면서 수도권으로 인구가 유입되고 부(富)가 집중되는 현상을 낳았다. 아울러 수도권 이 사회·경제·문화 등 모든 면에서 발달하면서 지역간 격차가 심화되었던 것이다. 하지만 수도권과 지방 사이에 존재하는 불균형발전과 격차 심화라는 문제에 못지않게 심각한 것이 도농간 불균형발전이다. 달리 말한다면, 도농간 불균형발전이야말로 지역 불균형발전 문제의 핵심이며, 따라서 지역간 균형발전을 논의하는 경우에 도농간 불균형발전이라는 문제를 포함하여 다루어야 할 주제임은 명확하다.

이와 같은 한국 지역간 불균형의 전형적인 사례인 도농간 소득격차는 1990년대 중반 이후에 확대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도농간 소득격차의 확대로 농촌 노동력이 지속적으로 도시로 이동함으로써 농촌이 주거지역으로서 최소한의 기반을 상실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이는 국토의 균형발전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바람직하지 않은 결과이며, 따라서 도농간 소득격차의 해소로 농촌의 인구 유출을 억제하고, 자립이 가능한 기반을 농촌이 갖추도록 함으로써 지역간 불균형발전을 완화하여야 한다.

도농간 소득격차에 주목하여 격차의 실태를 밝히고 원인을 분석하여 정책대안을 모색한 이동필 외(2004)는 도농간 소득격차와 발전격차를 해소하는 몇 가지 정책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이 가운데 한 가지가 “농촌지역에서도 농업 이외의 다양한 취업이나 사업에 참여함으로써 농외소득을 높일 수 있는 기회와 능력을 배양하는 것”이다. 여기에서 말하는 ‘농외소득을 높일 수 있는 기회’란 한 마디로 고용기회(employment opportunities) 일 것이다. 이동필 외(2004)에서도 언급하고 있듯이 외국의 사례에서 보

2 농촌지역 노동시장과 고용기회 : 통계분석과 사례분석으로부터 얻는 시사점

면, 고용기회가 도농간 소득격차를 완화하는 데 공헌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이 연구는 농촌지역의 고용기회, 곧 일자리가 어떻게 창출(creation)되고 소멸(destruction)되는지 그리고 일자리의 창출과 소멸이 반복되는 가운데 순고용(net employment)은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실태를 밝히는 것을 주요한 목적으로 한다. 일자리는 노동시장에서 수요자와 공급자가 만나 결정하는 만큼 농촌지역에 형성된 노동시장의 수요자와 공급자가 어떠한 특성을 지니고 있는가를 먼저 이해하여야 한다. 이 연구는 농촌지역 노동시장의 특성에 대한 고찰로부터 시작하게 될 것이다.

농촌지역 노동시장의 특성에 대한 이해에 기초하여 농촌지역에서 고용기회, 곧 일자리는 어떻게 창출되고 소멸되는지 그리고 일자리의 변화는 어떠한지를 지역별로 추계한다. 여기에서는 통계청의 ‘시군구별 통계자료’와 임금근로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고용보험 데이터베이스」 원자료(raw data)를 이용하여 일자리의 동태성을 관찰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지역별 고용기회의 동태적 변화가 지역적 특성과 관련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검증하기로 한다.

다음으로 지역별 고용기회의 차이를 결정하는 요인으로서 어떠한 것이 있는지 이들의 영향력은 어느 정도인지를 분석하기 위하여 인구와 고용기회의 동시적 결정 모형에 기초한 통계분석을 시도하기로 한다. 이 결과에 기초하여 농촌지역의 고용기회와 관련된 거시적 특성을 조명하게 될 것이다.

아울러 전국 범위의 통계자료에 기초한 분석으로부터 얻는 결과는 구체적인 개별 사례에서도 확인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이 연구는 두 농촌지역(경상남도 함안군과 충청남도 당진군)을 대상으로 하는 사례분석도 동시에 실시하기로 한다. 이 사례분석은 단순한 실질적 사례검증만이 아니라 거시적 차원의 접근방법에 대한 미시적 차원의 보완이라는 역할도 해줄 것이다. 다시 말해서 사례조사는 전국 범위의 통계자료에서 규명되지 않는 부분이나 설명될 수 없는 부분을 개별 사례의 구체적인 사실로부터 새롭게 해석할 수 있게 할 것이다.

2. 연구 방법

농촌지역 노동시장의 특성을 밝히고, 지역별 고용기회의 창출과 소멸 그리고 고용기회의 변화를 추계하고자 하는 이 연구는 접근방법으로서 통계적 분석과 사례분석을 병행하기로 한다. 이미 언급하였듯이 거시적 접근과 미시적 접근을 동시에 사용하는 것이기도 하다.

통계적 분석방법의 경우, 고용기회의 창출과 소멸에 대해서는 기존의 시군구별 통계자료와 고용보험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할 예정이다. 이로부터 고용기회의 저장(stock)과 유량(flow)을 동시에 추계할 수 있게 된다. 이 작업에서는 주로 기술적 통계(descriptive statistics)를 이용한 분석이 이루어질 것이다.

그리고 농촌지역별 고용기회의 결정요인을 분석하는 데는 인구와 고용기회를 내생변수(endogenous variable)로 하는 연립방정식(simultaneous equations)을 이용하기로 한다. 여기에 포함되는 설명변수는 주로 인구와 고용기회를 결정하는 지역적 특성이 포함될 것이다.

지역사례 연구와 관련하여 이 연구에서는 두 지역을 사례분석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경상남도 함안군과 충청남도 당진군이다.¹⁾ 경남 함안군과 충남 당진군의 경우, 중요한 차이점이 한 가지 존재한다고 볼 수 있는데 바로 충남 당진군의 경우에 국가산업단지가 있다는 사실이다. 물론 경남 함안군에도 마찬가지로 칠산국가산업단지가 있다. 하지만 충남 당진군의 국가산업단지에 최근 INI 스틸과 현대하이스코가 입주할 하게 됨으로써 지역경제에서 국가산업단지가 차지하는 위치와 역할은 더욱 커지게 되었다.

이와 같은 차이점을 고려할 때 두 지역에 공통되는 분석 대상을 결정한다는 것은 그다지 의미가 없다고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국가산업단지를

1) 참고로 이 연구는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주관하여 경제사회연구회 협동연구 과제로서 수행되었으며, 협동연구에서 선정한 사례분석 대상지역에 경남 함안군과 충남 당진군이 포함되었다. 협동연구 결과는 박시현 외(2005)로 정리되었다. 경남 함안군과 충남 당진군을 이 연구의 사례분석 대상지역으로 한 것은 연구진의 접근가능성이 비교적 높은 지역이었다는 점을 고려하였으나 두 지역이 각각 농공단지과 국가산업단지로서 비교적 성공적이라는 평가를 받는다는 점도 고려하였기 때문이다.

4 농촌지역 노동시장과 고용기회 : 통계분석과 사례분석으로부터 얻는 시사점

중심으로 분석하는 경우에 경남 함안군은 칠산국가산업단지를 분석 대상으로 하여야 한다. 그러나 이는 경남 함안군의 특성을 충분히 나타내기는 어렵다. 이와 달리 충남 당진군의 경우에 농공단지를 분석 대상으로 하게 되면, 충남 당진군의 농공단지가 분석에 포함되나 이는 충남 당진군의 고용기회를 올바르게 반영한다고 할 수 없다. 결국, 두 지역의 고용기회를 객관적으로 나타내는 분석 대상을 중심으로 논의하여야 함은 재론의 여지가 없을 것이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경남 함안군의 경우는 농공단지를 중심으로 사례조사를 하며, 충남 당진군의 경우는 국가산업단지를 중심으로 진행하기로 한다.

지역별 분석 대상이 다르다고 할 때, 동일한 기준이나 연구방법론으로 경남 함안군과 충남 당진군을 사례분석하기에는 적지 않은 문제점이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²⁾ 고용주와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여 설문조사를 하고, 이 조사 결과를 분석하는 방법은 중소기업이 많은 경남 함안군 농공단지의 경우에 가능하다. 비교적 고용주와 근로자가 많지 않고, 업종 등 다양한 특성을 가진 기업이 존재하는 만큼 조사 대상의 분포도 다양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대기업이 있는 충남 당진군 국가산업단지는 대기업의 영향력을 감안할 때, 단순한 기업대상 설문조사는 결과에 편의(bias)가 개입될 여지가 적지 않다. 게다가 경남 함안군과는 달리 충남 당진군은 계속 제조업 부문이 확장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단순히 현장의 기업이나 근로자를 대상으로 조사하는 방법으로는 변화하는 지역의 특성을 올바르게 포착하기에 한계가 있다. 이에 따라 충남 당진군의 경우는 경남 함안군과는 달리 주로 현지방문 면접조사를 위주로 하였다. 이러한 지역별 조사방법의 차이에 유념하여야 할 것이다.

두 지역은 각각 농공단지과 국가산업단지로서 성공한 사례로 간주할 수

2) 연구진 내부에서도 동일한 연구방법론의 채택을 둘러싸고 지역별로 상이한 분석틀을 적용하는 것이 옳은지에 대하여 적지 않은 논의가 이루어졌다. 하지만 앞으로 지역관련 연구방법론의 확대를 시도한다는 취지에서 두 사례지역의 분석방법을 달리 하였다. 이 시도가 아직은 생소하여 받아들여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나 앞으로 지역연구에 이와 같은 논의가 활성화되기를 연구진은 기대한다.

있다는 점에서 농공단지와 국가산업단지가 농촌지역의 고용기회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향후의 가능성은 어떠한 것인지 그리고 농촌지역의 고용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어떠한 정책적 대안이 필요할 것인지를 비교, 검토할 수 있다. 하지만 농공단지와 국가산업단지의 절대 비교는 불가능한 만큼 직접적인 비교로부터 어떠한 공통적 시사점을 얻기보다는 지역 조건에 따른 정책시사점을 구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에도 유의할 필요가 있다.

II. 농촌지역 노동시장의 고용기회

1. 농촌지역간 고용기회의 차이

가. 종사자수의 변화

1) 종사자수 변화의 도농간 비교

통계청의 ‘시군구별 주요 통계자료’로부터 지역별 종사자수에 대한 통계를 얻을 수 있다.³⁾ 먼저 <표 II-1>에 따르면, 통합시를 포함한 농촌지역의 사업체에서 일하고 있는 종사자수는 2003년의 경우, 4,823천 명으로 종사자수 전체의 33.0%를 차지하고 있다. 이는 2001년과 2002년에 32.2%로 약간 감소하고 있으나 비중의 큰 변화는 없는 편이다.

<표 II-1> 지역별 종사자수(1999~2003)

(단위: 명, %)

	전체		도시		농촌	
	종사자수	백분율	종사자수	백분율	종사자수	백분율
1999	12,920,289	100.00	8,661,841	67.04	4,258,448	32.96
2000	13,604,274	100.00	9,080,991	66.75	4,523,283	33.25
2001	14,109,641	100.00	9,568,772	67.82	4,540,869	32.18
2002	14,608,322	100.00	9,907,970	67.82	4,700,352	32.18
2003	14,637,560	100.00	9,814,175	67.05	4,823,385	32.95

자료: KOSIS(통계청).

종사자수 변화를 보면(표 II-2 참조), 변화가 일정하지 않은 편이다. 곧 2000년에는 농촌지역의 종사자수 증가율이 상대적으로 높았으나 다음 해인 2001년에는 오히려 도시지역의 종사자수 증가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던

3) 경제활동인구조사는 가구(household)를 대상으로 한 조사이며, 시군구별 통계 자료는 사업체(establishment)를 대상으로 한 조사 결과이다. 이러한 차이를 통계 해석에서 고려하여야 한다.

<표 II-2> 지역별 종사자수 변화(2000~2003)

(단위: %)

	전체	도시	농촌
2000	5.29	4.84	6.22
2001	3.71	5.37	0.39
2002	3.53	3.54	3.51
2003	0.20	-0.95	2.62

자료: KOSIS(통계청).

것이다. 2003년에는 도시지역에서는 종사자수가 1.0% 감소하고 있지만, 농촌지역에서는 2.6% 증가하고 있다.

다음으로 <표 II-3>에서 사업체규모별 종사자 분포를 살펴보면, 분포에서 도시지역과 농촌지역의 차이는 크지 않다고 볼 수 있다. 대체로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사업체의 종사자가 많다는 것이 농촌지역의 특징이라 할 수 있다. 곧 5~9인 규모의 사업체를 제외하고는 100인 미만 규모에 해당하는 사업체의 비중이 도시지역보다 농촌지역이 더 높다. 이와는 반대로 100인 이상 규모의 사업체 비중은 도시지역이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다.⁴⁾

<표 II-3> 지역별·사업체규모별 종사자수 구성(2003)

(단위: 명, %)

	전국	도시	농촌
1~4인	4,836,729 (32.84)	3,221,820 (32.52)	1,614,909 (33.48)
5~9인	1,835,679 (12.46)	1,283,052 (12.95)	552,627 (11.46)
10~19인	1,555,418 (10.56)	1,028,331 (10.38)	527,087 (10.93)
20~49인	1,978,630 (13.43)	1,260,915 (12.73)	717,715 (14.88)
50~99인	1,314,221 (8.92)	880,293 (8.89)	433,928 (9.00)
100~299인	1,412,475 (9.59)	962,439 (9.72)	450,036 (9.33)
300~499인	512,935 (3.48)	368,295 (3.72)	144,640 (3.00)
500~999인	507,949 (3.45)	376,841 (3.80)	131,108 (2.72)
1,000인 이상	775,130 (5.26)	523,795 (5.29)	251,335 (5.21)
전체	14,729,166 (100.00)	9,905,781 (100.00)	4,823,385 (100.00)

자료: KOSIS(통계청).

4) 이 사실은 경제활동인구조사의 임금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통계에서도 확인되고 있다.

8 농촌지역 노동시장과 고용기회 : 통계분석과 사례분석으로부터 얻는 시사점

업종별 구성을 보면(표 II-4 참조), 두드러지는 특징으로서 농촌지역에 제조업 종사자의 비중이 도시지역보다 높게 나타난다는 것이다. 곧 농촌지역의 제조업 종사자 비중은 31.7%로 도시지역의 제조업 종사자 비중 19.0%보다 훨씬 높은 편이다. 도소매업과 사업서비스업에서 도시지역 종사자의 비중이 높다는 사실을 제외하고는 다른 업종에서 구성비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말하자면 도시지역에 비하여 고용기회의 면에서 농촌지역이 제조업에 의존하는 정도가 상대적으로 높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표 II-4> 지역별·업종별 종사자수 구성(2003)

(단위: 명, %)

	전국	도시	농촌
농업 및 임업	27,723 (0.19)	3,823 (0.04)	23,900 (0.50)
어업	7,481 (0.05)	4,295 (0.04)	3,186 (0.07)
광업	20,537 (0.14)	4,378 (0.04)	16,159 (0.34)
제조업	3,411,003 (23.16)	1,884,521 (19.02)	1,526,482 (31.65)
전기·가스·수도사업	62,312 (0.42)	33,420 (0.34)	28,892 (0.60)
건설업	713,775 (4.85)	502,601 (5.07)	211,174 (4.38)
도소매업	2,539,189 (17.24)	1,859,851 (18.78)	679,338 (14.08)
숙박 및 음식점업	1,738,724 (11.80)	1,142,788 (11.54)	595,936 (12.36)
운수업	858,018 (5.83)	635,346 (6.41)	222,672 (4.62)
통신업	139,273 (0.95)	99,769 (1.01)	39,504 (0.82)
금융 및 보험업	600,173 (4.07)	446,125 (4.50)	154,048 (3.19)
부동산 및 임대업	395,880 (2.69)	314,647 (3.18)	81,233 (1.68)
사업 서비스업	926,229 (6.29)	795,183 (8.03)	131,046 (2.72)
공공행정, 국방, 사회	508,032 (3.45)	313,186 (3.16)	194,846 (4.04)
교육서비스업	1,079,364 (7.33)	704,031 (7.11)	375,333 (7.78)
보건 및 사회복지	559,258 (3.80)	391,831 (3.96)	167,427 (3.47)
오락, 문화 및 운동	354,974 (2.41)	251,947 (2.54)	103,027 (2.14)
기타 공공, 사회, 개인	787,221 (5.34)	518,039 (5.23)	269,182 (5.58)
전 체	14,729,166 (100.00)	9,905,781 (100.00)	4,823,385 (100.00)

자료: KOSIS(통계청).

2) 종사자수 변화

가) 평균 종사자수

최근 3년간(2001~2003)의 평균 종사자수를 보면, 경남 창원시, 경북 포항시, 충남 천안시, 경북 구미시, 경기 용인시의 순으로 대체로 공단이 있는 지역과 통합시의 평균 종사자수가 많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표 II-5 참조).

<표 II-5> 최근 3년간 종사자수별 지역 분류

종사자수	지역
100,000명 이상(9)	경남 창원시, 경북 포항시, 충남 천안시, 경북 구미시, 경기 용인시, 경기 화성시, 경남 김해시, 경남 마산시, 경기 평택시
50,000 ~ 99,999명 (23)	경남 진주시, 전북 익산시, 경북 경주시, 전남 여수시, 강원 원주시, 경남 양산시, 전북 군산시, 경남 거제시, 강원 춘천시, 경기 김포시, 경북 경산시, 충남 아산시, 강원 강릉시, 전남 순천시, 경기 남양주시, 경기 이천시, 경기 파주시, 울산 울주군, 경기 포천시, 경기 양주시, 경기 광주시, 충북 충주시, 대구 달성군
20,000 ~ 49,999명 (34)	경북 안동시, 경기 안성시, 전남 광양시, 경북 칠곡군, 충북 제천시, 충남 서산시, 충북 청원군, 충북 음성군, 경북 김천시, 경남 통영시, 충남 논산시, 충남 공주시, 경남 사천시, 경북 영천시, 전북 정읍시, 경북 영주시, 충남 당진군, 부산 기장군, 충남 연기군, 경남 밀양시, 경기 여주군, 충남 보령시, 충북 진천군, 전북 김제시, 전북 남원시, 경북 상주시, 전남 나주시, 전북 완주군, 충남 예산군, 강원 삼척시, 충남 홍성군, 경남 함안군, 전남 영암군, 제주 북제주군
10,000 ~ 19,999명 (43)	충남 부여군, 경북 문경시, 충남 금산군, 전남 해남군, 제주 남제주군, 경기 양평군, 전남 화순군, 전남 영광군, 전남 고흥군, 강원 홍천군, 경북 울진군, 충북 옥천군, 충남 서천군, 경남 창녕군, 경남 거창군, 경남 고성군, 경기 가평군, 강원 정선군, 전남 완도군, 전북 부안군, 충남 태안군, 인천 강화군, 전남 담양군, 경북 의성군, 전남 무안군, 전북 고창군, 충북 영동군, 강원 평창군, 강원 횡성군, 전남 보성군, 경남 합천군, 강원 영월군, 경남 하동군, 충북 단양군, 경기 연천군, 경북 성주군, 경남 남해군, 강원 철원군, 경북 고령군, 전남 장성군, 경북 영덕군, 경북 예천군, 전남 장흥군
10,000명 미만(31)	충북 보은군, 경북 청도군, 강원 양양군, 전남 강진군, 강원 고성군, 충북 괴산군, 경남 함양군, 전남 곡성군, 경북 봉화군, 충남 청양군, 전남 신안군, 충북 증평군, 경남 산청군, 경남 의령군, 경북 청송군, 전남 함평군, 전남 진도군, 전북 임실군, 강원 인제군, 전남 구례군, 전북 무주군, 경북 군위군, 전북 순창군, 전북 진안군, 강원 화천군, 전북 장수군, 강원 양구군, 충남 계룡시, 경북 영양군, 경북 울릉군, 인천 옹진군

자료: KOSIS(통계청).

10 농촌지역 노동시장과 고용기회 : 통계분석과 사례분석으로부터 얻는 시사점

반대로 평균 종사자수가 적은 것으로 나타나는 지역으로서는 인천 옹진군, 경북 울릉군, 경북 영양군, 충남 계룡시, 강원 양구군 등 주로 해안, 도서, 산간 지역이 해당한다. 통합시에 속하지 않는 지역으로서는 경북 칠곡군과 충북 청원군이 각각 평균 종사자수에서 36위와 39위를 기록하는 정도이다.

참고로 39개 낙후 지역 가운데 17개 지역은 10,000~19,999명 지역에 포함되어 10,000~19,999명 지역 전체 43개의 39.5%를 차지하며, 22개 지역은 10,000명 미만 지역에 포함되어 이들 지역 31개의 71.0%를 차지하고 있다. 이로부터 낙후지역인 경우에 종사자수가 적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표 11-6〉 최근 2년간 종사자수 변화율별 지역 분류

변화율	지역
10% 이상 (4)	충남 계룡시, 경기 화성시, 강원 양양군, 인천 옹진군
5% 이상 10% 미만(19)	경남 김해시, 경기 용인시, 충북 청원군, 경기 김포시, 충남 천안시, 경남 통영시, 충남 아산시, 충남 서산시, 경북 구미시, 경남 거제시, 경북 칠곡군, 강원 고성군, 경기 안성시, 경북 봉화군, 전북 순창군, 울산 울주군, 경기 남양주시, 경기 양주시, 강원 정선군
3% 이상 5% 미만(21)	경기 파주시, 강원 강릉시, 강원 평창군, 전남 광양시, 경기 포천시, 전북 무주군, 경북 성주경기 양평군, 경남 양산시, 충북 증평군, 충남 보령시, 제주 북제주군, 전북 고창군, 충남 부여군, 충남 서천군, 강원 원주시, 강원 인제군, 경남 산청군, 부산 기장군, 경기 광주시, 충북 옥천군
1% 이상 3% 미만(37)	경남 의령군, 경기 평택시, 충북 단양군, 경남 하동군, 제주 남제주군, 경남 창원시, 충남 연기군, 전남 보성군, 경기 이천시, 경북 고령군, 충북 음성군, 충북 진천군, 충북 영동군, 강원 춘천시, 충남 화순군, 경북 경산시, 경남 고성군, 전북 김제시, 충북 제천시, 경북 청송군, 대구 달성군, 강원 삼척시, 경남 남해군, 충남 논산시, 경남 진주시, 경북 경주시, 전북 익산시, 경북 안동시, 충남 당진군, 경남 함안군, 경남 거창군, 경기 연천군, 강원 영월군, 경남 함양군, 충남 공주시, 경남 밀양시, 충남 예산군
0% 이상 1% 미만(16)	전북 임실군, 전남 장흥군, 경북 영덕군, 경기 여주군, 경북 울릉군, 전북 장수군, 전남 장성군, 경북 영천시, 경북 포항시, 충남 태안군, 전북 완주군, 경북 영주시, 전남 해남군, 전남 완도군, 강원 횡성군, 전남 강진군
0% 미만(43)	경남 사천시, 전남 나주시, 강원 양구군, 전북 남원시, 전북 군산시, 전북 부안군, 충남 금산군, 전남 함평군, 경북 청도군, 경북 군위군, 전북 정읍시, 전북 진안군, 전남 여수시, 경기 가평군, 전남 순천시, 전남 고흥군, 경북 김천시, 전남 신안군, 강원 홍천군, 충북 충주시, 경북 상주시, 인천 강화군, 경북 의성군, 전남 곡성군, 전남 구례군, 전남 담양군, 경북 울진군, 전남 무안군, 전남 영광군, 충남 홍성군, 경북 영양군, 경남 장영군, 경남 함천군, 경북 문경시, 강원 화천군, 충북 괴산군, 경남 마산시, 전남 진도군, 충남 청양군, 충북 보은군, 전남 영암군, 강원 철원군, 경북 예천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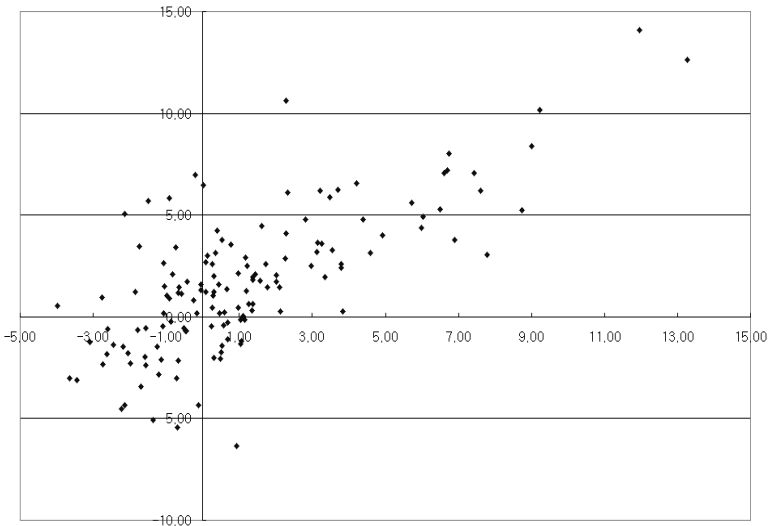
자료 : KOSIS(통계청).

아울러 인구가 많은 지역일수록 종사자수도 많을 가능성이 높다. 이에 따라 최근 3년간의 종사자수와 인구의 상관계수를 구해 보면 0.96이다. 다음으로 종사자수의 변화율을 최근 2년간에 대하여 구해 보았다(표 II-6 참조). 종사자수가 최근 가장 많이 증가한 지역은 충남 계룡시, 경기 화성시, 강원 양구군의 순이다. 그리고 43개 지역은 2년간 평균 변화율이 마이너스로 2년간 종사자수가 오히려 감소한 지역이라 할 수 있다. 대표적으로 경북 예천군과 강원 철원군을 들 수 있다.

참고로 최근 2년간의 종사자수 변화율과 3년간 평균 종사자수의 상관계수는 0.31이며, 최근 2년간의 종사자수 변화율과 인구 1인당 종사자수의 상관계수는 0.42이다. 그리고 최근 2년간의 종사자수 변화율과 최근 2년간의 사업체수 변화율이 보이는 상관계수는 0.73이다. 이 상관관계를 나타내고 있는 것이 [그림 II-1]이다. 말하자면 종사자수의 변화는 사업체수의 변화와 높은 관련성을 보인다는 것이다.

[그림 II-1] 최근 2년간의 종사자수 변화율과 사업체수 변화율

(단위: %)



나) 규모별 종사자수

300명 이상의 사업체 종사자가 해당 지역의 종사자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순서를 보면(표 II-7 참조), 경북 구미시, 경기 이천시, 강원 정선군으로 나타난다. 그리고 전남 신안군 등 31개 지역에서는 300명 이상의 사업체 종사자가 전혀 없다.

낙후지역의 경우, 300명 이상 종사자 비율이 20% 이상 30% 미만인 지역은 강원 정선군과 전남 곡성군 2개 지역이 포함되어 있으며, 5% 이상 10% 미만 지역으로 충남 태안군, 전북 무주군, 경북 군위군이 포함된다. 그리고 1% 이상 5% 미만 지역에 16개 지역, 0% 지역에 18개 지역이 속하고 있다.

참고로 사업체 종사자수와 300인 이상 사업체 종사자의 비율이 어떠한 상관성을 보이는지 알기 위하여 상관계수를 구한 결과 0.56이었다. 그리고 사업체 종사자수와 50인 미만 사업체 종사자의 비율이 보이는 상관계수는 -0.64였다. 따라서 사업체 종사자수가 적은 지역은 소규모 사업체에서 일하는 종사자가 많으며, 사업체 종사자수가 많은 지역은 대규모 사업체 종사자가 많음을 간접적으로 알 수 있다.

다) 업종별 종사자 비중

종사자의 업종별 비중을 살펴보면(표 II-8 참조), 제조업 종사자가 가장 높은 비중을 보이는 지역이 경기 화성시, 충북 진천군, 경기 양주시 등이다. 특히 제조업 종사자가 종사자 전체의 과반수인 지역이 12개 지역이다.

도소매업 종사자 비중이 높은 지역은 충남 홍성군, 전남 영광군, 전남 순천시, 전북 부안군, 경북 안동시를 들 수 있으며, 숙박 및 음식점업 종사자 비중이 높은 지역은 인천 옹진군, 강원 양양군, 강원 고성군, 전북 무주군, 강원 인제군 등을 들 수 있다.

낙후지역의 경우, 전남 곡성군이 가장 제조업 비중이 높아 30.5% 수준이다. 이 밖에 20% 이상 30% 미만이 경북 군위군 등 5개 지역, 10% 이상 20% 미만이 전남 함평군 등 22개 지역 그리고 10% 미만이 전남 신안군 등 11개 지역이다.

〈표 11-7〉 300인 이상 종사자 비율 순위별 지역 분류

비율	지역
30% 이상 (1)	경북 구미시
20% 이상 30% 미만 (10)	경기 이천시, 강원 정선군, 경남 거제시, 경기 용인시, 경남 창원시, 전남 광양시, 전남 영암군, 전남 곡성군, 충남 아산시, 울산 울주군
10% 이상 20% 미만 (23)	경기 화성시, 충남 연기군, 전북 완주군, 충남 서산시, 강원 삼척시, 경기 평택시, 경북 포항시, 부산 기장군, 충북 단양군, 경북 울진군, 경북 경주시, 전남 영광군, 대구 달성군, 경남 양산시, 경남 사천시, 전북 군산시, 경북 경산시, 충남 천안시, 충남 금산군, 경남 마산시, 전남 여주시, 충북 청원군, 전북 익산시
5% 이상 10% 미만 (28)	충남 태안군, 전남 나주시, 충남 당진군, 전북 무주군, 충남 보령시, 경북 영주시, 강원 강릉시, 충북 증평군, 강원 평창군, 강원 춘천시, 강원 원주시, 전남 화순군, 경북 김천시, 충남 계룡시, 강원 횡성군, 강원 홍천군, 충남 공주시, 전남 무안군, 충북 충주시, 경북 안동시, 경기 연천군, 경북 칠곡군, 경북 군위군, 경남 진주시, 강원 영월군, 경기 안성시, 인천 강화군, 경기 파주시
1% 이상 5% 미만 (47)	충남 부여군, 경남 통영시, 경북 문경시, 충북 제천시, 전북 정읍시, 충북 진천군, 경남 하동군, 전북 임실군, 경기 여주군, 경남 남해군, 경북 상주시, 전남 진도군, 경북 청송군, 충남 서천군, 전남 순천시, 경남 함양군, 경남 산청군, 경북 성주군, 경북 봉화군, 경북 영덕군, 경남 고성군, 전북 부안군, 경남 밀양시, 충북 음성군, 충북 영동군, 경기 김포시, 경남 김해시, 충북 옥천군, 경기 포천시, 전남 장성군, 충남 홍성군, 충남 논산시, 경기 가평군, 전북 남원시, 경북 영천시, 전남 보성군, 전북 고창군, 경기 양주시, 전북 김제시, 제주 북제주군, 충남 예산군, 경남 거창군, 경기 남양주시, 경기 양평군, 전남 해남군, 경남 함안군, 경기 광주시
0% (31)	전남 신안군, 강원 인제군, 강원 양구군, 강원 화천군, 인천 옹진군, 경북 영양군, 전북 진안군, 경북 울릉군, 경북 의성군, 경남 합천군, 전남 구례군, 전남 장흥군, 강원 양양군, 전남 강진군, 전남 완도군, 강원 철원군, 경북 청도군, 전남 함평군, 경북 예천군, 전남 고흥군, 강원 고성군, 전북 순창군, 제주 남제주군, 전남 담양군, 충북 보은군, 전북 장수군, 경북 고령군, 경남 의령군, 충남 청양군, 경남 창녕군, 충북 괴산군

자료 : KOSIS(통계청).

14 농촌지역 노동시장과 고용기회 : 통계분석과 사례분석으로부터 얻는 시사점

〈표 11-8〉 제조업 비중 순위

비율	지역
50% 이상 (12)	경기 화성시, 충북 진천군, 경기 양주시, 울산 울주군, 경북 칠곡군, 대구 달성군, 충북 음성군, 경남 함안군, 경기 김포시, 충북 청원군, 경북 구미시, 충남 아산시
40% 이상 50% 미만 (14)	경북 고령군, 경남 양산시, 충남 연기군, 경기 포천시, 전남 영암군, 경남 김해시, 경남 거제시, 경남 창원시, 경기 이천시, 경기 파주시, 경기 광주시, 경기 평택시, 전북 완주군, 경기 안성시
30% 이상 40% 미만 (12)	경기 용인시, 경북 경산시, 경북 영천시, 충남 금산군, 충남 천안시, 경북 성주군, 부산 기장군, 충북 옥천군, 전남 담양군, 경북 경주시, 전남 곡성군, 경북 김천시
20% 이상 30% 미만 (28)	충북 괴산군, 경남 사천시, 전남 광양시, 전남 장성군, 경북 군위군, 경기 남양주시, 전북 김제시, 강원 횡성군, 경남 고성군, 충남 당진군, 충남 청양군, 충북 증평군, 전북 익산시, 경남 창녕군, 경기 여주군, 경북 포항시, 충남 서천군, 충북 영동군, 전북 정읍시, 경남 의령군, 충북 단양군, 전남 나주시, 충남 논산시, 전남 완도군, 경남 마산시, 충남 서산시, 전북 군산시, 전남 여수시
10% 이상 20% 미만 (48)	충남 예산군, 경기 연천군, 경남 통영시, 충북 보은군, 충남 공주시, 경남 밀양시, 전남 함평군, 경남 합천군, 충남 부여군, 경북 청도군, 전북 임실군, 전남 무안군, 경북 봉화군, 강원 원주시, 충북 충주시, 전남 화순군, 전남 고흥군, 충남 보령시, 전북 순창군, 전북 남원시, 전남 해남군, 경북 의성군, 경남 함양군, 경북 울릉군, 경북 영덕군, 경북 상주시, 충남 홍성군, 경남 진주시, 강원 영월군, 전북 진안군, 전북 장수군, 경북 영주시, 강원 철원군, 경남 산청군, 경북 문경시, 강원 홍천군, 경북 예천군, 전북 부안군, 경남 거창군, 강원 양양군, 전남 장흥군, 충북 제천시, 강원 고성군, 제주 북제주군, 전남 강진군, 인천 강화군, 전북 고창군, 전남 보성군
10% 미만 (26)	전남 신안군, 전남 진도군, 강원 강릉시, 경남 하동군, 경북 영양군, 경기 가평군, 강원 삼척시, 강원 양구군, 강원 인제군, 경북 안동시, 경기 양평군, 전남 순천시, 충남 계룡시, 제주 남제주군, 강원 평창군, 전남 구례군, 경북 울진군, 전남 영광군, 강원 춘천시, 전북 무주군, 경남 남해군, 강원 정선군, 강원 화천군, 경북 청송군, 충남 태안군, 인천 옹진군

자료 : KOSIS(통계청).

라) 종사자수와 종사자수 변화율

마지막으로 3년 평균 종사자수를 상위, 중상위, 중하위, 하위로 분류하고, 2년 평균 종사자수 변화율도 동일한 방식으로 분류하여 지역을 구분하여 보았다(표 11-9 참조). 양자의 상관계수는 0.31로 높은 편이 아니지만, <표 11-10>을 보면, 종사자수에서 상위 35위권에 속하는 지역 가운데

<표 11-9> 종사자수 증가율 상위 35위권의 종사자수 분류

상위(17)		중상위(6)		중하위(4)		하위(8)	
충남	천안시	경북	칠곡군	경기	양평군	강원	양양군
경북	구미시	충남	서산시	강원	정선군	강원	고성군
경기	용인시	충북	청원군	강원	평창군	경북	봉화군
경기	화성시	경남	통영시	경북	성주군	충북	증평군
경남	김해시	충남	보령시			전북	무주군
경남	양산시	제주	북제주군			전북	순창군
경남	거제시					충남	계룡시
경기	김포시					인천	옹진군
충남	아산시						
강원	강릉시						
경기	남양주시						
경기	파주시						
울산	울주군						
경기	포천시						
경기	양주시						
경기	안성시						
전남	광양시						

17개 지역은 종사자수 증가율에서도 상위권에 있다. 그리고 하위 35위권 가운데 8개 지역이 종사자수 증가율에서 상위 35위권에 드는 것도 특징적이다.

이들 지역 가운데 17개 지역은 제조업 종사자 비중이 30% 이상인 지역이다. 전남 광양시 등 3개 지역은 25% 이상의 제조업 종사자 비중을 보인다. 그리고 인천 옹진군 등 6개 지역은 숙박 및 음식점업 종사자의 비중이 높은 편이다. 이들은 대체로 종사자수에서는 하위권에 속하는 지역이다. 정리하자면, 종사자수와 종사자수 증가율이 동시에 높은 지역은 제조업 종사자수 비중이 높으며, 종사자수는 적으나 종사자수 증가율이 높은 지역은 숙박 및 음식점업 종사자 비중이 높은 지역임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표 11-10>은 종사자수 증가율에서 하위권(106~140위)에 속하는 지역을 분류한 것이다. 표에서 볼 수 있듯이 최근 3년간 평균 종사자수에서 중하위권과 하위권에 속하는 지역이 절대적으로 높은 비중을 보인다.

〈표 II-10〉 종사자수 증가율 하위 35위권의 종사자수 분류

상위(4)		중상위(6)		중하위(12)		하위(13)	
경남	마산시	경북	김천시	전남	영광군	경북	예천군
전남	여수시	전북	정읍시	전남	고흥군	충북	보은군
전남	순천시	경북	상주시	강원	홍천군	경북	청도군
충북	충주시	충남	홍성군	경북	울진군	충북	괴산군
		전남	영암군	경남	창녕군	전남	곡성군
		경북	문경시	경기	가평군	충남	청양군
				인천	강화군	전남	신안군
				전남	담양군	전남	진도군
				경북	의성군	전남	구례군
				전남	무안군	경북	군위군
				경남	합천군	전북	진안군
				강원	철원군	강원	화천군
						경북	영양군

이들 지역의 특징은 대체로 제조업 종사자 비중이 낮다는 사실이다. 전남 영암군, 경북 김천시, 전남 곡성군과 전남 담양군이 제조업 종사자 비중이 30%를 넘어서며, 경남 마산시 등 7개 지역이 20~30% 수준이다. 나머지는 특별히 어느 업종의 종사자 비중이 높다거나 하는 특징을 보이지 않는다. 예외적으로 경북 의성군이 도소매업 종사자 비중이 높으며, 경기 가평군, 강원 화천군과 전남 구례군이 숙박 및 음식점 종사자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다.

나. 고용보험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한 지역별 일자리 창출과 소멸 추계

시군구별 주요 통계자료에 수록된 지역별 종사자수는 일종의 저장(stock) 변수에 해당한다. 곧 어느 지역에서 1년간 평균적으로 어느 정도로 종사자들이 활동하였는가를 나타낸다. 하지만 일자리(job)는 사업체의 신설이나 기존 사업체의 확장으로 새롭게 창출되는가 하면, 기존 사업체의 축소나 폐업 등으로 소멸되기도 한다. 따라서 농촌지역의 고용기회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이처럼 일자리의 창출과 소멸이라는 일종의 유량(flow) 변수도 아울러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1) 일자리 창출과 소멸 설명

일자리 창출(job creation)과 일자리 소멸(job destruction)에 대해서는 Davis and Haltiwanger(1999)의 정의에 따르기로 한다. 먼저 일자리 창출에 대한 정의는 다음과 같다.

(t 시점의) 일자리 창출 = ($t-1$) 시점과 t 시점 사이에 사업의 확장이나 신설 등으로 창출된 고용(employment)의 총계

(t 시점의) 일자리 소멸 = ($t-1$) 시점과 t 시점 사이에 사업의 축소나 폐업 등으로 소멸된 고용의 총계

이에 따라 순고용변화(net employment change)라는 개념도 정의된다.

(t 시점의) 순고용변화 = 일자리 창출 - 일자리 소멸

2) 고용보험 데이터베이스 설명

일자리 창출과 소멸을 분석하는 데 유용한 통계자료는 고용보험 데이터베이스(앞으로 고용보험 DB라 약칭)이다. 고용보험 DB는 사업체와 피보험자에 대한 방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행정 자료로서 사업체와 근로자와 관련된 데이터가 수록되어 있다. 이 연구에서는 고용보험 DB의 사업체 자료와 피보험자에 대한 이력을 활용하여 ‘사업체-피보험자 연계패널 자료’를 구축하였다.⁵⁾

패널 자료의 구축 과정은 다음과 같다. 첫째, 피보험자 이력 데이터의 피보험자 자격 취득·상실·이직 정보를 이용하여 개별 근로자의 직업력(job spell)을 만들었다. 둘째, 이 직업력을 사업체 데이터와 결합함으로써 각 연도별 사업체-피보험자 연계패널 자료를 구성하였다.

1995년 7월부터 현재(2005년 2월 19일 기준)까지 고용보험 DB는 1,998천 개의 사업체와 14,992천 명 피용자의 정보를 가지고 있다. 2004년 12월

5) 고용보험 데이터베이스의 사용과 관련하여 노동부 보험운영지원팀의 흔쾌한 자료 협조를 받았다.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뜻을 전하고자 한다.

말 기준으로 일자리수는 7,304천 개⁶⁾로 22,557천 명의 취업자 중 1/3만을 포괄하는 한계를 가진다. 이는 일용근로자 등 적용제외 근로자와 영세 소규모 사업체가 누락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분석 대상 기간은 2001년 12월 31일부터 2004년 12월 31일까지이다. 2001년부터 2004년까지 각각 12월 31일을 기준으로 당시 재직하고 있는 근로자수를 사업체별로 계산하고 창출률과 소멸률을 통한 지역별 일자리 변동을 알아보았다. 예를 들어 2002년의 일자리 창출률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2002년 1월 1일과 2002년 12월 31일 사이에 취업하였거나 재직하고 있는 근로자를 사업체별로 계산한다. 그리고 다시 이를 사업체의 소재지에 따라 지역별로 합산하게 된다.

3) 지역별 고용기회의 차이

가) 도농간 비교

2004년 12월 31일 현재 농촌지역의 사업체에서 일하고 있는 고용보험 피보험자는 2,209천 명으로 피보험자 전체의 30.2%를 차지하고 있다(표 II-11 참조). 그리고 최근 4년간 농촌 지역 피보험자의 구성비가 조금씩 늘고 있음이 확인된다. 이는 <표 II-12>에서 볼 수 있듯이 농촌 지역의 일

6) 이러한 일자리수는 통계청에서 발표한 우리나라 총취업자수 22,557천 명과 큰 차이를 보이는데 이유는 다음과 같다. 우선 통계청에서 쓰는 취업자의 개념이 조사대상 주간에 소득, 이익, 봉급, 임금 등의 수입을 목적으로 1시간 이상 일한 자, 자기에게 직접적으로 이득이나 수입이 오지 않더라도 가구단위에서 경영하는 농장이나 사업체의 수입을 높이는 데 도와준 가족종사자로서 주당 18시간 이상 일한 자, 직업 또는 사업체를 가지고 있으나 조사대상 주간에 일시적인 병, 일기불순, 휴가 또는 연가, 노동쟁의 등의 이유로 일하지 못한 일시 휴직자를 모두 취업자로 포함하고 있다. 이와는 달리 고용보험법상에 근로자는 근로기준법(14조)에 규정된 근로자의 범위보다는 넓지만 사업주의 지휘·감독하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형태의 금품(보수 등)을 지급받는 자로 정의하고 있다. 고용보험법상 적용제외되는 근로자는 65세 이상인 자, 소정근로시간이 월간 60시간(1주간 15시간) 미만인 자가 포함되며, 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의한 신분보장 및 연금의 수혜대상이 되므로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며,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자와 별정우체국법에 의한 별정우체국직원, 재외국민, 외국인 근로자 또한 적용제외 대상이다.

〈표 II-11〉 지역별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추이(2001년 말~2004년 말)
(단위: 명, %)

	전체	도시	농촌
2001	6,680,000 (100.00)	4,704,193 (70.42)	1,975,807 (29.58)
2002	6,869,124 (100.00)	4,828,072 (70.29)	2,041,052 (29.71)
2003	7,062,259 (100.00)	4,941,048 (69.96)	2,121,211 (30.04)
2004	7,304,051 (100.00)	5,095,549 (69.76)	2,208,502 (30.24)

자료: 중앙고용정보원, 「고용보험 데이터베이스」, 원자료.

〈표 II-12〉 지역별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변화율 추이(2001년 말~2004년 말)
(단위: 명, %)

	전체	도시	농촌
2002	2.83	2.63	3.30
2003	2.81	2.34	3.93
2004	3.42	3.13	4.12

자료: 중앙고용정보원, 「고용보험 데이터베이스」, 원자료.

자리수 증가율이 최근 3년간 도시지역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 이 사실은 앞에서 종사자수 증가 추세와 유사하다.

한편, 사업체규모별 구성은 <표 II-13>에 나와 있다. 표에 따르면, 300인 이상, 특히 1,000인 이상 규모의 사업체는 도시의 경우에 상대적으로 높은 구성비를 보이고 있다. 농촌의 경우에는 100인 미만 규모의 사업체에 종사하는 피보험자의 비중이 도시에 비하여 높게 나타난다. 100~299인의 경우에도 농촌의 구성비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는데 이는 앞의 사업체규모별 종사자수 비중과 다르다. 이는 이미 설명한 대로 고용보험 피보험자 개념이 종사자와는 다르기 때문이다.

〈표 II-13〉 지역별·사업체규모별 피보험자 구성(2004년 12월 31일 현재)
(단위: 명, %)

	전체	도시	농촌
5인 미만	821,243 (11.19)	580454.0 (11.35)	240,789 (10.81)
5~9인	751,342 (10.24)	503036.0 (9.84)	248,306 (11.15)
10~29인	1,311,949 (17.87)	856818.0 (16.76)	455,131 (20.44)

20 농촌지역 노동시장과 고용기회 : 통계분석과 사례분석으로부터 얻는 시사점

〈표 11-13〉의 계속

(단위: 명, %)

	전체	도시	농촌
30~49인	560,452 (7.64)	357885.0 (7.00)	202,567 (9.10)
50~99인	747,486 (10.18)	468772.0 (9.17)	278,714 (12.51)
100~299인	1,109,867 (15.12)	757821.0 (14.82)	352,046 (15.81)
300~499인	402,795 (5.49)	297886.0 (5.83)	104,909 (4.71)
500~999인	449,146 (6.12)	342153.0 (6.69)	106,993 (4.80)
1,000인 이상	1,185,365 (16.15)	947643.0 (18.54)	237,722 (10.67)
전체	7,339,645 (100.00)	5,112,468 (100.00)	2,227,177.0 (100.00)

자료: 중앙고용정보원, 「고용보험 데이터베이스」, 원자료.

〈표 11-14〉 지역별·업종별 피보험자 구성(2004년 12월 31일 현재)

(단위: 명, %)

	전체	도시	농촌
농림어업	24,964 (0.34)	11,186 (0.22)	13,778 (0.62)
광업	16,349 (0.22)	7,478 (0.15)	8,871 (0.40)
제조업	2,694,900 (36.90)	1,475,154 (28.95)	1,219,746 (55.23)
전기,가스및수도사업	59,379 (0.81)	44,821 (0.88)	14,558 (0.66)
건설업	513,482 (7.03)	334,612 (6.57)	178,870 (8.10)
도매 및 소매업	760,456 (10.41)	651,245 (12.78)	109,211 (4.95)
숙박 및 음식점업	156,165 (2.14)	125,690 (2.47)	30,475 (1.38)
운수업	488,419 (6.69)	379,013 (7.44)	109,406 (4.95)
통신업	42,067 (0.58)	38,241 (0.75)	3,826 (0.17)
금융 및 보험업	353,236 (4.84)	287,399 (5.64)	65,837 (2.98)
부동산 및 임대업	216,018 (2.96)	180,156 (3.54)	35,862 (1.62)
사업서비스업	957,564 (13.11)	848,112 (16.64)	109,452 (4.96)
공공행정,국방,사회	107,882 (1.48)	66,079 (1.30)	41,803 (1.89)
교육서비스업	198,460 (2.72)	133,392 (2.62)	65,068 (2.95)
보건, 사회복지사업	384,405 (5.26)	269,506 (5.29)	114,899 (5.20)
오락,문화,운동관련	95,299 (1.30)	67,148 (1.32)	28,151 (1.27)
기타공공,수리,개인	233,960 (3.20)	175,469 (3.44)	58,491 (2.65)
가사서비스업	777 (0.01)	580 (0.01)	197 (0.01)
국제 및 외국기관	269 (0.00)	268 (0.01)	1 (0.00)
전체	7,304,051 (100.00)	5,095,549 (100.00)	2,208,502 (100.00)

자료: 중앙고용정보원, 「고용보험 데이터베이스」, 원자료.

고용보험 피보험자는 근로자로 구성된다는 점이 반영된 것으로 보이는 데 업종별 분포를 보면, 제조업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표 II

-14 참조). 특히 이는 농촌지역에서 두드러져 2004년 12월 31일 현재 제조업에 종사하는 농촌지역의 고용보험 피보험자수는 1,220천 명으로 농촌지역 전체 피보험자수의 55.2%에 이르고 있다. 특이한 사항은 시군구별 주요 통계자료의 종사자수에서 도소매업과 숙박 및 음식점업의 비중이 높은 편이었으나 고용보험 피보험자에서는 각각 5.0%와 1.4%로 상당히 낮은 분포를 보인다는 것이다. 이는 두 업종에 종사하는 취업자가 근로자보다는 자영업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뜻한다.

나) 지역별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최근 4년간(2001~2004년 말)의 고용보험 피보험자수를 보면(표 II-15 참조), 경남 창원시와 같이 120천 명인 경우가 있는가 하면, 경북 울릉군 처럼 415명에 지나지 않는 경우도 있다. 대체로 3만 명 이상의 지역은 모두 통합시이며, 1만 명 이상의 지역은 충북 청원군, 경기 양주시, 충북 음성군 등 대부분 공단 지대이거나 인근에 대도시가 있는 경우이다. 특히 이 결과는 앞의 최근 3년간 종사자수와 유사하다.

〈표 II-15〉 최근 4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수별 지역 분류

피보험자수	지역
10만명 이상(1)	경남 창원시
5만명 이상 10만명 미만(7)	경북 구미시, 경기 용인시, 경기 화성시, 충남 천안시, 경북 포항시, 경기 평택시, 경남 김해시
3만명 이상 5만명 미만(13)	경남 양산시, 경남 마산시, 경기 이천시, 경남 거제시, 충남 아산시, 경기 김포시, 울산 울주군, 경북 경주시, 경기 광주시, 전북 익산시, 경북 경산시, 전남 여주시, 경기 파주시
1만명 이상 3만명 미만(30)	경남 진주시, 강원 원주시, 전북 군산시, 전남 광양시, 대구 달성군, 경기 남양주시, 충북 청원군, 경기 양주시, 경기 안성시, 경기 포천시, 강원 춘천시, 강원 강릉시, 충북 음성군, 경북 칠곡군, 전남 순천시, 충북 충주시, 충북 진천군, 부산 기장군, 경북 김천시, 충남 서산시, 충남 연기군, 경북 영천시, 경북 안동시, 충남 당진군, 경남 사천시, 충남 공주시, 전북 완주군, 충남 논산시, 충북 제천시, 경남 함안군
5천명 이상 1만명 미만(26)	경기 여주시, 전남 화순군, 전남 나주시, 전남 영암군, 전북 정읍시, 전북 김제시, 경남 밀양시, 충남 보령시, 경남 통영시, 충남 예산군, 경북 영주시, 충남 금산군, 경북 상주시, 충북 옥천군, 전북 남원시, 강원 정선군, 전남 담양군, 강원 횡성군, 충남 부여군, 경남 고성군, 강원 홍천군, 충남 홍성군, 경북 고령군, 전남 영광군, 충남 서천군, 전남 장성군

〈표 II-15〉의 계속

피보험자수	지역
3천명 이상 5천명 미만(27)	제주 북제주군, 경남 창원군, 강원 삼척시, 충북 단양군, 경북 성주군, 경북 문경시, 강원 평창군, 경기 양평군, 전남 곡성군, 경기 가평군, 전남 해남군, 강원 영월군, 전남 무안군, 충북 영동군, 경북 울진군, 제주 남제주군, 경남 거창군, 인천 강화군, 경북 의성군, 충남 태안군, 전남 고흥군, 충북 괴산군, 경북 청도군, 전북 부안군, 충북 증평군, 경기 연천군, 충북 보은군
1천명 이상 3천명 미만(33)	경남 합천군, 경남 하동군, 경남 의령군, 전북 고창군, 충남 청양군, 경북 군위군, 전남 함평군, 강원 철원군, 전남 완도군, 전남 보성군, 경북 영덕군, 경북 봉화군, 강원 양양군, 강원 고성군, 경남 남해군, 경남 산청군, 경북 예천군, 경남 함양군, 전북 임실군, 전남 장흥군, 전남 강진군, 충남 계룡시, 전북 무주군, 전남 신안군, 전북 순창군, 전북 진안군, 경북 청송군, 전남 구례군, 강원 인제군, 전남 진도군, 전북 장수군, 경북 영양군, 강원 양구군
1천명 미만(3)	강원 화천군, 인천 옹진군, 경북 울릉군

자료: 중앙고용정보원, 「고용보험 데이터베이스」, 원자료.

다음으로 고용보험 피보험자의 업종별 구성을 살펴보면(표 II-16 참조), 먼저 제조업 비중이 가장 높은 지역은 충북 충주시로 80.3%의 비중을 보이고 있다. 이 밖에 충북 진천군(79.5%)과 전남 함평군(78.5%) 등 총 45개 지역이 50%가 넘는 비중을 보이고 있다. 총 104개 지역의 경우에 제조업 비중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이 가운데 가장 낮은 비중을 보이는 지역은 충남 서천군으로 12.7%이다.

전기·가스 및 수도사업은 인천 강화군이 30.6%로 가장 높은 비중을 보이며, 특히 강화군에서도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업종이다.

건설업은 경남 하동군(53.5%), 충남 청양군(47.9%), 전북 정읍시(41.9%), 전남 화순군(38.3%), 경북 고령군(34.0%), 경기 안성시(33.7%), 양평군(31.2%), 경북 영천시(30.7%), 충북 청원군(29.3%), 경기 포천시(28.5%), 대구 달성군(27.9%), 강원 원주시(27.9%), 경북 의성군(27.3%), 전남 장성군(27.2%)의 순으로 비중이 높으며, 해당 지역에서도 가장 높은 비중의 업종이다.

숙박 및 음식점업은 충남 예산군(32.6%), 강원 고성군(22.1%), 경남 마산시(19.6%)의 순으로 높은 비중을 보이며, 해당 지역에서도 가장 높은 비중의 업종이다.

금융 및 보험업은 충북 청원군이 27.5%로 농촌지역 가운데 가장 높은 비중을 보이지만, 건설업보다 낮은 비중을 보인다. 두 번째로 높은 비중을 보이는 전북 부안군은 26.2%로 부안군의 업종 가운데 가장 비중이 높은 업종이기도 하다. 경북 문경시가 22.8%로 세 번째의 자리에 오르지만, 지역 내에서는 제조업(25.3%)보다 낮다.

오락, 문화 및 운동관련 서비스업은 경북 청송군이 33.3%로 가장 높은 비중을 보인다.

〈표 II-16〉 고용보험 피보험자 제조업 비중별 지역 분류

비율	지역
50% 이상 (45)	충북 충주시, 충북 진천군, 전남 함평군, 충북 영동군, 전남 완도군, 경북 구미시, 충북 보은군, 충남 금산군, 충남 논산시, 제주 남제주군, 경남 김해시, 경남 함안군, 전북 고창군, 경기 남양주시, 전북 김제시, 경북 봉화군, 경북 상주시, 경북 영주시, 전남 신안군, 전북 완주군, 경북 청도군, 경기 이천시, 전북 임실군, 경북 울진군, 경북 영양군, 경북 김천시, 경북 성주군, 강원 홍천군, 강원 인제군, 충남 당진군, 경북 경산시, 강원 정선군, 경남 통영시, 충남 천안시, 경북 경주시, 경기 파주시, 경기 김포시, 충북 옥천군, 경남 거창군, 충북 단양군, 경남 함양군, 경남 사천시, 전남 고흥군, 전남 해남군, 강원 춘천시
30% 이상 50% 미만 (32)	경북 군위군, 전남 무안군, 경북 칠곡군, 충남 서산시, 경기 양주시, 전남 나주시, 전북 순창군, 전북 군산시, 충남 연기군, 경남 고성군, 충남 아산시, 인천 옹진군, 강원 화천군, 전남 곡성군, 경북 포항시, 충남 태안군, 경남 창원시, 강원 강릉시, 충북 증평군, 전남 장흥군, 경북 안동시, 전북 무주군, 경남 의령군, 전북 익산시, 충남 공주시, 경남 양산시, 경기 가평군, 전남 강진군, 경기 용인시, 충남 홍성군, 경남 거제시, 전남 순천시
10% 이상 30% 미만 (51)	강원 영월군, 경남 창녕군, 충북 괴산군, 경기 양평군, 경북 울릉군, 경남 합천군, 강원 삼척시, 전남 담양군, 전남 장성군, 경남 밀양시, 경북 예천군, 전남 평양시, 전북 남원시, 경북 문경시, 제주 북제주군, 전남 구례군, 경남 산청군, 경기 평택시, 충남 부여군, 강원 횡성군, 충북 제천시, 부산 기장군, 충남 보령시, 경기 광주시, 강원 철원군, 경북 영천시, 전남 보성군, 전북 진안군, 전북 장수군, 전남 영광군, 전남 여수시, 경남 진주시, 강원 양양군, 경기 여주군, 경북 의성군, 전북 정읍시, 전남 진도군, 경기 연천군, 경남 남해군, 강원 고성군, 충남 청양군, 충남 서천군, 충북 음성군, 경남 마산시, 인천 강화군, 전남 영암군, 경기 포천시, 울산 울주군, 경기 화성시, 강원 평창군, 대구 달성군
10% 미만(12)	경북 영덕군, 강원 양구군, 전남 화순군, 경북 청송군, 충남 계룡시, 충남 예산군, 강원 원주시, 경북 고령군, 전북 부안군, 경기 안성시, 경남 하동군, 충북 청원군

자료 : 중앙고용정보원, 「고용보험 데이터베이스」, 원자료.

4) 지역별 일자리 창출과 일자리 소멸

가) 도농간 비교

1) 일자리 창출·일자리 소멸·순고용 변화

전국으로 볼 때, 2002~2004년 일자리 창출은 각각 1,043천 명, 1,020천 명, 1,077천 명 이루어지고, 일자리 소멸은 각각 854천 명, 827천 명, 836천 명 이루어져서 순고용변화가 각각 189천 명, 193천 명, 242천 명이었다. 따라서 지속적으로 고용이 증가하였음을 알 수 있다(표 II-17 참조).

도시 지역의 경우, 2002~2004년 일자리 창출이 각각 736천 명, 704천 명, 742천 명, 일자리 소멸이 각각 612천 명, 591천 명, 587천 명으로, 순고용변화가 각각 124천 명, 113천 명, 155천 명이었다. 농촌 지역의 경우, 2002~2004년 일자리 창출이 각각 307천 명, 316천 명, 336천 명, 일자리 소멸이 각각 242천 명, 236천 명, 248천 명으로 순고용변화가 각각 65천 명, 80천 명, 87천 명이었다.

도시지역과 농촌지역을 비교해 보면, 일자리 창출에서 농촌지역이 29.5~31.2%를 차지하고, 일자리 소멸에서 28.4~29.7%를 차지하여 순고용변화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34.5~41.5%를 보이고 있다. 말하자면 일자리 창출보다 일자리 소멸이 상대적으로 낮게 발생함으로써 농촌지역이 순고용 증가에서 상대적으로 기여도가 높다고 할 수 있다.

<표 II-17> 지역별 일자리 창출·소멸·순고용변화 추이(2002~2004)

(단위: 명, %)

		전체	도시	농촌
일자리 창출	2002	1,042,921 (100.00)	735,518 (70.52)	307,403 (29.48)
	2003	1,020,173 (100.00)	703,784 (68.99)	316,389 (31.01)
	2004	1,077,449 (100.00)	741,748 (68.84)	335,701 (31.16)
일자리 소멸	2002	853,797 (100.00)	611,639 (71.64)	242,158 (28.36)
	2003	827,038 (100.00)	590,808 (71.44)	236,230 (28.56)
	2004	835,657 (100.00)	587,247 (70.27)	248,410 (29.73)
순고용 변화	2002	189,124 (100.00)	123,879 (65.50)	65,245 (34.50)
	2003	193,135 (100.00)	112,976 (58.50)	80,159 (41.50)
	2004	241,792 (100.00)	154,501 (63.90)	87,291 (36.10)

자료: 중앙고용정보원, 「고용보험 데이터베이스」, 원자료.

2) 업종별 일자리 창출·일자리 소멸·순고용 변화

최근 3년간 업종별 평균 일자리 창출을 보면(표 II-18 참조), 도시지역은 제조업(23.6%)과 사업서비스업(21.0%) 그리고 도매 및 소매업(17.4%)를 중심으로 일어났음을 알 수 있다. 농촌지역은 제조업이 50.2%로 과반수에 이른다. 그리고 건설업(10.4%)과 도매 및 소매업(7.5%), 사업서비스업(6.4%)의 순이다.

최근 3년간 일자리 소멸의 경우(표 II-19 참조), 역시 도시지역에서는 제조업(28.8%), 도매 및 소매업(18.0%), 사업서비스업(17.5%)이 중심이다. 농촌지역에서는 제조업이 53.0%로 절대적인 위치에 있으며, 건설업과 도매 및 소매업이 각각 9.1%와 8.8%로 뒤를 잇고 있다.

이에 따라 최근 3년간 순고용변화는 도시지역의 경우에 사업서비스업,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도매 및 소매업, 건설업을 중심으로 증가하였으며, 통신업, 운수업의 경우는 순고용이 감소하였다(표 II-20 참조).

농촌지역의 경우는 제조업이 순고용 증가에 대한 기여도가 가장 크며, 다음으로 건설업,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사업서비스업의 순이었다. 도시지역과 마찬가지로 농촌지역에서도 통신업이 순고용 감소를 보였으며, 이 밖에 전기, 가스 및 수도사업과 숙박 및 음식점업이 약간의 순고용 감소를 기록하고 있다. 이로 볼 때 제조업 비중이 높은 지역인 경우에 일자리 창출과 일자리 소멸이 높을 뿐만 아니라 순고용도 변화, 특히 증가할 가능성이 높음을 알 수 있다.

참고로 3년 평균 지역별 일자리 창출과 4년 평균 일자리수의 상관계수를 구한 결과 0.98이며, 3년 평균 지역별 일자리 창출과 4년 평균 제조업 일자리수의 상관계수를 구한 결과 0.97이었다. 이 두 상관계수를 3년 평균 일자리 소멸에 대하여 구한 결과 각각 0.98과 0.95였으며, 3년 평균 순고용 변화에 대하여 구한 결과 각각 0.77과 0.80이었다. 이는 순고용의 증가에 일자리 창출이 상대적으로 높은 관련성을 가지고 있으며, 특히 제조업의 일자리 창출이 중요함을 보여준다.

26 농촌지역 노동시장과 고용기회 : 통계분석과 사례분석으로부터 얻는 시사점

〈표 11-18〉 최근 3년간 업종별 평균 일자리 창출(2002~2004)

(단위: 명, %)

	전체	도시	농촌
농림어업	4,282 (0.41)	1,971 (0.27)	2,311 (0.72)
광업	1,820 (0.17)	401 (0.06)	1,419 (0.44)
제조업	332,381 (31.75)	171,846 (23.64)	160,535 (50.19)
전기,가스및수도사업	2,883 (0.28)	2,185 (0.30)	698 (0.22)
건설업	91,053 (8.70)	57,846 (7.96)	33,207 (10.38)
도매 및 소매업	150,399 (14.37)	126,430 (17.39)	23,970 (7.49)
숙박 및 음식점업	31,352 (2.99)	24,787 (3.41)	6,565 (2.05)
운수업	41,052 (3.92)	29,987 (4.12)	11,065 (3.46)
통신업	5,826 (0.56)	4,926 (0.68)	900 (0.28)
금융 및 보험업	18,769 (1.79)	15,983 (2.20)	2,786 (0.87)
부동산 및 임대업	30,984 (2.96)	25,451 (3.50)	5,533 (1.73)
사업서비스업	173,113 (16.54)	152,545 (20.98)	20,569 (6.43)
공공행정,국방,사회	11,687 (1.12)	6,253 (0.86)	5,434 (1.70)
교육서비스업	40,862 (3.90)	28,091 (3.86)	12,771 (3.99)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56,349 (5.38)	39,446 (5.43)	16,903 (5.28)
오락,문화,운동관련	13,944 (1.33)	9,767 (1.34)	4,177 (1.31)
기타공공,수리,개인	39,791 (3.80)	28,856 (3.97)	10,935 (3.42)
가사서비스업	243 (0.02)	188 (0.03)	54 (0.02)
국제 및 외국기관	59 (0.01)	59 (0.01)	0 (0.00)
전 체	1,046,848 (100.00)	727,017 (100.00)	319,831 (100.00)

자료: 중앙고용정보원, 「고용보험 데이터베이스」, 원자료.

〈표 11-19〉 최근 3년간 업종별 평균 일자리 소멸(2002~2004)

(단위: 명, %)

	전체	도시	농촌
농림어업	2,584 (0.31)	1,098 (0.18)	1,486 (0.61)
광업	1,931 (0.23)	438 (0.07)	1,493 (0.62)
제조업	300,127 (35.78)	171,745 (28.79)	128,382 (52.99)
전기,가스및수도사업	2,403 (0.29)	861 (0.14)	1,543 (0.64)
건설업	64,032 (7.63)	41,945 (7.03)	22,088 (9.12)
도매 및 소매업	128,586 (15.33)	107,331 (17.99)	21,255 (8.77)
숙박 및 음식점업	29,744 (3.55)	22,483 (3.77)	7,261 (3.00)
운수업	42,148 (5.02)	31,840 (5.34)	10,309 (4.26)
통신업	16,784 (2.00)	13,833 (2.32)	2,951 (1.22)
금융 및 보험업	19,597 (2.34)	16,886 (2.83)	2,711 (1.12)
부동산 및 임대업	20,091 (2.40)	16,918 (2.84)	3,173 (1.31)

<표 11-19>의 계속

(단위: 명, %)

	전체	도시	농촌
사업서비스업	116,944 (13.94)	104,490 (17.52)	12,454 (5.14)
공공행정,국방,사회	4,391 (0.52)	2,709 (0.45)	1,682 (0.69)
교육서비스업	24,205 (2.89)	16,590 (2.78)	7,615 (3.14)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28,173 (3.36)	19,736 (3.31)	8,437 (3.48)
오락,문화,운동관련	9,321 (1.11)	7,288 (1.22)	2,033 (0.84)
기타공공,수리,개인	27,654 (3.30)	20,271 (3.40)	7,383 (3.05)
가사서비스업	93 (0.01)	82 (0.01)	11 (0.00)
국제 및 외국기관	21 (0.00)	21 (0.00)	0 (0.00)
전 체	838,831 (100.00)	596,565 (100.00)	242,266 (100.00)

자료: 중앙고용정보원, 「고용보험 데이터베이스」, 원자료.

<표 11-20> 최근 3년간 업종별 평균 순고용변화(2002~2004)

(단위: 명, %)

	전체	도시	농촌
농림업	1,698 (0.82)	872 (0.67)	825 (1.06)
광업	-111 (-0.05)	-37 (-0.03)	-73 (-0.09)
제조업	32,254 (15.51)	100 (0.08)	32,154 (41.45)
전기,가스및수도사업	480 (0.23)	1,324 (1.02)	-844 (-1.09)
건설업	27,021 (12.99)	15,902 (12.19)	11,119 (14.34)
도매 및 소매업	21,813 (10.49)	19,098 (14.64)	2,715 (3.50)
숙박 및 음식점업	1,608 (0.77)	2,305 (1.77)	-697 (-0.90)
운수업	-1,097 (-0.53)	-1,853 (-1.42)	756 (0.98)
통신업	-10,958 (-5.27)	-8,907 (-6.83)	-2,051 (-2.64)
금융 및 보험업	-828 (-0.40)	-903 (-0.69)	75 (0.10)
부동산 및 임대업	10,893 (5.24)	8,533 (6.54)	2,360 (3.04)
사업서비스업	56,169 (27.00)	48,054 (36.84)	8,115 (10.46)
공공행정,국방,사회	7,296 (3.51)	3,544 (2.72)	3,751 (4.84)
교육서비스업	16,657 (8.01)	11,501 (8.82)	5,156 (6.65)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28,176 (13.54)	19,710 (15.11)	8,466 (10.91)
오락,문화,운동관련	4,622 (2.22)	2,479 (1.90)	2,144 (2.76)
기타공공,수리,개인	12,136 (5.83)	8,585 (6.58)	3,551 (4.58)
가사서비스업	150 (0.07)	107 (0.08)	43 (0.06)
국제 및 외국기관	38 (0.02)	38 (0.03)	0 (0.00)
전 체	208,017 (100.00)	130,452 (100.00)	77,565 (100.00)

자료: 중앙고용정보원, 「고용보험 데이터베이스」, 원자료.

다) 지역별 일자리 창출

1) 일자리 창출

3년 평균 일자리 창출수로 보면(표 II-21 참조), 경북 구미시 등 통합시가 상위를 차지하고 있다. 군 지역으로서는 충북 청원군이 23번째로 높은 일자리 창출수를 보인다. 평균 1만 명 이상의 일자리 창출이 있었던 지역이 7개, 5천 명 이상 1만 명 미만의 일자리 창출이 있었던 지역이 11개이며, 73개 지역은 평균 1천 명 미만의 일자리 창출을 보이고 있다. 특히 경북 울릉군은 3년 평균 일자리 창출이 67명이다.

〈표 II-21〉 3년 평균 일자리 창출수별 지역 분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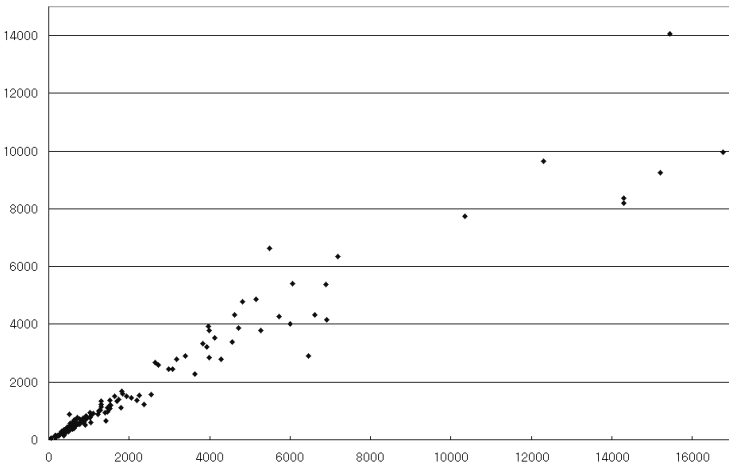
일자리창출	지 역
10,000명 이상 (7)	경북 구미시, 경남 창원시, 경기 화성시, 경기 용인시, 충남 천안시, 경남 김해시, 경기 평택시
5,000~9,999명(11)	경북 포항시, 충남 아산시, 경기 김포시, 경기 광주시, 경남 거제시, 경남 양산시, 경기 파주시, 경기 이천시, 경남 마산시, 울산 울주군, 경북 경주시
3,000~4,999명(15)	전북 익산시, 강원 원주시, 경북 경산시, 경기 남양주시, 충북 청원군, 경기 포천시, 경기 양주시, 경북 칠곡군, 전북 군산시, 경남 진주시, 전남 여수시, 경기 안성시, 강원 춘천시, 강원 강릉시, 충북 음성군
2,000~2,999명(8)	전남 순천시, 대구 달성군, 충북 충주시, 충북 진천군, 충남 서산시, 충남 연기군, 전남 광양시, 경북 김천시
1,000~1,999명(26)	충남 당진군, 경북 안동시, 경북 영천시, 전북 완주군, 경남 함안군, 경기 여주군, 경남 통영시, 충남 공주시, 충남 논산시, 충북 제천시, 전남 나주시, 전남 화순군, 전북 김제시, 강원 정선군, 전남 영암군, 전북 정읍시, 부산 기장군, 경남 사천시, 경남 밀양시, 충남 금산군, 충남 보령시, 경북 상주시, 전남 담양군, 제주 북제주군, 경북 영주시, 충남 홍성군
1,000명 미만(73)	전북 남원시 등

자료 : 중앙고용정보원, 「고용보험 데이터베이스」, 원자료.

2) 일자리 소멸

3년 평균 일자리 소멸수는 경남 창원시가 14천 명으로 가장 높다(표 II-22 참조). 5천 명 이상의 일자리가 소멸한 지역은 창원시를 포함하여 10개 지역이다. 그리고 46명의 일자리가 소멸한 경북 울릉군을 포함하여 1천 명 미만의 일자리 소멸을 보인 지역은 82개 지역이다. 참고로 3년 평균 일자리 창출수와 일자리 소멸수의 상관계수는 0.97로 일자리 창출과 일자리 소멸 사이에는 높은 상관관계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그림 II-2]에서 명확히 나타난다.

(그림 II-2) 일자리 창출과 일자리 소멸의 상관도



라) 순고용변화

3년 평균 순고용변화는 경북 구미시가 7천 명으로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다(표 II-23 참조). 5천 명 이상의 순고용 증가를 보인 지역은 충남 천안시(6천명), 경기 화성시(6천명), 경기 용인시(6천명)이다. 그리고 1천 명 이상 5천 명 미만의 순고용 증가는 경남 거제시 등 15개 지역에서 있었으며, 경북 의성군이 5명으로 가장 낮은 순고용 증가를 기록하고 있다. 이와는달리 강원 영월군 및 횡성군, 부산 기장군, 충북 충주시, 경남 고성군, 경북 울진군, 경남 마산시는 순고용 감소를 기록하고 있는데 경남 마산시의

30 농촌지역 노동시장과 고용기회 : 통계분석과 사례분석으로부터 얻는 시사점

경우에 순고용 감소가 1천 명에 이른다.

그리고 3년 평균 일자리 창출과 순고용 변화의 상관계수는 0.86이며, 3년 평균 일자리 소멸과 순고용 변화의 상관관계는 0.71였다.

〈표 II-22〉 3년 평균 일자리 소멸별 지역 분류

	지 역
10,000명 이상 (1)	경남 창원시
5,000~9,999명(10)	경북 구미시, 경남 김해시, 경기 화성시, 경기 용인시, 충남 천안시, 경기 평택시, 경남 마산시, 경북 포항시, 경남 양산시, 경기 김포시
3,000~4,999명(15)	경북 경주시, 전북 익산시, 경북 경산시, 경기 광주시, 경기 이천시, 충남 아산시, 경기 파주시, 전북 군산시, 강원 원주시, 경기 양주시, 울산 울주군, 경기 포천시, 경기 남양주시, 전남 여주시, 경남 진주시
1,000~2,999명(32)	강원 춘천시, 경남 거제시, 경북 칠곡군, 강원 강릉시, 충북 청원군, 충북 충주시, 대구 달성군, 충북 음성군, 전남 순천시, 경기 안성시, 경북 영천시, 경북 안동시, 충북 진천군, 충남 연기군, 충남 당진군, 경남 통영시, 경북 김천시, 경남 함안군, 충북 제천시, 전남 광양시, 경기 여주군, 부산 기장군, 충남 서산시, 전북 정읍시, 충남 공주시, 충남 논산시, 경남 사천시, 전북 김제시, 전북 완주군, 전남 나주시, 경남 밀양시, 충남 금산군
1,000명 미만(82)	전남 화순군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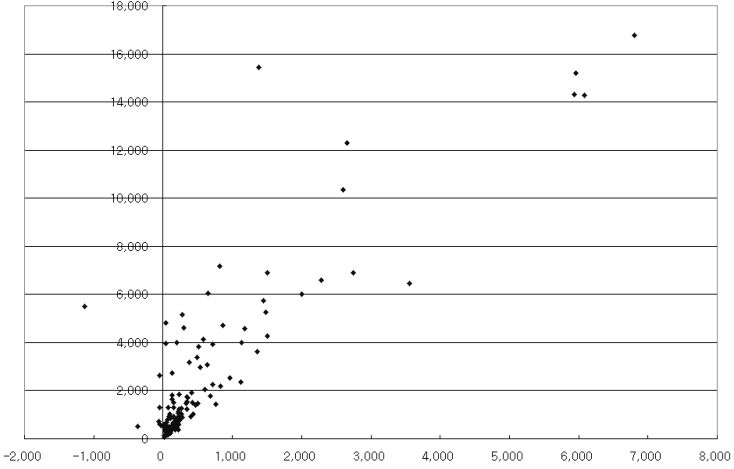
자료: 중앙고용정보원, 「고용보험 데이터베이스」, 원자료.

〈표 II-23〉 3년 평균 순고용변화별 지역 분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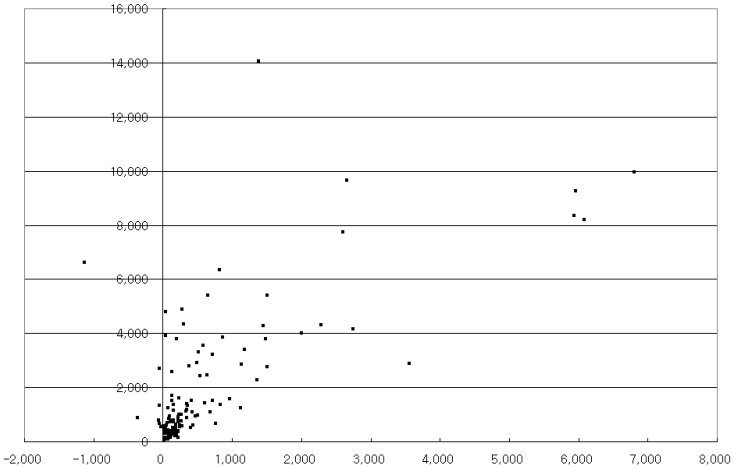
	지역
5,000명 이상(4)	경북 구미시, 충남 천안시, 경기 화성시, 경기 용인시
1,000~4,999명(15)	경남 거제시, 충남 아산시, 경남 김해시, 경기 평택시, 경기 광주시, 경기 파주시, 충북 청원군, 경기 김포시, 울산 울주군, 경기 이천시, 경남 창원시, 경기 안성시, 경기 남양주시, 경북 칠곡군, 충남 서산시
0~999명 (114)	충북 진천군 등
감소(7)	강원 영월군, 강원 횡성군, 부산 기장군, 충북 충주시, 경남 고성군, 경북 울진군, 경남 마산시

자료: 중앙고용정보원, 「고용보험 데이터베이스」, 원자료.

[그림 II-3] 3년 평균 일자리 창출과 순고용변화의 상관도



[그림 II-4] 3년 평균 일자리 소멸과 순고용변화의 상관도



마). 지역별 일자리 창출률 · 일자리 소멸률 · 순고용변화율

1) 일자리 창출률

전년도 말의 일자리수를 가중치로 하여 창출률을 구하여 보았다. 곧 일자리 창출률은 다음과 같은 식이 된다.

$$t \text{ 년도의 일자리 창출률} = 100 \times (t \text{ 년도의 일자리 창출수} / (t - 1) \text{ 년도 말의 일자리수})$$

최근 3년간의 일자리 창출률을 평균한 결과(표 II-24 참조), 강원 정선군이 25.9%로 가장 높다. 강원 정선군의 경우는 2003년의 일자리 창출률이 45.9%로 상당히 높았기 때문이다.⁷⁾ 다음으로 전북 무주군이 3년 평균 일자리 창출률이 23.2%로 높게 나타나고 있는데 전북 무주군 역시 2003년의 일자리 창출률이 40.2%에 이르고 있다.⁸⁾

표를 보면, 일자리 창출률이 높은 지역 가운데 일자리수가 적은 지역이 적지 않다. 상위권 35위 가운데 일자리수가 많은 지역은 경북 칠곡군, 경기 광주시, 경남 김해시, 경기 남양주시, 경기 파주시, 경기 포천시, 충남 천안시, 경기 김포시, 충북 청원군, 경북 구미시이다. 모두 통합시이거나 대도시가 인근에 있는 지역임을 알 수 있다.

일자리 창출률이 가장 낮은 지역은 전남 광양시로 8.6%이다. 일자리 창출률이 낮은 35개 지역을 보면, 일자리수가 적은 지역이 6할 정도의 비중을 보인다. 전남 영광군, 강원 횡성군, 전남 곡성군, 충남 예산군, 충북 보은군, 경남 고성군, 충북 보은군, 강원 양구군, 충북 괴산군, 충남 청양군, 강원 영월군, 인천 강화군, 경북 울진군, 경북 영양군 등이다. 이 가운데 상당수의 지역은 낙후지역으로 분류되는 곳이기도 하다.

2) 일자리 소멸률

일자리 소멸률은 다음과 같은 식이 된다.

$$t \text{ 년도의 일자리 소멸률} = 100 \times (t \text{ 년도의 일자리 소멸수} / (t - 1) \text{ 년도 말의 일자리수})$$

최근 3년간 평균 일자리 소멸률을 보면(표 II-25 참조), 경북 울진군이

7) 2003년에 강원 정선군에서 오락, 문화 및 운동관련 서비스업에서 1천 명을 넘는 일자리 창출이 있었다.

8) 전북 무주군은 2003년에 숙박 및 음식점업에서 344명의 일자리 창출이 있었다.

20.9%로 가장 높은 편이다. 이는 2002년의 일자리 소멸률이 39.0%로 높았기 때문인데 전기, 가스 및 수도사업에서 1천 명의 일자리 소멸이 있었다.

평균 일자리 창출률과 일자리 소멸률의 상관계수는 0.38로 그리 높지 않은 편이다. 일자리 창출수와 일자리 소멸수의 상관계수가 0.97로 높았던 것은 다소 의외의 결과이다. 일자리가 많이 창출되는 지역에서 마찬가지로

〈표 II-24〉 3년 평균 일자리 창출률별 지역 분류

일자리창출률	지 역
20% 이상 (9)	강원 정선군, 전북 무주군, 인천 옹진군, 경남 의령군, 충남 계룡시, 강원 평창군, 제주 북제주군, 강원 인제군, 경북 칠곡군
18% 이상 20% 미만 (27)	경남 통영시, 전남 보성군, 경기 광주시, 강원 고성군, 경남 김해시, 경남 함양군, 충남 홍성군, 경기 남양주시, 강원 철원군, 경남 거창군, 강원 삼척시, 경기 양평군, 경북 청송군, 경기 과천시, 전북 순창군, 경기 포천시, 충남 천안시, 경기 김포시, 충남 서산시, 경기 연천군, 경남 하동군, 강원 화천군, 충북 청원군, 경북 성주군, 경북 구미시, 전남 신안군, 충남 아산시
10% 이상 18% 미만 (102)	경북 상주시 등
10% 미만 (2)	부산 기장군, 전남 광양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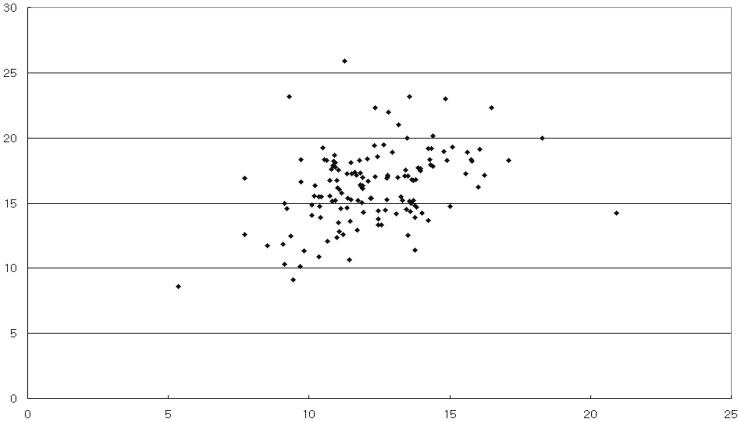
자료: 중앙고용정보원, 「고용보험 데이터베이스」, 원자료.

〈표 II-25〉 3년 평균 일자리 소멸률별 지역 분류

일자리소멸률	지 역
15% 이상(13)	경북 울진군, 경남 통영시, 경기 연천군, 충남 계룡시, 경기 양주시, 강원 철원군, 경북 의성군, 경북 성주군, 경기 포천시, 강원 삼척시, 경북 고령군, 경남 김해시, 충북 충주시
10% 이상 15% 미만 (112)	강원 화천군 등
10% 미만 (15)	전남 여수시, 경기 용인시, 충남 서산시, 전남 영광군, 부산 기장군, 경기 이천시, 전북 무주군, 전남 고흥군, 전북 장수군, 경북 포항시, 충남 예산군, 전남 곡성군, 충북 단양군, 경남 거제시, 전남 광양군

자료: 중앙고용정보원, 「고용보험 데이터베이스」, 원자료.

[그림 II-5] 일자리 창출률과 일자리 소멸률의 상관도



로 일자리가 많이 소멸되는 편이나 일자리수를 가중치로 하였을 때는 이 관계가 약화된다는 것이다.

3) 순고용변화

순고용변화율은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t \text{ 년도의 순고용변화율} = 100 \times (t \text{ 년도의 순고용변화} / (t - 1) \text{ 년도 말의 일자리수})$$

<표 II-26>에 따르면, 2003년도에 급격한 일자리 증가를 경험한 강원 정선군과 전북 무주군이 나란히 최근 3년간 순고용 변화율도 각각 14.7%와 13.9%로 나란히 1, 2위에 오르고 있다. 3년 평균 5% 이상의 증가율을 보이는 지역은 강원 정선군과 전북 무주군을 포함하여 46개 지역에 해당한다.

그리고 감소율을 기록한 지역으로서는 경북 울진군이 2002년의 -30.4%라는 변화율로 3년 평균 변화율이 -6.7%이다. 이 밖에 마산시(-2.4%), 경남 고성군(-1.0%), 강원 횡성군(-0.8%), 강원 영월군(-0.6%), 부산 기장군(-0.4%), 충북 충주시(-0.3%)의 변화율을 보이고 있다.

순고용증가율이 높은 지역의 경우 어떤 업종에서 순고용이 증가하였는지를 보면, 강원 정선군과 전북 무주군은 각각 오락, 문화 및 운동관련 서비스업과 숙박 및 음식점업에서 일자리 창출이 크게 이루어졌다는 사실은 이미 말한 바와 같다. 강원 평창군은 숙박 및 음식점업과 부동산 및 임대업에서 순고용증가가 이루어졌다. 경남 거제시의 경우는 제조업과 건설업의 영향이 크며, 제주 북제주군의 경우는 오락, 문화 및 운동관련 서비스업,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사업서비스업과 교육서비스업에서 순고용증가가 이루어졌다. 충남 서산시의 경우는 제조업, 사업서비스업, 도매 및 소매업에서 순고용증가가 이루어지고, 충남 천안시, 경북 구미시, 충남 아산시, 경기 화성시, 경기 용인시, 충북 진천군, 경기 광주시, 전북 완주군, 충북 청원군, 경기 파주시, 경기 안성시, 경북 칠곡군은 제조업의 순고용증가가 컸다. 이로 볼 때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는 주로 제조업의 순고용증가가 확인되고 있다.

〈표 II-26〉 3년 평균 순고용변화율별 지역 분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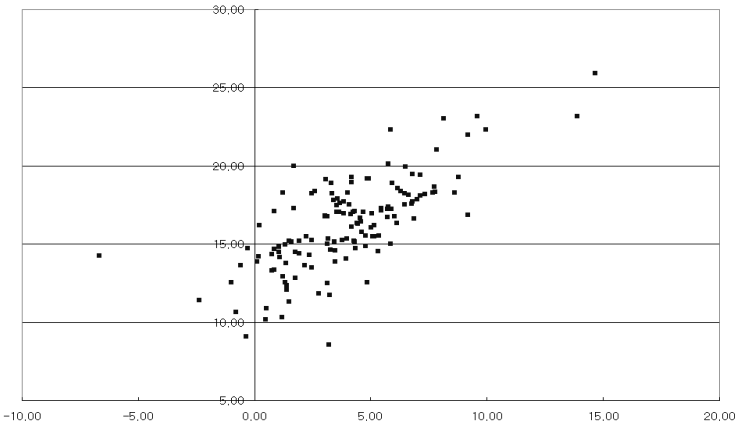
순고용변화율	지 역
10% 이상(2)	강원 정선군, 전북 무주군
5% 이상 10% 미만 (44)	강원 평창군, 인천 옹진군, 경남 거제시, 제주 북제주군, 경남 함양군, 충남 서산시, 경남 의령군, 강원 인제군, 충남 천안시, 경북 청송군, 경남 하동군, 경북 구미시, 충남 아산시, 강원 고성군, 경기 화성시, 경기 용인시, 충북 진천군, 경기 광주시, 전북 완주군, 전남 신안군, 전남 보성군, 전북 부안군, 충북 청원군, 전북 순창군, 경기 파주시, 경기 안성시, 전북 진안군, 경기 양평군, 전남 구례군, 전북 장수군, 충남 계룡시, 경남 남해군, 경북 칠곡군, 전남 진도군, 경북 울릉군, 충남 연기군, 전북 임실군, 전남 화순군, 전남 고흥군, 강원 홍천군, 충남 태안군, 전남 영암군, 전남 장성군, 경기 가평군
5% 미만 증가 (87)	경기 남양주시 등
감소율(7)	충북 충주시, 부산 기장군, 강원 영월군, 강원 횡성군, 경남 고성군, 경남 마산시, 경북 울진군

자료 : 중앙고용정보원, 「고용보험 데이터베이스」, 원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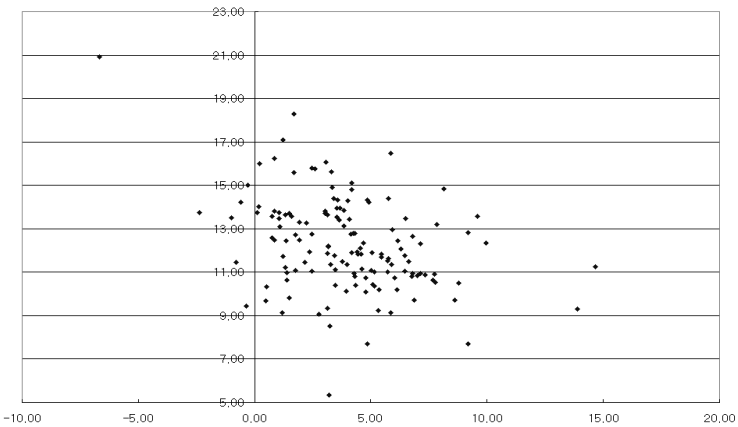
36 농촌지역 노동시장과 고용기회 : 통계분석과 사례분석으로부터 얻는 시사점

3년 평균 일자리 창출률과 순고용 변화율의 상관계수는 0.72로 상당히 높으나 3년 평균 일자리 소멸률과 순고용 변화율의 상관계수는 -0.37로 낮은 편이다. 이 결과에서 알 수 있는 것은 순고용의 증가가 일자리 창출과 관계가 있다는 사실이다. 이상의 사실은 [그림 II-6]과 [그림 II-8]에서 잘 나타나고 있다.

[그림 II-6] 일자리 창출률과 순고용변화율의 상관도



[그림 II-7] 일자리 소멸률과 순고용변화율의 상관도



4) 지역별 특성과 일자리 창출·일자리 소멸·순고용변화의 상관관계
 지역별 일자리 창출률, 일자리 소멸률, 순고용 변화율은 지역별 특성과 어떠한 관련이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각각에 대한 상관계수를 구하였다. <표 II-27>에서 볼 수 있듯이 지역별 특성과는 상관성이 상당히 낮은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지역별 특성을 설명변수로 하고, 일자리 창출률, 일자리 소멸률, 순고용 변화율을 각각 종속변수로 한 회귀분석에서도 계수 추정치의 계수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표 II-27> 지역별 특성과 일자리 창출률·일자리 소멸률·순고용변화율의 상관관계

	창출률	소멸률	변화율
인구	-0.16	0.12	0.10
인구밀도	-0.18	0.00	0.01
종사자수	-0.13	0.10	0.06
1인당 지방세부담액	0.18	0.11	0.11
지가	-0.01	0.08	-0.01
중졸 이하 학력자 비율	0.08	0.16	0.22
전문대졸 이상 학력자 비율	0.06	0.17	0.23
사업체수	-0.21	0.11	0.10
제조업 사업체 비율	-0.05	-0.04	0.01
도소매업 사업체 비율	-0.18	-0.17	-0.08
급여	-0.07	-0.07	-0.07
50인 미만 종사자 비율	0.10	0.09	-0.10
300인 이상 종사자 비율	0.10	0.05	-0.12
주민세	-0.12	-0.01	0.05
인근지역 근접거리	-0.01	0.09	0.12
인근지역 인구	0.02	0.08	0.03
전업농가비율	-0.05	0.01	0.03

5) 순고용변화율에 따른 지역 분류

여기에서는 순고용변화율이 일자리 창출률 및 일자리 소멸률과 어떠한 관계에 있는지를 알아보기로 한다. 말하자면, 높은 일자리 창출률과 높은 일자리 소멸률을 통하여 순고용증가율이 클 수도 있으며, 일자리 창출률은 크지 않으면서도 일자리 소멸률이 0에 가까워 순고용증가율이 크게 나타날 수도 있다. 이와 같은 상황을 고려함으로써 지역개발과 관련된 정책

적 시사점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먼저 <표 II-28>은 순고용증가율에서 상위권(1~35위)에 속하는 지역을 일자리 창출률의 순위와 일자리 소멸률의 순위로 분류한 것이다. 표를 간단히 설명하면, 가로축은 일자리 창출률을 뜻하고, 세로축은 일자리 소멸률을 뜻하게 된다. 표에 따르면, 전북 무주군, 경남 함양군, 충남 서산시, 충남 천안시, 경북 청송군, 경남 하동군, 경북 구미시는 일자리 창출률이 높으면서 일자리 소멸률은 낮은 경우이다. 그런데 여기에서 전북 무주군, 경남 함양군, 경북 청송군, 경남 하동군은 낙후지역으로 분류되는 지역이기도 하다.

<표 II-28> 순고용증가율 상위권(1~35위) 특성

	상위 (1~35위)	중상위 (36~70위)	중하위 (71~105위)	하위 (106~140위)	
하위 (106~140위)	전북 무주군 경남 함양군 충남 서산시 충남 천안시 경북 청송군 경남 하동군 경북 구미시	경남 거제시 경기 화성시 경기 용인시 전북 완주군 경기 안성시	전북 장수군		13개
중하위 (71~105위)	강원 정선군 충북 청원군	충남 아산시 충북 진천군 전남 신안군 전북 부안군 전북 진안군 경기 안성시			8개
중상위 (36~70위)	강원 평창군 인천 용진군 제주 북제주군 강원 인제군 강원 고성군 경기 광주시 전남 보성군 전북 순창군 경기 양평군				9개
상위 (1~35위)	경남 의령군 충남 계룡시 경북 칠곡군	경기 파주시			4개
	21개	12개	1개		

일자리 창출률과 일자리 소멸률이 동시에 높으면서도 순고용증가율이 높은 지역은 경남 의령군, 충남 계룡시, 경북 칠곡군이다. 그런데 대체로 이처럼 일자리 창출률이 높은 지역은 일자리수 자체가 적은 지역이다.

한편 일자리 창출률에서는 중상위권에 속하나 일자리 소멸률에서는 하위권에 속하는 지역이 경남 거제시, 경기 화성시, 경기 용인시, 전북 완주군, 경기 안성시이다. 이들은 일자리수가 많은 편이어서 일자리 창출률이 상위권에 속하지 못하고 중상위권에 속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집단의 높은 일자리 창출과 낮은 일자리 소멸이 어떻게 가능하였는지를 앞으로 추적하는 것이 농촌지역 개발에서 좋은 방향일 것으로 보인다.

다음으로 순고용증가율 하위권(106~140위)의 일자리 창출률과 일자리 소멸률은 어떠한지를 알아보기로 한다. 이는 <표 II-29>에 나와 있다. 무엇보다도 낮은 일자리 창출률이 순고용변화에 영향을 크게 미친다는 것은 일자리 창출률 하위권 24개 지역이 순고용증가율 하위권에 속한다는 사실에서 알 수 있다. 물론 이에 못지 않게 일자리 소멸률 상위권과 중상위권이 각각 14개 지역과 10개 지역이라는 사실에서 낮은 일자리 소멸률의 영향도 무시하기 어렵기는 하다.

표에서 볼 수 있듯이 이처럼 순고용증가율이 낮거나 심지어 감소율을 보이는 하위권 35개 지역의 공통된 특성을 발견하기란 결코 쉽지 않다. 전남 여수시와 경북 포항시와 같이 대규모 공단이 입주한 지역이 있는가 하면, 강원 영월군이나 경북 문경시와 같이 낙후지역으로 분류되기도 하는 지역이 있기 때문이다. 아마 이와 같은 사실 때문에 앞에서 일자리 창출률, 일자리 소멸률 그리고 순고용변화율에 대하여 지역적 특성이 보이는 상관계수가 극히 낮았던 것으로 추측된다.

<표 II-29> 순고용증가율 하위권(106~140위) 특성

	상위 (1~35위)	중상위 (36~70위)	중하위 (71~105위)	하위 (106~140위)	
하위 (106~140위)				전남 여수시 경남 사천시 경북 포항시 대구 달성군 전남 영광군 부산 기장군	6개

〈표 11-29〉의 계속

	상위 (1~35위)	중상위 (36~70위)	중하위 (71~105위)	하위 (106~140위)	
중하위 (71~105위)				강원 양구군 충북 보은군 경남 양산시 경남 창원시 강원 횡성군	5개
중상위 (36~70위)			경남 통영시 충남 서천군	강원 강릉시 경북 영주시 인천 강화군 경북 영천시 경북 경산시 경북 경주시 충북 괴산군 경남 고성군	10개
상위 (1~35위)	경남 통영시 경기 연천군	경북 고령군 경기 양주군	충북 제천시 경북 문경시 전북 정읍시 경북 의성군 충북 충주시	전북 군산시 전북 익산시 강원 영월군 경남 마산시 경북 울진군	14개
	2개	2개	7개	24개	

2. 지역별 고용기회의 결정

지금까지 지역별 종사자수를 이용한 종사자수의 변화 그리고 고용보험 피보험자수를 이용한 일자리 창출과 소멸을 알아보았다. 특히 일자리 창출과 일자리 소멸 그리고 순고용변화가 지역별 특성으로 설명하기가 어렵다는 사실도 아울러 확인하였다. 이제 이 장에서는 다른 분석 모형을 이용하여 지역별 고용기회가 어떠한 요인에 영향을 받고 있는지를 살펴보기로 한다.

가. 분석모형의 설명

1) 분석모형

흔히 지역의 고용기회를 결정하는 요인을 고려할 때 등장하는 가설이 “사람이 일을 따른다(people follow jobs)”라는 가설과 “일이 사람을 따른

다(jobs follow people)”라는 가설이다. 이 때문에 인구와 고용기회는 동시에 결정되는 것으로 간주하고, 이 가설을 검증할 수 있도록 분석 모형을 제시한 연구가 Carlino and Mills (1987)이다.

이들에 따르면, t 년도의 인구, P_t 와 t 년도의 고용 E_t 는 상호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다음과 같은 식이 될 것이다.

$$\begin{aligned} P_t &= F(E_t, P_{t-1}, X_t) \dots\dots\dots (\text{II}-1) \\ E_t &= G(P_t, E_{t-1}, Z_t) \end{aligned}$$

먼저 P_t 는 E_t 와 전년도 인구인 P_{t-1} 그리고 다른 설명변수인 X_t 에 의하여 결정되며, E_t 는 P_t 와 전년도 고용인 E_{t-1} 그리고 다른 설명변수인 Z_t 에 의하여 동시에 결정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P_t 와 E_t 는 분석 모형에서 내생적으로 결정되는 변수이며, 나머지 P_{t-1} , E_{t-1} , X_t , Z_t 는 외생 변수(exogeneous variable)이다.

무엇보다도 Carlino and Mills(1987)는 기업과 가계가 불균형에 대한 조정을 즉각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시간에 걸쳐 하는 것으로 가정하고 있다. 말하자면, 기업은 어떤 지역에 입주할 결정하거나 이전을 결정하기까지 이윤이 균등화되는 원리에 따르게 되고, 가계도 마찬가지로 가계의 효용이 현재의 주거지와 대안 주거지 사이에 균등화될 때 이주를 결정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가정에서 균형상태의 인구와 고용이 동시에 결정된다는 것이 Carlino and Mills(1987)의 주요 논점이라 할 수 있다.

인구와 고용기회의 동시적 결정 모형에 기초한 연구는 약간의 변형은 있을지라도 기본적인 틀로서 Carlino and Mills(1987)의 모형을 따르고 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도 Carlino and Mills(1987)의 모형에 기초하여 분석하기로 한다.

2) 설명변수

인구 P_t 에 영향을 미치는 설명변수로서 먼저 E_t , P_{t-1} 가 포함된다는 사실은 이미 말하였다. Carlino and Mills(1987)는 이 밖의 설명변수로서 흑인 비율, 주간(州間) 고속도로 포장률, 1인당 지방세 부담액, 가구소득,

노조조직률, 지방공채 발행액 등이다.

이 연구에서는 설명변수에 다음과 같은 변수들을 포함하고 있다. 먼저 인근지역의 상황을 나타내는 대리변수(proxy variable)로서 인근지역 인구, 인적자본(human capital)의 축적 수준을 나타내는 변수로서 중졸 이하 학력자 비중(2000년)과 전문대졸 이상 학력자 비중(2000년)⁹⁾, 농업의 영향을 나타내는 대리변수로서 전업농가 비중, 300인 이상 사업체 비중, 인구밀도(2003년), 지역의 소득을 나타내는 대리변수로서 1인당 주민세 부담액(2002년), 정주 비용을 나타내는 대리변수로서 1인당 지방세 부담액(2003년)을 포함하고 있다.

그리고 고용 E_t 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서 P_t 와 E_{t-1} 이외에 인근지역 인구, 중졸 이하 학력자 비중과 전문대졸 이상 학력자 비중, 전업농가 비중과 300인 이상 사업체 비중을 포함하였다.

Edmiston(2004)은 이 밖에도 고용 E_t 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서 사업체수와 변화 등을 고려하고 있다. 이 연구에서도 Edmiston(2004)과 마찬가지로 2002년의 사업체수, 2003년의 사업체수 변화(= 2003년의 사업체수 - 2002년의 사업체수), 고용보험 DB에서 추계한 순고용증가율(2002~2004년의 평균)을 포함하였다. 이로부터 기존의 사업체가 고용에 미치는 영향, 사업체의 변화가 고용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근로자수의 변화가 전체 취업자의 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할 수 있게 된다.

나. 분석 결과와 해석

1) 분석 결과

분석 결과를 나타내고 있는 <표 II-30>에 따르면, 먼저 인구에 대하여 종사자수가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동시에 종사자수에 대해서도 인구가 영향을 미치고 있음이 확인된다. 곧 “사람이 일을 따른다(people follow jobs)”와 “일이 사람을 따른다(jobs follow people)”라는 가설이 모두 입증

9) 이로써 고졸 학력자 비중이 일종의 비교집단(reference group)이 된다. 그리고 이들 비중은 2003년도 주민의 교육수준에 대한 통계가 없어 2000년의 인구센서스 자료에 기초하여 계산하였다.

이 되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농촌지역의 인구가 정주하는 데는 고용기회가 상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분석 결과가 말해 주고 있다.

다음으로 종사자수에 대하여 인근 지역의 인구가 미치는 영향도 확인된다. 이는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다. 인근 지역에 거대시장이 존재하여 이 시장의 생산물에 대한 수요가 노동에 대한 파생수요로 나타난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가능한 해석은 통근을 통하여 인근 지역의 주민이 해당 지역에 노동을 공급하는 경우로도 해석할 수 있다.

지역의 인적자본 수준을 나타내는 중졸 이하 학력자 비중과 전문대졸 이상 학력자 비중은 계수추정치가 모두 정(+)의 부호를 보일 뿐만 아니라 통계적으로 유의하다. 이는 저숙련 노동력에 대한 수요와 숙련노동력에 대한 수요가 지역별로 다르게 나타날 것으로 추정되지만, 이 분석 결과로

〈표 11-30〉 인구와 고용의 상호영향성 분석 결과(2003)

	인구 (2003)		종사자수 (2003)	
	계수추정치	P> z	계수추정치	P> z
상수	-14,209.99(4,481.819)	0.002	-5,152.626(1,308.427)	0.000
종사자수(2003)	0.083(0.037)	0.025	-	-
인구(2003)	-	-	0.015(0.001)	0.009
인구(2002)	0.996(0.013)	0.000	-	-
종사자수(2002)	-	-	0.969(0.015)	0.000
인근지역 인구	1.299(0.206)	0.000	0.315(0.073)	0.000
중졸 이하 비중	126.672(48.103)	0.008	57.202(15.021)	0.000
전문대졸 이상 비중	536.806(237.494)	0.024	326.213(75.430)	0.000
전업농가비중	-5,282.331(5551.137)	0.341	-2,735.922(1,587.065)	0.085
300인이상사업체비중	-107.549(73.850)	0.145	54.919(23.837)	0.021
인구밀도(2003)	-4.033(3.120)	0.196	-	-
1인당 주민세 부담액	0.956(4.905)	0.846	-	-
1인당 지방세 부담액	0.008(0.002)	0.000	-	-
사업체수(2002)	-	-	-0.224(0.104)	0.031
사업체수 증가(2003)	-	-	3.029(0.544)	0.000
순고용증가(3년 평균)	-	-	1.620(0.204)	0.000
결정계수	0.9986		0.9988	

주: ()안의 수치는 표준오차임.

는 구분하기가 어렵다. 다만 전문대졸 이상 학력자 비중의 계수추정치가 상대적으로 큰 것으로 볼 때, 지역 내의 인적자본 수준을 높이는 것이 지역내의 고용기회를 증대시키고, 따라서 정주 인구도 늘어나는 연결고리가 되는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이와 더불어 300인 이상 사업체의 비중이 정(+의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 이는 대규모 사업체의 입주 자체가 고용기회를 창출할 뿐만 아니라 관련된 사업체의 확대를 통한 고용기회의 창출 효과도 수반되기 때문인 것으로 추측된다.

한편 사업체수(2002년)가 부(-)의 효과를 보이는 것은 의외이다. 이는 영세사업체에 대한 대리변수(proxy variable)인 것으로 보인다. 곧 사업체수는 많지만, 이를 통한 고용효과는 그리 크지 않다는 것이다. 그렇지만 사업체수의 증가(2003년)는 정(+의 효과를 보이고 있는데 이는 쉽게 예상할 수 있는 사항이라 하겠다.

그리고 순고용증가(3년 평균)가 종사자수에 정(+의 효과를 보이는 것은 근로자와 이들과 관련되는 자영업 관련 종사자의 연관성을 짐작할 수 있다. 이는 고용기회의 확대가 소비 기반의 확충을 통하여 다시 고용기회의 확대로 연결되는 사실을 말하여 준다고 보겠다.

2) 분석 결과의 해석

이상에서 보았듯이 분석 결과에서 알 수 있었던 사실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인구와 고용기회는 상호 영향을 미친다. 둘째, 인근 지역의 상황(인구를 대리변수로 한 경우)이 고용기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셋째, 지역의 인적자본 축적 수준, 특히 고학력자가 높을수록 고용기회가 늘어난다. 넷째, 300인 이상의 대규모 사업체가 입주하는 경우도 고용기회에 긍정적이다. 다섯째, 근로자의 증가가 지역 전체 취업자 증가와 연결된다.

이상의 분석 결과를 해석하여 보기로 하자. 먼저 고용기회가 인구에 미치는 영향이 인구가 고용기회에 미치는 영향보다 상대적으로 크다는 결과로 볼 때, 농촌지역 개발에서 고용기회의 역할을 재확인하게 된다. 말하자면 지역의 일자리 창출이 농촌지역 개발의 필요조건이 된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전제조건에서 나머지 분석 결과는 어떠한 방식으로 일자리

창출이 가능한지를 알려주고 있다. 먼저 고학력자의 고용효과가 높다는 결과로 볼 때, 장기적으로 농촌지역이 인적자본 축적 수준을 제고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위의 함안군 사례에서도 나타나듯이 기능 인력의 부족이 사업체의 농촌지역 입주를 어렵게 하며, 결국 인근 지역에서 기능인력을 보충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그렇다고 해서 인근 지역에서 노동력이 공급된다는 것이 반드시 부정적인 것은 아니다. 인근 지역의 인구가 고용효과에 긍정적이라는 결과에서 볼 때, 인근 지역과 어떠한 보완관계를 가지도록 일자리 창출이 이루어질 것인가가 관건이라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보완관계는 특히 대규모 사업체를 중심으로 생산과 소비의 공동네트워크를 형성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 분석 결과의 또 다른 시사점이기도 하다. 곧 300인 이상의 사업체가 긍정적인 고용효과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상의 내용은 일자리 창출을 통한 농촌지역 개발의 장기적 방향을 제시한 것이라면, 단기적인 대책도 아울러 생각하여야 할 것이다. 이는 함안군 사례에서 지적하고 있듯이 현재의 노동력을 활용하는 방안이다. 곧 분석 결과에서 저학력자의 높은 비중도 고용효과에는 긍정적이다. 물론 고학력자의 비중에 비하여 효과는 낮은 것이 사실이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저학력자 그리고 분석에서는 제외되었지만 여성 노동력을 그대로 농업 부문에 잠재적 실업자로 남아 있도록 하기보다는 이들을 농외 부문의 일자리로 끌어내는 것이 필요하다.

Ⅲ. 국가산업단지 사례조사를 통해 본 농촌지역 고용 : 충청남도 당진군

1. 머리말

가. 문제 의식

근래 들어 사회 전반적으로 고용에 대한 관심이 커졌다. 1990년대 말 외환위기 전까지만 해도 고용은 물가, 성장, 수출 등 다른 거시경제 변수들에 비해 관심을 덜 받았다. 외환위기 이후 산업 전반에 걸쳐 구조조정이 진행되면서, 실업이 주요 사회 문제로 부각되었다. 최근에는 오랫동안 경기가 회복되지 못하면서, 이전 정도의 성장과 고용창출이 어려워진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의 소리도 많이 들린다.

현 정부는 국가 균형발전을 주요 국정과제로 삼았다. 수도권에 집중된 경제력을 몇 개의 권역으로 퍼뜨려 전국을 골고루 발전시킨다는 전략이다. 이 전략 아래 행정수도 이전이 추진되었고, 각 권역별로 지역 혁신클러스터가 지정되었으며 기업도시가 선정되었다. 지역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거주하고 싶은 지역이 되어야 할 것이고, 매력적인 거주지가 되기 위해서는 거기에서 경제적 필요를 충족시킬 수 있어야 한다. 경제생활이란 소득을 벌어서 쓰는 것, 즉 생산과 소비로 줄여 말할 수 있다. 따라서 한 지역이 발전한다는 것은 생산과 소비의 기반을 갖춘다는 것 말고 다른 말이 아니다.

한 지역의 생산과 소비 기반은 서로가 서로를 전제하는 관계에 있다. 물론 생산 기반 없이 소비 기반만 있는 지역이나 소비 기반 없이 생산 기반만 있는 지역이 없는 것은 아니다. 앞의 예로 대도시 바로 외곽의 신도시를 들 수 있고, 뒤의 예로 공단 지역을 들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들도 좀 넓게 보면, 좀더 넓은 권역에서 생산과 소비가 연계되어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우리 사회의 지방 특히 농촌이 지닌 문제는 어느 것이 먼저인지는 불명확하지만 생산과 소비의 기반이 약해 그것을 찾아 도시로 떠나고 또 떠나는 악순환으로 요약할 수 있다.

한 지방이 생산 기반 없이 소비 기반을 갖춰 사람들을 끌어들이는 것은 현실적으로 가능하지도, 장기적으로 바람직하지도 않다. 다시 말해서 앞서 말한 악순환의 고리는 생산 쪽에서 먼저 끊는 것이 현실적인 대안이다. 현대 경제에서 생산의 주력은 두말할 것 없이 기업이다. 산업으로서 농업이 점점 더 어려워지는 현실을 감안할 때, 농촌 지역도 예외가 아니다. 따라서 한 지역이 생산 기반을 갖추는 문제는 그 지역 안으로 기업을 끌어들이는 문제로 환원해도 큰 무리가 없다.

한 지역에 기업을 끌어들이기 위해서는 자연적 조건을 활용하는 것만으로는 안 되고 인위적 조건을 창출하는 노력을 함께 해야 한다. 한 기업을 놓고 여러 지역이 서로 유치하기 위해 치열하게 경쟁하는 요즘의 상황을 감안하면, 이 두 가지 조건을 함께 구비하는 것은 필수적인 일이다. 물론 주어진 자연적 조건만을 활용한 지역 특화산업의 성공 사례가 없는 것은 아니다. 지역 특산물을 전국 시장을 대상으로 상품화한 몇몇 경우가 그 대표적 사례다. 그러나 이러한 사례들은 대부분의 지역에 일반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모형이 되지 못하며, 지방 산업의 발전을 바라는 사회의 전반적인 기대 수준에도 미치지 못한다.

한 지역에 기업을 끌어들이고 산업을 일으키려는 것은 생산 기반을 갖추려는 것이다. 그리고 생산 기반을 갖추려는 것은 소득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만들려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농촌 지역이 소득을 반드시 기업에서 얻어야 하는가라는 의의를 제기할 수는 있다. 이러한 의의를 제기하는 사람들은 아마 생계형 사업을 염두에 두고 있을 것이다.

그런데 생계형 사업을 중심으로 한 지역의 발전을 도모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현실적으로 생계형 사업은 주로 농업과 서비스업에 한정된다. 그동안 계속 악화되어 온 농촌의 현실을 감안할 때, 농업 관련 생계형 사업은 일반적인 대안이 될 수 없다. 그렇다고 생계형 서비스업이 대안이 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생계형 사업으로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는 대부분 최종소비재로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이미 상당한 정도 소비 기반이 있는

지역이 아니면 생계형 서비스업이 발전할 수 없다.

한 지역이 자연적 조건을 활용하고 인위적 조건을 창출해 기업을 끌어들이고 산업을 일으켰다고 해 보자. 이렇게 생산 기반을 성공적으로 갖췄다고 해서 산업 발전이 지역 발전으로 이어질 것인가? 지금까지 우리 사회의 경험으로 보면 전혀 그렇지 않다. 그랬다면 국가 균형발전이라는 문제는 애초에 제기되지도 않았을 것이다. 어느 정도 생산 기반을 갖추면서 소비 기반을 함께 갖춰 나가는 노력이 없다면 지역 발전을 이룰 수 없다. 생산 기반은 지역 발전의 필요조건일 뿐 충분조건이 아니다. 일반적으로 소비 기반보다 생산 기반을 강조하는 것은 지역의 발전을 도모할 때 생산 기반을 갖추는 데서부터 시작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할 뿐이다.

한 지역에 소비 기반이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그것을 소비할 인구가 있어야 한다. 그런데 소비 기반 없이 생산 기반만 갖춘 지역은 그런 전제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생산 기반을 갖춘 지역은 고용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잠재적으로 인구가 늘어날 수 있는 지역이 된다. 다시 말해서 소비 기반은 잠재적인 주민을 근거로도 만들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일단 소비 기반이 들어서기 시작하면, 그 지역에 거주하면서 소비하는 인구가 늘어나기 시작할 것이다.

인구가 늘어나면 생산과 소비의 선순환이 일어난다. 이러한 선순환은 크게 두 과정으로 나타난다. 하나는 소비가 늘면서 서비스업의 생산을 자극하고, 서비스업의 발전이 소득과 인구의 증가를 매개로 다시 소비를 자극하는 과정이다. 또 하나는 인구가 늘면서 기업이 노동력 구하기가 쉬워지고, 이러한 조건이 그 지역으로 기업을 불러들이는 과정이다. 앞의 과정을 생산의 수요 여건이 좋아지는 효과라고 부른다면, 뒤의 과정은 생산의 공급 여건이 좋아지는 효과라고 부를 수 있다.

나. 연구 내용

이 글은 충청남도 당진군을 사례로 본 지역고용에 대한 연구 보고서다. 일반적으로 사례 연구는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다. 하나는 일반화된 가설을 만들어내기 위해 사례 연구를 통해 현실을 들여다보는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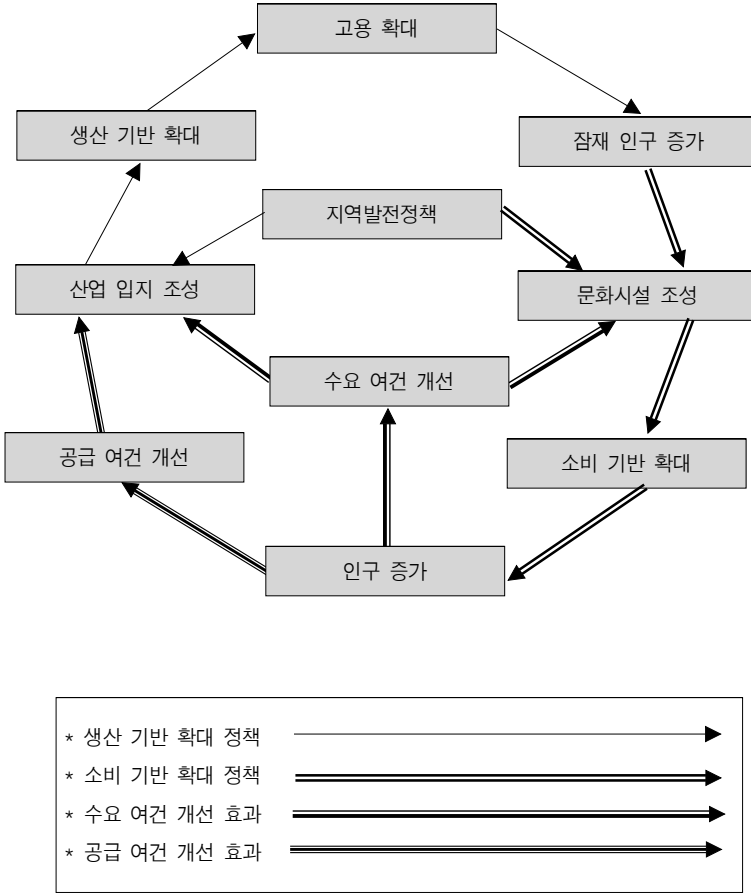
이다. 또 하나는 일반화된 가설이 있고, 사례 연구를 통해 그 가설을 확인하는 것이다. 이렇게 나눠 본다면, 이 연구는 두 가지 성격을 반반 정도씩 가지고 있다.

한편에서 보면, 이 연구는 가설을 세우기 위한 작업으로 볼 수도 있다. 앞서 문제 의식에서 서술한 논의들은 아직 반증가능성(falsifiability)을 만족시킬 정도로 정련된 가설들은 아니지만 현실을 파악할 때 준거가 되는 예비 가설들로 이루어진 ‘지역발전 모형’(이하 ‘지역발전 모형’으로 줄임) 정도는 된다. 다른 한편에서 보면, 이 연구는 가설을 확인하는 작업으로 볼 수 있다. 이 연구는 이 연구와 함께 이루어진 ‘전국 수준의 통계 분석’에서 검증된 가설들을 당진군이라는 특정 지역 안에서 좀더 구체적으로 살펴본다는 의미가 있다.

따라서 이 연구는 크게 두 가지 내용을 가진다. 하나는 ‘지역발전 모형’을 이루는 예비 가설들을 당진군에서 확인하고 그 논리를 설명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전국 수준의 통계 분석’에서 검증된 사실들과 가설들을 당진군에서 다시 확인하고 그 논리를 설명하는 것이다. 앞의 작업은 한 지역의 발전에 대해 정책을 추진하는 데서부터 성과를 거두는 데까지 이어지는 전 과정을 모두 포괄해서 논의한다는 데 의의가 있고, 뒤의 작업은 고용기회에 대한 일반적인 가설들을 우리나라의 현실에서 검증하고 그 결과를 특정 지역에서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데 의의가 있다. 그러나 이 두 가지 작업은 완전히 별개의 작업도 아니고 일부 중복되는 부분도 있어, 그 결과를 종합해서 논의하면서 그때그때 관련 논점을 강조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질 것이다.

이 연구는 앞서 문제 의식에서 예비 가설의 형태로 논의한 관점들에 따라 당진군의 산업, 고용, 인구 변동의 실태를 그려 나가는 구조로 되어 있다. 그리고 이 예비 가설들을 서로 연결해 통합하면 하나의 가설적인 ‘지역발전 모형’이 된다. 이 모형을 그림으로 나타낸 것이 [그림 III-1]이다.

[그림 III-1] '지역발전 모형'의 도해



이 '지역발전 모형'을 이루는 예비 가설들을 다시 한번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지역발전 모형'을 이루는 예비 가설들>

- 한 지역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생산과 소비 기반을 갖추어야 한다.
- 지역발전 전략은 생산 기반을 갖추는 데서 시작해야 한다.
- 생산 기반을 갖추려는 정책적 노력에서 핵심은 지역 안으로 제조업 기

업을 끌어들이는 것이다.

- 지역 안으로 기업을 끌어들이기 위해서는 자연적 조건을 활용하는 것뿐 아니라 인위적 조건을 창출하는 정책적 노력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 기업이 늘어나는 곳은 잠재적으로 거주 인구가 늘어날 수 있는 지역이 된다.
- 잠재적으로 거주 인구가 늘어날 수 있는 지역에서는 소비 기반이 만들어지기 시작할 수 있다.
- 소비 기반이 늘어나는 지역에서는 실제로 거주하는 인구가 늘어난다.
- 지역 안에 거주 인구가 늘어나면, 생산물 판매 여건과 노동력 조달 여건이 좋아지면서 또 다시 기업을 불러들이는 선순환이 일어난다.

이 연구는 농촌 지역간 고용기회의 차이에 대한 ‘전국 수준의 통계 분석’에서 검증한 가설들을 당진군이라는 특정 지역에서 다시 확인하고 그 결과를 설명하는 지역사례 연구이기도 하다. 이에 대한 논의는 별도로 하기보다 ‘지역발전 모델’에 대한 논의 속에서 그때그때 관련 사실들을 지적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질 것이다. 따라서 논점을 분명히 하기 위해서는 ‘전국 수준의 통계 분석’에서 확인된 것들을 미리 정리해 둘 필요가 있다. 그 내용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하나는 다른 군과 구별되는 당진군의 고용 특성이고, 또 하나는 고용기회에 대한 일반적인 가설들을 검증한 결과다. 위의 두 가지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전국 수준의 통계 분석’에서 확인된 당진군의 고용 특성들>

- 사업체수는 많은 편인데, 제조업체수는 적은 편이다.
- 중졸 이하의 저학력자나 전문대졸 이상의 고학력자는 적고 중간 정도의 학력자가 많다.
- 300인 이상 사업체가 많은 편이다.
- 사업체수, 근로자 300인 이상 사업체수, 사업체당 평균 종사자수는 많은 편이지만(사업체수 2위, 근로자 300인 이상 사업체수 2위¹⁰⁾, 사업체당

10) 도농 복합시를 제외한 경우의 순위이다.

평균 종사자수 5위)¹¹⁾, 사업체수 증가율, 제조업체 비중, 종사자수, 300인 이상 사업체 종사자 비율, 종사자수 증가율은 높거나 많다고 할 수 없다.

- 고용보험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해 파악한 2002~2004년 기간 동안의 일자리 창출수와 일자리 소멸수는 모두 많은 편이다(일자리 창출수 7위, 일자리 소멸수 6위)¹²⁾.

<‘전국 수준의 통계 분석’에서 검증된 고용기회에 대한 가설들>

- ‘일자리가 사람을 따르기’(jobs follow people)보다는 ‘사람이 자리를 따르는데’(people follow jobs) 경향이 있다.
- 고용기회가 늘어나면 인구가 늘어나지만, 인구가 많은 지역이라고 고용기회가 많지는 않다. 즉 고용이 인구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만, 인구가 고용에 미치는 영향은 작다.
- 인구 밀도가 높은 지역일수록, 제조업의 비중이 작은 지역일수록, 소규모 사업체에 종사하는 종사자의 비율이 높은 지역일수록 고용기회가 많다.

다. 연구 방법

이 연구는 크게 두 부분의 작업으로 나누어진다. 하나는 [그림 III-1]의 모형에 따라 당진군의 산업 입지 변동, 사업체 변동, 고용·인구 변동 등을 관찰하는 작업이고, 또 하나는 전반부에서 관찰한 사실들을 [그림 III-1]의 모형에 비추어 논리적으로 해석하고 평가하는 작업이다. 물론 이 과정에서 ‘전국 수준의 통계 분석’에서 확인된 당진군의 고용특성들과 고용기회에 대한 일반적 가설들의 검증 결과는 관련 사실들을 서술하면서 함께 설명한다.

두 가지 작업에서 주로 쓰는 방법은 다르다. 첫째 작업에서는 주로 통계를 포함해 각종 자료들을 분석해 이 연구에서 확인하려는 사실들을 찾아

11) 앞의 각주 10)을 참고할 것.

12) 앞의 각주 10)을 참고할 것.

내는 방법을 쓰고, 둘째 작업에서는 전반부에서 찾은 사실들을 해석하고 평가하면서 사실들 사이에 인과관계를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것들을 주로 지역 관계자들과의 면담에서 확인하는 방법을 쓴다.

첫째 작업에서 쓰는 각종 통계와 자료들은 주로 통계청 (<http://kosis.nso.go.kr/>), 당진군청 (<http://www.dangjin.go.kr/>), 당진군의회 (<http://www.djcouncil.go.kr/>), 이클러스터 산학연 통합 정보망(<http://www.e-cluster.net/>), 충청남도산업정보망 (<http://www.cndb.or.kr/>), 한국산업단지공단 (<http://www.kicox.or.kr/>), 공장설립관리시스템(<http://www.femis.go.kr/>) 등에서 구할 수 있는 것들이며, 면담 대상자는 당진군에서 산업과 고용과 관련된 일을 하는 정부와 민간 관계자들이다.

사례 연구에서는 일반적으로 설문 조사를 많이 한다. 그런데 이 연구에는 설문 조사가 알맞지 않다. 이 연구의 주제인 지역고용과 관련해 근로자들의 실태와 의식이 연구의 관심이라면 설문 조사가 알맞을 것이다. 그러나 이 연구의 초점은 근로자의 구직이 아니라 기업의 고용에 맞춰져 있다. 다시 말해서 근로자의 실태가 아니라 기업의 고용창출 능력이 이 연구에서 관심을 두는 바다.

이 연구에서 확인하려는 사실들이나 그 사실들을 해석하는 데 필요한 정보들은 정형화된 설문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것들이 아니다. 이 연구에서 설문 조사를 한다면 사업체의 운영 관리자를 대상으로 하게 되었을 것이다. 그 경우 사업체의 운영자나 관리자에게서 얻을 수 있는 정보는 사업 업종과 규모 같은 사업체의 프로파일 그리고 사업을 운영 관리하면서 느낀 어려운 점이나 개선되어야 할 점 등이 될 것이다. 그런데 사업체의 프로파일은 이 연구에서 활용하는 각 기관의 데이터베이스에 잘 정리되어 있다. 그리고 답변자들의 의견도 이 연구가 제기하는 복합적인 문제를 푸는 데는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 연구에서 필요한 것은 다수의 주관적 의견보다는 소수의 객관적 분석이다.

이 연구에서 관계자와의 면담을 통해 얻으려고 하는 것은 일반적인 설문 조사에서 얻을 수 있는 단순한 사실들이 아니라, 각종 자료들에서 관찰한 사실들을 해석하고 평가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의문들에 대한 답변들이다. 이러한 복합적인 문제들에 대해서는 간략하고 정형화된 형식의 설문

조사를 통해 답변을 얻는 것이 기술적으로 쉽지 않을 뿐 아니라, 현실적으로도 성의 있고 신뢰할 수 있는 답변을 기대하기 힘들다.

2. 산업의 변동

가. 산업 입지의 변동

1) 지리 조건

당진군은 충청남도 북부의 연안 평야 지대로 동쪽으로는 아산시와 평택시(경기도), 서쪽으로는 서산시, 남쪽으로는 예산군과 서산시, 북쪽으로는 화성시(경기도)와 붙어 있다. 행정 구역은 [그림 III-2]에서 보듯이, 2개 읍(당진, 합덕), 10개 면(고대, 석문, 대호지, 정미, 면천, 순성, 우강, 신평, 송악, 송산)으로 이루어져 있다.

당진군은 서울에서 100km 정도 떨어진 거리에 있다. 서울 지역과는 서해안고속도로와 경부고속도로를 통해 이어진다. 서해안고속도로의 송악 IC는 군 지역이며, 경부고속도로의 안성 IC는 30km 정도 떨어진 거리에 있다. 철도 교통은 30km 정도 떨어진 거리에 있는 평택역을 통해 경부선과 연결된다. 그 밖에 부여와 의정부를 잇는 39번 국도, 서산과 가평을 잇는 45번 국도를 통해서도 수도권 지역과 연결된다.

당진군에서 경인 지역에 이르는 길에는 평택시, 화성시, 아산시가 이어 있다. 세 곳 모두 대규모 사업장을 포함해 공단을 끼고 있다. 한편 당진군의 남쪽은 예산군이다. 이렇게 보면 당진군은 북쪽의 공업 지역과 남쪽의 농업 지역 사이에 끼어 있는, 경인공업 지역의 남방 한계선에 위치한 지역이라고 할 수 있다.

당진군에서 북쪽으로 경인 지역까지는 자동차, 기계, 화학, 전자, 섬유, 식품 공업이 발달했으며 대규모 사업장도 많은 지역이다. 평택시에는 LG 전자(평택공장), 영진약품, 매일유업, 한국야쿠르트 등이 있으며, 평택항 외에도 주요 사회간접자본 시설로 중유 및 액화천연가스 겸용 평택화력발전소(시설용량 140만kW)가 있다. 화성시는 1980년대 수도권 공장이 이전하면서 공업 지역으로 발전했으며, 기아자동차, 금호전기, 일화모직 등이

[그림 III-2] 당진군 읍면의 위치



자료 : 당진군청 (<http://www.dangjin.go.kr/>)

있다. 안산시는 처음부터 공단 지역으로 개발된 지역이다.

당진군은 이름에 흔적이 남아 있듯이 삼국시대 당과의 교역항이라는 역사적 배경을 가진 지역이다. 당진항은 2005년부터 아산만을 사이에 두고 마주보는 평택항과 합쳐져 아산항(평택-당진항)이 되었다. 현재 아산항은 인천항과 군산항에 이어 서해안에서 세 번째로 큰 항이다. 앞으로 아산항은 남한 지역 서해안의 중앙에 위치한다는 지리적 이점을 살려 중국과 북한으로 향하는 무역 전진기지로 발전할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평택항은 평택시 포승면 원정리에 있는 항구다. 평택항은 원정항이라는 작은 어항에서 출발해 1980년대 전반 LNG항으로 발전했고, 지금은 인천항을 대체하는 아산항의 일부가 되었다. LNG항은 1980년대 전반 석유 의존도를 낮추려는 정부의 에너지 전략에 따라 건설되었다. 평택에 LNG항이 건설되게 된 데는 다른 후보지에 비해 투자비가 적게 든다는 점과 평택화력발전소라는 대량 수요처가 가까이 있다는 점이 크게 작용했다.

아산항은 1991~2011년까지 4단계 사업으로 평택시 포승면에 건설 중이다. 아산항의 확장은 아산국가산업단지의 조성 과 함께 인천항 대체전략

의 한 축을 이룬다. 인천항에 집중되어 있는 화물을 분산 처리하기 위해서는 입출항 화물뿐 아니라 화물의 주요 수급처를 경인 이외 지역으로 분산 시킬 필요가 있다. 아산국가산업단지는 수도권에 과도하게 집중되어 있는 제조업체들을 이전시킴으로써 경기도 남부와 충청남도 서북부를 개발한다는 취지에서 건설되었다.

아산항은 2002년 말 기준으로 안벽의 길이가 2.3km, 접안 능력이 17선석, 하역 능력이 980만 톤에 이르는 큰 항이다. 하역 능력을 기준으로 보면, 이 항의 규모는 인천항의 17%, 군산항의 84% 정도로 볼 수 있다. 주요 취급 화물은 유류가 전체의 62%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며, 그 밖에 모래가 18%, 자동차가 13%, 철재가 9% 정도의 비중을 차지한다. <표 III-1>은 아산항을 서해안의 두 경쟁 항인 인천항과 군산항과 시설 능력 면에서 비교한 것이다.

당진항만 보면, 2008년까지 7선석의 부두가 추가 건설될 전망이다. 그 내역은 동부제강 2선석(3만 톤, 5만 톤), INI스틸 2선석(3만 톤, 5만 톤), 당진화력 1선석(17만 톤), 당진탱크터미널 액체화물부두 1선석(5만 톤), 고대지구 1선석(3만 톤) 등 고대지구를 빼면 모두 전용항이다.

<표 III-1> 아산항과 인천항의 시설 능력 비교 (2002년 말)

	아산항	인천항	군산항
항내 수면적(평방km)	123	268	115
방파제(m)	240	2,233	2,385
안벽(km)	2.3	10.8	3.8
물양장(m)	330	2,229	1,239
접안 능력(선석)	17	76	25
하역 능력(만 톤)	980	5,680	1,170
주요 취급 화물(%)	유류(62) 모래(18) 자동차(13) 철재(9)	유류(33) 양곡(7) 철재(6) 자동차(6)	유류(25) 양곡(6) 목재(15) 시멘트(12)

자료: 해양수산부 (<http://www.momaf.go.kr/>)

해양수산부 항만국 (<http://www.ports.go.kr/>)

2) 국가산업단지

당진군에는 국가산업단지가 두 곳 있다. 하나는 아산국가산업단지로 경기도 평택시와 충청남도 당진군에 걸쳐 있고, 또 하나는 석문국가산업단지로 아직 조성 중에 있다. <표 III-2>는 당진군내 국가산업단지의 주요 내역을 요약한 것이다.

<표 III-2> 당진군내 국가산업단지의 주요 내역

	아산국가산업단지	석문국가산업단지
위치	경기포승지구(평택시 포승면) 충남고대·부곡지구(당진군 송악면)	충남 당진군 석문면, 고대면
특징(목적)	철강, 기계, 자동차 관련 업종 (수도권 공장 이전)	전 제조업 (나후 지역 개발)
조성 기간 (사업비)	1992.12~2005.12 (8,500억 원) - 1998.12 포승지구(1단계) 준공 - 1999.01 고대지구 준공 - 2000.12 부곡지구 준공 - 2002.05 포승지구(2단계) 준공	1992~2008 (1조 2,300억 원) - 2006 하반기 착공 - 2008 상반기 분양
면적 (분양률)	12.1평방km (62.8%) - 산업시설 76.4% - 지원시설 1.3% - 공공시설 12.8% - 녹지 9.4%	10.9평방km (미분양) - 산업시설 64.1% - 지원시설 4.2% - 공공시설 21.0% - 녹지 10.8%
공시 지가 (거래가) 평당m당	- 포승지구 11.0(20.0)만 원 - 고대지구 8.0(9.9)만 원 - 부곡지구 9.0(10.2)만 원	13.9만 원
교통	서해안고속도로 안중, 송악 IC 국도 39번(부여-의정부) 국도 45번(서산-가평) 경부선 평택역(27km) 김포공항(70km) 아산항(단지내)	경부고속도로 안성 IC(30km) 서해안고속도로 송악 IC 지방도 615번(석문-당진) 경부선 천안역(60km) 김포공항(80km) 아산항(20km)
업체	입주 194사 가동 107사 고용 5,241명	-

자료: 당진군청 (<http://www.dangjin.go.kr/>)

이클러스터 산학연 정보 통합망 (<http://www.e-cluster.net/>)

아산국가산업단지에는 주로 철강, 기계, 자동차 관련 사업체들이 들어온다. 또 이들 사업체 가운데는 수도권에서 공장을 옮기는 경우가 많다. 아산국가산업단지는 크게 세 지구로 나뉜다. 경기도 평택시 포승면의 포승지구, 충청남도 당진군 송악면의 고대/부곡지구다. 1998~1999년 연말연초에 포승지구(1단계)와 고대지구가 준공되었고, 2000년 말에 부곡지구와 2002년 중반 포승지구(2단계)가 준공되었다. 전체 면적은 12.1평방km다. 현재 분양은 100% 되었으며, 고대/부곡지구의 입주율은 70% 정도로 100여 사 정도가 입주해 가동 중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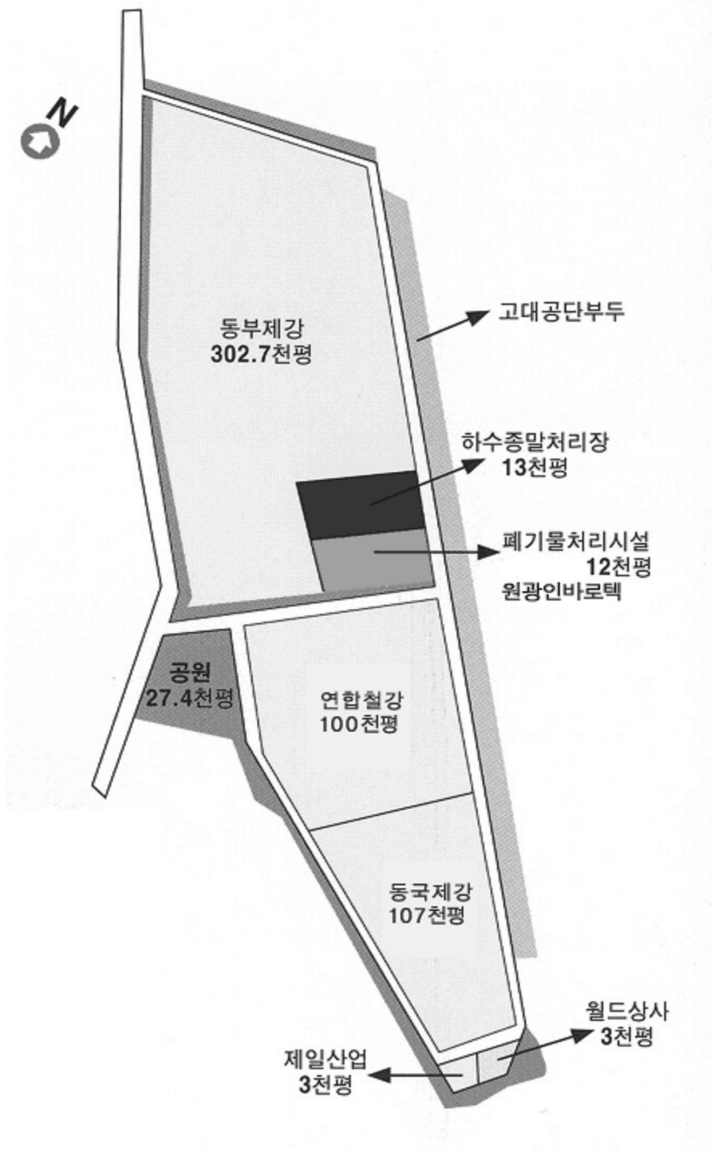
아산국가산업단지 가운데 당진군에 속에는 고대/부곡지구는 전체 단지의 절반 정도를 차지한다. 고대지구에는 주로 철강 사업체들이 들어선다. [그림 III-3]은 아산국가산업단지 고대지구의 배치도다. 배치도에 나타난 바와 같이, 전체 80만 평 가운데 30만 평 부지에 이미 동부제강이 들어와 가동 중이며, 연합철강과 동국제강도 각각 10여만 평 부지에 들어올 예정이다. 현재 가동 중인 사업체로는 동부제강 외에 레미콘 사업체인 제일산업이 있다. 부곡지구는 70사 정도의 사업체에 분양이 되었다. 이 가운데 10사 정도의 사업체가 들어와 가동 중이다. 가동 사업체는 휴스텔 등 철강 사업체들과 그 밖에 조립금속과 기계 사업체들이다.

석문국가산업단지는 당진군 석문면과 고대면에 걸쳐 낙후 지역 개발을 목표로 조성된다. 2006년 하반기에 착공해 2008년 상반기에 분양할 예정이다. 석문국가산업단지가 조성되면, 당진군 내 국가산업단지의 면적은 현재의 세 배로 늘어날 것이다.

[그림 III-4]는 석문국가산업단지의 계획도이다. 계획도에도 나타나듯이, 석문국가산업단지는 산업, 유통, 관광, 휴양, 거주를 겸한 복합 산업단지가 될 전망이다. 실제로 석문국가산업단지는 아산국가산업단지에 비해 산업 시설 부지가 적고 공공시설 부지가 많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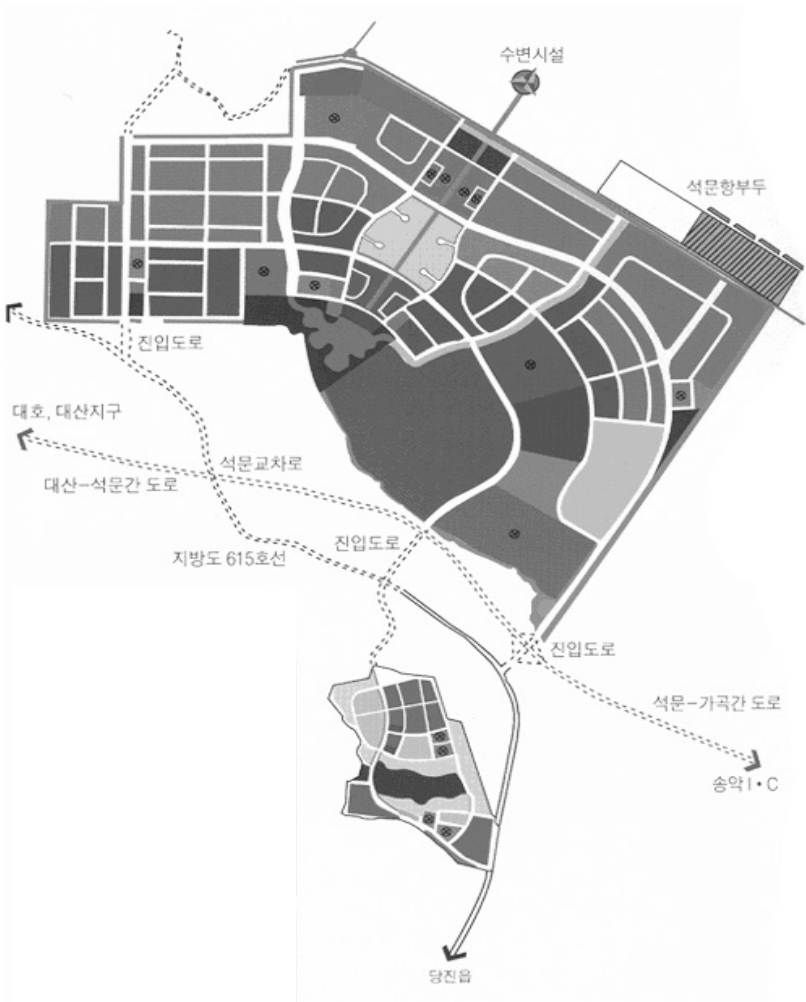
석문국가산업단지는 산업시설 부지 안에 공장 부지뿐 아니라 관광 휴양 시설 부지가 포함되어 있으며, 공공시설 부지 외에 주거시설 부지와 대학 부지도 계획되어 있다. 이렇게 복합 산업단지가 조성되면, 지역내 산업이 제조업에서 유통, 관광, 휴양 등으로 다양해지고 교육, 행정 등 거주 환경이 개선되면서 산업의 지역 정착에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그림 III-3] 아산국가산업단지 고대지구의 사업체 배치도



자료: 당진군청 (<http://www.dangjin.go.kr/>)

[그림 III-4] 석문국가산업단지의 계획도



자료: 당진군청 (<http://www.dangjin.go.kr/>)

당진군 내 국가산업단지는 입지가 좋다. 육상으로는 서해안 고속도로 송악IC를 통해 수도권과 1시간 안에 연결되며, 해상으로는 당진-평택항을 끼고 있다. 그리고 두 단지 모두 대청호와 아산호를 끼고 있어 용수에도 문제가 없다. 아산국가산업단지에는 하루 6.8만 톤의 용수가 공급되고 있

으며, 석문국가산업단지도 하루 16만 톤의 용수를 공급받을 수 있다.

3) 주요 철강사

당진군을 대표하는 대형 사업장으로는 INI스틸 당진 공장, 현대하이스코 당진 공장, 동부제강 아산만 공장 등 철강 사업장들을 꼽을 수 있다. INI스틸 당진 공장은 봉강과 열연 강판을 생산하고, 현대하이스코 당진 공장 과 동부제강 아산만 공장은 냉연 강판을 생산한다. 이들 공장은 아산국가 산업단지의 산업 입지에 결정적 요소로 작용할 만큼 규모가 큰 사업장들이다. 따라서 이들 사업장의 전반적인 내역을 좀더 살펴볼 필요가 있다.

INI스틸은 현대자동차그룹이 인천제철과 구한보철강을 인수 합병해 설립한 회사다. 인천제철은 2000년 현대그룹으로부터 계열 분리하기 전후해서 강원산업과 삼미특수강을 인수하고 2001년 다시 현대자동차그룹에 편입되었다. INI스틸은 인천, 포항, 당진, 청도(중국)에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 가운데 당진 공장은 2004년 10월 한보철강을 인수한 것이다.

(그림 III-5) INI스틸 당진 공장과 현대하이스코 당진 공장의 전경



자료 : INI스틸 (<http://www.inisteel.co.kr/>)

[그림 III-5]는 INI스틸 당진 공장과 현대하이스코 당진 공장의 전경이다. 그림의 아래에 있는 것이 현대하이스코 당진 공장이고, 위에 있는 것이 INI스틸 당진 공장이다. 이들 공장의 부지는 [그림 III-3]에 나타나 있는 아산국가산업단지 고대지구의 북서쪽(그림에서 위쪽)에 붙어 있다. 즉 [그림 III-5]의 그림 오른쪽 위쪽에 오른쪽으로 꺾여 있는 부지가 동부제강 아산만 공장이 있는 고대지구다.

한보철강은 1997년 1월 부도를 맞았고, 이후 1년 반 동안 조업과 건설을 이어가다가 1998년 7월 조업과 건설을 중단했다. 한보철강이 조업과 건설을 중단하면서 당진군의 지역경제는 큰 타격을 입었다. 한보철강이 정상화의 가닥을 잡은 것은 2004년 10월 현대자동차그룹의 INI스틸에 인수되면서부터이다. INI스틸 당진 공장의 A지구 열연 공장은 2005년 5월에 가동이 중단된 지 7년 만에 다시 상업 생산을 시작했다.

한보철강의 조업과 건설 중단이 당진군의 지역경제에 엄청난 영향을 미친 만큼, INI스틸 당진 공장의 재가동과 향후 확장 계획은 앞으로 당진군의 지역경제에 대단히 큰 영향을 미칠 것이 분명하다. 그런 의미에서 INI스틸 당진 공장의 현황과 향후 확장 계획은 좀더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INI스틸 당진 공장의 부지는 모두 120만 평으로 열연 제품과 봉강 제품을 생산하는 A지구와 열연 제품을 생산하는 B지구로 나뉜다. A지구에는 철 스크랩으로 연산 180만 톤의 열연 강판을 생산하는 미니밀 공장과 연산 120만 톤의 철근을 생산하는 소형 봉강 공장이 현재 가동 중이며, B지구에는 연산 200만 톤 규모의 열연 공장이 건설 중이다. A지구의 봉강 공장은 그 동안에도 가동 중이었고, 7년 만에 재가동한 것은 A지구의 미니밀 공장이다. <표 III-3>은 INI스틸 당진 공장의 연산 능력을 요약한 것이다.

INI스틸 당진 공장의 B지구 열연 공장은 2007년에 완공될 예정이다. 그때가 되면 INI스틸 당진 공장은 연산 500만 톤 규모의 철강을 생산하는 대규모 사업장이 된다. 현재 항만 시설로는 A지구에 5만 톤급 1선석과 3만 톤급 1선석이 있는데, 앞으로 B지구에도 5만 톤급과 3만 톤급을 각 1선석씩 추가로 건설할 계획이다.

〈표 III-3〉 INI스틸 당진 공장의 연산 능력

	제강	압연	비고
A지구 철근	130만 톤	120만 톤	조업 중
A지구 열연	200만 톤	180만 톤	조업 중
B지구 열연	210만 톤	210만 톤	건설 중
전 체	540만 톤	510만 톤	

자료 : INI스틸 (<http://www.inisteel.com/>)

〈표 III-4〉 현대하이스코의 생산 품목과 연산 능력

품 목	연 산
폴하드(반제품)	150만 톤
냉연 강판	115만 톤
용융 아연도금 강판	35만 톤
착색 아연도금 강판	10만 톤
산세 도유 강판	20만 톤
열연 아연도금 강판	30만 톤
완제품 계	210만 톤

자료 : 현대하이스코 (<http://www.hdp.co.kr/>)

현대하이스코 당진 공장은 한보철강의 냉연 공장을 인수한 것이다. 현대하이스코는 순천 공장과 당진 공장에서 냉연 강판을 생산하고, 울산 공장에서 강판을 생산한다. 현대하이스코 당진 공장의 주요 생산 품목은 냉연 강판과 아연도금 강판이며, 생산 능력은 연산 210만 톤이다. <표 III-4>는 현대하이스코의 생산 품목과 연산 능력을 요약한 것이다.

INI스틸과 현대하이스코의 당진 공장 운영 계획에 따르면, 공장을 정상화하는 데 9,000억 원, 설비 투자를 늘리는 데 1조 2,000억 원 등 모두 2조 원 이상 투자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INI스틸은 공장 정상화를 위해 2006년까지 5,500억 원을 투자하고, 2008년까지 설비 확장을 위해 1조 1,800억 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현대하이스코는 공장 정상화를 위해 2008년까지 3,500억 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표 III-5>는 INI스틸과 현대하이스코의 투자 계획을 요약한 것이다.

〈표 III-5〉 INI스틸과 현대하이스코의 투자 계획(2005~2008)

	투자 내역	투자비	투자 기한
INI스틸	A지구 봉강 공장	50억 원	2006
	A지구 열연 공장	640억 원	2006
	B지구 열연 공장	3,400억 원	2006
	항만 건설	500억 원	2006
	매립	220억 원	2006
	환경, 전산	770억 원	2006
	정상화 투자 계	5,550억 원	2006
	설비 투자	1조 1,850억 원	2008
	정상화/설비 투자 계	1조 7,400억 원	2008
현대하이스코	정상화	3,500억 원	2008
전 체	정상화와 설비 확장	2조 900억 원	2008

자료: 각종 보도 자료 종합.

INI스틸 당진 공장과 현대하이스코 당진 공장은 각각 2007년과 2008년 정상 가동한다는 계획이다. 이 무렵이면 두 사업장의 연간 매출액은 INI스틸이 2조 9,000억 원, 현대하이스코가 1조 5,000억 원에 이를 전망이다. 두 사업장은 생산 과급 효과와 고용 창출 효과도 대단히 크다.

INI스틸 당진 공장의 확장은 B지구의 건설로 끝나지 않을 전망이다. 현대자동차그룹은 2004년 한보철강을 인수하면서 B지구의 건설이 끝나는 대로 그 옆에 일관 고로제철소를 건설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부지는 실 수요자 직접 개발 방식으로 96만 평의 송산지방산업단지를 조성해 마련할 계획이다.

각종 보도 자료를 종합해 보면, INI스틸은 300만 톤 규모의 고로를 건설할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 업계에서는 투자비가 최소 2조 원에 이를 것이며, 원료를 수입하고 제품을 수출할 수 있는 최소 20만 톤 규모의 항만을 추가 건설해야 할 것으로 보고 있다.

INI스틸 당진 공장과 현대하이스코 당진 공장에 이어 당진군에서 두 번째로 큰 사업장은 동부제강 아산만 공장이다. 동부제강은 인천 공장, 아산

〈표 III-6〉 동부제강 아산만 공장의 생산 품목과 연산 능력

품 목	연 산
냉연 강판	170만 톤
아연 도금 강판	72만 톤
주석 도금 강판	25만 톤
전 체	267만 톤

자료 : 동부제강 (<http://www.dongbusteel.co.kr/>)

〔그림 III-6〕 동부제강 아산만 공장의 전경



자료 : 동부제강 (<http://www.dongbusteel.co.kr/>)

만 공장, 포항 공장에서 냉연 강판, 아연도금 강판, 주석도금 강판 등을 생산한다. 동부제강 아산만 공장은 고대지구에 있다.

동부제강 아산만 공장은 30만 평 부지에서 연간 냉연 강판과 아연과 주석도금 강판 267만 톤을 생산한다. <표 III-6>은 동부제강 아산만 공장의 생산 품목과 연산 능력을 요약한 것이고, [그림 III-6]은 고대지구와 동부제강 아산만 공장의 전경이다. 여기서 공장 앞에 있는 빈 땅은 동부제강 부지이며, 뒤에 보이는 빈 땅은 연합철강과 동국제강이 들어오기로 되어 있

는 부지다.

4) 농공단지

당진군에는 국가산업단지 외에 5군데 농공단지가 가동 중이다. <표 III-7>은 당진군 내 농공단지의 현황을 요약한 것이다. 당진군 내 농공단지는 근래 조성되어 아직 가동되지 않고 있는 송악농공단지를 빼면 거의 대부분 1990년을 전후해 준공되었다. 현재 당진읍, 합덕읍, 면천, 신평, 석문, 송악 등에 모두 1평방km(30만 평)가 계획되어 있으며, 이 가운데 22만 평은 분양이 끝났다. 분양 사업체는 모두 67사이며, 이 가운데 가동 중인 사업체는 41사다. <표 III-7>에는 나타나 있지 않지만, 최근 중외제약은 농공단지와는 별도로 송악면에 개별 입지 방식으로 공장을 짓기로 했다.

<표 III-7> 당진군내 농공단지 현황

	소재지	준공일	분양 사업체수	가동 사업체수	고용자수
당진	당진읍 시곡리	1989. 12	7	6	177
합덕	합덕읍 도곡리	1989. 12	21	17	326
면천	면천면 문봉리	1990. 03	10	9	179
신평	신평면 거산리	1992. 04	9	7	210
석문	석문면 통정리	1992. 06	4	2	112
송악	송악면 석포리	-	16	0	0
전체	-	-	67	41	1,004

자료: 당진군청 (<http://www.dangjin.go.kr/>)

공장설립관리시스템(<http://www.femis.go.kr/>)

5) 기업 유치 정책

당진군은 산업 유치에 매우 적극적이어서 2001~04년 4년간 충청남도 내 기업 유치 우수군으로 선정되었으며, 특히 2004년에는 ‘신나게 기업하는 충남 만들기’ 평가에서 최우수군으로 선정되었다. ‘신나게 기업하는 충남 만들기’는 2002년부터 관내 15개 시군을 대상으로 평가하고 있다. 2005년에는 1/4분기에만 40개 업체를 유치했다. 이 수치는 당진군이 올해 세운

연간 목표와 동일하다.

당진군은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 공장 설립 승인 기간을 30일에서 20일로 줄이는 등 인허가를 신속히 처리하고, 사업장 진입로 인근에 교통안전 시설물을 설치해 주는 등 각종 편의를 봐주고 있다. 2004년 당진군이 최우수군으로 선정된 데는 아산국가산업단지 부곡지구 35만 평을 소분할 방식으로 재분양해 50사를 유치한 것과 INI스틸이 한보철강을 인수한 것이 크게 작용했다.

대규모 업체들이 들어오고 그에 따라 고용기회가 늘어날 것으로 주민들이 기대하면서 지역 내에서 좋은 인력을 공급하는 것이 점점 문제로 되고 있다. 이 문제는 산학 협력을 통해 풀고 있다. 2004년 말에는 군의 주선으로 INI스틸 당진 공장, 현대하이스코 당진 공장, 동부제강 아산만 공장, 휴스틸, 환영철강 등 군내 대형 사업장이 신성대학, 합덕산업고 등 군내 교육기관과 산학 협력을 체결했다.

교육기관들은 기업이 필요로 하는 인력을 양성하는 데 초점을 맞춰 학과를 신·증설하고 교과과정을 개편하기로 했으며, 기업들은 교육기관에 현장 학습과 실습 그리고 채용의 기회를 제공하기로 했다. 한편 군은 같은 맥락에서 기능대학과 공과대학을 유치하기 위해 노력 중이다.

6) 평가

당진군의 산업 입지를 특징짓는 요소로 서해안고속도로, 아산항, 아산국가산업단지, 군내 농공단지, 대형 철강사 등을 꼽을 수 있다. 서해안고속도로는 당진군을 가로질러 경기도 시흥에서 전라남도 목포까지 이어진다. 당진군은 송악IC에서 서해안고속도로와 접속되며, 서울까지의 시간적 거리는 1시간 정도다. 서해안고속도로는 당진군의 산업과 경제에 큰 영향을 미쳤다. 서해안고속도로는 1990년 말 착공되어 2001년 말 전 구간이 개통되었다. 당진은 마지막 개통된 구간의 북쪽 끝이다. 즉 당진은 시흥 쪽과는 2000년 말 연결되었고, 목포 쪽과는 2001년 말 연결되었다. 당진군이 2001년 인근 이남 지역의 교통 연계지로 불리게 된 데는 이러한 사정이 작용했다.

아산항은 당진군의 산업 입지에서 중요한 요소다. 아산항은 인천항과

군산항에 이어 서해안에서 세 번째로 큰 항구다. 아산항을 놓고 평택시와 당진군은 서로 경쟁하는 관계에 있다. 그래서 2004년 말 항 이름을 평택-당진항으로 부르는 것으로 조정이 이루어졌다. 그러나 아직 항만청의 공식 자료에는 아산항으로 되어 있으며, 현지에서도 평택시에서는 평택항 또는 평택-당진항으로, 당진군에서는 당진항 또는 당진-평택항으로 부르는 경향이 있다.¹³⁾ 현재까지는 평택시가 아산항의 혜택을 많이 누렸다. 그러나 앞으로는 크기는 아니더라도 사정이 바뀔 가능성이 높다. 아산항의 해수면 가운데 당진군에 속하는 부분이 평택시에 속하는 부분에 비해 많기 때문에, 항구가 확장될수록 당진군이 더 혜택을 볼 것이다.

아산국가산업단지도 당진군과 평택시에 걸쳐 있다. 당진군에 속한 부분은 고대/부곡지구며, 평택시에 속한 부분은 포송지구다. 현재 두 지구 모두 100% 분양된 상태다. 그러나 입주율 면에서는 적어도 현재까지는 포송지구가 고대/부곡지구보다 앞선다. 현재 고대/부곡지구의 입주율은 70% 정도다. 고대지구 바로 옆의 한보철강이 1998년 조업과 건설을 중단하면서 입주 예정 업체들이 입주를 미룬 것이 입주율이 낮은 가장 큰 원인이다. 이제 INI스틸이 부분 정상 가동에 들어갔고 곧 전면 가동에 들어갈 것이기 때문에, 곧 미입주 업체들도 입주를 서두를 것이다. 이렇게 되면 아산국가산업단지 안에서 당진군과 평택시 사이에서 현재까지 보인 성과 차이는 없어질 것이다.

현재 당진군에는 농공단지가 6곳 있고, 한 군데가 추가 조성 중이다. 국가산업단지에 비해 농공단지는 규모가 작지만 그래도 상당한 비중을 차지한다. 농공단지 안에도 규모가 큰 사업장이 있는데, 이들 사업장이 농공단지에 입주한 것은 거의 국가산업단지가 조성되기 이전의 일이다. 전국적으로 농공단지는 그다지 성공한 정책으로 보지 않는다. 당진군의 경우도 크게 다르지는 않지만, 최근 중외제약의 투자에서 보듯 지역 분위기에 따라 얼마든지 사정은 달라질 수 있다. 농공단지는 면에 소재하지만 군 단위에서 관리하며, 기업 유치 같은 일이 면 단위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군 차원에서도 국가산업단지와 농공단지에 대한 정책에서 규모에 따

13) 이러한 사정을 감안하여 이 연구에서는 아산항으로 부르기로 한다.

른 업무 비중 이상의 차이는 두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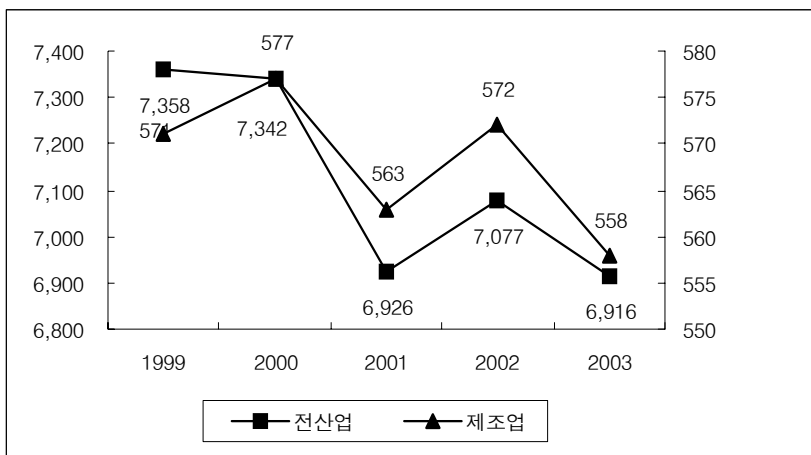
나. 사업체의 변동

1) 사업체의 양적 변동

2003년 말 현재 당진군의 사업체 수는 6,916곳이다. [그림 III-7]은 1999~2003년 기간 동안 당진군내 사업체수의 변동 추이를 그림으로 나타낸 것이다. 사업체수는 4년 동안 7,358곳에서 6,916곳으로 2002년을 빼고 계속 줄어 6.0%가 줄었다. 제조업의 사업체수도 1999년 571곳에서 2003년 558곳으로 4년 동안 2.3%가 줄었다. 제조업은 다른 산업에 비해 사업체수 감소세가 약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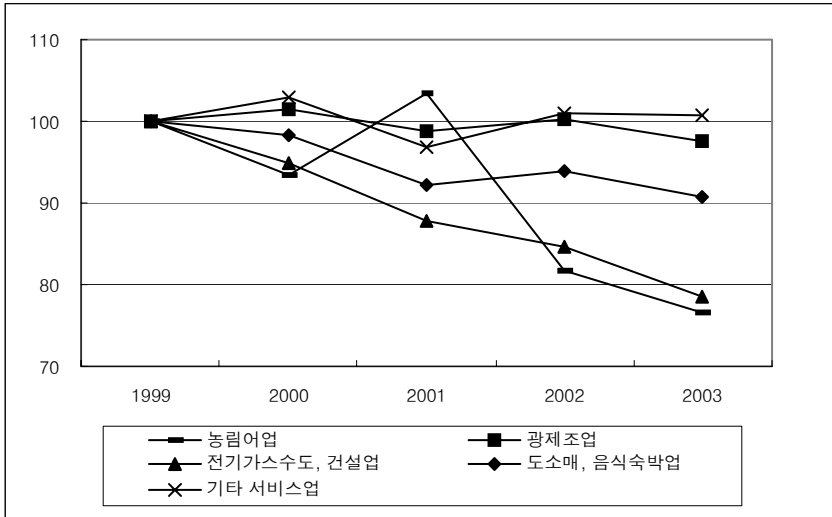
사업체수의 감소 추세는 산업별로 큰 차이가 있다. [그림 III-8]은 1999~2003년 기간 동안 당진군내 사업체수의 변동 추이를 산업별로 나타낸 것이다. 사업체수의 감소는 농림어업과 전기가스수도 및 건설업에서 두드러졌다. 이들 산업에서는 4년 만에 사업체수가 20% 이상 줄어들었다. 광업 및 제조업(이하 광제조업으로 줄임)과 기타서비스업의 사업체수는 큰 변화가 없었다.

[그림 III-7] 사업체수 변동 추이(1999~2003)



자료 : 통계청(<http://kosis.nso.go.kr/>).

[그림 III-8] 산업별 사업체수 변동 추이: 1999=100(1999~2003)



자료: 통계청 (<http://kosis.nso.go.kr/>)

2) 제조업 사업체의 질적 변화

당진군내 제조업 사업체의 발전은 인당 연간 출하액과 인당 연간 부가가치액의 변동 추이에서 잘 나타난다. [그림 III-9]와 [그림 III-10]은 1999~2003년 기간 동안 당진군내 종사자 5인 이상 광제조업 사업체의 인당 연간 출하액과 부가가치액의 변동 추이를 나타낸 것이다. 당진군내 광업 사업체의 비중이 미미하므로, 광제조업 사업체의 수치를 제조 사업체의 수치로 보아도 큰 무리가 없다. 사업체수나 취업자수 면에서 볼 때, 당진군내 광업은 제조업의 1.3~1.4% 규모에 지나지 않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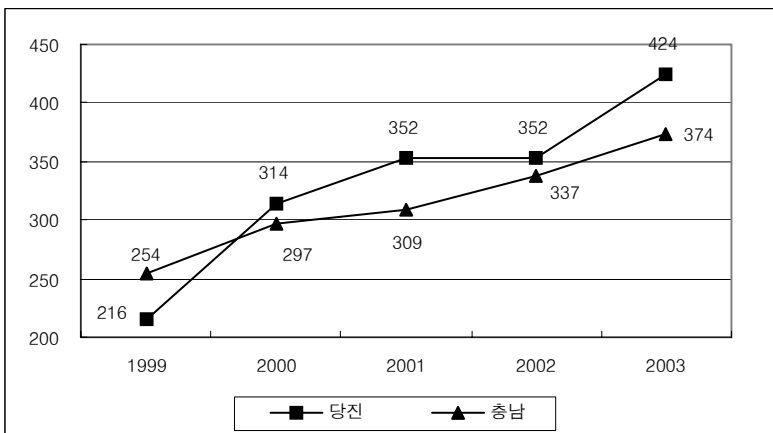
종사자 5인 이상 광제조업 사업체의 인당 연간 출하액은 당진군의 경우 1999년 2억 1,600만 원에서 4억 2,400만 원으로 두 배 가까이 늘어났다. 그러나 대전을 뺀 충청남도의 다른 지역(이하 충청남도는 특별한 언급이 없는 한 대전을 뺀 나머지 지역을 가리킨다)의 경우는 같은 기간 2억 5,400만 원에서 3억 7,400만 원으로 50%도 늘어나지 못했다. 지난 4년 동안 당진군의 광제조업 사업체는 충청남도의 다른 지역 사업체보다 인당 연간 출하액이 두 배 가까이 빠른 속도로 늘어난 것이다.

인당 연간 출하액의 변동 추이에 나타난 특징은 인당 연간 부가가치액의 변동 추이에서 더 극적으로 나타난다. 종사자 5인 이상 광제조업 사업체의 인당 연간 부가가치액도 당진군이 충청남도의 다른 지역에 비해 훨씬 많이 늘어났다. 인당 연간 부가가치액은 당진군의 경우 1999년 6,800만 원에서 1억 5,400만 원으로 126% 늘어난 데 비해, 충청남도의 경우 9,600만 원에서 1억 3,700만 원으로 42% 늘어나는 데 그쳤다. 지난 4년 동안 당진군의 광제조업 사업체는 충청남도의 다른 지역 사업체보다 인당 연간 부가가치액이 세 배 가까이 빠른 속도로 늘어난 것이다.

1999~2000년까지만 해도 광제조업의 인당 연간 출하액이나 부가가치액 면에서 당진군은 충청남도의 다른 지역에 비해 뒤떨어졌으나, 이러한 현상은 2000~2001년 이후 완전히 역전되었다. 그러나 인당 연간 급여액 면에서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지 않았다. [그림 III-11]은 1999~2003년 기간 동안 종사자 5인 이상 광제조업 사업체의 인당 연간 급여액의 변동 추이를 나타낸 것이다. 광제조업 사업체의 인당 연간 급여액은 4년 동안 당진군이 1,567만 원에서 2,239만 원으로 42.8%, 충청남도가 1,568만 원에서 2,311만 원으로 47.4% 올랐다.

(그림 III-9) 광제조업의 인당 연간 출하액 추이(1999~200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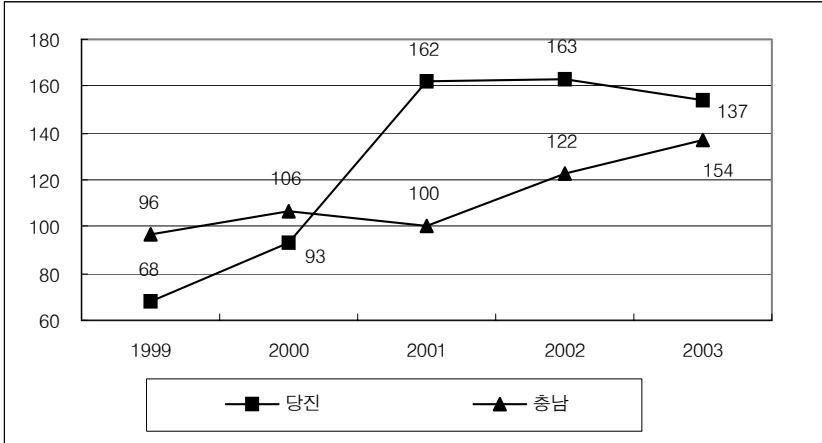
(단위: 백만 원)



72 농촌지역 노동시장과 고용기회 : 통계분석과 사례분석으로부터 얻는 시사점

[그림 III-10] 광제조업의 인당 연간 부가가치액 추이(1999~2003)

(단위: 백만 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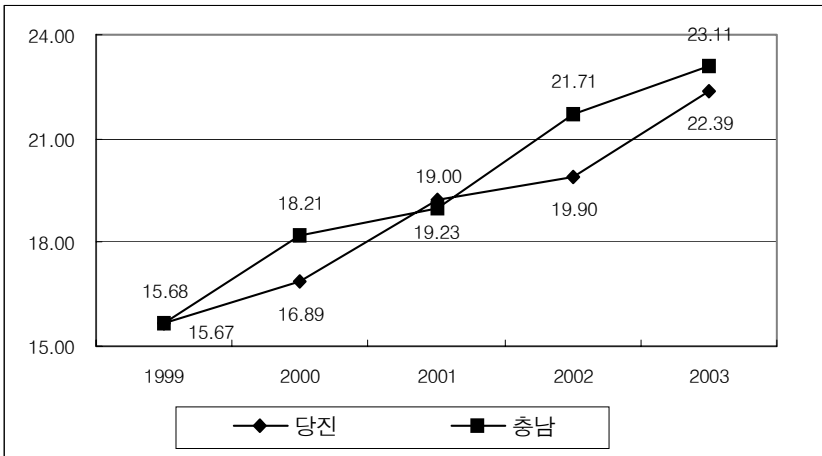


주: 조사 대상은 종사자 5인 이상 사업체.

자료: 통계청 (<http://kosis.nso.go.kr/>).

[그림 III-11] 광제조업의 인당 연간 급여액 추이(1999~200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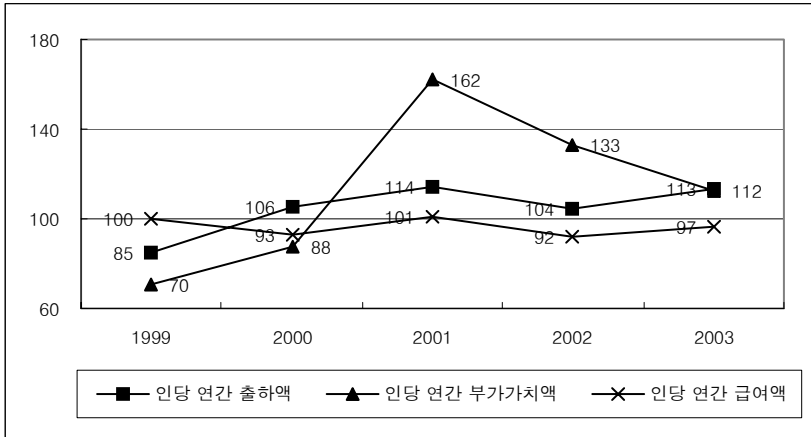
(단위: 백만 원)



주: 조사 대상은 종사자 5인 이상 사업체.

자료: 통계청 (<http://kosis.nso.go.kr/>).

[그림 III-12] 광제조업 성과의 당진/충남 비율 변동 추이(1999~2003)



주: 조사 대상은 종사자 5인 이상 사업체.

자료: 통계청 (<http://kosis.nso.go.kr/>).

[그림 III-12]는 1999~2003년 기간 동안 종사자 5인 이상 광제조업 사업체를 대상으로 인당 연간 출하액, 부가가치액, 급여액의 충청남도 대비 당진군 비율의 변동 추이를 나타낸 것이다. 연간 출하액 면에서 당진군 사업체는 1999년만 하더라도 충청남도 사업체의 85% 수준에 머물렀으나, 2003년에는 113% 수준으로 역전되었다. 연간 부가가치액 면에서는 역전 상황이 더 극적이다. 당진군 사업체의 연간 부가가치액은 1999년만 해도 충청남도 사업체의 70% 수준에 머물렀으나, 2003년에는 112% 수준으로 역전되었다.

최근 광제조업의 연간 출하액과 부가가치액은 당진군 사업체가 충청남도 사업체보다 12~13% 정도 많지만, 연간 급여액은 그 반대로 5% 정도 낮다. 1999년만 하더라도 당진군 사업체와 충청남도 사업체 사이에 연간 급여액의 차이가 거의 없었으나, 최근에는 당진군 사업체가 충청남도 사업체의 95% 안팎 수준으로 떨어졌다.

3) 평가

당진군에서 1990년대 말 이후 최근까지 사업체수가 계속 줄어든 것은

거의 대부분 한보철강이 조업과 건설을 중단한 데 따른 효과이다. 제조업에 비해 건설, 도소매, 음식숙박업에서 사업체수가 격감한 것도 같은 맥락에서 볼 수 있다. 공장 건설이 중단되면서 지역 건설업이 쇠퇴했고, 건설과 함께 조업이 중단되면서 거기에 관련되어 있던 많은 인구의 지역내 소비가 끊기면서 지역 도소매와 음식숙박업이 쇠퇴했다.

1997년 한보철강의 부도는 당진군의 지역 경제에 큰 타격을 주었다. 당시 한보철강에 납품하던 178개 업체의 미변제 채권은 558억 원에 이르렀고, 이 가운데 많은 업체들이 연쇄 부도에 빠지면서 2,500여 명이 정리해고되었다.

모든 산업에 걸쳐 보면 사업체 수가 줄고 있지만, 제조업만 놓고 보면 그렇지 않다. 사업체 수는 농림어업, 전기가스수도과 건설업, 도소매와 음식숙박업의 순으로 많이 줄었다. 농림어업의 사업체 수가 줄어든 것은 농업의 경쟁력이 약화되고 있다는 일반적인 경향이 나타난 것이다. 건설업의 사업체 수가 많이 줄어든 데는 2000년대 초 서해안고속도로가 완공되면서 관련 건설 일감이 줄어든 영향이 큰 것으로 보인다.

당진군에서 2000년대 들어 제조업이 인당 출하액이나 부가가치액 면에서 크게 성장한 것은 상당한 부분 서해안고속도로가 개통된 데 따른 효과이다. 서해안고속도로가 개통되기 전에는 수도권에서 이주하는 업체들이나 수도권을 시장으로 하는 업체들이 평택시 이남 지역에 투자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웠다. 2000년대 초 서해대교가 완공되고 서해안고속도로가 당진군까지 부분 개통되면서 당진군은 한때 이남 지역까지 커버하는 물류 중개지로서 기능했다. 이 무렵부터 제조, 도소매, 음식숙박업을 중심으로 지역내 투자가 늘어나면서 관련 업종 사업체의 감소 추세도 둔화되었다.

제조업의 인당 연간 급여액 면에서 당진군이 충청남도의 다른 지역에 비해 약간 낮은 것은 군소 철강 관련 사업체들이 다른 산업에 비해 임금이 낮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 실제로 충청남도의 다른 지역에 비해 당진군의 임금이 싸다는 인식은 군내에서 확인할 수 없었다.

2005년 5월부터 INI스틸이 당진 공장을 재가동함에 따라 한보사태가 당진군 지역 경제에 미친 부정적인 영향은 거의 대부분 해소될 전망이다. 아

산국가산업단지 고대부곡지구는 100% 분양이 끝난 상태에서 70% 정도의 입주율을 보이고 있으며, 그 동안 입주를 미루던 업체들도 INI스틸의 당진 공장이 재가동되면서 입주를 서두를 것으로 보인다.

다. 사업체의 특성

1) 국가산업단지

아산국가산업단지의 당진군 지역인 고대/부곡지구에는 11개 사업체가 가동 중이며, 종업원 수는 1,077명에 이른다. <표 III-8>은 고대/부곡지구에서 가동 중인 사업체의 업종별 분포를 사업체 수와 종업원 수로 나타낸 것이다. 11개 사업체 가운데 고대지구에 있는 것은 2개뿐이며, 나머지는 부곡지구에 있다.

고대/부곡지구를 대표하는 업종은 철강업이라 할 수 있다. 두 지구에 근무하는 근로자 가운데 3/4 정도가 철강업에 종사하고 있으며, 그 수는 787명에 이른다. 철강 업종은 다른 업종에 비해 사업체의 규모가 크다. 고대지구의 최대 사업체인 동부제강(종업원 수 388인)과 부곡지구의 최대 사업체인 휴스틸(종업원 수 352인)은 모두 철강 사업체다. 동부제강은 냉간 압연 및 압출 제품을, 휴스틸은 강관을 생산한다. <표 III-9>는 아산국가산업단지 고대/부곡지구에서 가동 중인 대규모(종업원 수 40인 이상) 사업체의 산업 분류와 종업원 수를 요약한 것이다.

<표 III-8> 고대/부곡지구내 가동 중 사업체의 업종별 분포

	사업체 수	비중(%)	종업원 수	비중(%)
비금속광물	4	36.4	143	13.3
철강	3	27.3	787	73.1
기계	2	18.2	21	1.9
전기전자	1	9.1	77	7.1
운송장비	1	9.1	49	4.5
전 체	11	100.0	1,077	100.0

자료 : 당진군청(<http://www.dangjin.go.kr/>), 충청남도산업정보망(<http://www.cndb.or.kr/>), 공장설립관리시스템(<http://www.femis.go.kr/>).

대형 사업체들은 동부제강을 빼고 모두 부곡지구에 있다. 동부제강과 휴스틸 외에 대형 사업체로는 전기전자 업종의 동서기공(종업원 수 77인), 비금속 광물 업종의 한국하니소(종업원 수 64인), 라파즈석고보드(종업원 수 58인), 운송장비 업종의 새한공업(종업원 수 49인), 철강 업종의 상신산업(종업원 수 47인) 등이 있다. 한국하니소는 유리섬유 및 광학용 유리를, 라파즈석고보드는 플라스틱 제품을, 새한공업은 자동차 차체용 부품을, 상신산업은 강관을 생산한다. 그 밖에 나머지 사업체들은 모두 종업원 수 10인 안팎의 작은 사업체들이다.

가동 사업체 수에서 보면, 고대/부곡지구는 아산국가산업단지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0% 정도로 미미하다. 따라서 고대/부곡지구의 업종 분포는 당진군 권역의 업종 분포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할 수 있다. 경기도 평택시 포승지구를 포함해 아산국가산업단지 전체에는 107개 사업체가 가동 중이며, 종업원 수는 5,241명에 이른다. <표 III-10>은 아산국가산업단지에서 가동 중인 사업체의 업종별 분포를 사업체 수와 종업원 수로 나타낸 것이다.

아산국가산업단지에서 가동 중인 사업체 수가 많은 업종은 기계(28.0%), 석유화학(17.8%), 운송장비(13.1%), 철강(10.3%), 전기전자

<표 III-9> 고대/부곡지구 대규모(종업원수 40인 이상) 사업체

	지구	산업 중분류	산업 세세분류	종업원 수
동부제강	고대	제1차 금속	냉간압연 및 압출 제품	388
휴스틸	부곡	제1차 금속	강관	352
동서기공	부곡	기타 전기기계 및 전기변환 장치	배전반 및 전기자동 제어반	77
한국하니소	부곡	비금속광물 제품	유리섬유 및 광학용 유리	64
라파즈석고보드	부곡	비금속광물 제품	플라스틱 제품	58
새한공업	부곡	자동차 및 트레일러	자동차 차체용 부품	49
상신산업	부곡	제1차 금속	강관	47

자료 : 당진군청 (<http://www.dangjin.go.kr/>), 충청남도산업정보망 (<http://www.cndb.or.kr/>), 공장설립관리시스템(<http://www.femis.go.kr/>).

〈표 III-10〉 아산 국가산업단지내 가동 중 사업체의 업종별 분포

(단위 : 개, %)

	사업체수	종업원수
음식료	2 (1.9)	13 (0.2)
목재종이	4 (3.7)	110 (2.1)
석유화학	19 (17.8)	758 (14.5)
비금속광물	3 (2.8)	128 (2.4)
철강	11 (10.3)	666 (12.7)
기계	30 (28.0)	968 (18.5)
전기전자	7 (6.5)	755 (14.4)
운송장비	14 (13.1)	1,393 (26.6)
기타	17 (15.9)	450 (8.6)
전 체	107 (100.0)	5,241 (100.0)

자료 : 이클러스터 산학연 정보 통합망 (<http://www.e-cluster.net/>).

(6.5%) 순이다. 전체 종업원 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으로 보면, 운송장비(26.6%), 기계(18.5%), 석유화학(14.5%), 전기전자(14.4%), 철강(12.7%) 순이다. 아산국가산업단지 내 운송장비와 기계생산 사업체들은 고대/부곡지구에 집중되어 있는 철강업에 유리한 입지 환경을 이룬다.

<표 III-8>과 <표 III-10>을 함께 보면, 아산국가산업단지의 포송지구와 고대/부곡지구의 차이가 드러난다. 주력 업종을 보면, 포송지구는 운송장비, 기계, 전기전자, 석유화학 등을, 고대/부곡지구는 철강, 비금속광물 등을 꼽을 수 있다. 한편 고대/부곡지구가 아산국가산업단지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사업체 수를 기준으로 보면 10% 정도이고, 종업원 수를 기준으로 보면 20% 정도다. 따라서 고대/부곡지구는 포송지구에 비해 상대적으로 대형 사업체가 많다고 볼 수 있다.

2) 농공단지

당진군에는 5군데 농공단지가 가동 중이다. 당진군내 농공단지별 분양 사업체 수, 가동 사업체 수, 고용자 수는 앞의 <표 III-7>과 같다. 분양 사업체는 근래 조성되어 아직 가동되지 않고 있는 송악농공단지를 포함해

〈표 III-11〉 당진군 농공단지내 가동 중 사업체의 업종별 분포

	사업체수	종업원수
음식료	5 (12.2)	125 (12.5)
가죽, 가방, 신발	2 (4.9)	36 (3.6)
화학, 고무, 플라스틱	8 (19.5)	284 (28.3)
비금속광물	6 (14.6)	78 (7.8)
철강	1 (2.4)	4 (0.4)
기계	11 (26.8)	255 (25.4)
전기전자	3 (7.3)	119 (11.9)
운송장비	4 (9.8)	82 (8.2)
기타	1 (2.4)	21 (2.1)
전 체	41 (100.0)	1,004 (100.0)

자료 : 당진군청 (<http://www.dangjin.go.kr/>)
 이클러스터 산학연 정보 통합망 (<http://www.e-cluster.net/>)

67개사이고, 이 가운데 가동 중인 사업체는 41개사이며, 고용자수는 1,004명이다. <표 III-11>은 당진군내 농공단지에서 가동 중인 사업체의 업종별 분포를 나타낸 것이다.

당진군내 농공단지에서 비중이 큰 업종은 고무 및 플라스틱과 기계 업종이다. 종업원 수를 기준으로 볼 때, 농공단지내 사업체에서 화학, 고무, 플라스틱 사업체는 28.3%를, 기계 사업체는 25.4%를 차지한다. 그 밖에 고용 비중이 큰 사업체로는 음식료 사업체(12.5%)와 전기전자 사업체(11.9%), 운송장비 사업체(8.2%)가 있다. 같은 지역내 아산국가산업단지의 고대/부곡지구를 대표하는 철강업은 농공단지내 비중이 미미하다. 이는 소규모 사업체에 적합한 농공단지에 대규모 철강 사업체가 입주하기 어렵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다.

농공단지 안에도 비교적 규모가 큰 사업체가 있기도 하다. <표 III-12>는 당진군내 농공단지에서 가동 중인 대규모(종업원 수 40인 이상) 사업체의 산업분류와 종업 수를 요약한 것이다. 대규모 사업체는 농공단지별로 골고루 분포한다. 합덕, 면천, 신평 농공단지에는 대규모 사업체가 둘 이상

〈표 III-12〉 당진군 농공단지의 대규모(40인 이상) 사업체

	단지	산업 중분류	산업 세세분류	종업원 수
두영전자	당진	기타 전기기계 및 전기 변환 장치	방전 램프용 안정기	113
현대엔지니어링 플라스틱	석문	화합물 및 화학 제품	합성수지 및 기타 플라스틱 물질	103
한성식품	합덕	음식료품	어육 및 유사 제품	90
코맥스산업	신평	고무 및 플라스틱 제품	고무의류 및 기타 위생용 고무 제품	64
영화엔지니어링	면천	조립금속 제품	금속 조립 구조재	63
태화정공	신평	기타 기계 및 장비	기타 몰륨 취급 장비	62
씨아이티	합덕	화합물 및 화학 제품	화장품	53
태성폴드산업	합덕	자동차 및 트레일러	기타 자동차 부품	45
대명세라믹	면천	비금속광물 제품	점토 벽돌, 블록 및 유사 비내화 요업 제품	45
계령코리아	면천	기타 기계 및 장비	동력식 수지 공구	44

자료 : 당진군청 (<http://www.dangjin.go.kr/>).

충청남도산업정보망 (<http://www.cndb.or.kr/>).

공장설립관리시스템 (<http://www.femis.go.kr/>).

이며, 당진과 석문 농공단지에는 대규모 사업체가 하나씩 있지만 종업원수가 100인 이상이다.

당진군내 농공단지의 대규모 사업체의 업종 분포는 화학 관련 업종이 3사, 기계 관련 업종이 3사로 우세하며, 그 밖에 음식료품, 전기기계, 고무 및 플라스틱, 조립금속 관련 업종이 1개사씩 있다. 종업원 수 100인 안팎의 대규모 업체로는 안정기를 생산하는 두영전자(당진, 종업원 수 113인), 플라스틱 제품을 생산하는 현대엔지니어링플라스틱(석문, 종업원 수 103인), 어육 제품을 생산하는 한성식품(합덕, 종업원 수 90인) 등이 있다.

3) 최근 유치 사업체

당진군은 2005년 1/4분기에만 40개 업체를 유치했다. 이 수치는 당진군이 올해 세운 연간 목표와 같다. 입주 업체들이 들어설 부지는 13만 평에

이르며, 고용 예상 인원도 1,200여 명에 이른다. 업체당 평균 부지는 3,250 평이고, 평균 고용 인원은 30명인 셈이다. 결코 작은 업체들이 아니다.

〈표 III-13〉 당진군 2005년 1/4분기 유치 사업체 내역

업체 명	생산 제품	종업원 수
대모엔지니어링	산업 기계	50
대성기계공업	건조기 진동기기	20
대영주방설비	주방기구	25
대현정밀	자동차 금형	15
디엠씨테크	금속 성형기	25
멀티일렉텍	인쇄 회로 판	65
문앤션	엘리베이터	20
삼광기계	공작 기계	33
삼지콘트롤	자동 제어반	26
신라철강	냉연 강판 절단 가공	50
신우종합금속	질삭 가공	30
아하플랜트산업	필터, 열 교환기	30
영진아이텍	메탈 마스크	26
옥동공업	알루미늄	31
유니온금속공업	튜브, 벨트	35
이화기계공업	섬유 열처리기	45
장한기술	금속 탱크 펌프	38
제네럴도크	도크 장비	21
제이월드텍	믹서기, 전기 그릴	25
조이엔지니어링	자동차 부품	33
지덕산업	산업용 캐스터	30
창환단자공업	배터리 터미널	45
태창철강	열연 강판 절단 가공	35
한국기술서비스	발전기	20
한국메이후란	컨베이어	22

<표 III-13>의 계속

업체 명	생산 제품	종업원 수
한진기계	유공압 실린더	20
BJ테크놀로지	연소 기기	54
영가인더스트리	크레인	10
세원	철판	40
삼일테크	플라스틱 사출	10
삼일수지	플라스틱 사출	15
삼일폴리머테크	플라스틱 사출	15
한준철강	C형 철강	25
에스씨에프	양축용 사료	15
성원산업	철 구조물	15
토스산업	자동차 연료 탱크	30
씨티자동차	전기자동차	100
덕유산업	침낭	20
대능	자동차 부품	30
미래산업	자동차 부품 포장재	15

자료 : <당진시대> (<http://www.djtimes.co.kr/>).

올해 새로 유치한 업체들은 대부분 자동차 부품 업체거나 INI스틸 연관 업체들이다. 여기서도 INI스틸 당진 공장과 현대/기아자동차 아산 공장이 당진군의 산업 입지에서 차지하는 절대적인 비중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다. 당진군이 2005년 1/4분기에 유치한 업체의 내역은 <표 III-13>과 같다.

이러한 경향은 이미 지난해부터 확인된다. 2004년에 유치한 업체들도 동우열처리공업(자동 변속기), 태화정공(기계 장치), 한국마그넷(자동차 부품), 영풍아이알(전동 드릴 부품) 등 대부분 자동차, 금속, 기계 관련 사업체들이다.

4) 평가

당진군과 평택시는 아산국가산단지나 아산항을 공유하고 있다는 점에서 경쟁보다는 보완의 관계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아산국가산업단지의 주력 업종은 당진군 지역인 고대/부곡지구의 경우 철강과 비금속광물이고, 평택시 지역인 포승지구의 경우 운송장비, 기계, 전기전자, 석유화학이다. 수도권 공장 이전 정책에 따라 당진군에 비해 수도권에 가까이 있는 평택시가 먼저 산업이 발전했다. 그래서 최근까지는 포승지구에 비해 고대/부곡지구가 상대적으로 침체된 모습을 보여 왔다. 현재 아산국가산업단지에서 고대/부곡지구가 차지하는 비중은 사업체 수에서 10%, 종업원 수에서 20% 정도다.

그러나 2000년대 들어 서해대교와 서해안고속도로가 개통되면서 당진군의 입지 조건이 크게 개선되었다. 또 동부제강 아산만 공장에 이어 2005년에는 INI스틸 당진 공장과 현대하이스코 당진 공장이 다시 가동을 시작하면서 고대/부곡지구가 포승지구에 비해 더 활기를 띠고 있기도 하다. 현재에도 대형 사업체는 포승지구에 비해 고대/부곡지구에 상대적으로 더 많다.

한편 당진군내 농공단지의 주력 업종은 화학 고무 및 플라스틱과 기계다. 이들 업종도 고대/부곡지구의 철강 산업과는 관련이 적지만 포승지구의 주력 업종들과는 보완적인 관계를 가진 것으로 볼 수 있다. 현재 당진군은 평택시에 비해 몇 가지 점에서 기업 유치에 유리한 입장이다. 우선 용지가 상대적으로 넉넉하다는 점, 또 현실적으로는 INI스틸과 현대하이스코 등 대형 철강사들의 재가동과 추가 투자 계획 등으로 향후 지가 상승률이 높을 것이란 점 등이 크게 작용하고 있다.

입지 조건과 기업 입지의 관계는 입지 조건이 기업 입지에 영향을 미치는 것뿐 아니라 기업 입지가 입지 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것도 있다. 한 지역이 특정 업종을 중심으로 발전하는 경우 대부분 선도 기업이 있는 경우가 많다. 지역 혁신클러스터의 대표적 사례로 얘기되는 스웨덴의 시스타(Kista), 핀란드의 울루(Oulu), 중국의 중관촌(中關村), 미국의 실리콘밸리(Silicon Valley) 등도 예외가 아니다. 시스타는 에릭슨(Ericsson)이, 울루는 노키아(Nokia)가, 중관촌은 IBM, 선마이크로시스템스(Sun Microsystem

s), 마이크로소프트(Microsoft, MS), 모토롤라(Motorola) 등이, 실리콘밸리는 휴렛패커드(Hewlett Packard, HP), IBM, 지록스(Xerox) 등이 선도 기업의 역할을 했다.

당진군의 경우도 INI스틸 당진 공장, 현대하이스코 당진 공장, 동부제강 아산만 공장 등은 규모 면에서 당진군의 입지 조건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친다. 그런 점에서 당진군을 철강 클러스터라고 부른다면, INI스틸, 현대하이스코, 동부제강 등 대형 철강사들이 선도 기업의 역할을 한다고 봐야 할 것이다. 앞으로 이들 대형 철강사가 당진군의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막대할 것이다. 이들 철강사는 그 자체로 이미 상당한 규모에 이르며, 이들 업체들을 중심으로 군소 철강 관련사들이 당진군으로 모여들고 있기 때문이다.

앞서 [그림 III-1]의 ‘지역발전 모형’에서 자연적 조건뿐 아니라 인위적 조건을 포함해 생산 기반을 갖춘 다음 제조업을 끌어들이는 데서 지역발전 전략을 시작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당진군은 산업 입지를 조성하고 생산 기반을 확대하는 데까지는 성공했다고 볼 수 있다. 남은 문제는 고용과 함께 인구 유입을 유도해 소비 기반을 확대하는 일이다.

3. 고용과 인구의 변동

가. 고용의 변동

1) 취업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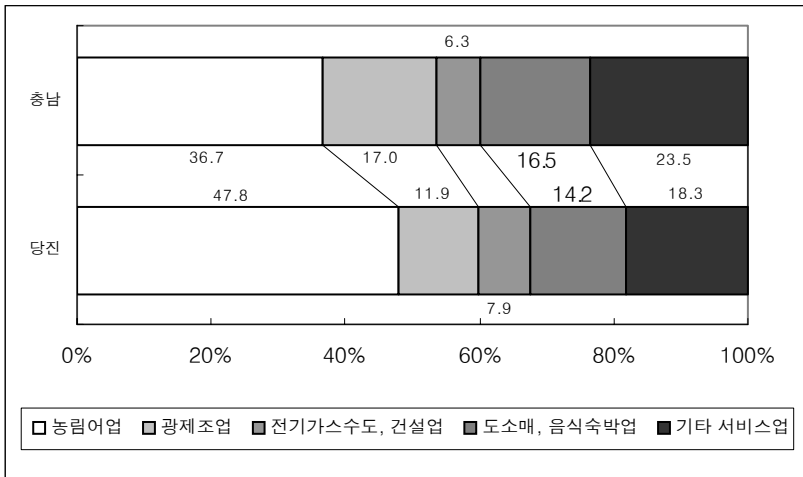
2000년 말 현재 당진군의 취업자 수는 5만 6,910명이다. 이는 당시 당진군의 인구 12만 2,818명의 46.3%에 해당하는 수치다. <표 III-14>는 2000년 말 현재 당진군내 취업자 수의 산업별 구성을 충청남도의 다른 지역들과 비교한 것이다. 취업자 수를 기준으로 볼 때, 당진군은 충청남도의 다른 시·군에 비해 농림어업의 비중이 높고 제조업의 비중이 낮다. [그림 III-13]은 <표 III-14>에 포함된 특징을 잘 드러내기 위해 관련 산업을 묶어 그림으로 나타낸 것이다.

〈표 III-14〉 산업별 취업자수(2000년 말)

	취업자 수 (천 명)		구성비 (%)	
	총남	당진군	총남	당진군
합계	824.9	56.9	100.0	100.0
농림어업	302.4	27.2	36.7	47.8
광제조업	140.2	6.8	17.0	11.9
전기가스수도업	6.0	0.9	0.7	1.5
건설업	46.0	3.6	5.6	6.3
도소매업	85.5	5.1	10.4	8.9
음식숙박업	50.7	3.0	6.1	5.3
운수통신업	28.4	1.3	3.4	2.3
금융보험업	21.2	1.2	2.6	2.2
부동산임대업	7.9	0.6	1.0	1.0
민간서비스업	106.6	5.8	12.9	10.2
정부서비스	29.8	1.4	3.6	2.5

자료 : 통계청 (<http://kosis.nso.go.kr/>).

〈그림 III-13〉 산업별 취업자 구성(2000년 말)



자료 : 통계청 (<http://kosis.nso.go.kr/>).

당진군에서 농림어업의 취업 비중은 47.8%로 충청남도의 36.7%에 비해 매우 높은 편이다. 물론 여기서 충청남도는 대전을 뺀 나머지 지역들이다. 광제조업의 취업 비중은 당진군이 11.9%로 충청남도의 17.0%에 비해 많이 낮다. 충청남도의 다른 지역에 비해 당진에서 취업 비중이 큰 산업은 농림어업 말고는 전기가스수도업과 건설업뿐이다. 그 밖에 음식숙박업, 운수통신업, 금융보험업, 부동산임대업, 민간서비스업, 정부서비스 등은 모두 충청남도의 다른 지역에 비해 취업 비중이 낮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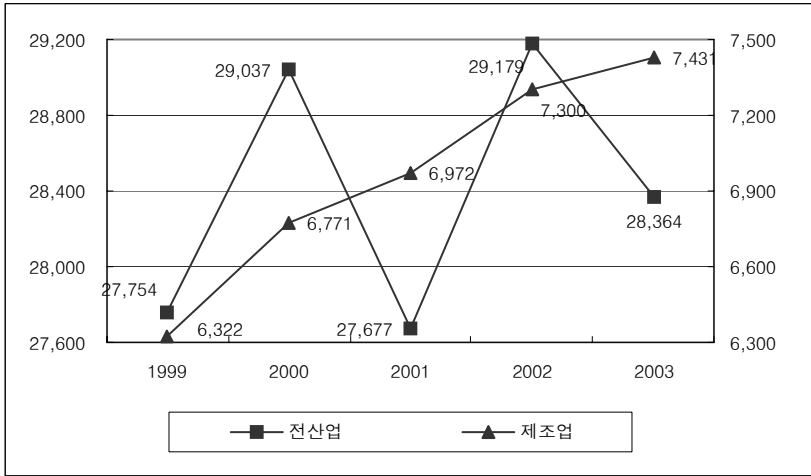
당진군의 취업 구조는 일단 농림업의 비중이 높고 제조업의 비중이 낮은 유형으로 규정할 수 있다. 서비스업 안에서는 전기가스수도업을 포함해 건설업의 비중은 상대적으로 높고, 도소매음식숙박업 등 나머지 서비스업의 비중은 낮은 편이다. 건설 관련 산업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크다는 것은 다른 지역에 비해 개발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뜻한다. 그리고 이는 앞으로 당진군의 산업 구성이 제조업의 비중이 커지는 쪽으로 바뀔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함축한다.

2) 종사자

사업체 수의 변동 추이에 나타난 특징은 종사자 수의 변동 추이에서도 확인된다. 2003년 말 현재 당진군의 종사자 수는 2만 8,364명이다. [그림 III-14]는 1999~2003년 기간 동안 당진군내 종사자 수의 변동 추이를 그림으로 나타낸 것이다. 사업체 수는 지난 4년 동안 증감이 있었지만 전체적으로는 완만한 증가 추세를 보였다. 제조업의 종사자 수는 상대적으로 빠른 속도로 늘었다. 당진군의 제조업 종사자 수는 1999년 6,322명에서 2003년 7,431명으로 4년 동안 17.5% 늘었다. 제조업의 경우 당진군에서 매년 종사자가 4% 이상씩 늘어난 셈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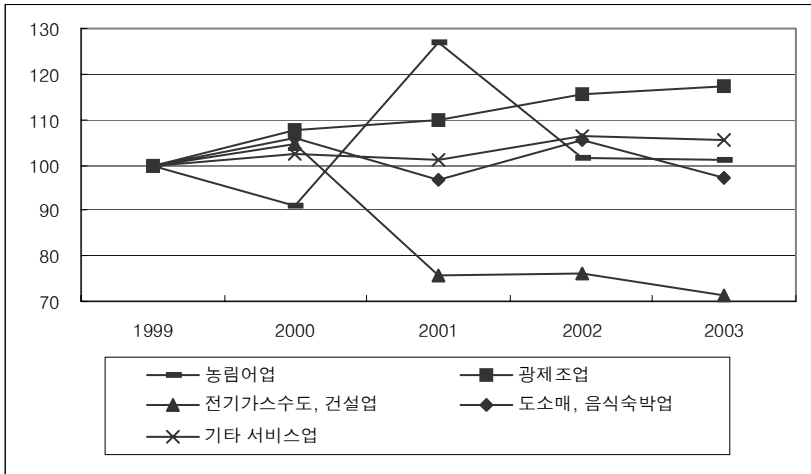
종사자 수의 변화 추세는 산업별로 큰 차이가 있다. [그림 III-15]는 1999~2003년 기간 동안 당진군내 종사자 수의 변동 추이를 산업별로 나타낸 것이다. 종사자 수가 뚜렷하게 줄어든 산업은 전기가스수도 및 건설업이다. 이들 산업에서는 4년 만에 종사자 수가 30% 가까이 줄었다. 종사자 수가 뚜렷하게 늘어난 산업은 광제조업뿐이며, 도소매, 음식숙박업의 종사자 수는 약간 줄었다.

[그림 III-14] 종사자수 변동 추이(1999~2003)



자료 : 통계청 (<http://kosis.nso.go.kr/>)

[그림 III-15] 산업별 종사자수 변동 추이: 1999=100(1999~2003)



자료 : 통계청 (<http://kosis.nso.go.kr/>)

당진군내 제조업 종사자가 늘어난 것은 이 지역의 산업 구성이 제조업의 비중이 커지는 쪽으로 바뀌고 있다는 것을 뜻한다. 특히 제조업의 경우

사업체 수가 약간 줄어든 가운데 종사자 수가 빠른 속도로 늘어난 것은 사업체의 규모가 커지고 있다는 것을 뜻한다.

3) 최근 고용 성과

INI스틸은 2004년 180명을 채용했고, 2005년에는 800명, 2006년부터는 매년 200~300명 정도씩 채용할 계획이며, 이러한 계획대로라면 2006년에는 직원이 2,100명에 이를 전망이다. 물론 이 인원이 모두 정규직은 아니다. 노조의 예상에 따르면, 핵심 라인에만 정규직이 배치되고 나머지 라인에는 소사장제 형식의 사내 하청을 통해 비정규직으로 채워질 전망이다. 회사도 B지구 열연 공장이 완공되는 2007년에는 전체 고용 인원의 50% 가까이 협력화 등을 통해 비정규직으로 채워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현대하이스코는 2006년까지 전체 직원 800명 가운데 400명을 비정규직으로 채용 계획이다.

위의 계획대로라면 2007년 INI스틸과 현대하이스코의 고용 규모는 3,000명에 근접할 것이다. 거기에 두 사업장의 협력 업체들까지 고려하면 고용 규모는 7,000~8,000여 명에 이를 전망이다. 한편 아산국가산업단지 고대/부곡지구에는 2008년까지 76개 업체가 입주하기로 되어 있다. 이들 업체의 고용 인원은 5,000여 명 정도로 추산된다. 물론 INI스틸과 현대하이스코의 협력 업체들과 고대/부곡지구의 입주 업체들 가운데는 중복되는 것이 있을 것이고, 따라서 전체 고용 규모는 10,000명 정도에 머물 것이다.

INI스틸이 계획대로 일관 고로 제철소를 건설하면, 생산이 시작되는 2010년쯤에는 건설을 빼고도 공장 운영 인원만 4,000여 명에 이를 전망이다. 한편 지역 언론인 <당진시대>(http://www.djtimes.co.kr/)(540호, 2004. 11. 29)는 INI스틸 당진 공장과 현대하이스코 당진 공장의 정상화 투자만으로도 2조 7,000억 원의 생산 파급 효과와 1만 9,000명의 고용창출 효과가 예상되며, 정상 가동 뒤에는 매년 2조 원의 생산 파급 효과와 4만 명의 고용창출 효과가 나올 것으로 보도한 바 있다.

철강, 자동차, 기계 관련 업체 외에도 입주하는 업체들이 있다. 대표적인 것이 2005년 말 준공 예정인 한진농공단지의 중외제약이다. 중외제약의 고용 규모는 400~500명 정도가 될 전망이다. 농공단지 입주 사업체의

고용 규모는 현재 1,004명이며, 앞으로 분양 사업체들의 가동이 이루어지면 지금의 두 배 정도로 늘어날 전망이다.

아산향도 잠재적인 고용 효과가 크다. 다만 현재로서는 당진향이 평택향에 비해 전용향 중심이어서 고용 효과가 크지 않을 전망이다. 그러나 부곡지구의 전용향과 별도로 고대지구의 부두를 상향으로 개발하면 하역, 창고, 예도선업, 운송, 물품 공급 등 항만 관련 산업에서 1,500여 명 정도의 고용 효과가 생긴다. 더 들어가 당진군의 고용이라는 면에서 보면, 어느 지역 노조가 항만의 주 노무 공급자가 되는지가 또 문제로 된다. 현재는 당진화력, IN스틸 당진 공장, 동부제강 아산만 공장의 항만의 노무 공급자가 보령에 근거지를 두고 있는 서부향운노조로 되어 있어 건설, 유통, 서비스, 항만 노무 등에서 당진군이 소외되는 경향이 있다.

4) 평가

당진군의 산업별 취업자 비중에서 가장 큰 특징은 충청남도의 다른 지역에 비해 농림어업의 비중이 높고 광제조업의 비중이 낮다는 점이다. 이는 아산향과 아산국가산업단지를 낀 지역으로서 의외의 일로 보일 수도 있지만, 당진군이 전국에서 김제군에 이어 농토 면적이 두 번째로 넓은 군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일이다.

농림어업 말고 상대적으로 취업자 비중이 큰 산업은 전기가스수도업과 건설업이다. 여기에는 2000년 무렵 학교 등 지역 공공시설 건설 사업이 다소 늘어난 것이 약간 자료의 왜곡을 가져왔을 가능성이 있다. 한보철강이 조업과 건설을 중단한 이후 당진군의 건설업은 사업체 수와 종사자 수가 모두 큰 폭으로 줄었다.

당진군의 종사자 수 변동 추이에서 가장 큰 특징은 광제조업 말고는 종사자가 크게 늘어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전기가스수도업과 건설업의 종사자 수는 4년 만에 30% 가까이 줄었다. 이는 이미 바로 앞에서 한보철강이 건설을 중단한 데 따른 여파라고 설명했다. 산업별 종사자 수 변동 추이는 전반적으로 종사자 수가 별로 늘지 않는 상태에서 그나마 제조업의 종사자 수는 늘고 있다는 정도로 평가할 수 있다.

산업별 사업체와 종사자 수의 변동 추이를 비교해 보면, 제조업의 경우

사업체 수가 약간 줄었음에도 불구하고 종사자 수는 꽤 많이 늘어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제조업체의 대형화가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뜻한다.

당진군에서 앞으로의 고용 추세는 최근의 고용 추세와 많이 달라질 것이 분명하다. INI스틸 당진 공장과 현대하이스코 당진 공장은 2005년부터 다시 가동을 시작했고, 앞으로는 추가로 공장을 건설하는 등 조업을 더 확대해 나갈 것이다. 그렇게 되면, 제조업과 건설업은 말할 것도 없고 도소매와 음식숙박업의 종사자 수가 늘어나면서 전체적으로 종사자 수가 크게 늘어날 것이다.

2003년 말 현재 당진군의 제조업 종사자 수는 7,400여 명 수준이다. INI스틸 당진 공장의 B지구 공장이 완공되어 조업을 시작하는 2007년쯤에는 INI스틸 당진 공장과 현대하이스코 당진 공장에서만 3,000명 정도 고용이 늘어날 것이다. 이 두 공장의 직접적인 고용 인원만 고려하더라도 제조업의 종사자 수는 현재의 1.5배 가까이 늘어날 것이다. 거기에 이 두 공장이 유인하는 신규 업체의 입주와 기존 업체의 생산 유발 효과까지 감안하면, 제조업의 종사자 수는 지금의 두 배 이상 늘어나는 것도 어렵지 않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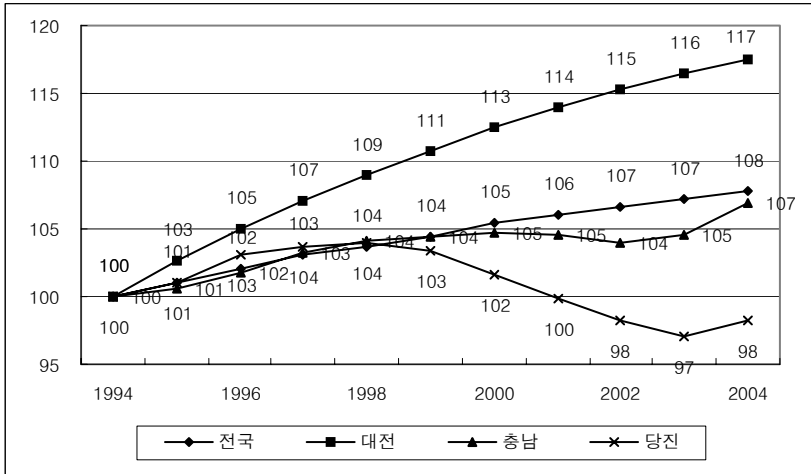
‘전국 수준의 통계 분석’에서 확인된 당진군의 고용 특성은 당진군의 고용 변동에 대한 사례 분석에서 다시 한번 확인된다. 사업체 수에 비해 제조업체 수가 적은 것은 농지 면적이 넓다는 당진군의 자연 조건 때문이다. 대형 사업체가 많은 것은 최근 대형 철강사들이 조업을 시작하면서 나타난 현상이다. 2000년대 초 일자리 창출 수와 소멸 수가 많은 것은 지역 철강 산업의 부침에 따른 이직을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나. 인구와 세대의 변동

1) 인구

2004년 말 현재 당진군의 주민등록인구(이하 인가로 약칭)는 11만 5,514명이다. [그림 III-16]은 1994~2004년 기간 동안 당진군의 인구 변동 추이를 전국, 충청남도, 대전과 비교한 것이다. 지난 10년간 인구 변동 추이를 보면, 당진군의 인구는 1998년을 정점으로 줄고 있다. 당진군이 속해 있는

[그림 III-16] 주민등록인구 변동 추이: 1994=100(1994~200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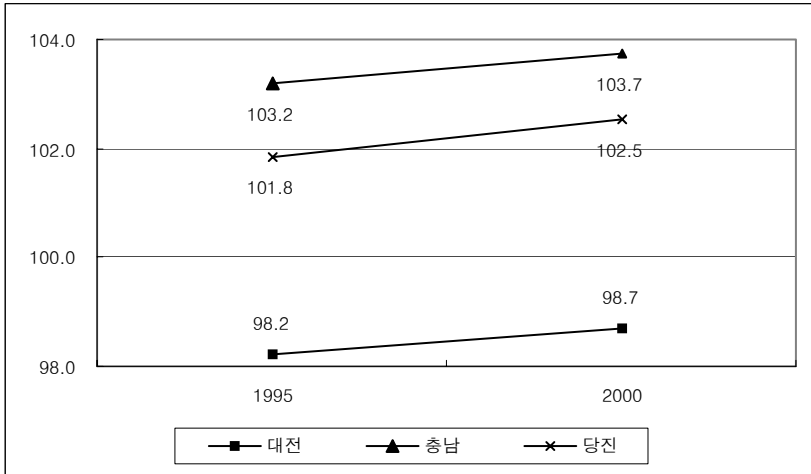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 (<http://kosis.nso.go.kr/>)

충청남도의 인구 변동 추이는 전국의 인구 변동 추이와 비슷하다. 지난 10년간 인구 변동을 보면, 전국과 충청남도는 각각 7.8%와 6.9%씩 늘어난 데 비해, 당진군은 1.8% 줄었다.

당진군의 인구 감소는 일단 이농향도 현상으로 규정할 수 있다. 당진군의 인구 감소와 대전시의 인구 증가, 이 두 현상의 대조가 그것을 잘 말해 준다. 그런데 문제는 충청남도의 다른 지역에서는 당진군과 같은 이농향도 현상이 약하다는 점이다. 대전을 뺀 충청남도는 전국 평균과 비슷한 비율로 인구가 늘었다. 이는 충청남도의 다른 군에 비해 당진군이 인구 감소가 유독 심했다는 것을 뜻한다. 이 점, 당진군이 인근 도시에 비해서는 말할 것도 없고 인근 다른 농촌 지역에 비해서도 인구가 줄고 있다는 것은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다.

2000년 현재 당진군의 상주(야간) 인구는 11만 5,495명, 주간 인구는 11만 8,412명으로, 주간 인구 지수는 102.5다. 즉 상주 인구에 비해 주간 인구가 2.5% 많다. 상주 인구에 비해 주간 인구가 많다는 것은 통근과 통학을 이유로 주간에 지역 안으로 들어오는 순유입 인구가 야간에 지역 바깥으로 나가는 순유출 인구보다 많다는 것을 뜻한다. <표 III-17>은 1995~

[그림 III-17] 주간 인구 지수의 변동: 상주 인구=100(1995~2000)



자료 : 통계청 (<http://kosis.nso.g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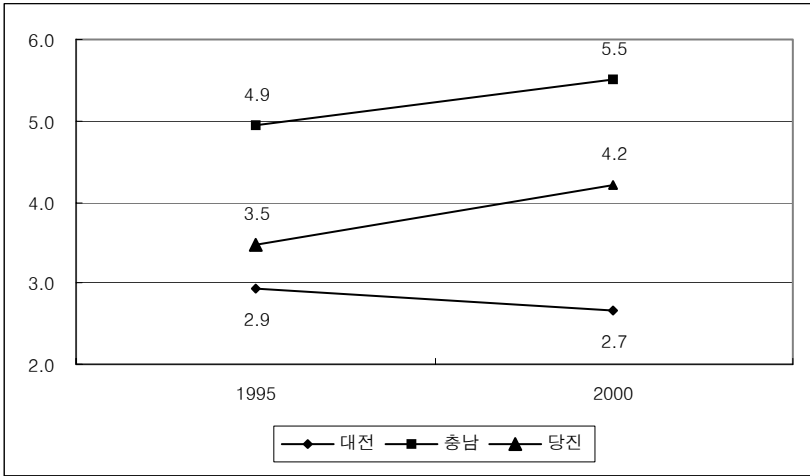
2000년 기간 동안 당진군의 주야간 인구 유출입 비율의 변화를 대전 등 충청남도 다른 지역과 비교한 것이다.

주간 인구 지수는 대전과 대전 이외 지역이 뚜렷이 구별된다. 여기서 초점은 당진군의 주간 인구 지수가 대전에 비해 높다는 것이 아니라 충청남도의 다른 지역에 비해 낮다는 것이다. 주간 인구 지수가 낮다는 것은 상대적으로 상주 인구(야간 인구)에 비해 주간 인구가 적다는 것이다.

상주 인구에 비해 상대적으로 주간 인구가 적은 것은 주간 유입(야간 유출) 인구가 적거나 주간 유출(야간 유입) 인구가 많기 때문이다. 이 문제를 판단하기 위해 주간 유입 인구 비율과 주간 유출 인구 비율을 지역 별로 비교한 것이 [그림 III-18]과 [그림 III-19]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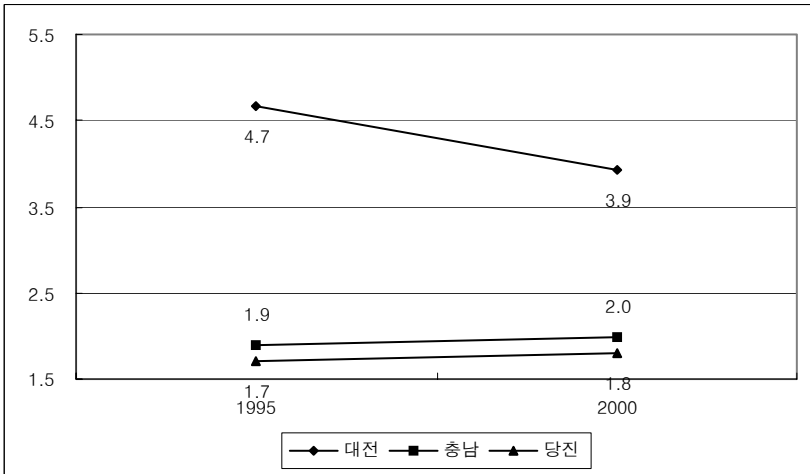
이 두 그림을 함께 보면, 당진군이 충청남도의 다른 지역에 비해 주간 인구 지수가 낮은 것은 주간 유출 인구가 많기보다는 주간 유입 인구가 적기 때문이다. 주간 유출 인구가 많지 않다는 것은 주거지로서 매력적이지 않다는 것을, 주간 유입 인구가 적다는 것은 일터로서 매력적이지 않다는 것을 뜻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적어도 1990년대 후반에는 당진군이 거주지로도 일터로도 그다지 매력적이지 못한 지역이라고 평가할 수 있

[그림 III-18] 주간 인구 중 유입인구 비율 변동(1995~2000)



자료 : 통계청 (<http://kosis.nso.g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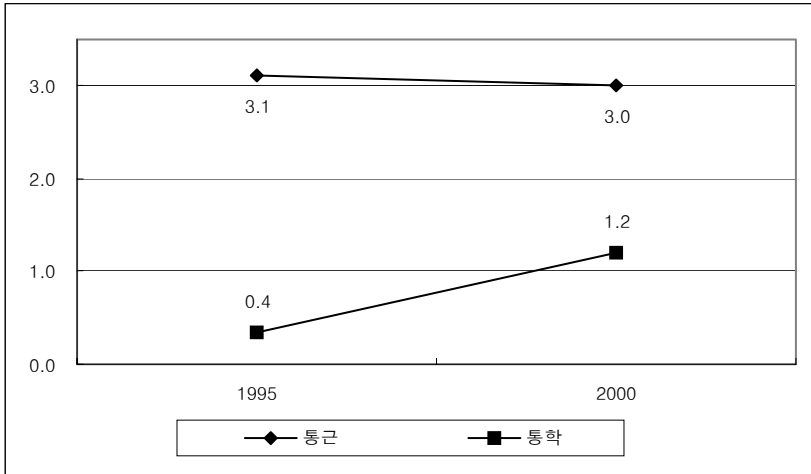
[그림 III-19] 상주 인구 중 유출인구 비율 변동(1995~2000)



자료 : 통계청 (<http://kosis.nso.go.kr/>).

다. 물론 논리적으로는 반대로 해석할 수 있지만, 현실적으로 그럴 가능성은 적어 보인다.

[그림 III-20] 주간 인구 중 통근학 유입인구 비율 변동(1995~2000)



자료 : 통계청 (<http://kosis.nso.g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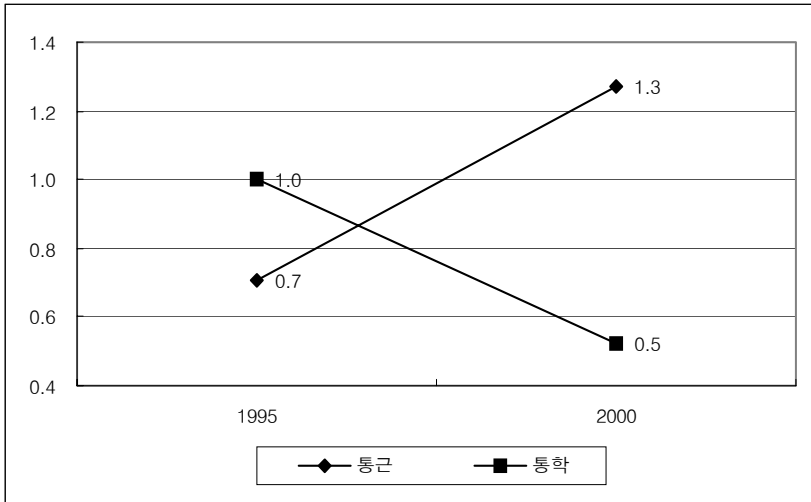
주야간 인구의 유출입은 주로 통근과 통학을 목적으로 이루어진다. [그림 III-20]과 [그림 III-21]은 1995~2000년 기간 동안 당진군에서 각각 주간 인구에서 통근과 통학을 목적으로 주간에 유입된 인구 비율과 상주 인구에서 통근과 통학을 목적으로 주간에 유출된 인구 비율의 변동 추이를 비교한 것이다.

[그림 III-20]을 보면, 1990년대 후반 당진군에서 주간 유입 인구 가운데 통근을 목적으로 한 인구는 큰 변화가 없으나 통학을 목적으로 한 인구는 늘어났다. 이는 교육 여건이 개선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볼 수도 있지만, 일터로서 별 발전이 없었다는 의미가 훨씬 더 강할 것이다.

당진군이 1990년대 후반 동안 일터로서 별 발전이 없었다는 점은 [그림 III-21]에서 확실하게 드러난다. 이 기간 동안 당진군의 주간 유출 인구 가운데 통학을 목적으로 한 인구는 크게 줄었고 통근을 목적으로 한 인구는 크게 늘었다.

통학을 목적으로 한 주간 유출 인구가 줄어든 것은 교육 여건이 개선된 데 따른 효과로 볼 수도 있지만, 주거지로서 매력이 떨어져 통학을 목적으로 주간에 유출되던 인구가 아예 이주해 버렸기 때문일 수도 있다. 통근을

[그림 III-21] 상주 인구 중 통근학 유출인구 비율 변동(1995~2000)



자료 : 통계청 (<http://kosis.nso.go.kr/>).

목적으로 한 주간 유출 인구가 늘어난 것은 주거지로서 매력이 높아졌기 때문이라기보다는 일터로서 매력이 떨어진 결과일 가능성이 크다.

최근 당진군은 도농 복합시로 승격하기 위해 주민 수를 늘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군청은 유입 인구 보상, 출산 장려, 유동 인구 전입 운동, 교육시설 확충, 명문고 육성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업계는 기업 유치에 힘쓰고 있다. 시가 되기 위해서는 도시적 산업 종사자의 비율이 45% 이상이어야 하는데, 2004년 말 당진군은 60.7%로 기준을 충족시켰다. 군의 재정자립도도 34.7%로 전국 평균인 18.8%를 크게 상회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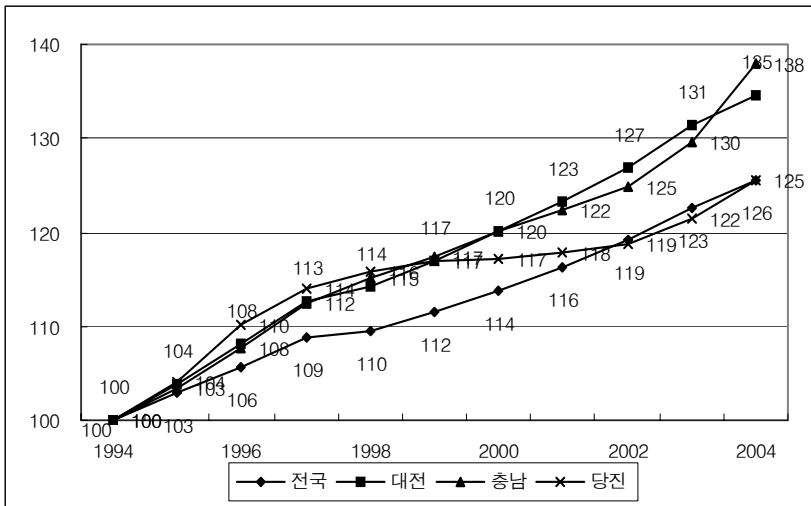
문제는 주민 수인데, 3만 명 정도가 늘어나야 기준인 15만 명을 충족시킬 수 있다. 그러나 이미 상주 인구는 13만 명을 넘은 것으로 추정된다. 결국 1만여 명 이상이 사실상 당진군에 거주하면서 주민등록을 옮기지 않은 것이 된다. 이는 주로 주택 청약, 자녀 교육, 전세 아파트 부족 등 교육·문화·의료 등 주거 환경이 달라주지 못해서 생기는 현상이다. 군청이 2004년부터 ‘내 고장 주민등록 갖기 운동’을 벌이고 있는 것도 이러한 맥락이다. 현재 당진군은 INI스틸의 정상화와 부곡지구 공단 분양 등으로 인구가 늘어나는 데 큰 기대를 걸고 있다.

2) 세대

당진군은 인구가 줄어든 데 반해 세대수는 상당한 폭으로 늘어났다. 세대수는 1994년 3만 4,100세대 정도에서 2003년 4만 1,400세대 정도로 10년 만에 21.5% 늘어났다. 인구가 줄어들고 세대수가 늘어나면서, 세대당 인구수는 10년 동안 3.55명에서 2.83명으로 떨어졌다. [그림 III-22]는 1994~2004년 기간 동안 당진군의 세대수 변동 추이를 다른 지역과 비교한 것이다.

[그림 III-22]를 보면, 지난 10년간 세대수의 증가는 전국적인 현상이지만, 시기별로 그리고 지역별로 큰 차이가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당진군에 초점을 맞춰 보면, 한보철강의 부도 이전인 1990년대 중반에만 해도 전국, 대전, 충청남도 다른 지역에 비해 세대수 증가율이 높았지만, 한보철강이 조업과 건설을 중단한 1990년대 말 이후에는 세대수 증가 추세가 현격히 떨어져 2000년대 초까지 거의 늘어나지 못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III-22) 세대수의 변동 추이: 1994=100(1994~2004)



자료: 통계청 (<http://kosis.nso.go.kr/>).

3) 평가

한 지역을 대표하는 사업체의 활동은 해당 지역 경제에 엄청난 영향을

미친다. 당진군의 인구수와 세대 수의 변동 추이는 한보철강이 조업과 건설을 중단한 여파가 당진군의 지역경제에 얼마나 큰 타격을 주었으며, INI스틸과 현대하이스코의 한보철강 인수가 앞으로 지역경제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되는지 잘 보여준다.

당진군의 인구수는 정확하게 한보철강이 조업과 건설을 중단한 1998년을 정점으로 줄어들기 시작했으며, INI스틸과 현대하이스코가 한보철강을 인수한 2004년을 저점으로 늘어나고 있다. 2005년 INI스틸 당진 공장이 정상 가동되기 시작했고 앞으로 B지구 건설이 계속됨에 따라 인구수는 더 빨리 늘어나고 세대 수도 다른 지역에 비해 다시 빨라질 것이다.

1990년대 후반 당진군이 일터는 말할 것도 없고 주거지로도 매력을 잃은 것도 한보철강이 조업과 건설을 중단한 것과 깊은 관련이 있다. 이러한 판단은 당시 통근을 목적으로 한 주간 유출 인구가 유난히 늘어났던 것과 충청남도의 다른 지역에 비해 주간 인구 비율이 낮았던 것으로 입증된다.

앞서 당진군의 산업 변동에 대한 분석을 마감하면서 당진군이 산업 입지를 조성하고 생산 기반을 확대하는 데까지는 성공했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앞서 [그림 IV-1]의 ‘지역발전 모형’에서 제안한 것처럼 한 지역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생산 기반의 확대에 따른 고용의 증가가 소비 기반의 확대에 따른 인구의 증가로 이어져야 한다. 이 문제에 관한 한 지금까지 당진군은 거의 성과를 내지 못했다.

‘전국 수준의 통계 분석’에서 검증된 고용기회에 대한 일반적 가설들은 당진군의 인구와 세대 변동에 대한 사례 분석에서도 다시 한번 확인된다. ‘전국 수준의 통계 분석’에서는 ‘일자리가 사람을 따르기’보다는 ‘사람이 일자리를 따르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당진군의 사례도 그런 경향에 부합한다. 당진군에 일자리가 생긴 것은 사람이 있어서라기보다는 산업 입지 조건이 마련되었기 때문이었고, 사람이 줄어든 것은 일자리가 줄어들었기 때문이었다.

4. 맺음말

지역발전 전략에서 농업을 중심으로 한 발전은 우리나라 농촌 지역에 일반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대안이 아니다. 우리나라에서 농업이 전혀 경쟁력을 가질 수 없는 것은 아니지만, 어느 농촌 지역이나 나름대로의 방식으로 농업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도 엄연한 현실이다.

일반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지역발전 모형'은 제조업의 발전에서 시작해서 서비스업의 발전을 도모함으로써 지역경제를 발전시키는 전략일 것이다. 이때 제조업이 먼저 발전하기 위해서는 선도적 역할을 할 대기업을 유치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대단히 중요하다. 소규모 기업을 중심으로 한 지역발전 전략도 생각해 볼 수 있지만, 현실적으로 성공하기 어려울 가능성이 크다. 지역경제에 뿌리를 내린 소규모 기업의 발전은 소비 기반과 인구가 늘어나는 등 어느 정도 지역경제가 발전한 다음에야 가능한 일이기 때문이다.

한 지역이 대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먼저 다른 지역에 비해 우수한 산업 입지를 갖춰야 한다. 산업 입지를 갖추는 일은 지자체의 낮은 재정 자립도를 감안할 때 지자체 수준에서 감당할 수 있는 규모를 넘어서는 경우가 많으므로 중앙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 현 정부의 국토 균형발전도 이러한 관점에서 접근할 수 있다.

지역경제의 기반이 약한 상태에서는 산업 입지를 조성해 생산 기반을 확대하는 데서부터 지역발전 전략을 시작할 수밖에 없다. 생산 기반이 늘어남에 따라 고용이 늘어나면 잠재 인구가 늘어남에 따라 소비 기반이 늘어날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진다. 이 단계에서 산업 입지 조성 노력과 함께 문화시설 조성 노력이 정책적으로 뒤따라야 한다.

문화시설이 조성되고 소비 기반이 확대되어 인구가 늘어나면, 산업 입장에서 수요와 공급 조건이 모두 개선되는 선순환 과정이 시작될 수 있다. 교육 여건이 개선되고 인구가 늘면서 기업의 인력 조달이 쉬워질 것이고, 인구가 늘고 소비 여건이 개선되면서 기업의 시장 접근이 쉬워질 것이다.

최근 10년간 당진군의 산업, 고용, 인구 변화에 대한 경험은 이 사례 연구의 '지역발전 모형'이 상정한 가설들에 부합한다. 최근 10년간 당진군의

지역경제는 한보철강이라는 지역대표 기업과 함께 부침했다. 1990년대 중반 한보철강이 당진군에 들어선 것은 산업 입지를 보고 결정한 것이지 지역경제의 전반적 수준을 감안해 결정한 것이 아니다. 이러한 현상은 당진군 외의 다른 지역에서도 마찬가지다. ‘전국 수준의 통계 분석’에서 ‘일자리가 사람을 따르는’ 경향이 확인되지 않은 것도 그런 이유로 볼 수 있다.

당진군에 한보철강이 들어서면서 산업 입지가 크게 달라졌다. 이후 동부제강, 휴스틸, 연합철강, 동국제강 등 대형 철강사들의 투자와 투자 계획이 이어졌다. 그러나 1990년대 말 한보철강이 부도를 맞으면서 조업과 건설을 중단하자 당진군의 지역경제는 큰 타격을 입었다. 그 전까지 다른 어느 지역보다 인구가 빨리 늘던 지역이 그 일을 계기로 인구 감소 지역으로 바뀌었다. 일자리가 없어지면서 인구가 준 데서 ‘사람이 일자리를 따르는’ 경향이 거꾸로 다시 한번 확인된다. 2000년대 중반 INI스틸과 현대하이스코가 한보철강을 인수하면서 인구는 다시 늘기 시작했다. 여기서 ‘사람이 일자리를 따르는’ 경향이 다시 한번 확인된다.

[그림 III-1]의 ‘지역발전 모형’에 따라 당진군의 지역발전 전략을 평가한다면, 산업 입지를 조성해 생산 기반을 확대하는 데까지는 갔지만, 이후 문화시설을 조성해 소비 기반을 확대하는 데까지는 가지 못했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1990년대 말 이후 당진군의 인구가 줄어든 것은 소비 기반 확대 전략이 실패해서라기보다는 한보철강의 부도로 생산 기반 확대 전략에 차질이 생기면서 일어난 일종의 해프닝으로 보는 것이 옳다.

이제 당진군은 INI스틸과 현대하이스코가 한보철강을 인수하면서 다시 지역경제가 활기를 되찾아가고 있다. 이 시점에서 소비 기반 확대 전략이 제대로 진행된다면 당진군의 지역경제는 크게 발전할 수 있을 것이다. 당진군에서는 이미 소비 기반을 확대해야 한다는 지역 공감대는 생기고 있는 듯하다. 최근 당진군이 시 승격을 추진하고 있는 것, 군내 대학이 산학 협력 프로그램을 위해 대규모 펀드를 조성한 것, 아파트 등 지역 건설경기가 되살아나고 있는 것 등은 모두 이러한 맥락에서 볼 수 있다.

‘전국 수준의 통계 분석’에서 ‘일자리가 사람을 따르는’ 경향이 확인되지 않은 것은 소비 기반이 확대되면서 다시 생산 기반이 확대되는 선순환이 실제로 상당히 어렵거나 아니면 아직까지 별 경험이 없는 과정이라는 것

을 의미한다. 따라서 앞으로 지역균형발전 전략은 생산 기반만큼이나 소비 기반을 확대하는 데 관심과 노력을 쏟아야 한다. 그렇다 하더라도 산업 입지를 조성해 생산 기반을 확대하는 노력과 함께 문화시설을 조성해 소비 기반을 확대함으로써 인구를 늘리는 것이 소비 기반 확대 전략의 핵심이라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다.

IV. 농공단지 사례조사를 통해 본 농촌지역 고용 : 경상남도 함안군

1. 사례대상, 사례대상지 선택과 특성

가. 사례대상과 사례대상지의 선택

농촌지역에 입지하는 공장들과 농촌지역과의 관계는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이루어지고 변화되어 왔다. 첫째는 농촌지역의 생산물인 농업자원을 이용하기 위해 공장이 진입하는 것이다. 발전 정도가 낮았던 1970년대까지의 한국 농촌이나 현재의 후진지역에 공장이 진입하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된다. 그러나 이미 이러한 관계는 세계적으로도, 한국의 농촌에서도 일반적이지 않다. 경제가 발전하고 통신수송의 체계가 발전하게 되면 농촌의 입지조건 자체가 중요한 공장 진입의 요소가 되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오늘날 농촌지역에 공장이 진입하는 두 번째 이유는 도시의 지가 혹은 공장부지 확보 불가능에 따른 비용 문제와 인력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이다. 이러한 변화는 세계사적으로도, 세계지역적으로도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며, 자원이 많은 아프리카나 남미로 세계의 공장이 이동하는 것이 아니라 우수하고 저렴한 노동력을 확보할 수 있는 인도나 중국으로 이동하는 것이 이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본 사례 조사의 목적은 이러한 시대적 변화에 따라 농촌내 경제활동 기회의 현황과 문제점, 그리고 대안을 찾기 위한 것이다. 농촌내 경제활동 기회란 노동시장 구조, 즉 수요와 공급에 의해 결정된다. 그런데 이를 조사하는 접근방법은 시장의 세 주체 중 어느 편을 접근 시각으로 하는가에 따라 달라진다. 우선 첫째는 농촌의 고용기회를 공급하는 기업의 입장에서 접근하는 것이고, 둘째는 고용기회를 수요하며 그 수혜 대상자인 농촌인들의 입장에서 접근하는 것이며, 세 번째는 엄밀히 말해 시장의 구성 주

체는 아니지만, 노동시장의 마찰을 줄이고 효율성을 증대시키기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이라는 측면에서 접근하는 것이다. 본 사례조사는 이 중 첫 번째 접근방법인 기업으로부터 접근하는 방법을 쓴다. 이 경우 농촌 경제활동 기회를 제공하는 기업가, 즉 기업의 대표이사가 공급 대변수가 되며 수요 변수는 그 기업에 취직해 있는 종사자가 된다. 따라서 조사방법은, 첫째 기업을 찾아가 대표이사를 만나 인터뷰를 하고, 둘째 대표이사를 대상으로 노동수요자로서의 회사에 대한 설문지 조사를 하였으며, 셋째 노동공급자로서의 종사자들을 만나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현재 농촌지역에는 외부 기업을 유치한 농촌 공업단지 혹은 독립 농촌 공장이 조성되고 있는데 그 중에 “농어촌 지역의 지방자치단체가 스스로 재정을 확보하고, 지역 주민이 지금 살고 있는 농어촌 지역에서 취업할 수 있도록 하며, 도시와 농어촌의 격차를 줄여 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을 이룬다”는 목적 아래 전국적으로 농촌에 조성된 것이 농공단지(農工團地, industrial complex of rural areas)이다¹⁴⁾. 이러한 목적 때문에 농공단지에는 환경, 공해 업종이 아닌 경우 농촌, 농업과 관련없이 모든 업종이 입주할 수 있다. 공해 배출 산업의 경우도 환경부의 승인을 받으면 입주할 수 있으므로 사실상 모든 업종이 입주할 수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농공단지는 농업과의 산업 관련이 목적이 아니라 농촌인들의 고용을 주목적으로 한 것이다. 즉 농공단지는 다른 기업 유치와 다르게 처음부터 농촌 지역주민의 취업을 주목적으로 한 사업이다. 농공단지가 이러한 차별적인 목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기업체 대표이사(이하 줄여 쓰는 경우 기업대

14) 이러한 목적 때문에 농공단지 입주 기업은 금융, 기술지원 및 세금 감면 혜택을 받는다. 농공단지는 1984년부터 시행된 『농어촌소득원개발촉진법』에 의해 지정되었으며 1984년부터 1994년까지 단지당 15ha 넓이로 전국 269군데 농공단지의 개발이 끝났다. ‘함안군’은 1987년 5월 29일부터 농공단지를 조성하기 시작했다. 1995년부터 2004년까지는 단지당 26ha 넓이로 전국 131군데의 개발 계획이 시행되었다. 지역별로 보면 수도권에 인접하여 입지가 유리한 중부 대전·충청 지역은 개발이 활발한 반면에 입지 여건이 불리한 기타 지역은 개발이 늦어졌다. 경상남도 역시 개발이 늦은 지역이다. 관리는 각 자치단체와 중소기업진흥공단, 산업자원부가 하고 있다. 기업이 각 시·도의 시장이나 군수에게 입주 신청을 하면 시장이나 군수는 중소기업진흥공단에 해당 신청기업의 사업 타당성 조사를 의뢰하여 입주 승인 여부를 결정한다.

표)들 역시 잘 인식하고 있었음은 인터뷰에서 확인되었다. 조사자가 그런 용어를 사용하거나 유도하지 않았음에도 사례 대상의 기업대표들은 “농촌 지역의 인력을 활용하고자 만든 농공단지(이지만, 이므로)……”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었다. 따라서 본 사례연구에서는 농촌 지역 내에서의 경제 활동 기회의 현황과 문제점 그리고 대안을 찾기 위해 이와 가장 가까운 목적을 가지고 만들어지고 운영되고 있는 농공단지내 기업을 사례 대상으로 하였다.

조사대상 지역은 경상남도 지역 중 한국 농촌의 평균 지역으로 평가되는 지역을 선택하였다. 평균의 기준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여기에서는 농촌경제연구원의 분류(이동필 외, 2004: 131)에 의하여 대도시 인근 발전 지역인 유형 A, 중간 수준의 농촌 유형 B, 낙후 농촌지역의 유형 C 중 중간 수준인 유형 B에 속하는 군을 평균 지역으로 보았다. 이렇게 할 경우 경상남도에서는 중간 평균에 속하는 군은 함안군 1개 지역만 해당되므로 함안군으로 선택했다.

처음 조사에서는 고용의 경우 경상남도 내의 농촌과 주변부 도시와의 관계가 주요 변수라고 보고 이를 변수화하여 보기 위해 일차 대상으로 부산과 가까운 김해, 양산, 밀양의 세 지역을 선택했다. 그러나 이들 지역의 사전조사 결과 모두 부산광역시와 너무 가까워 한국의 일반적인 농촌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문제가 제기되었고,¹⁵⁾ 동시에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분류에 의하면 이 지역들은 모두 유형 A에 속하여 한국의 평균 농촌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문제가 있어 함안군으로 선택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조사(이동필 외, 2004: 237)에 의하면 유형 B형에 속하는 농촌은 일반적으로 “농촌지역 중에서 농어업, 관광 등 나름대로 지역의 경제적 기반을 갖추고 있는 지역이 중심을 이루고 있고 인구가 감소하고 있으며 고령인구의 비율이 농촌 평균보다 낮고 고학력인구 비율은 농촌 평균보다 높은 특성을 가진” 평균 농촌지역이다. 소득 구성에서 보면 “농업소득이 높은 농가가 많은 편이지만 겸업활동은 활발하지 않는 특성을 가지고 있고 서남

15) 이 사전조사와 면담에서 신라대학교 김대래 교수님, 인제대학교 박섭 상경대학장님, 부산상공회의소 김승희 과장님, 경제조사팀 김재동 과장님, 한국은행 부산지점 경제조사팀 박형호 차장님께 도움을 받았다. 감사드린다.

해안의 전통적 벼농사 지대 또는 강원이나 경남북 내륙의 과수나 채소 재배지대 등 전통적인 농업지역이 많이 포함”된 지역이다.

나. 사례대상지 특성

함안군은 동쪽과 남쪽으로 창원·마산시에 인접해 있고 서쪽으로 진주시, 북쪽으로는 의령·창녕군과 접해 있다. 군의 전체 면적은 416.77km²로 경상남도 면적의 3.9%를 차지하고 있다. 함안군에는 아라가야의 여러 무덤군과 문화재가 산재해 있지만 여전히 관광 자원보다는 수박과 청포도가 지역 특산물로 생산되는 시설농업이 중심이고, 최근 농공병진(農工並進)을 함안의 지역적 특색으로 내세우고 있다. 함안군의 구성은 2005년 7월 말 현재 1읍 9면 238리 764반으로 되어 있으며, 인구는 남자 30,035명, 여자 30,483명으로 총 61,518명이다. 읍면별 세대수, 인구, 성별 구성을 보면 <표 IV-1>과 같다.

함안의 산업구조는 종사인구로 보면 1차산업 53.1%, 2차산업 26.8%, 3차산업 20.1%로 여전히 농업 중심의 산업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토지 이용 지목별 분포로 보면 임야가 52.14%, 농지가 30.75%, 대지와 공장 용지가 2.95%, 도로·하천이 7.22%, 기타 지목이 6.95%로 농지와 임야가 전체의 82.9%를 차지하고 있고 공장 용지는 적다. 함안이 여전히 농업 중심의 산업구조와 이용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은 “함안이 수박·청포도 등 고수확 영농후계자를 집중 육성하고 있고 이들이 고소득원인 비닐 농업을 하고 있으며 전국에서 여성경제활동비율이 50% 이상으로 가장 높지만 이들 역시 경영형 부농에 속하기 때문”(함안군 진석규 군수 인터뷰, 2005. 7. 21)이다.

함안군내 기업체는 [그림 IV-1]에서 보듯이 2004년 말 현재 859개 업체에 이들 기업체 고용인원은 12,054명에 이르고 있다. 1994년 이후 2004년까지의 최근 10년간 변화를 보면 기업체수는 전반적으로 2000년을 제외하고 상승 추세에 있다. 1998년 함안군내 입주 기업이 전년도 595개에서 714개로 급증한 것은 외환위기로 비용을 줄이려는 많은 기업체들이 주위 도시로부터 함안군 내로 이주해 왔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당시 함안군으로 많은 기업들이 이주해 왔음에도 함안의 고용은 오히려 악화되었다. 이주

〈표 IV-1〉 함안군 읍면별 인구(2005년 7월 31일 현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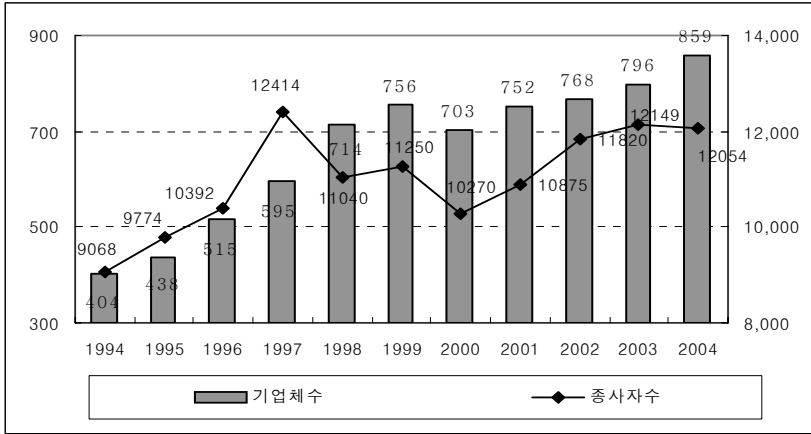
읍면별	세대수	인구수(명)		
		전체	남자	여자
가야읍	6,255	17,981	9,023	8,958
함안면	1,339	3,069	1,529	1,540
군북면	3,316	7,788	3,881	3,907
법수면	1,567	3,765	1,880	1,885
대산면	2,046	4,927	2,520	2,407
칠서면	2,522	6,412	3,244	3,168
칠북면	1,109	2,521	1,274	1,247
칠원면	3,887	11,033	5,643	5,390
산인면	1,301	3,053	1,566	1,487
여항면	426	969	475	494
전 체	23,768	61,518	30,035	30,483

자료: 함안군청 자료(2005년 8월).

기업들은 비용을 줄이기 위해 고용을 늘리지 않고 있었고 기존의 입주업체들 역시 외환위기로 오히려 고용을 줄였기 때문이다. 이러한 영향으로 함안군내 기업체들이 고용한 종사자수는 1997년을 정점으로 이후 2000년까지 계속 감소하였고 2001년부터 여러 정책적 유도도 다시 상승 추세에 있다. 2004년 말 현재 함안군내 기업체가 고용하고 있는 현 고용인원은 전년도 2003년에 비해 95명이 줄어드는 정체 현상을 보이고 있지만 1994년에 비해 2,986명, 32.9% 증가한 것이다.

〈표 IV-2〉에서 보듯이 2004년 말 현재 기업체의 규모별 현황을 보면 50인 이하 중소기업이 기업수에서 95.9%로 2003년에 비해 약간 늘어나면서 압도적 다수를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들 5인 이하 기업체가 고용하는 효과를 보면 전체 고용의 73.6%를 차지하고 있다. 함안군의 공업은 현재 조성중인 일반지방산업단지 1개소, 그리고 완공되어 운영중인 농공단지 4개소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조성 중인 ‘칠서일반지방산업단지’는 2005년 6월 말 현재 306.7만㎡ 규모로 이미 33개 기업이 입주하여 현재 가동률은 59%에 이르고 있다.

[그림 IV-1] 함안군 기업체 변화(1994~2004)



자료 : 함안군 지역경제과.

<표 IV-2> 기업체 규모별 현황(2003~2004년 말 현재)

(단위 : 개, 명, %)

구 분		전체	50인 이하	50~100인	101~200인	201인 이상	
2003	업체수	796	762	24	8	2	
	종사자수	12,149	8,658	1,715	1,159	617	
2004	업체수	수	859	824	25	8	2
		비중	100.0	95.0	2.9	0.9	0.2
	종사자수	수	12,054	8,868	1,445	1,123	618
		비중	100.0	73.6	12.0	9.3	5.1

자료: 함안군 지역경제과.

2. 사전조사

가. 함안 농공단지 현황과 고용 관련 변수간 관계

원래 함안의 농공단지는 5개소 20만 평이지만 ‘가야농공단지’¹⁶⁾가 아직

16) ‘가야농공단지’는 1992년 7월 9일 지정되었고 총사업비 7,299백만 원으로 78,235㎡ 부지가 조성되었다. 원래 준공 예정일은 2005년 4월로 되어 있으나 아직 가동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자세한 것은 산업자원부·중소기업진흥

미가동 상태여서 4개의 농공단지가 움직이고 있다. 2005년 6월 말 현재 함안의 4개 농공단지의 현황은 <표 IV-3>과 같으며 입주업체는 84개, 가동 중 업체는 78개, 그리고 고용 인원은 남녀 각각 1,667명, 414명으로 총 2,081명이다.

함안군은 도시 근교로서의 지리적 여건과 남해, 중부내륙고속도로, 경전선철도, 국도, 지방도로 등이 관내를 통과하고 김해공항이 인접해 중부 경남의 타지역에 비해 교통망이 발달되어 있다. 이러한 지역적 조건 때문에 마산·창원 지역 기업체의 사업 확장과 기업체들의 신규 창업시 함안군으로 진입하려는 기업, 즉 노동수요는 존재한다.

상공회의소와 함안군청 지역산업과에 문의해 확인한 바에 의하면 농촌 공단으로 기업이 들어오는 결정적 이유는 인근 도시, 즉 마산과 창원이 이미 높은 지가에도 불구하고 더 이상 도시에 공장이 들어갈 수 없는 토지 포화상태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따라서 결국 기업들이 농촌으로 갈 수밖에 없는 현실적인 이유가 상존해 있으므로 현재 함안에는 4개의 농공단지가 있고 ‘칠서일반지방산업단지’¹⁷⁾ 여전히 조성 중에 있지만 함안군청은 2개의 농공단지를 더 만들려고 준비 중에 있다. 함안군의 입장에서 보

<표 IV-3> 함안군 농공단지 현황(2005년 6월 30일 현재)

단지명	조성 연도	업체수		고용(명)			생산 (백만원)	수출 (백만원)
		전체	가동중	남자	여자	전체		
과수	1991	30	28	357	121	478	43,770	1,600
군북	1988	14	13	258	130	388	38,295	11,850
범수	1991	19	17	491	83	574	49,370	3,050
산인	1991	22	20	561	80	641	33,880	50
전체		84	78	1,667	414	2,081	165,315	16,550

주: 생산과 수출은 2005년 2분기 실적임.
 자료: 함안군 지역경제과.

공단, 『농공단지현황』, 2004를 참조하기 바란다.

17) ‘칠서일반지방산업단지’에서 가장 고용규모가 큰 ‘부산우유’와 ‘건설화학’을 확인해 본 결과 ‘부산우유’는 총 143명 중 함안 현지인이 21명으로 14.7%였고, ‘건설화학’은 총 110명 중 함안 현지인이 10명인 9.1%로 농공단지보다 현지인 취업 비율이 낮았다.

아도 “마땅히 지역경제와 고용을 늘릴 관광 자원이 없고 비교우위 산업도 없는 데 비해 기업들의 진입 욕구는 계속 있고 또 진입 유도가 가능하기 때문이다”(지역경제과 인터뷰 내용, 2005. 6. 28).

함안의 농공단지를 전체적으로 성장과 쇠퇴의 측면에서 평가해 보면 결과적으로는 모두 중립적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각 농공단지 내 입주업체수의 변동은 4개 농공단지 모두 거의 발견되지 않고 있다. 물론 입주 기업들이 그대로 머문 것은 아니고 입주 기업들의 진입·퇴출이 있었으나 퇴출만큼 대체적으로 진입이 이루어져 전체적인 숫자에서 큰 차이가 없었다. 다른 전국의 많은 농공단지(와 달리¹⁸⁾) 기업의 퇴출수만큼 바로 진입으로 채워진다고 하는 것이 함안 농공단지가 다른 농공단지와 다른 점이고 이것이 바로 함안 농공단지가 비교적 성공하였다고 볼 수 있는 근거가 된다.

함안군 역시 다른 농촌과 마찬가지로 이미 노동공급 병목시장이 형성되고 있다. 이는 세 가지 요인 때문이다. 첫째는 자연적인 노동공급 시장인 인구 증가와 인구 구성에서 공급 감소가 심하기 때문이다. 함안군은 1965년 대비 인구가 감소해 1990년 52.3% 감소하였고 2003년과 2005년 7월 말 현재 인구가 각각 63,435명, 61,518명으로 2001년 말 65,368명 대비 각각 2.96%, 5.89% 감소하였다.¹⁹⁾ 둘째는 사회적인 노동공급 시장 구성에서 농

18) 농공단지는 1984년 7개 시범단지로 시작하여 전국적으로 확대되었는데 총체적 평가는 실패하였다고 말하여지고 있다. 이는 <농민신문>의 2005년 6월 17일자 기사에서 “애물단지 취급을 받아오던 농공단지가 지역산업과 연계한 특화된 ‘전문농공단지’ 조성으로 새로운 활로를 모색하고 있다”는 기사에서 잘 나타나고 있다. 정부는 농공단지 활성화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그동안 농공단지 조성사업을 금지했던 대기업 등 민간 사업자에게 사업 참여를 허용하고 농공단지당 면적도 넓혀주기로 하고 있다.

19) 1998년과 2001년 일시적 인구 증가가 있었다. 군청은 특별한 이유가 없었다고 말했는데 1998년의 인구 증가는 1997년 외환위기에 따라 도시에서 역류한 인구조로 설명 가능하다. 2001년의 경우 그 원인을 찾기 위해 각 기업체 방문시 기업체 대표이사들과의 인터뷰에서 나타나는데 그 해 마산 경제가 한계에 오면서 대거 마산으로부터 함안으로의 인구 이동이 있었다고 말했다. 결국 경제적 요인, 직업탐색 및 이동에 의해 인구가 이동하고 농촌인구가 다시 늘어나는 산업혁명 이후의 사회적 인구 이동 현상이 함안에서도 발견되는 것을 확인했다.

촌인들도 농촌 노동시장을 선호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유는 농촌의 노동 시장 가격(임금)이 더 낮기 때문이다. 셋째는 함안은 수박·청포도 등 상대적으로 타지에 비해 고수익 지역특산 온실작물이 많아 젊은이들이 고소득의 농업에 종사하기 때문이다(함안군 진석규 군수 인터뷰, 2005. 7. 21). 따라서 현재 함안 농촌 노동시장의 애로는 노동수요가 아니라 노동공급이며 특히 젊은 층의 노동공급 병목시장으로 형성되어 있다. 실질적으로 기업들은 노동공급 부족 문제의 해결에 진력하고 있으며 외국인 노동자들을 채용하는 등 마산과 창원에서 노동력을 공급받고 있다. 지가는 「산인농공단지」가 가장 높는데 이는 농공단지 중 마산과 창원에 가장 가까워 도시로부터의 노동력 공급 수월성도 존재하기 때문이었다.

4개 농공단지 중 마산·창원의 도시와 가장 가까운 지역은 「산인농공단지」(이하 줄여 쓸 경우 「산인」으로 약칭)였고 가장 도시와 멀리 떨어져 있는 지역, 즉 가장 농촌에 가까운 지역은 「군북농공단지」(이하 줄여 쓸 경우 「군북」으로 약칭)였다. <표 IV-3>에서 보듯이 가장 도시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군북농공단지」는 1988년 입주가 시작되었고 「산인농공단지」는 1991년에 입주가 시작되었다.

농촌 농공단지의 종사자수는²⁰⁾ 조사 시점에 따라 차이가 발생한다. 이는 일이 갑자기 느는 경우 일시적으로 종사자를 고용하기 때문이다. 본 조사에서는 일차적으로 매년 산업자원부에 보고하는 기준이 6월 30일이 되므로 이를 기준으로 하여 검토한다.

농공단지의 기업 증가도 두 가지 의미를 갖는다. 하나는 완전히 새로운 공장을 지어 오는 경우이고, 다른 하나는 현행 공장의 한 부분을 소규모

20) 종사자 혹은 종업원이란 원래 「광공업통계조사보고서」에서 보듯이 경영자, 기술자를 전부 포괄하는 개념이다. 노동자의 경우는 경영자, 사용자와 대비되는 개념인데, 엄밀히 말해 회사를 분석할 경우 경영자와 노동자로 쓰는 것이 맞다. 그러나 노동자에는 현재 일정 직급 이상의 직원이 포함되지 않는 개념상의 문제가 있으므로 여기에서는 노동자와 종사자를 혼용해 쓰고, 종사자라고 쓸 때는 농공단지 기업의 피고용자, 즉 대표이사, 경영자를 제외한 전 직원의 개념으로 한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농촌 농공단지의 대표이사는 거의 대부분 외지인으로 진입한 사람이지만 농공단지 기업의 부장, 차장, 기술자 등은 현지인이 많기 때문이다.

협력업체가 입주해 들어오는 임차 형식으로 이루어지는 경우이다. 물론 후자도 모두 독립된 기업이고 또 고용이 독립적으로 이루어지므로 모두 다른 기업으로 추계해야 한다.

우리의 사례연구가 관심을 가지는 고용효과를 보기 위해 고용관련 변수를 각 농공단지별로 정리하면 <표 IV-4>와 같다.

<표 IV-4>에서 농촌 현지인 고용 비율은 함안 농공단지 전체로 볼 때 2005년 6월 말 현재 39.3%였다. 여기에서 현지인 고용비율은 현재 함안군이나 산업자원부,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정의하여 쓰고 있는 것처럼 주소를 함안 현지에 두고 있는 종사자의 전체 종사자에 대한 비율이다. 그러나 신규 고용 면에 초점을 맞추어 엄밀히 얘기하면 고용되기 이전 주소를 함안에 두었던 종사자의 전체 종사자에 대한 비율이 현지인 고용비율이 될 것이다. 따라서 조사자는 사례분석에서 신규 고용의 경우 이전 주소를 동시에 고려하여 조사·분석하고 일반 종사자 특성의 경우는 현주소 현지인을 대상으로 하여 분리하여 분석·검토한다.

우선 <표 IV-4>로부터 2005년 6월 30일 현재 도시에서 가장 먼 「군북농공단지」의 현지인 비율이 64.2%로 가장 높고 도시에서 가장 가까운 「산인농공단지」가 18.4%로 가장 낮음을 알 수 있다. 그 중간에 도시와의 거리에서 차이가 없는 「파수농공단지」(이하 「파수」로 약칭)와 「법수농공단지」(이하 「법수」로 약칭)의 현지인 비율이 50.6%, 32.6%로 나타난다. 즉 도시

<표 IV-4> 함안군 농공단지 고용 현황(2005년 6월 30일 현재)

(명, %)

단지명	가동 업체수	남자	여자	현지인 농가	현지인 비농가	외지인	총계	업체당 인원	현지인 비율
파수	28	357	121	71	171	236	478	17.1	50.6
군북	13	258	130	130	119	139	388	29.8	64.2
법수	17	491	83	12	197	365	574	33.8	32.6
산인	20	561	80	21	97	523	641	32.1	18.4
전체	78	1,667	414	234	584	1,263	2,081	26.7	39.3

자료: 함안군 지역경제과.

<표 IV-5> 단지별 고용관련 변수 1

순위	인구 (면, 명)	가동업체 (입주업체)	고용인원 (명)	현지인 (명)	현지인 비율(%)	고용인원 감소(명)	현지인 감소(명)	현지인감 소율(%)
1	군북(군북 면 7,788)	과수 28(30)	산인 641	군북 249	군북 64.2	산인 134	범수 181	산인 53.5
2	범수(범수 면 3,765)	산인 20(22)	범수 574	과수 242	과수 50.6	과수 107	과수 179	범수 46.4
3	과수(함안 면 3,069)	범수 17(19)	과수 478	범수 209	범수 32.6	범수 63	산인 136	과수 42.5
4	산인(산인 면 3,053)	군북 13(14)	군북 388	산인 118	산인 18.4	군북 11	군북 39	군북 13.5

와의 근접성에 의해 현지 고용비율이 결정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제 단지별로 고용과 관련된 변수들인 해당 면 인구, 가동 및 입주업체 수, 생산 실적, 수출 실적, 기숙사 수용인원, 회사의 농촌공단 진입형태(창업, 이전, 분공장 등), 부지조성사업비 자부담비율(自負擔比率), 분양가, 가동률을 고용인원, 현지인 고용인원, 고용 감소인원, 현지인 감소인원, 현지인 고용 감소율과 함께 정리해 보면 <표 IV-5>, <표 IV-6>과 같다.

이제 <표 IV-4>와 <표 IV-5>, <표 IV-6>을 대조하면서 농공단지의 고용효과 혹은 현지인 고용효과와 각 경제변수와의 관련성을 검토해 보자.

우선 인구 변수를 보면 「과수농공단지」가 위치한 함안면이 3,069명, 「군북농공단지」가 위치한 군북면이 7,788명, 「범수농공단지」가 위치한 범수면이 3,765명, 「산인농공단지」가 위치한 산인면이 3,053명으로 결국 고용효과는 인구와 상관관계가 없었다. 현지 고용비율과 인구와의 관계를 보면 현지인 고용비율이 가장 높은 「군북농공단지」는 군북면의 높은 인구로 설명될 수 있지만 그 다음 현지인 고용비율이 50.6%로 높은 「과수농공단지」가 위치한 과수면 인구가 32.6%의 「범수농공단지」가 위치한 범수면보다 적고, 18.4%의 「산인농공단지」가 위치한 산인면과 거의 인구가 같다는 점에서 인구가 현지 고용비율에 미친 영향 역시 작다고 볼 수 있다.

두 번째로 입주 업체수 혹은 가동 업체수와 고용인원의 연관성은 없음을 알 수 있다. 입주 업체수 혹은 가동 업체수와 현지 고용효과와의 관련

〈표 IV-6〉 단지별 고용관련 변수 2

	생산실적 (백만원)	수출실적 (천 달러)	기숙사수용 인원(명)	진입형태		부지조성사 업비자부담 비율(%)	분양가 원/m ²	가동률 (%)
				창업/전체 업체수(%)	이전/전체 업체수(%)			
1	법수 213,700	군북 49,350	군북 110	파수 63.3	군북 30.8	군북 0	군북 11,792	군북 92
2	파수 190,360	법수 14,300	법수 102	법수 63.2	산인 30.4	법수 62.9	파수 25,712	파수 90
3	산인 143,070	파수 6,385	파수 76	군북 53.8	파수 26.6	파수 100	법수 36,602	법수 90
4	군북 77,900	산인 300	산인 68	산인 47.8	법수 26.3	산인 100	산인 38,417	산인 87

주 : 1) 인구는 2005년 7월 31일 현재임.

2) 입주, 가동업체수, 고용인원, 현지인수, 현지인 비율, 기숙사 수용인원수는 2005년 6월 30일 기준임.

3) 고용인원 감소, 현지인 감소, 현지인 비율 감소는 2003년 6월 30일 대비 변화임.

4) 현지인 감소율=2003~2005년간 감소 현지인수/2003년 현지인수.

5) 생산실적, 수출실적은 2004년 연간 기준임.

6) 창업/전체 업체수, 이전/전체 업체수, 가동률은 2005년 3월 31일 기준임.

7) 기업의 입주 형태는 이전, 분공장, 창업으로 나누어 보았으며 따라서 이전과 창업의 비율 합이 100이 되지 않음. 창업은 본 농공단지에서 처음 회사를 설립한 것이고, 이전은 타지역에서 들어온 것이고, 분공장은 기존 업체 공장의 일부를 대여받아 입주하는 것임.

8) 파수가 입주 업체가 많으므로 가동률을 상위에 올림.

자료 : 함안군 지역경제과.

성도 없음을 확인할 수 있다. 입주 업체수 혹은 가동 업체수는 「군북농공단지」가 가장 적으나 현지인 고용효과는 가장 높다.

세 번째로 생산 실적과 고용인원의 상관관계는 적으며 생산 실적과 현지인 고용관계, 현지인 고용비율도 관계가 없는 것이 확인된다. 수출 실적과 고용인원의 관련성도 매우 약하지만 수출 실적과 현지인 고용, 그리고 현지인 고용비율과는 관련성이 높았다. 수출액이 높은 지역, 업종일수록 현지인 고용이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네 번째로 기숙사 시설과 고용인원은 오히려 역의 관계가 발견될 정도로 상관관계가 없으나 현지인 고용, 현지인 비율과는 관련성이 매우 높다.

현재 공급 요인이 함안 노동시장의 병목 요인이므로 이는 도시와 가까워 출퇴근이 가능한 지역보다 오히려 농촌지역으로 갈수록 기숙사 필요가 더 증대됨을 보여주며, 나아가 농촌내 출퇴근시 오히려 교통 문제와 시설 문제가 더욱 심각할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이다.

다섯 번째, 기업의 진입 형태와 고용관련 변수와의 관련성을 보기 위해 창업 업체수/전체 업체수 비율 혹은 이전 업체수/전체 업체수 비율을 조사해 본 결과 이는 고용 인원과 상관관계가 적고 현지인 및 현지인 비율과도 상관성이 크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다. 기업이 농촌으로 온 것이 현지 고용과 어떤 연관 변수를 갖고 있는지는 직접 기업 조사를 통하여 확인해 보아야 하겠지만, 일단 현지에서 직접 창업하는가, 분공장을 얻는가 혹은 다른 지역에서 이주하는가라는 진입 형태는 고용이나 현지 고용과 관련성이 작음을 알 수 있다. 통상적으로 이주해 올 경우 현지 고용이 적고 직접 창업할 경우 현지 고용이 많을 것으로 모두 보고 있고 또 지역상공회의소도 그렇게 조사자에게 설명해 주었으나 현실은 이와 달랐다. 이러한 사실은 기업이 도시에서 농촌으로 이주할 경우 도시에 있던 종사자가 상당 부분 이전을 포기함을 보여주는 것으로 농촌 공급 병목시장의 한 특성을 다시 보여주는 것이다.

여섯 번째 가동률과의 관계를 보면 현지인 고용이 가장 높은 「군북농공단지」는 부도 폐업업체가 1업체이고 가동률도 92%로 가장 높으며, 나아가 전체적으로 현지인 비율이 높은 곳일수록 가동률이 높은 상관관계가 발견된다. 지가가 가장 높고 도시에 가장 인접해 외부 고용을 가장 많이 쓰는 「산인농공단지」가 휴업·폐업 3개사, 가동률 87%로 가장 낮다. 추가적인 현안 문제가 같다고 가정하면 일단 현지인을 많이 쓰는 것이 더 안정적인 공장 가동 및 기업 운용에 유리함을 보여준다.

일곱 번째, 부지조성 사업비 자부담이 전혀 없었고 정책적으로 진입을 유도한 「군북농공단지」가 현지 고용효과가 가장 높았다. 그러나 이것이 가장 중요한 요인이 아님은 「파수농공단지」는 자비용 부담률이 100%였지만, 62.9% 자비용 부담의 「법수농공단지」보다 현지 고용효과가 더 높다. 따라서 대폭적인 부지조성 비용 혜택이 없는 한, 부지조성 사업비 부담과 현지 고용효과의 연관성은 적다고 볼 수 있으며, 일단 정책적으로 유도할

경우 대폭적인 부지조정 비용 혜택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반면 분양가가 낮을수록 현지 고용비율이 높은 것은 그대로 일치한다. 이는 도시와의 근접성에 따른 변수 효과와 중복될 수 있는 변수이지만 분명히 분양가가 낮은 곳을 선호하는 기업일수록 현지 고용비율이 높다는 것은 분명하다. 따라서 일단 현지 고용을 높이려면 입지 선정을 잘 해야 한다는 것과 함께 이들 낮은 분양가를 선호하는 기업들을 유치하기 위한 대폭적인 분양가 인하가 필요함을 보여준다.

여덟 번째, 2년 전인 2003년과 비교한 변화를 보면 마산·창원 도시와 가장 가까운 「산인농공단지」가 고용인원 감소도 가장 크고, 반면에 가장 먼 거리인 「군북농공단지」의 고용인원 감소가 가장 적다. 고용인원 감소는 「산인농공단지」, 「파수농공단지」, 「법수농공단지」, 「군북농공단지」의 순으로 나타나 대체적으로 현지인 고용과 역관계가 높았고 도시와의 거리와 역관계를 보였다. 즉 현지 고용이 많을수록 전반적으로 고용감소가 적어 고용 면에서의 안정성이 더 높음을 확인할 수 있다.

현지인 감소의 경우 「산인농공단지」가 처음부터 현지인 고용이 매우 적어 현지인 감소수 절대값은 작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 현지인 고용수가 118명인데 2년간 현지인 고용감소 수가 136명이어서 현 고용인원 대비 현지인 고용감소 비율은 유일하게 100을 넘어 115.3을 기록하고 있다. 이 비율은 타농공단지의 경우 「법수」 86.6, 「파수」 74.0, 그리고 「군북농공단지」는 33.1에 불과했다. 그 결과 2003년 6월 대비 2005년 6월 현재의 2년간 변화율을 보면 현지인 감소비율은 산인이 53.5%로 가장 높고 이어 「법수농공단지」, 46.4%, 「파수농공단지」, 42.5%였으며, 그리고 「군북농공단지」는 13.5%로 가장 적어 이는 현지인 고용수, 현지인 고용비율과 정확히 역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결국 전반적으로 전체 고용 면에서도, 현지인 고용 면에서도 도시에 가까운 지역일수록, 외지인 비율이 높을수록 감소비율이 크다.

아홉 번째, 현지인 고용이 전체적으로 전체 고용감소보다 더 크게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현지인 고용비율 역시 전체적으로 감소하고 있는데 현지인 고용비율은 계속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렇게 현지인 고용감소가 외지인 고용감소보다 더 큰 이유는 사례조사를 통해 확인해 보아야 할

내용이 된다.

나. 조사대상 농공단지의 선정과 그 특성

이상의 농공단지 위치와 고용변수, 그리고 고용효과 혹은 현지인 고용 효과와 각 경제변수와의 관련성을 검토해 보면 「산인농공단지」와 「군북농공단지」가 비교 사례조사 지역으로 가장 적절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두 지역을 대비되는 유형의 사례 지역으로 선택하는 것이 타당한 이유는 다음과 같이 정리된다.

우선 입지 면에서, 가장 도시와 가까운 지역과 가장 도시에서 근접성이 떨어지는 지역을 선택할 필요가 있다. 이 경우 사례조사 대상은 도시와 가장 가까운 지역이 「산인농공단지」가 되며 도시와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지역이 「군북농공단지」가 된다. 이렇게 양 지역을 선정함으로써 조사 목적의 한 요소로 도시와의 근접성이라는 요인도 동시에 고려할 수 있다.

둘째, 농촌과 진입 공장과의 관계 면에서, 우리의 일차적 관심인 현지 고용비율을 볼 때 2005년 6월 30일 현재 「군북농공단지」가 64.2%로 가장 높고, 「산인농공단지」가 18.4%로 가장 낮다. 즉 「군북농공단지」는 ‘현지 인력을 고용함으로써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형태’를 가장 잘 추구하고 있는 반면, 「산인농공단지」는 도시의 지가와 입지 부적격에 따라 ‘농촌이라는 지가가 저렴한 장소를 통해 비용을 절감함으로써 부가가치를 창출하려는 형태’를 추구하는 차이점이 가장 크게 나타난다. 따라서 현지 고용비율의 원인과 특성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군북농공단지」와 「산인농공단지」를 대비해 검토하는 것이 가장 적절하다.

셋째, 현지인 고용비율이 전체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나 최근 2년간의 통계를 보면, 「산인농공단지」의 감소율이 53.5%로 가장 크고, 반면 「군북농공단지」의 현지인 고용비율 감소율은 13.5%로 농공단지 중 가장 작아 양 지역 감소율 차이는 40배에 이르고 있다. 현지인 감소도 「산인농공단지」가 처음부터 현지인이 적어 절대수는 작다고 하더라도 군북보다 3.5배(산인 136명, 군북 39명)나 높았다. 또 현 고용인원 대비 현지인 고용감소 비율은 「산인농공단지」가 113.6으로 가장 높았고 「군북농공단지」는 33.1로

가장 작았다. 따라서 현지 고용의 정태적 수치만이 아니라 동태적 변화 면에서도 양 지역이 가장 대조를 이루고 있다. 결국 현지인 감소율이라는 전체 농촌기업 및 농촌공업의 현상을 고려하기 위해서도 「산인농공단지」와 「군북농공단지」가 이와 같은 특성을 가장 잘 보여준다.

넷째, 전체 고용효과라는 측면에서 보아도 가장 많이 감소한 곳은 「산인농공단지」이고 가장 적게 감소한 곳은 「군북농공단지」이다. 두 지역의 차이는 12.2배에 이르고 있다. 고용효과의 동태적 변화 원인을 찾기 위해서는 가장 대조적인 양 지역을 비교대상으로 하는 것이 적절하다.

다섯째, 업종 면에서 「군북농공단지」와 「산인농공단지」가 뚜렷이 대비된다. 농공단지는 사실상 업종의 구분 없이 입주되고 있음에도 「군북농공단지」에는 섬유업이 전체 종사자의 57.9%를 차지하고 있는 반면 「산인농공단지」는 광의의 기계 및 금속제품 종사자가 전체 종사자의 94.0%를 차지하고 있다.²¹⁾ 즉 양 지역은 경공업과 중공업으로 뚜렷이 구분된다.

이제 선택된 「군북농공단지」와 「산인농공단지」의 특성 개요를 보면 <표 IV-7>과 같다. 「군북」이 도시에서 가장 멀리 떨어진 농촌지역에 먼저 건설되었다. 「산인농공단지」가 「군북농공단지」에 비해 30.2% 조성 면적이 넓지만 조성 사업비는 126.3%가 높았다. 이는 도시 근접성의 차이에 따른 지가 차이만이 아니라 공사 조성 시기가 2년 이상 차이가 나는 데 기인한다. 조성 면적 대비 분양 면적은 「군북농공단지」와 「산인농공단지」가 각각 78.1%, 80.0%로 큰 차이가 없었다.

<표 IV-7> 사례조사 대상 농공단지 개요

단지명	위치	조성기간	조성면적	조성사업비	분양면적
군북	함안군 군북면 대리 500	87.5.29~88.8.12	99,455㎡	1,595백만원	77,709㎡
산인	함안군 산인면 산리 578	89.9.9~91.3.23	129,450㎡	3,609백만원	103,504㎡

자료: 함안군 지역경제과.

21) 기계장치, 조립금속, 정밀기계, 자동차 및 운송장비를 합한 것이다.

3. 「군북농공단지」와 「산인농공단지」의 최근 변화와 동향

가. 2003~2005년 3년간 변화와 특징 비교

「군북농공단지」와 「산인농공단지」의 2003년, 2004년, 2005년 최근 3년 입주업체수와 고용, 현지인 통계와 변화를 정리하면 <표 IV-8>과 같다. 모두 매년 6월 기준이며 현지인 비율 변화는 현지인 변화율과 달리 현지인 비율의 절대수치 변화를 말한다.

<표 IV-8> 최근 3년 「군북농공단지」와 「산인농공단지」 현황(매년 6월 말 현재)

		입주 업체 (개)	인력 부족분 (명)	인력 부족률 (%)	고용 인원 (명)	현지인 (명)	현지인 비율(%)	고용인원 변화(명)		현지인 변화(명)		현지인 비율변화 (%P)
군 북	2003	12	4	1.0	399	288	72.2	-13		-10		-0.1
	2004	13	56	11.2	445	230	51.7	+ 46	-24	-58	-49	-20.5
	2005	14	-	-	388	249	64.2	-57		+19		+12.5
산 인	2003	20	60	7.2	775	254	32.8	+100		+45		+1.8
	2004	21	34	4.6	710	280	39.4	-65	-34	+26	-91	+6.6
	2005	22	-	-	641	118	18.4	-69		-162		-21.0

주: 변화는 전년 동월 대비임.

자료: 산업자원부·중소기업진흥공단, 『농공단지현황』, 2003~2004; 함안군 지역경제과.

2003년에는 「산인농공단지」의 인력부족률이 7.2%로 거의 인력부족이 없었던 「군북농공단지」의 1.0%에 비해 높았다. 그러나 2004년에는 도시와 인접한 「산인농공단지」의 인력부족률이 대폭 개선된 반면, 상대적인 의미에서 농촌지역에 속하는 「군북농공단지」의 인력부족이 심화되었다. 「군북농공단지」 대표이사들과의 면담에서 노무현 대통령이 선거운동 기간 이곳을 방문하여 병역특례를 늘린다고 공언했으나 당선 후 오히려 줄였다고 하소연하는 소리가 높았음은 이러한 지역적 차이에 따른 변화를 반영한다. 이러한 지역적 차이에 따른 현상은 현재 줄고 있는 병역특례 등 인력혜택을 도시에서 먼 곳, 결국 현지 인력을 많이 채용하는 곳에 배정할 필요가 있음을 보여준다.

인력부족이 향상화되고 심화되면서 양쪽을 합하여 보면 결국 현지인 비율이 2004년 44.2%에서 2005년 35.7%로 낮아지고 있다. 최근 3년간을 보면 「군북농공단지」는 고용인원이 24명 줄고 있으나 현지인은 49명이 줄고 있고 「산인농공단지」는 고용이 34명 줄고 있으나 현지인은 91명이 줄고 있다. 즉 전체적으로 지역 차이 없이 현지인 고용이 더 줄어들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올해 「군북농공단지」는 현지인 비율을 다시 늘리고 있으나 「산인농공단지」는 전면적인 외지인 고용으로 바꾸고 있는 차이가 발견된다. 그 결과 양 지역의 현지인 비율차가 2004년 12.3%포인트에서 2005년 45.8%포인트로, 1.3배에서 3.5배로 대폭 확대되었다.

이론적으로 기숙사 수요는 두 가지 측면에서 생각해 볼 수 있다. 첫째는 「군북농공단지」는 도시로부터의 원격성으로 더욱 기숙사 수요가 있을 것이라는 것이다. 둘째는 「군북농공단지」는 현지인이 많으므로 기숙사 수요가 적고 「산인농공단지」는 외지인이 많으므로 기숙사 수요가 더 많을 것이라는 생각이다. 일단 현지 조사 결과 양 단지 모두 대표이사, 직원들이 직원 숙소를 늘리고 싶어했다. 도시와 가까운 「산인농공단지」에서도 출퇴근 문제가 중요 이슈이며 미분양 아파트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만들어 줄 것을 건의할 정도였다. 그런데 기숙사 시설 수용인원 현황과 최근 변화를 보면 <표 IV-9>에서 보듯이 뚜렷한 지역별 특징이 발견된다.

<표 IV-9> 기숙사 수용비율과 가동률

		기숙사 수용인원	기숙사 수용비율(%)	가동률(%)
군북	2004	48명	10.8	94
	2005	110명	28.4	92
산인	2004	112명	15.8	94
	2005	68명	10.6	87

주: 1) 기숙사 수용인원 및 수용률은 2005년 6월 말 현재이고, 가동률은 2004년은 6월 말, 2005년은 3월 말 현재임.

2) 기숙사 수용비율=기숙사 입사종사자수/전 종사자수.

3) 가동률=실질공장가동시간/공장가동가능예상시간.

우선, 2004년과 2005년에 양 지역의 기숙사 수용인원과 수용비율이 역전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은 기숙사 수요에 대한 선행적인 위의 두 생각이 실질적으로는 어느 한쪽도 결정적 설명력이 없음을 보여준다. 기숙사 수요와 공급에 대해 보다 많은 실질조사와 현실에 입각한 대안적 고려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둘째, 기숙사 수용비율은 「군북」은 2004년 10.8%에서 2005년 28.4%로 대폭 늘고 있고 반면, 「산인」은 15.8%에서 10.6%로 대폭 줄어들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세 가지 이유 때문이다. 첫째는 「군북농공단지」가 2004년 인력부족률이 높아 이에 적극 대처한 때문이다. 둘째는 기숙사 수요가 단 순히 외지인에 대한 수요만이 아니기 때문이다. 「군북농공단지」는 외지인이 215명에서 139명으로 줄고 현지인이 19명 더 늘어났고, 「산인농공단지」는 외지인이 93명 늘고 현지인이 162명 대폭 감소했음에도 오히려 「군북농공단지」의 기숙사 수용이 늘고 「산인농공단지」의 기숙사 수용이 준 것은 이를 잘 보여준다. 셋째는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차이에서 나온 것이다. 실질적으로 앞의 <표 IV-3>에서 보았듯이 올해 2분기 「군북농공단지」의 생산은 「산인농공단지」의 641명에 비해 388명이라는 적은 인원으로도 처음으로 「산인농공단지」의 생산액을 추월했다. 생산성을 높이고자 하는 기업의 노력으로 기숙사 수용인원이 1, 2분기 계속 늘어나고 이는 실질적으로 생산을 대폭 증가시켰던 것이다.

다. 2005년 현재 동향(2005년 상반기 분기별 변화)과 단지별 특성

1) 군북농공단지

「군북농공단지」의 생산은 2005년 1분기 17,430백만 원에서 2분기 38,295백만 원으로 119.7% 증가했다. 「군북농공단지」는 가동중인 업체수(생산중인 업체수)가 13개로 「산인농공단지」의 65%에 불과하고 1분기 생산액 비중도 「산인농공단지」의 66.2%에 불과하여 가동 업체수 비중과 비슷한 정상적인 형태를 보였으나 2005년 2분기에는 오히려 생산액이 「산인농공단지」를 추월하고 있다. 섬유·의류의 폭발적 생산 증가가 중요한 요인이었다.

입주업체로 보면 2분기에는 입주업체가 「투엠함안지점」(2005년 5월 6일 입주)과 「(주)씨앤비테크」(2005년 4월 6일 입주) 2개가 더 늘어났다. 따라서 입주업체수는 1분기 12개 기업에서 총 14개 기업으로 되었다. 그러나 「투엠함안지점」은 아직 고용 및 생산이 없다.

이에 따라 고용이 375명에서 388명으로 13명 늘었다. 생산은 전 분기 대비 119.7% 늘었으나 고용은 3.5% 증가하였다. 생산에 비해 고용이 상대적으로 소폭 상승한 것은 고용 증가가 어려움을 보여준다. 고용 증가의 구성을 보면 도시와 떨어져 있는 지역임에도 신규 고용의 92.3%가 외지 인력으로 충당되었다. 그 결과 현지인 비율이 여전히 타지역에 비해 매우 높으나 1분기 66.1%에서 2분기에는 64.2%로 낮아졌다. 고용을 성별로 보면 남자가 246명에서 258명으로 12명 늘고 여자는 129명에서 130명으로 1명 늘어 기업들의 남자 선호가 두드러짐을 알 수 있다. 고용은 13명 늘었으나 기숙사 수용은 105명에서 110명으로 5명 증가하여 1분기 기숙사 수용률이 28%였던 것이 2분기에는 0.4%포인트 더 높아졌다.

2) 산인농공단지

「산인농공단지」는 올해 부도 1개 업체(「에어뱅크」 2005년 3월 22일 부도), 폐업 2개업체 (「태성과워텍」, 「우수기계공업」)가 있었던 반면 신규 입주업체가 「정신기업」(2005년 4월 6일 입주), 「철성씨앤아이」(2005년 6월 13일 입주) 2개사가 있어 총 입주업체는 23개에서 22개로 1개사가 줄었다.

생산은 1분기 26,329백만 원에서 2분기 33,880백만 원으로 28.7% 증가하였다. 고용은 581명에서 641명으로 60명 증가하여 10.3% 증가율을 보여주었는데 고용 증가 효과는 전통적 노동집약산업에 있지 않고 기계·금속 부문에 있었다. 즉 전통적 노동집약산업이 점차 자동화·장치산업화가 더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었다. 이는 인터뷰에서도 확인되었다. 고용 증가 중 현지인은 107명에서 118명으로 11명 증가하고 외지인이 49명 증가하였다. 그 결과 현지인 비율은 이미 4개 농공단지 중 가장 낮은 18.42%에서 미미하나마 낮아져 18.41%로 되고 있다. 하지만 현지인 비율 감소는 전체적인 공통 현상이고 「산인」은 오히려 이미 현지인 비율이 매우 낮아 더 낮아질 가능성은 적다. 성별로 보면 남자가 511명에서 561명으로 50명

(9.8%) 늘고 여자는 70명에서 80명으로 10명 증가하였지만 여자 증가비율이 14.3%로 더 큰 편이다. 하지만 여전히 전체적으로 남자 선호는 계속되어 남자 종사자가 여자 종사자의 7.0배에 이르고 있는데 이는 「산인농공단지」가 상대적으로 기계업종이 많기 때문이다.

기숙사 수용비율은 10.6%가 되어 역시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2분기에 총 60명(10.3%)의 신규 종사자 인원이 늘었으나 기숙사는 61명에서 68명(11.5%)으로 늘어 높은 증가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기숙사 문제가 남아 있다.

4. 사례조사 방법과 처리 방법

가. 사례조사 방법과 내용

사례조사는 「군북농공단지」, 「산인농공단지」의 농공단지 기업 전체를 대상으로 하였다. 회사와 회사 대표의 경우 전수조사를 하였으며 종사자의 경우 업종별 대표성을 가지는 회사의 경우만 조사하기로 하였다. 회사 대표는 인터뷰와 설문지 조사를 병행하였으며 종사자의 경우 극히 예외로 보충 인터뷰가 이루어졌으나 설문지조사를 원칙으로 하였다. 사전조사가 2005년 6월 20일부터 7월 15일까지 25일간 이루어졌고 이후 면담과 설문조사가 이루어진 시기는 7월 20일부터 7월 29일까지였다. 면담과 설문조사는 사전조사에서 확인된 시차적 요인을 없애기 위해 집중적으로 이루어졌다.

회사 대표에게 인터뷰한 질문 내용은 크게 네 가지였다. 첫째는 당연히 본 사례조사의 목적상 인력문제에 대해 질문했다. 인터뷰의 대부분은 연구 목적에 맞게 이 부분에 시간을 할애했다. 이 인터뷰에서는 인력문제의 현상, 현재 구해지고 있는 인력문제의 해결책, 그리고 제안하고자 하는 인력공급정책을 물었다. 두 번째로 질문한 내용은 임금하였고, 세 번째로 질문한 내용은 세금 등 정부의 보조에 관한 내용이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질문한 내용은 ‘농촌에서의 사업 기회를 늘리는 데 있어서 존재하는 애로 사항’에 대해 대표이사들이 그냥 얘기해 보라는 자유 주제였다. 농촌에서

의 사업 기회란 사실상 본 연구가 조사하고자 하는 농촌에서의 경제활동 기회의 제공을 의미하며, 조사의 목적에 해당한다.

제시된 종사자 설문지와 대표이사 설문지는 부록으로 첨부했다. 설문지에서 기타 항목을 가능한 한 배제한 것은 가능한 한 유사 항목을 찾도록 유도하여 자유도를 높이기 위한 것이다. 실질적으로 나중 설문지의 분석에서도 무응답이나 기타는 전부 제외하고 분석하였다. 역시 자유도를 높이기 위한 방법으로 응답 항목은 사전조사를 통해 빈도가 높다고 생각되는 항목을 객관식으로 만들었다.

설문지는 1답안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하다면 복수응답도 가능하다고 안내하였다. 그리고 대표이사들의 설문지 작성에서는 다음과 같은 정정을 통해 대답을 보다 구체적으로 유도했다.

첫째, 1번 질문의 ‘귀하의 업종은 무엇입니까’라는 항목에서 (2)기계, 금속과 (7)목재, 종이는 구체적으로 해당 업종에 표시해 줄 것을 요청했다. 둘째, 질문 2의 ‘귀하가 생산한 품목의 주판매 시장은 어디입니까’라는 질문에서 (7)의 답, 기타를 중등으로 정정하여 수정해 답을 받았다. 셋째, 12번 질문, ‘이 농공단지에 사람이 계속 모자란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6) 기계, 제조업 기피를 인터뷰에서 첨부하여 표시하도록 하였다. 넷째, 14번 질문, ‘3년 이내에 여기를 떠날 생각이 있으시거나 혹은 떠날 생각이 없으신 이유는 무엇입니까’라는 질문에서 떠날 생각이 없는 경우 (7) ‘이사비용 등 기업 이사비용이 보통 문제가 아니어서’를 첨가하여 답하도록 하였다.

나. 조사수, 업종, 회수율과 처리 방법

「군북농공단지」의 경우 대표이사 면담과 설문조사는 가동 중인 총 13개 기업²²⁾ 중 「태흥섬유」는 현지 생산이 없어 제외하고 12개 업체에 대해 이루어졌다. 12개 업체의 업종별 현황은 섬유 4개사, 1차 금속 3개사, 기계 2개사, 조립금속 2개사, 화학 1개사였다. 종사자 설문지는 총 280매가 업종

22) 「투엠함안지점」은 아직 고용 및 생산이 없다.

별, 재직 종사자수에 따라 배포되어 202매가 회수되었다.²³⁾ 회수율은 72.1%였다.

「산인농공단지」의 경우 가동중인 20개 기업²⁴⁾ 중 「한택」은 「옥산산업 기계」로 통합되었고 「대동지업」, 「제일테크」는 현지 생산이 없어 제외하고 대표이사 면담과 설문조사가 총 17개 기업체에 대해 이루어졌다. 이들 17개 업체를 업종별로 보면 기계·장비 제조업이 8개사, 조립·금속 1개사, 목재 1개사, 종이 제조업 1개사,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중 「측정, 시험, 항해 및 기타 정밀기기(D332)」 1개사,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D34) 4개사이고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중 「항공기·우주선 및 부품제조업(D353)」 1개사이다. 종사자의 경우 설문지는 업종과 재직 종사자수를 감안하여 총 250매를 배포하여 173매가 회수되었으며 회수율은 69.2%였다. 결국 양 공단에서 종사자 설문지는 총 530매 배포하여 375매가 회수됨으로써 회수율은 70.8%였다.

종사자 설문지는 분석시 다음 몇 가지 처리방식을 사용하였다.

첫째, 1.2.질문, 「귀하의 연령은 얼마입니까」는 (1) 19세 이하 (2) 20~29세 (3) 30~39세 (4) 40~49세 (5) 50~59세 (6) 60~69세 로 분류하여 재 정리하였다. 둘째, 1.5. 질문, 「현재 본인은 거주하는 주소는 어디입니까」에 대해서는 (1) 함안군 (2) 마산·창원시 (3) 마산·창원 외 경남의 시 (4) 함안의 외 경남 군 (5) 경남 외 시 (6) 경남 외 군으로 처리하여 분석하였다. 셋째, 1.5의 질문에서 부산시는 경남의 시로 처리하였다. 넷째, 1.8.의 질문, 「귀하의 학력은 무엇입니까」에 대해 대재나 초대졸업은 대졸로 하였다.

23) 「우리섬유」는 6월 30일 종사자수가 22명이었으나 조사일 7월 21일~26일간의 종사자수는 24명이었다.

24) 입주업체 총 22개 기업 중 「칠성씨엔아이」는 생산 및 고용이 없었고 「에어뱅크」는 7월 말 현재 부도로 생산이 없어 가동중인 업체는 20개이다.

5. 대표이사와의 인터뷰 분석

가. 군북농공단지

1) 인력 및 고용 문제

본 사례조사의 목적상 인력문제에 대해 가장 많은 시간을 할애했다. 「군북농공단지」의 대표이사들은 모두 구인난과 기술난, 높은 이동을 가장 큰 애로로 꼽았다. 농촌인들이 훨씬 더 성실하고 근무 태도가 좋다는 점은 많은 기업 대표들이 인정하고 있지만 기본적으로 농촌에 젊고 기술력이 있는 사람이 적다는 것이 이들의 생각이었다. 나아가 직원 중 70~80%를 유동인구로 분류한 기업도 있었고 현지 젊은이가 거의 없으며 본인이 일단 취직해 머물고 싶어도 자식이 농촌에 머물기를 싫어하는 부모들이 자식을 내보내려고 설득하고 있다고 말했다. 부모들의 이러한 생각과 강권은 농촌 젊은이가 농촌을 떠나는 주요한 이유가 되고 있음을 발견했는데 이는 이제까지 계속된 정부의 농촌정책 실패에서 연유하는 것이며 고령 농촌인들이 현재와 향후의 농촌정책에 대해서도 매우 불신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과거의 문제는 항상 현재와 미래에도 그 비용을 물고 있고 그 비용이 결국 자원 배분의 비효율성이라는 국민경제 전체의 비용으로 전가되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공대 졸업자는 물론이고 공고생만 해도 농촌 취직을 기피해 찾기 힘들다. 이전에는 대학 진학이 어렵고 대학에서의 학비문제 해결이 어려워 대학 진학을 포기하고 기술을 공장 현장에서 계속 배웠으나 이제는 전문대와 대학 난립으로 전부 진학 가능한 시대이므로 고교 졸업 후 전부 진학하고 있다는 한국교육 모습도 지적하였다. 이에 따라 종사자들이 영어 메뉴얼 자체를 이해 못하는 일이 발생한다고 한다. 기업 대표들은 일류 공대를 나온 젊은이가 현장에 투입되는 중국과 기본적으로 경쟁이 불가하다고 지적했다.

나아가 농촌에 현재 있는 젊은이 중 비경제활동인구는 상당수가 도시 사회생활에 적응 못하고 남아 있는 사람이라 농촌 기업에서도 적응할 수 없었으며 따라서 현재 농촌에 있는 활용가능한 노동력은 40~50대가 주축

이라고 보고 있다.

현재 외국인을 쓰고 있으나 외국인에 대한 사전교육이 안 되어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베트남에서 대기하고 있는 인력이 있고 또 쓰고 싶지만 언어소통의 문제가 있어 현재 추가 영입을 보류 중이라고 밝힌 기업도 있었는데 회사대표들은 정부가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대책을 내놓기를 요망했다. 외국인을 교육시킬 수 있는 인근 대학의 교육시설과 인력을 체계적으로 이용할 필요가 있다.²⁵⁾ 또 외국인의 경우 열심히 일을 안 하고 직장 문화의 차이도 존재해 기술 개선도 안 된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심지어 전통적인 섬유산업도 이제는 기본적인 기술이 필요한데 외국인의 경우 이것이 역부족이라는 것이었다.

인력문제의 또 다른 악화 원인으로 농촌기업은 자동화가 뒤져 결국 하기 더 힘들어 인력 문제가 악화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기업들도 자동화가 안 되어 있어 저효율·저이윤으로 높은 임금을 줄 수 없어 사태를 악화시키고 있었다.

기업들은 이구동성으로 특단의 인력지원책을 호소했으며 도료나 크레인 등 기업이 할 수 있는 특정 부분에 대한 정부보조보다 기업이 할 수 없는 인력문제를 해결해 줄 방안을 간절히 바라고 있었다.

현재 이러한 인력문제의 해결책으로서 기업들은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었다.

첫째는 병역특례를 이용하는 것이다. 그러나 특례병 제도가 없어지고 보충역 특례만 남아 있어 그 이용 가능성은 거의 줄어들었다. 노무현 대통령이 선거운동시 함안에 와서 병역특례를 늘리겠다고 공언했으나 오히려 당선 후 줄였다는 증언이 있었다. 아직은 일부 기업에서 병역특례 인력을 이용하고 있지만 이들도 이 특례 기간이 끝나면 바로 도시로 전직하고 있다고 고충을 말했다. 둘째는 외국인 인력에 의존하는 것이다. 외국인이 안 오면 생산라인을 세워야 한다는 업체도 있었으며 향후 외국인을 더 받고 싶다는 기업도 있었고 심지어 불가피할 뿐만 아니라 인원충원시 오히려

25) 아시아권 언어교육 인력과 시설이 풍부한 부산외국어대학교에 이 문제에 대해 확인한 결과 정부가 합리적으로 이를 연결시킬 경우 당연히 교육을 맡을 수 있다는 높은 관심을 보였다.

외국인 인력을 선호하는 기업도 있었다. 그러나 대부분 기업들이 교체충원인력이 발생해도 외국인 공급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셋째는 인력문제를 전국 문제로 보고 고임금, 성과급, 아파트 제공 등을 시행하거나 시행하려는 기업이 있었다. 조사 대상 중 매출액 20%를 성과급으로 지출하여 고기술 인력의 유입을 유도하고 이직률을 막는 제도로 쓰는 기업도 있었다. 넷째는 자동화를 추구하는 것이다. 많은 기업들이 인력부족에 대해 일본 사례를 참조하고 있었는데 완전설비 자동화로 종사자 근로를 쉽게 하고 근로시간을 짧게 바꾸어 주는 것이다. 이렇게 하여 효율성과 생산성도 동시에 높여 월급도 올려 주는 방법을 택하고 있었다.

한편 대표이사들은 공급 병목시장인 농촌 노동시장의 인력공급정책을 제안했는데 이들이 제안한 모든 인력공급정책은 농촌에 노동력을 잔류시키고 또 농촌으로 노동력을 유입하는 동시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공업단지를 여기저기 흩어놓지 말고 합해서 대규모화하고 규모의 경제를 이용한 문화시설 등을 유지하여 농촌내 문화단지를 만들면 인력 확보에 도움을 줄 것이다. 둘째, 일류기업을 지방에 분산한다. 농촌에 대기업을 분산하면 인력이 같이 이동하고 이에 따라 중소기업도 따르면서 인력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셋째, 적극적으로 고령층 인구 흡수책을 만든다. 향후 고령화 사회로 가면서 이 문제는 국가적으로도 중요하다. 넷째, 병역특례를 다시 늘려야 한다. 그나마 젊은이들이 여기에 찾아오거나 남는 것은 병역 때문이다. 다섯째, 정부가 3년 정도 임금을 보조하는 정책을 써야 한다. 1인 50만 원 정도 보조하면 결국 임금이 높아져 지방 제조업체에 인력이 오게 된다. 여섯째, 정부가 외국인 인력에 대해 「외국인 공동관리센터(가칭)」를 만들어 일정 부분 기업들에게 운용 비용을 부담시키되 외국인 공급확대, 관리, 교육을 맡고 제도적으로 외국인 근로자 월급 착취 등도 막도록 하여 외국인 공급을 안정적이고 질적으로 늘린다.

이상, 현재 기업들이 시행하고 있는 인력문제의 해결책이나 정책해결방안 제시는 단편적으로 보면 농촌인력을 활용하는 방법과는 괴리가 있어 보이는 부분이 많이 눈에 띈다. 그러나 이미 공급 병목시장이 형성되어 있고 장기적으로 농촌 기업이 계속 성장해야 계속 고용기회 창출이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이상의 기업해결책과 정책해결방안은 전부 농촌노동력 활

용과 관련이 있다. 예컨대 자동화는 농촌노동력을 줄이는 효과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농촌노동력이 그 기업에 취직해 잔류하는 효과를 주며, 외지인 고용문제는 외국인이라도 공급이 원활해져야 농촌 기업이 농촌에 계속 잔류하게 되고 또 신규 기업이 유입되어 장기적으로 농촌노동력 활용을 넓혀주게 되는 것이다.

2) 임금, 정부보조, 기타 애로사항

두 번째로 질문한 내용은 임금이었다. 임금을 직접 대조해 보면 함안의 농공단지가 마산·창원보다 조금 싸다고 대답했다. 하지만 임금을 더 준다고 해도 사람을 구할 수 없는 것은 마찬가지이고, 더구나 40~50대의 저기능 종사자에게는 한계생산성이 낮으므로 결코 농촌공업 임금이 저임금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임금은 노동의 한계수입생산물(marginal revenue product of labor)에 의해 결정되므로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 외국인의 경우 2004년 9월 이후 외국인에게도 내국인과 동일한 대우 혹은 오히려 더 강화된 내용이 적용되어 임금이 낮지 않다고 대답했다. 동일노동 동일임금은 맞지만 외국인들이 국내인에 비해 기술이 현저히 떨어지고 일일이 데리고 다니며 작업 지시를 해야 하며 몇 년이 지나도 작업처리 능력이 나아지는 것이 적은 상황에서 동일임금을 지급한다는 것은 오히려 기업들의 비용상승 요인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점을 많은 기업이 말했다. “그래도 왜 외국인을 쓰는냐?”고 묻자 “외국인 쓰는 것은 초과수당을 노리는 외국인들의 욕심으로 단순기능이라도 장시간 근무를 받아들이기 때문”이라고 대답했다. 즉 노동공급의 병목 때문이라는 것이었다.

세 번째로 질문한 내용은 세금 등 정부의 보조에 관한 내용이었다. 대표 이사들은 농공단지라고 하지만 우대 내용이 없다고 지적했다. 함안농공단지가 성공하고 있는 것은 정부보조 때문이 아니라 마산의 몰락 때문이라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행정과 교통이 창원에 집중되고 마산은 구(舊)도시로서 발전에 제약이 있게 되자 도로망 등에서 고물류비·고지가로 몰락하기 시작했고 몰락한 사람들이 창원·부산 등 대도시로 이동하는 가운데 이동이 순조롭지 못한 기업들이 이곳 함안으로 들어오고 있다는 것이다. 즉 함안은 마산의 몰락으로 인해 성공한 곳이지, 정부정책의 성공에 의한

것이 아니라는 주장이었다.

설비유지비 부담과 관리비에서 폐수처리장 등 시설 소유자는 군청인데도 시설보수 유지비용을 입주업체가 물고 있다고 주장했다. 입주시에는 공동 폐수처리, 공동 민원해결 등 초기 혜택이 있어 입주했으나 대부분 입주 이후 시설 수리·유지가 안 된다는 것이며, 이전에 공공근로가 있을 때는 공공근로로 청소도 이루어졌으나 이제는 모두 입주업체 부담으로 남겨졌다고 한다. 최근 환경법 강화 추세에 따라 비용이 급등하고 있는 폐수처리 문제도 전문관리업체에 폐수처리를 맡기고 매달 업체들이 그 비용을 분담하고 있는데 그 부담이 확대되고 있다. 특히 폐기·폐수 등 제반 공장 가동에 따른 부산물 처리 설비시설을 초기에 규모를 작게 함으로써 현재 여러 추가시설 설치 및 시설유지 문제가 큰 비용 요인으로 발생하고 있다.

처음 입주시에는 등록세 및 취득세에 혜택이 있었으나 이후에는 일반업체와 동일하다고 주장했다. 농촌 살리기 차원에서 정부의 보조가 더 필요하다는 주장이었다. 물론 초기 농공단지 입주시 초기 정부 혜택을 악용한 기업주도 있었고 부동산 투자자도 있었지만 지금은 진짜 기업가만 남아 있으므로 정부의 보조가 곧 긍정적 효과로 연결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네 번째로 질문한 내용은 농촌에서의 사업 기회를 늘리는 데 있어서 애로사항에 대해 대표이사들이 얘기해 보라는 자유 주제였다. 이에 대해 대표이사들은 동일업종을 동일단지로 배치해야 함에도 일단 성과에 급급하여 다른 업종(異業種)을 같은 지역에 유치함으로써 업종 지원서비스 공유, 업종 상호협조가 안 되고 있다는 점과, 소음·냄새·분진·공해 등이 다른 업종에 악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로 인해 현재의 농공단지는 오히려 원자재 구입, 물류 등 입지조건이 불리하게 되고 이는 바로 기업들에게 비용상승 요인이 되고 있다. 넓게 보아 진해 바다, 사천 비행장까지 포괄하여 경남 전체 지역을 연결하는 연계 공단구조를 갖고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농공단지를 여기저기 소규모로 흩어놓지 말고 합해서 대규모화해야 원료조달, 인력수급, 시설건설, 운송 등에서 유리한 경쟁력이 발생한다는 것이었다.

나. 산인농공단지

1) 인력 및 고용 문제

대표이사들은 이구동성으로 인력문제를 가장 큰 애로로 꼽았다. 현지인 고용은 현지인 부족으로 어렵고 이전에 외국인 고용이 있었으나 이것도 3년 만기로 많이 빠져 나갔고 현재 외국인 종사자를 정부에 신청해 놓았으나 공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다. 병역특례도 매년 3~4명씩 도움을 받았으나 최근 사실상 폐지되었다고 말하였다. 결국 마산·창원 등 도시 지역에서 노동력을 데려오기 위해 여러 가지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 연료비 보조나 통근차 운행이 가장 대표적이다. 그럼에도 공급이 원활치 않아서 농촌공단보다 지가가 비싼 창원으로 이전하고 또 이전을 고려하는 업체도 있다. “창원으로 이전할 경우 비용 충당이 가능하겠느냐”라는 질문에 “창원으로 이전할 경우 평당 60만~80만원 주어도 70~80% 용자를 받을 수 있고 당장 공장을 돌리는 인력이 문제이므로 이전의 동기는 충분하다”고 대답했다.

노동력 공급 애로에 대한 대책으로 함안에 있는 많은 미분양 아파트를 사원 숙소로 쓸 수 있도록 아파트를 담보로 받아주고 용자를 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렇게 미분양 아파트를 사원 숙소로 사용할 경우 인력 문제 해결이 상당히 이루어질 것이라고 보고 있었다. 이에 대해 “실현가능하므로 그 방안을 요청해 보았는가”라는 질문에 “은행권은 부정적이었고 함안군에서는 아파트의 경우 민간업자의 일이므로 개입 곤란하다”고 답했다고 한다. 점점 노동력 문제가 기업의 가장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농촌 노동시장에 대한 정밀한 조사와 보다 적극적인 조치가 요망된다고 할 수 있다.

『산인농공단지』의 경우 외지에서 인력을 공급받는 것도 한계가 있다고 대답했다. 도시와 가장 가까운 입지조건을 가지고 있지만 도시와 함안을 연결하는 대중교통의 연결이 매우 취약하기 때문이다. 농공단지가 입주한 것이 이미 14년이 지났지만 양 지역을 연결하는 버스가 올해 2005년부터 한 대 다니기 시작했다고 한다. 장기적으로 노동력의 유동성을 높이고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대중교통에 대한 고려가 필요함을 알 수 있다.

기술인력은 거의 구할 수 없다고 호소했다. 농촌인력도 없지만 공업기술이 필요한 업종은 농촌인력도 쓸 수가 없는데 왜냐하면 농촌인력은 기술 수준이 갖추어져 있지 않기 때문이다. 기술을 요하는 정밀기계직종의 경우 함안 사람은 1명만 쓰고 있다고 답한 기업도 있으며 대부분의 기술인력은 마산에서 데리고 와서 겨우 유지하고 있다고 대답했다. 기술인력이 시골에는 절대 안 오려 하고, 이와 같은 사정은 마산·창원 등 지방도시에서도 사실 동일하여 결국 기업이 기술력을 높이고 국제경쟁력을 가지려면 서울로 가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2) 임금, 정부보조, 기타 애로사항

두 번째로 질문 순서에 따라 임금에 대해 질문했다. ‘함안의 농공단지가 마산·창원보다 싼 것은 사실이다’고 말한 대표이사가 절반 정도 되었고 반 정도는 차이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렇게 차이가 없다고 하는 업체는 그나마 조금 난이도의 기술이 필요하고 작업을 위해 경력이 필요한 업종의 경우였으며 또 마산에서 데리고 온 인력인 경우가 많았다. 그나마 임금을 주어도 도시에 있는 고급인력은 오지 않는다고 말해 고급인력에 대한 갈증이 심했다. 한편 작년부터 외국인 종사자도 한국인 종사자와 똑같은 임금체제로 바뀌어 외국인 고용을 한다고 해도 임금에서 경쟁력이 없어졌다고 대표이사들은 말했다.

세 번째로 질문한 내용 역시 공통 질문 내용에 따라 세금 등 정부의 보조에 관한 내용을 질문했다. 대표이사들은 농공단지라고 하지만 세금 감면이 없고 물값이 공짜라는 것을 빼고는 보조가 없다고 주장했다. 심지어 시설의 경우 개인 시설이 아님에도 전기, 가로등 시설의 보수 등 모든 비용을 입주업체들이 부담하고 있다고 말하면서, 농공단지내 모든 시설이 군수에게 기부 체납되어 있어 소유주가 군으로 되어 있는데 당연히 시설 보수의 책임이 군에 있는 것이 아닌가며 합리성을 따져 물었다. 나아가 합리적 실적과 책임을 중시하는 정부, 지방자치단체의 운영원리로 인해 지방 중소기업체가 오히려 불리해지는 사례도 있음을 지적했다. 또한 기술 등록과 실용 등록이 너무 복잡하고 법적인 미비점이 많아 대기업들도 기술개발보다 도입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고 이것이 기술력이 있는 중소기업

업이 성장하기 어려운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네 번째로 질문한 내용은 농촌에서의 사업 기회를 늘리는 데 부딪히는 애로사항을 대표이사들이 그냥 얘기해 보라는 자유주제였다. 이에 대해 물류 문제를 많이 지적하였는데 이는 뜻밖이었다. 함안농공단지의 경우 전국에서도 가장 좋은 교통 입지를 갖추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기 때문이다. 구체적 내용은 고속도로가 가까움에도 불구하고 ① 가공 단계상 다음 단계와의 물류연결 체계가 전혀 고려되지 않아 이 점이 함안농공단지가 뒤떨어져 있다. ② 고속도로 바로 옆에 있어도 진입, 퇴출로가 바로 연결되지 않아 돌아가야 하는 시간 낭비가 많다는 것이었다. 결국 운반비가 매우 높아 창원 등 도시에 있는 것보다 물류 비용이 더 높다는 주장이었다. 이러한 물류의 문제점은 대도시를 바로 옆에 두지 않은 한국 공업단지가 공통적으로 느끼는 한계이다.

다음으로 말한 내용은 공단이 장기적인 비전을 갖지 않고 만들어져서 기업이 확장을 하고 싶어도 확장이 불가능하고 결국 다른 곳으로 이전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현재 「산인농공단지」와 고속도로 사이에 땅(농지)이 있는데 이를 적극 넓혀 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결국 군이 시설 준비와 더불어 부지 확장이 가능하도록 해주어야 한다는 주장이었는데, 부산시에서 보였던 1986년 이후 기업의 역외퇴출 교훈을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실질적으로 창원·마산으로 이전하거나 역류하는 기업도 있었고, 이를 고려하는 기업도 있었는데, 그 이유로 인력 문제가 첫째지만 두 번째로 땅을 추가로 확보할 수 없어서라고 대답했다. 기업의 대표이사들은 교통망 확충이 중요하고 지속적인 부지 확장 노력과 정부의 농촌 제조업에 대한 인식 변화가 적극적으로 전환되어야 한다는 점을 요점으로 지적했다.

6. 설문지 분석

가. 임금, 근로시간 분석(2005년 6~7월 현재)

임금과 근로시간은 정확하게 조사하기도 어렵지만 대답하기를 가장 꺼리는 부분이다. 임금은 과대하게, 근로시간은 과소하게 답변이 이루어지는 경향이 있어 편의(偏倚)가 있으며, 따라서 학력별·경력별·성별·업종별

로 정확한 절대값을 신뢰하기 어렵다. 그러므로 여기에서는 이러한 편의를 최소화하기 위해 양 단지의 상대적 비교값만을 유의미하게 받아들여 해석한다. 임금은 2005년 6월이나 7월 현재의 임금으로 하였다.

이 조사에서 「군북농공단지」에 입주한 14개 업체 중 「투엠함안지점」은 생산·고용이 없어서, 「태홍섬유」는 현지 생산이 없어 제외하고 총 12개 업체를 조사하였다. 업종은 D17(섬유제품제조업), D24(화합물 및 화학제품 제조업), D27(제1차금속), D28(조립금속제품), D29(기계·장비)였다. 「산인농공단지」 역시 생산·고용이 아직 없는 「칠성씨앤아이」, 부도로 생산이 없는 「에어뱅크」는 제외하고 구하되, 「한택」은 「옥산산업기계」로 통합되었고 「대동지업」, 「제일테크」는 현지 생산이 없어 총 조사기업체는 17개 기업체로 하였다. 「산인」의 업종은 D20(목재 및 나무제품제조업), D21(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제조업), D28(조립금속제품), D29(기계·장비), D33(의료·정밀·광학기기 및 시계), D34(자동차 및 트레일러제조업), D35(기타운송장비제조업)이다. 여자 평균은 여성 고용이 없는 기업을 제외하고 평균하여 구하였다.

일반적으로 도시에 가까운 「산인농공단지」의 임금이 더 높을 것이라고 얘기되고 있고 또 업종별로 보아도 기계공업이 많은 「산인농공단지」 임금이 더 높을 것이라고 기대되었지만 실질적으로 조사한 결과 「군북농공단지」의 임금과 「산인농공단지」의 임금에는 차이가 없었다. 남자 평균 임금은 「군북농공단지」가 157만 원으로 「산인농공단지」의 152만 원보다 오히려 약간 높은 수준이었고, 여자의 경우는 111만 원으로 「산인농공단지」의 119만 원보다 약간 낮은 수준이었다. 이러한 이유는 양 지역 모두 인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두 지역 간에는 종사자들 사이에 임금 정보가 교환되고 있고 또 종사자들간 기업 선택에서 임금이 제1의 비교요소가 되고 있기 때문이었다. 따라서 뚜렷한 위치, 업종, 현지인 비율 등의 차이를 가지고 있는 양 지역이지만 임금은 평준화되어 가고 있고 이것이 양 지역의 어떤 차이를 가져다주는 변수가 되고 있지 못함을 확인할 수 있다.

업종별로 보면 기계, 장비(D29)와 의료·정밀·광학기기 및 시계(D33) 부분, 조립금속공업(D28) 부분 임금이 높았다. 그러나 이 지역 사례조사에서 나타나는 특징적인 것은 작업 난이도를 반영하는 업종별로 다른 업종

과 동일한 서열 차이를 가지고 동일업종의 임금이 반드시 높은 것은 아니었다는 것이다. 예컨대 기계·장비업이 일반적으로 임금이 높지만 「산인농공단지」의 일부 이들 업종의 영세기업들은 다른 업종에 비해 임금이 매우 낮았고 그 결과 이들이 「산인농공단지」의 전체적인 임금수준을 낮추고 있었다. 반면 섬유업체는 임금이 통상적으로 낮다고 말하여지고 있으나 「군북농공단지」의 섬유업체는 낮지 않았으며 심지어 어떤 섬유업체는 월 200만원으로 전체 농공단지를 통틀어도 매우 높은 수준을 보여주었다.

남녀 임금은 여자의 임금이 남자에 비해 매우 낮았고, 양 지역 모두 그 차이가 비슷하였다. 업종별로도 대부분 유사한 차이가 발생하고 있었다. 이러한 차이가 발생하는 원인은 업종별 차이보다 기능·연령에 따른 차이였다. 그러나 이러한 기능·연령에 따른 보상격차(compensating wage differential)를 인정한다고 해도 여전히 남녀 임금 차이가 크게 존재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고, 이는 함안의 농촌 공업에서만만의 문제는 아니지만 이에 대한 적절한 대책이 노동의 질, 노동의 수요와 공급을 포함한 가격 측면에서 전반적으로 논의되어야 할 필요가 있음을 보여준다. 왜냐하면 이번 조사에서도 분명히 나타났듯이 현재만이 아니라 향후 농촌노동력의 주요한 부분이 40~50대의 주부이기 때문이다.

근무시간은 「산인농공단지」가 10.5시간으로 「군북농공단지」에 비해 1.1시간 긴 것으로 나타나는데 전반적으로 업종에 차이없이 「산인농공단지」가 더 높았다. 따라서 근무시간을 고려한 시간당 임금은 「군북농공단지」가 「산인농공단지」보다 더 높다고 할 수 있다.

나. 노동수요자 기업 분석: 대표이사 설문지 분석

1) 농촌 기업 업종과 시장

우선 업종별로 두 농공단지 기업을 분류해 보면 <표 IV-10>과 같다. 공단별로 업종이 완전히 구분되어 있지는 않았다. 이러한 동일 공단내 업종 미구분은 입주 업체 대표들의 불만 요인이었다. 물류, 공해 공동처리 등 여러 면에서 업종 구분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지만 공해 산업만 아니라면 그냥 신청 순서대로 받아주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비교적 「군북농공

<표 IV-10> 업종

	군북		산인	
	응답기업수	비율	응답기업수	비율
섬유	4	33.3	0	0.0
기계	2	16.7	13	72.2
금속	2	16.7	1	5.6
화학	1	8.3	0	0.0
1차금속	3	25.0	0	0.0
전기·전자	0	0.0	2	11.1
목재	0	0.0	1	5.6
종이	0	0.0	1	5.6
전 체	12	100.0	18	100.0

단지」는 섬유 중심, 「산인농공단지」는 기계 중심으로 공단이 형성되었다. 도시에서 멀리 떨어져 상대적으로 고연령, 여자, 저학력자를 이용하기 쉬운 「군북농공단지」에는 섬유가 1/3을 차지하고 있었고 도시에 가까운 「산인」은 기계가 72.2%로 압도적 지위를 차지하고 있었다.

이러한 차이는 초기 기업이 입주할 때의 농촌 노동시장 구조, 입지조건과 관계가 있는 것이다. 이제는 섬유 업종도 노동집약적 혹은 노동사용적 공업이 아니라는 일반적인 인식이 있지만, 입주 초기의 1980년대 말에는 섬유 업종이 노동집약산업이라는 인식이 있었고, 지금도 여전히 노동력 측면에서 보면 섬유 업종이 기계 부문보다는 연령, 학력, 성별의 제한을 덜 받으므로 노동시장 구조상 섬유 업종은 도시에서 먼 지역이, 기계공업은 도시 근교가 입지조건이 되기 때문이다.

한편 「산인농공단지」는 물론이고 「군북농공단지」 역시 마산·창원 기계공업단지의 영향으로 기계·금속 공업이 전체 업종의 1/3을 차지하고 있다. 이는 농촌 공업의 경우 결국 가까운 도시 혹은 도시공단의 영향을 어느 형태로든 받고 있음을 보여준다. 「군북농공단지」에 1차금속이 3개 기업이나 있는 것은 1차금속의 경우 물류가 가장 중요하므로 초기 입주에서 비교적 고속도로가 가깝다는 점이 고려되었기 때문이다. 이는 대표이사들과의 인터뷰에서 확인한 것이다.

이제 양 공단의 주판매시장을 조사해 보면 각각 <표 IV-11>과 같다.

판매시장은 기술수준의 대변수로 고려할 수 있다. 즉 선진시장이 판매시장인 경우 기술수준이 높은 제품이라고 말할 수 있다. 발전도상국 시장에 판매하는 것이 「군북」은 40%, 「산인」은 11.1%로 차이가 있었다. 「산인」에서 생산된 제품은 중국과 중동에 수출하는 기업이 각각 1개씩만 있었고 나머지는 전부 국내 혹은 선진시장에 판매하고 있었다.²⁶⁾ 결국 현지인 고용을 늘리는 데에는 일단 기술수준이 높은 제품보다 자동화가 많이 이루어져 기술 요구가 적은 생산 과정이 주로 진행되는 업종이 좋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 농촌기업 입주 환경

각 기업의 입주 경과 연한을 보면 각 공단별로 <표 IV-12>와 같다. 입주 경과 연한이란 입주 기업들의 입주 후 2005년 7월까지의 기간이다.

<표 IV-11> 주판매시장

	군북		산인	
	응답기업수	비율	응답기업수	비율
경남	3	15.0	5	27.8
경남외 국내	5	25.0	8	44.4
미국, 일본, 유럽 등 선진시장	4	20.0	3	16.7
중국	3	15.0	1	5.6
동남아	4	20.0	0	0.0
남미, 아프리카	0	0.0	0	0.0
중동	1	5.0	1	5.6
전 체	20	100.0	18	100.0

<표 IV-12> 입주 경과 연한

농공단지	군북	산인
입주 연한	10.6년	8.9년

26) 「산인」의 경우 그 해의 사정에 따라 달라진다는, 즉 모든 세계의 시장이 대상이라는 응답도 1곳 있었다.

「군북농공단지」가 건설된 기간은 1987년 5월 29일부터 1988년 8월 12일까지로 1988년 이후에 입주가 시작되었고 「산인농공단지」는 조성기간이 1989년 9월 9일부터 1991년 3월 23일까지로 「군북농공단지」가 조성되고 1년 후 착공되어 입주는 2년 7개월 정도 늦었다. 물론 오늘날까지 입주기업의 진입과 퇴출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2005년 7월 현재 「군북농공단지」에 입주한 업체의 입주 연한이 산인보다 1.7년 오래 되었다. 따라서 초기 입주의 차이가 있지만 어쨌든 농촌 공업의 원래 목적에 충실한, 즉 농촌노동력을 보다 많이 이용하는 업체가 더 일찍 농촌에 들어왔고 또 이들 기업들이 더 오랫동안 농촌에 잔류 혹은 생존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앞서 보았듯이 농촌노동시장에 맞는 업종들이 집중된 「군북농공단지」가 오래 농촌에 머물러 있는 점도 생각할 수 있다.

입주 이유를 각 공단별로 조사해 보면 각각 <표 IV-13>과 같다. 지역상공회의소를 방문하여 농촌으로 이주하는 기업들의 농촌 진입 원인을 물어본 결과 “기업들이 이제는 도시에서 ‘아무리 돈을 주어도 땅을 더 구할 수가 없다’는 것이 일차적 이유”였다. 공급 즉 도시의 문제 때문에 배출(push)이 일어난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군북농공단지」, 「산인농공단지」 모두 앞의 이유보다 ‘지가가 싸서’ 농촌으로 왔다는, 즉 농촌의 견인(pull) 요인 대답이 가장 많아 「군북농공단지」 기업들은 43.8%, 「산인농공단지」 기업들은 38.1%가 이렇게 대답했다. 「산인농공단지」의 경우 ‘저렴한 지가’와 똑같이 ‘조세 등 정책보조’ 때문에 농촌으로 왔다는 대답도 38.1%였는데 「군북」 역시 이 대답이 2위였지만 25%에 머물렀다. 「군북」에 입주한

<표 IV-13> 입주 이유

	군북		산인	
	응답기업수	비율	응답기업수	비율
땅을 구할 수 없어서	2	12.5	3	14.3
지가가 싸서	7	43.8	8	38.1
임금이 싸서	0	0.0	0	0.0
현지 인력을 쓰려고	3	18.8	2	9.5
조세 등 정책보조 때문에	4	25.0	8	38.1
전 체	16	100.0	21	100.0

기업의 평균 연수가 「산인」 입주기업보다 더 길었는데 최근 연도에 올수록 기업들이 ‘조세 등 정책보조’에 더욱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어쨌든 농촌에 경제활동 기회를 창출하는 기업을 유치하는 데에는 ‘저렴한 지가’와 함께 ‘정책적 보조’가 큰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도시의 배출(push) 요인보다 농촌의 견인(pull) 요인이 보다 큰 기업 이동 요인임이 확인된다. 이러한 점은 다시 도시로 돌아가는 기업이 2개 있었던 점에서도 발견되는데 이 기업들 역시 도시로 돌아가는 것이 여러 문제가 있음에도 농촌이 더 이상 기업을 유지할 수 없는 요인(토지 문제 등)이 발생하여 농촌을 떠난 것이었다. 결국 기업 유치는 농촌의 내재적 요인으로 설명가능하며 또한 내재적 요인의 개선에 의해 이루어질 수 있다.

이외에 「군북」의 경우 농촌 이주 요인으로 ‘현지 인력 이용’을 든 기업이, 「산인」은 ‘도시에서 땅을 구할 수 없어서’라고 답한 기업이 각각 18.3%, 14.3%였다. 이는 매우 중요한 점을 보여준다. 도시에서 먼 농촌으로 들어오는 기업의 경우 실질적으로 농촌의 노동력 이동에 관심이 있지만 도시와 인접한 농촌의 경우 현지 인력에 대한 관심보다 도시에서 실질적으로 가능한 벗어나지 않으면서 땅값이 싼 곳으로, 즉 도시와 인접한 농촌 지역으로 입주하고자 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농촌의 노동력을 보다 잘 활용하기 위해서는 이 점을 잘 고려할 필요가 있다.

상공회의소나 함안군 사전조사에서 지적된 이유인 ‘임금이 농촌이 싸서 입주했다’는 기업은 양 지역 모두 없었다. 임금은 언제나 기업가들에게 가장 큰 관심이었고 이번 면담에서도 계속 확인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촌으로의 진입 동기에서는 임금이 중요한 요인이 되지 못했다. 기업들은 농촌에 들어올 때 이미 농촌이라고 해서 임금이 싸다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았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농촌 입주기업에게 기업 부담으로 임금을 더 올려주라고 하는 것은 농촌 입주나 농촌 체류에 큰 장애가 될 수 있다. 왜냐하면 이미 농촌 입주기업들은 기술수준이나 학력 등 여러 다른 요소들을 고려할 때 농촌 임금이 싸다고 생각하고 있지 않아 임금을 올리면 농촌 체류나 진입 유인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이는 실질적으로 대표이사들과의 인터뷰를 통해서도 거의 대부분 모든 기업에서 확인되었다.

3) 고용 선호 대상과 이유

각 대표이사들에게 향후 가능하다면 현지인, 한국인 비농촌 외지인, 외국인 중에서 누구를 고용할 것인가를 물었고 그 대답은 <표 IV-14>와 같다.

<표 IV-14> 향후 가능한 노동자는 누구를 고용하겠는가

	군북		산인	
	응답기업수	비율	응답기업수	비율
가능하면 현지인	8	61.5	4	22.2
가능하면 한국인 비농촌인	1	7.7	4	22.2
가능하면 외국인	2	15.4	3	16.7
상관없다	2	15.4	7	38.9
전 체	13	100.0	18	100.0

향후 가능하다면 누구를 많이 고용하겠는가라는 질문에 「군북」과 「산인」은 뚜렷한 차이를 보였다. 현지인 고용이 많은 「군북」은 61.5%가 가능하다면 현지인을 고용하겠다고 대답한 데 반해, 도시와 인접한 「산인」의 경우 38.9%가 누구든 상관없다고 대답했다. 「산인」의 기업들은 현지인과 한국인 비농촌 외지인에 대한 선호도를 22.2%로 똑같이 보여주었다. 현지인을 따로 더 고용하고 싶다는 생각을 갖고 있지 않았다. 반면 「군북」은 오히려 한국인 비농촌 외지인을 고용하겠다는 비율이 7.7%에 불과해 가능하다면 외국인을 고용하겠다는 비율 15.4%보다도 낮았다.

따라서 농촌노동력을 더욱 활용하려면 당연히 「군북농공단지」에 입주한 기업의 조건을 활용, 적용하도록 해야 한다. 그것은 도시와 먼 지역이어야 하고 농촌노동력을 더욱 잘 쓸 수 있는 자동화된 낮은 수준의 기술을 요하는 업종, 발전도상국 시장지향 업종, 그리고 연령과 성별에 구애를 크게 받지 않는 업종이 좋다.

가능하면 현지인을 고용하겠다고 응답한 기업의 대표이사에게 왜 그런지 이유를 묻은 결과가 <표 IV-15>이다. 가능하다면 현지인을 고용한다고 한 이유를 묻은 결과 「군북」은 ‘현지에서 구하기 쉬워서’라고 대답한 기업이 41.7%로 다른 응답과 차별적으로 많았는데 비해, 「산인」은 ‘구하기 쉬

〈표 IV-15〉 가능하면 현지인을 고용한다고 한 이유

	군북		산인	
	응답기업수	비율	응답기업수	비율
구하기 쉬워서	5	41.7	2	40.0
임금이 싸서	2	16.7	0	0.0
일을 더 성실히 해서	3	25.0	2	40.0
퇴직자가 적어서	2	16.7	1	20.0
기술이 더 좋아서	0	0.0	0	0.0
전 체	12	100.0	5	100.0

위서'와 '일을 더 성실히 해서'가 각각 40%를 차지했다. 「군북」의 경우에도 '일을 더 성실히 해서'가 25%로 2위를 차지했다. 결국 농촌 현지인을 구하는 이유는 양 지역 모두 외지인보다 구하기 쉽고 일을 더 성실히 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공통점이 있었다. 농촌 현지인이 더 기술이 좋다고 생각하는 기업은 양 지역 모두에서 한 기업도 없어 농촌 현지인에 대한 기술교육의 필요성이 다시 한번 간접적으로 확인된다.

임금이 현지인이 더 싸다고 생각하는 경우는 「산인」은 1개사도 없었다. 그런데 「군북」은 2개사가 있었다. 「산인」에는 1개사도 없었던 점, 그리고 「군북」에서도 2개사만이 임금이 현지인이 더 싸다고 대답한 점으로 보아 이는 농촌 현지인과 외지인 간의 실질적인 임금 차별이 있다고 보기보다는, 오히려 「군북」 일부 기업이 나이가 많은 여성노동력을 많이 고용하고 있는 점에서 남녀 성차별과 취업연령에 따른 기술 및 생산성 격차로 발생하는 임금 차이를 대표이사들이 현지인·외지인 간 임금 차이로 잘못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산인」의 경우 이러한 노동력이 전체 종사자수에서 적으므로 인식 오류가 존재하고 있지 않은 것이다. 나아가 이러한 점은 거꾸로 도시에서 오는 사람에게 보상적인(compensating) 임금 차이도 크게 없음을 반영한다.

농촌 현지인이 조사 결과 보다 안정적이라는 것을 알 수 있음에도 양 쪽 기업들은 이 점을 고용의 이유로는 낮게 꼽았다. 이는 농촌 현지인보다 안정적 성향을 보이고 있음에도, 기업 대표들은 '현지인들도 최근 많이 그만두더라'라는 최근 상황과 인식 변화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결

국 현지인과 외지인에 대한 정확한 실태 차이가 농촌 입주기업의 대표이사들에게는 제대로 인식되지 못하고 있는 정보의 오류가 존재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번에는 가능하면 현지인이 아닌 한국인 비농촌 외지인, 그리고 가능하다면 외국인을 고용하겠다고 응답한 기업의 대표이사에게 왜 그런지 이유를 물었다. 그 결과를 정리한 것이 <표 IV-16>과 <표 IV-17>이다.

<표 IV-16>에서 보듯이 가능하면 현지인보다 한국인 비농촌 외지인을 고용한다고 한 기업은 「군북」이 1기업, 「산인」이 4기업으로 전체 기업수가 적고 「산인」의 4기업도 그 이유가 각각 다른 요인에 2곳씩 나뉘어져 현지인보다 한국인 외지인 고용을 선호하는 어떤 유의적인 해석을 내리기는 어렵다. 다만 그런 가운데에도 「군북」에서 1개 업체만이라고 하지만 ‘한국인 외지인을 더 구하기 쉬워서’라고 대답했고 「산인」의 경우 한국인 외지인이 ‘오히려 일을 더 성실히 한다’고 응답한 기업이 2개사, ‘기술이 더 좋다’라고 응답한 기업이 2개사 있는 것은 의미가 있다. 「군북」에서도 이제 현지인을 구하기 어려워 타지역, 도시 외지인을 구하는 것이 더 쉽고 생각하는 기업이 등장하고 있음을 볼 수 있고 이러한 경향으로, 즉 ‘현지인도 구하기 어려워지자 현지인들이 거만해졌다’고 생각하는 기업 대표이사들이 인터뷰에서 있었는데 이러한 인식이 반영되어 ‘오히려’ 외지인이 일을 더 성실히 하더라는 대답으로 「산인」에서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기술을 보다 더 요구하는 업종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산인」에서

<표 IV-16> 가능하면 한국인 비농촌 외지인을 고용하는 이유
(가능하면 한국인 외지인을 고용한다고 응답한 기업만 응답)

	군북		산인	
	응답기업수	비율	응답기업수	비율
구하기 쉬워서	1	100.0	0	0.0
임금이 싸서	0	0.0	0	0.0
일을 더 성실히 해서	0	0.0	2	50.0
퇴직자가 적어서	0	0.0	0	0.0
기술이 더 좋아서	0	0.0	2	50.0
전 체	1	100.0	4	100.0

현지인보다 한국인 외지인을 가능한 한 고용하고자 하는 이유가 외지인이 기술이 더 좋기 때문이라고 답한 것에 주목해야 한다.

<표 IV-17>에서 보듯이 가능하면 외국인을 고용하겠다고 한 기업체가 「군북」에 2개사, 「산인」에 3개사였는데 「군북」에서는 그 이유로 각각 ‘구하기 쉬워서’와 ‘임금이 싸서’를 꼽았고, 「산인」 역시 ‘구하기 쉬워서’를 1개사, ‘임금이 싸서’를 2개사 꼽았다. 전체적으로 가능하면 외국인을 뽑겠다는 업체는 절대수에서 적었으나 그럼에도 ‘가능하면 한국인 외지인을 뽑겠다’는 응답 회사수와 같다는 점에서 매우 주목할 만하다. 즉 이미 기업에서는 외국인 고용이 한국인 외지인 고용만큼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음을 반영한다. 외국인을 쓰면 좋은 이유를 보다 자세히 물어본 결과 ‘일단 배정을 받을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임금은 작년 9월부터 한국인과 동일하게 주지만 그럼에도 장기간 근무나 명절근무가 가능해 결과적으로 임금이 싸게 먹힌다’는 대표이사들의 인터뷰 내용에서 그 대답을 찾을 수 있다. 설비활용성, 평균 고정자본비용 하락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외국인 노동을 사용하는 것이 임금이 싸다고 대답한 것이다.

기업들은 ‘외국인을 정부에 신청한 것보다 훨씬 적게 받고 있고’ 또 ‘시간이 너무 걸린다’는 점을 큰 문제로 지적했다. 한편 여전히 외국인 고용은 언어, 그리고 기술부족 등의 장애가 있다고 대부분의 대표이사들이 말했으며 이러한 문제로 외국인을 절대 쓰지 않겠다는 기업도 2개사나 있었다. 결국 외국인 근로자 정책은 외국인 근로자를 긍정적으로 생각하든 부

<표 IV-17> 향후 가능하면 외국인을 고용하는 이유
(가능하면 외국인을 고용한다고 응답한 기업만 응답)

	군북		산인	
	응답기업수	비율	응답기업수	비율
구하기 쉬워서	1	100.0	1	33.3
임금이 싸서	0	0.0	2	66.7
일을 더 성실히 해서	0	0.0	0	0.0
퇴직자가 적어서	0	0.0	0	0.0
기술이 더 좋아서	0	0.0	0	0.0
전 체	1	100.0	3	100.0

정적으로 생각하든 간에 여러 면에서 아직도 정착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현장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

4) 정책과 기업 판단

대표이사들에게 농촌에 들어오는 기업을 늘리기 위해 정부가 어떤 역할을 하면 좋겠는가를 물었고 그 결과가 <표 IV-18>이다.

<표 IV-18> 입주기업을 늘리기 위한 정부 역할

	군북		산인	
	응답기업수	비율	응답기업수	비율
세금감면	5	33.3	8	33.3
임금보조	3	20.0	5	20.8
분양가 하락	0	0.0	2	8.3
숙소, 도로 등 시설건설 보조	6	40.0	8	33.3
교통비 보조	1	6.7	1	4.2
전 체	15	100.0	24	100.0

정부가 무엇을 해주면 입주기업이 늘어날까라는 질문에 「군북」과 「산인」은 각각 입지적 조건이 다르지만 둘 다 ‘숙소와 도로 등 시설건설 보조’를 가장 높은 응답비율로 답한 것은 매우 특징적이다. 이는 기존에 전혀 지적되지 않았던 것으로, 농촌지역 공업의 종사자 숙소 문제와 도로 등 교통체계에 대한 보다 전면적인 조사와 연구가 필요함을 제시한다. 숙소와 도로 등 시설에 높은 관심을 보인 것은 인터뷰 내용과도 일치한다.

그런데 예상과 달리 도시에서 출퇴근하는 인구가 많은 「산인」보다 「군북」의 경우가 숙소나 도로 보조를 40%로 더 많이 꼽은 것은 농촌 내에서의 이동이 오히려 도시-농촌 간 이동보다 더 어려운 한국의 현실을 반영하는 것이다. 현재 농촌내 교통 등 사회간접자본은 도시와 비교해 매우 불편하다. 물론 「산인」의 경우도 출퇴근하는 도시인들이 많아 이 문제로 기업대표들은 매우 골치 아파하고 있었고 교통 편의시설은 최근에야 버스 한 대가 다니기 시작했다. 그러므로 이러한 낙후된 교통 문제로 기업들은

연료비를 지급해야 하거나 혹은 통근버스를 운용하고 있었다. 세금에 보다 민감한 것으로 나타났던 「산인」에서 정부가 숙소나 도로 문제를 도와주면 입주기업이 늘어날 것이라고 답한 기업이 세금감면 응답비율과 같은 33.3%를 차지한 것도 이러한 점을 반영한다.

그런데 기업 대표들은 연료비, 통근 교통비용 등의 직접지출 경비보다 출퇴근에 따른 여러 추가적 문제 발생을 더욱 심각한 문제로 지적했다. 실질적으로 정부가 도와줄 일에서 ‘교통비 보조’를 꼽은 기업은 「근북」, 「산인」 모두 1군데 업체에 불과했다. 「산인」의 한 기업체 대표이사는공단 부근 미분양 아파트를 회사가 이용하는 방법을 주장하였는데 아파트 구입비용이 교통비 보조비용보다 더 많이 든다는 점에서 직접 교통관련 지출비용보다 출퇴근에 따른 추가적 문제를 기업 대표들이 더욱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결국 ‘숙소와 도로 등 시설보조’가 각 지역 모두 그리고 전체 지역으로 보아도 ‘세금감면’보다 더 중요한 요인으로 나타난 것은, 기업들이 세금감면만 요구하고 있다는 정부의 얘기가 틀리다는 것을 반영한다.

정부가 무엇을 해주면 입주기업이 늘어날까라는 질문에 양 지역의 기업이 공통으로 두 번째로 답한 것이 ‘세금감면’으로 각각 33.3%씩 선택했다. ‘숙소, 도로 시설보조’와 함께 ‘세금감면’의 두 항목이 압도적 비중을 보여주는 가운데 점점 최근에 올수록 기업들이 세금감면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 실질적으로 기업 대표들과 인터뷰를 한 결과 1980년대 후반과 1990년대 초 입주시에는 여러 세제혜택이 있었으나 현재 다른 지역의 기업과 다른 혜택이 없다고 이구동성으로 주장하고 있었다. 정부가 농공단지 진입 유인만 하고 그 이상 보조를 해주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임금보조가 똑같이 양 지역에서 세 번째로 많은 20%로 나왔다. 인터뷰에서 기업 대표이사들은 정부의 임금보조에 대해 회의적이었고 이에 대해 별로 기대를 하지 않아 이 항목 응답이 낮게 나왔지만, 그럼에도 역시 20%로 높은 비중임을 알 수 있다.

앞서 보았듯이 현재 농촌 공장에서는 고용인원이 줄고 있는데 특히 현지인 고용이 더 많이 줄고 있다. 그래서 대표이사들에게 왜 현지인 고용이 더 주는지 물어보았고 양 지역의 결과가 <표 IV-19>이다.

〈표 IV-19〉 농촌 현지인 고용이 더 주는 이유

	군북		산인	
	응답기업수	비율	응답기업수	비율
농촌 현지인을 구하지 못해	8	53.3	9	47.4
임금을 더 달라고 해서	1	6.7	1	5.3
기술수준이 더 낮아서	3	20.0	6	31.6
결근 등 근무태도가 더 나빠서	3	20.0	3	15.8
전 체	15	100.0	19	100.0

농촌 고용인 고용이 더 많이 주는 이유에 대해 물은 결과 양 지역 모두 ‘농촌 현지인을 구할 수 없어서’라는 대답이 각각 53.3%, 47.4%로 압도적 1위였다. 실질적으로 농촌에서 사람을 구하는 것은 어려웠다. 특히 함안의 특징상 수박 등 지역특산물 고수익 과수 재배로, 남아 있는 젊은층도 공업으로 고용흡수 하기는 이제 한계에 다다르고 있었다. 기업 대표들은 향후 흡수가 가능한 인원으로 40대 이상의 여자를 뽑았다. 농촌 고용을 늘리기 위해서는 이 층을 대상으로 할 수 있는 업종과 조건을 갖춘 기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특정적인 것은 업종 구성상 보다 기술사용적인 「산인」의 경우 31.6%가 현지인 고용이 감소하는 이유로 기술부족을 들었다는 점이다. 따라서 농촌 노동력을 위한 기술교육의 필요성은 매우 높다. 하지만 상대적으로 자동화가 많이 진행되고 개인 기술집약도가 낮은 업종이 많은 「군북」의 경우 ‘기술수준이 낮아서 현지 고용인 고용을 더 줄인다’는 대답이 ‘근무태도’ 등과 같은 수준으로, 높지 않았다. 이는 업종에 따라 현지 고용인에 대한 태도, 채용이 달라짐을 다시 한번 확인해 준다.

농촌 현지인들이 임금을 더 달라고 하는 경우는 거의 없었고 근무태도에서 특히 농촌 현지인이 더 좋거나 나쁘다는 차이는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인다.

현지인 고용을 늘리기 위해서는 어떤 정부 정책이 필요한지 물어보았다(표 IV-20). 현지인 고용을 늘리기 위해 정부가 무엇을 도와주면 좋겠는가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기업 대표이사들에게 ‘지금도 농촌인력이 부족하지만 그럼에도 현지 고용을 늘릴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 보아야 하는 이유’

부터 설명하고 질문했다. 이에 「군북」은 ‘현지인에 대해 임금을 보조해 준다면 당연히 기업으로서 현지인을 늘릴 것’이라고 1/3이 대답했고 이 비율이 가장 높았다. 이는 「군북」의 경우 현지인을 더 선호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가 그들 임금을 보조해 준다면 당연히 적극 더 늘리겠다는 것이다. 또한 앞서 보았듯이 작업상 요구되는 기술수준의 차이에 따라 「군북」은 임금 제원만 있다면 고용을 더 늘려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고 있는 반면, 「산인」은 사람수가 문제가 아니라 기술이 문제라는 인식도 반영되었다고 보여진다. 「산인」의 경우 현지인에 대해 「산북」보다는 덜 우호적이었고 또 기술 등에서 떨어진다고 생각하고 있었으며 임금보조가 실현가능한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그래서 「산인」은 28.6%가 그들 현지인 고용수만큼 세금을 깎아 준다면 더 늘릴 것이라고 대답했다. 이는 「군북」은 사람에, 「산인」은 「세금」에 더 관심이 있음을 반영하는 것으로 다른 질문의 결과와 내용상 통하는 면이 발견된다. 따라서 현지 고용을 늘리려면 도시에 가까운 지역일수록 세금정책을, 농촌에 가까운 지역일수록 임금보조정책이 유효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두 정책을 동시에 실시하고 기업에게 하나씩 선택하라고 할 경우 지역에 상관없이 46.7%, 42.8%가 현지 고용을 늘리겠다고 답한 것은 주요한 정책적 의미를 준다.

다음으로 높게 답한 내용은 「군북」, 「산인」 모두 ‘학교, 도로개발 등 농촌개발’로 각각 26.7%, 19.0%이었다. 「산인」의 경우 어떤 정책을 쓰던 이미 농촌에 사람이 없어 구할 수 없다고 말하면서 답을 하지 않은 기업 대

〈표 IV-20〉 현지인 고용을 늘리기 위한 필요한 정부정책

	군북		산인	
	응답기업수	비율	응답기업수	비율
세금감면	2	13.3	6	28.6
임금보조	5	33.3	3	14.3
분양가 내림	0	0.0	2	9.5
숙소 등 보조	1	6.7	3	14.3
기술교육	3	20.0	3	14.3
농촌개발(학교, 도로 등)	4	26.7	4	19.0
전 체	15	100.0	21	100.0

<표 IV-21> 농공단지에 사람이 모자라는 이유

	군북		산인	
	응답기업수	비율	응답기업수	비율
농촌에 사람이 없어서	8	53.3	7	29.2
농촌에 사람은 있지만 도시에서 일하려고 해서	5	33.3	8	33.3
일이 힘들어서	0	0.0	2	8.3
월급이 적어서	1	6.7	3	12.5
장래성이 없고 불안해서	1	6.7	2	8.3
기계, 제조업 기피	0	0.0	2	8.3
진 체	15	100.0	24	100.0

표도 1명 있어 이를 합할 경우 「산인」 역시 이 대답이 23.8%로 「군북」과 거의 유사한 비율이 된다. 여차피 공급 병목이 존재하고 있고 농촌 현지인이 없어 못 뽑고 있으므로 ‘학교, 도로 등 농촌개발이 잘 이루어져 농촌에 사람이 많이 머물 경우’ 농촌 현지인 고용이 늘어날 것이라는 것이 기업들의 생각이었다. 이러한 사실은 공급 병목시장에서 정부의 장기적 정책이 어떤 것이어야 할지를 보여준다.

다시 근본적으로 농공단지, 농촌에 사람이 모자라는 이유, 공급 병목 노동시장이 형성되고 있는 이유를 각 대표이사에게 물어보았고 그 대답이 <표 IV-21>이다.

「군북」 기업 대표 가운데 53.3%가 ‘농촌의 폐쇄화, 즉 농촌에 사람이 없다’는 것을 절대적인 원인으로 꼽은 반면, 도시에 가까운 「산인」은 33.3%가 ‘농촌에 사람이 있지만 도시에서 일하려고 하기 때문이다’를 답했다. 이러한 차이는 도시 인접도에 따른 공단의 위치에 연유한다. 두 번째 이유로 「군북」은 ‘도시로 나가서 일하려고 하기 때문에’를 33.3%, 그리고 「산인」은 ‘농촌에 사람이 없기 때문에’를 29.1% 꼽았다. 결국 양 지역의 기업 대표들은 모두 임금 등 경제적인 어떤 이유나 일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농촌에 사람이 없고’ 또 ‘있어도 도시에 나가 일하려고 하기 때문에’ 농촌 공업단지에는 사람이 없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5) 기업전략과 유치전략

대표이사들에게 향후 3년 이내에 농촌 농공단지를 떠날 것인가를 물어 보았고 그 응답 결과가 <표 IV-22>이다.

기업이 3년 이내에 이 농공단지를 떠날 것인가는 결국 농촌을 떠날 것이냐는 질문과 유사한 의미라고 설명했다. 그 결과 「군북」은 91.7%가 즉 1개사를 제외하고 전부 떠나지 않는다고 대답한 반면, 「산인」에 있는 기업은 떠날 생각이 있다와 없다와 거의 반반에 가까운 47.1%와 52.9%였다. ‘1년 이내에 이곳을 떠날 것인가’라고 종사자들에게 물어본 조사에서도 「산인」은 유사한 결과가 나왔다. 곧 도시근교 지역은 해체가능성이 높으므로 농촌 고용을 늘리고 장기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도시근교 지역보다는 농촌지역을 중심으로 하여야 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물론 여기에는 양 지역의 업종과 기술수준도 반영하고 있지만 농촌 노동시장의 구조적 변동 가운데 일차적으로 현지인을 많이 고용하고 있는 지역과 그렇지 않은 지역의 차이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표 IV-22> 앞으로 3년 이내에 이 농공단지를 떠날 계획이 있는 기업

	군북		산인	
	응답기업수	비율	응답기업수	비율
있다	1	8.3	8	47.1
없다	11	91.7	9	52.9
전체	12	100.0	17	100.0

<표 IV-23> 3년 이내에 떠나려고 하는 이유(떠난다고 응답한 사람 중)

	군북		산인	
	응답기업수	비율	응답기업수	비율
인력 구하는 문제 때문에	1	100	6	50.0
인건비(월급) 문제 때문에	0	0	2	16.7
원료 문제 때문에	0	0	1	8.3
지가 문제 때문에	0	0	0	0.0
정부보조가 적기 때문에	0	0	2	16.7
시장관로 관련 때문에	0	0	1	8.3
전 체	1	100	12	100.0

향후 3년 이내에 농촌 농공단지를 떠날 것이라고 대답한 기업 대표이사에게 왜 떠나려고 하는가를 물어보았고 그 응답 결과가 <표 IV-23>이다.

<표 IV-23>에서 보듯이 3년 이내에 떠나겠다는 기업이 거의 50%에 육박한 「산인」의 경우 역시 ‘인력을 구하기 쉬운 도시로 가야겠다’고 답한 기업이 전체 응답자의 50%가 되었다. 「군북」의 경우도 떠나겠다는 유일한 기업 1개사 역시 인력을 구하기 힘들어서라고 대답했다. 농촌에 사람이 없다는 것은 이제 오늘날의 농촌만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농촌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런 가운데에도 도시근교 지역과 달리 「군북」이 떠난다고 답한 기업이 거의 없었던 것은 매우 많은 시사점을 준다. 한편 「산인」의 경우 ‘인건비가 비싸기 때문에’와 ‘정부보조가 적기 때문에 떠난다’를 각각 2개사가 답했는데 이는 「산인」의 경우 농공단지에 기대했던 혜택이 시간이 지나면서 현재는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는 「산인」 대표이사들의 인터뷰 내용을 상기시킨다.

역으로 향후 3년 이내에 농촌 농공단지를 떠나지 않을 것이라고 응답한 기업 대표이사에게 왜 떠나지 않으려고 하는가를 물어보았고 그 응답 결과가 <표 IV-24>이다.

3년 이내에 이곳을 안 떠나겠다는 기업에 대해 왜 안 떠나는가를 물어보았는데 ‘지가 문제 때문’이라고 답한 기업이 양 지역 모두 1/3이었다. 최근 도시 지가가 폭등하면서 지가 격차가 더 벌어져 농촌지역의 현 부지를 처분해서는 도시로 이동할 수 없다는 것이 농촌에 머물겠다고 하는 가장

<표 IV-24> 농공단지를 안 떠나겠다는 이유(안 떠난다는 기업 중에서)

	군북		산인	
	응답기업수	비율	응답기업수	비율
인력 구하는 문제 때문에	3	25.0	2	22.2
인건비(월급) 문제 때문에	1	8.3	2	22.2
원료 문제 때문에	0	0.0	0	0.0
지가 문제 때문에	4	33.3	3	33.3
떠나면 보조가 적기 때문에	1	8.3	0	0.0
시장관로 관련 때문에	0	0.0	1	11.1
이사비용 등 여러 문제	3	25.0	1	11.1
전 체	12	100.0	9	100.0

큰 이유였다. 그 다음으로 「군북」에서는 25%의 기업이 ‘인력을 구하기 어렵기 때문’이라고 답했는데 「군북」이 훨씬 더 농촌 현지인 고용에 긍정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산인」의 경우 ‘인건비 문제 때문’이라고 답한 기업이 2개사였다.

“부지조성 사업비 부담을 보조해 준 것, 낮은 지가가 공단 입주에 영향을 많이 미쳤습니까?”라고 하여 지가가 농촌공단 진입에 얼마만큼 영향을 미쳤는지 물어보았고 그 응답을 정리한 것이 <표 IV-25>이다. 「군북」은 1개사를 제외하고 전부 영향을 미쳤다고 답했고, 「산인」은 68.8%가 영향을 미쳤다고 응답했다. 특히 땅값이 중요하므로 영향을 많이 미쳤다고 답한 기업도 「군북」에서 50%, 「산인」에서 56.3%나 나타나 땅값의 영향이 매우 컸음을 알 수 있다. 「군북」이 1개사를 제외하고 전부 영향을 미쳤다고 답한 이유는 「군북」의 경우 입주기업들이 공단부지 조성사업비를 전혀 물지 않았고 도시와 멀리 떨어진 농촌지역이어서 도시와의 지가 격차가 매우 컸기 때문이다.

반면 「산인」의 경우 농촌 진입에 땅값이 크게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하는 기업이 56.3%나 된 반면, ‘영향이 거의 없었다’고 답한 기업도 31.3%나 되

<표 IV-25> 지가가 공단 입주에 미친 영향

	군북		산인	
	응답기업수	비율	응답기업수	비율
땅값이 중요하므로 영향을 많이 미친다	6	50.0	9	56.3
조금 영향을 미친다	5	41.7	2	12.5
영향이 거의 없다.	1	8.3	5	31.3
전 체	12	100.0	16	100.0

<표 IV-26> 외국인 근로자 비율

(단위: 명, %)

	군북	산인
종사자수	374	516
외국인 근로자수	44	63
외국인 근로자 비율	11.8	12.2

었다. 이는 「군북」과 달리 「산인」은 도시와 붙어 있어 지가가 「군북」만큼 크게 싸지 않았고 또한 부지조성 사업비도 자부담이 3,609백만 원이나 있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에서 보면 「산인」의 경우 지가 외에 다른 요인도 입주에 영향을 많이 미쳤다는 것인데 이는 앞의 진입요인 질문 결과 「군북」은 「지가가 싸서」가 43.8%로 압도적이었던 데 비해 「산인」은 「지가가 싸서」와 함께 「조세 등 정책적 도움 때문에」가 각각 38.1%씩 높은 비율로 나온 것에서 알 수 있다. 기업 유치를 위해서는 도시에서 먼 경우 지가를 싸게 해 주어야 하며 도시와 가까워 지가를 많이 낮출 수 없는 경우는 조세 등 정책적 보조를 대신 시행할 필요가 있음을 다시 한번 보여준다.

외국인 근로자 비율을 각 기업에 물어보았다. 이를 정리한 것이 <표 IV-26>이다. 외국인 근로자 비율 조사는 여전히 기업들이 꺼리는 면이 있었다. 「군북」 1개사가 대답하지 않았으며 「산인」의 경우 2개사가 대답하지 않았다. 이를 제외하고 계산하면 외국인 근로자 비율은 「군북」이 11.8%, 「산인」이 12.2%였다. 이미 외국인 근로자의 비율이 농촌공업에서는 10% 이상의 비중을 점하고 있었고 실제로 공장 곳곳과 식당 등지에서 외국인 근로자를 발견하는 것은 어렵지 않았다.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정성적 평가는 인터뷰를 통해 이루어졌다. 「외국인 근로자가 없으면 공장을 돌리는 것은 이미 불가능해졌다」는 응답자와 「외국인 근로자가 언어, 태도, 학습효과 등에서 문제가 있어 쓰고 싶지 않거나 쓰지 않게 되었다」고 답한 기업이 반반 정도였다. 앞서 지적했듯이 외국인 근로자가 이미 정형화되고 그 비중이 높은 이상 보다 철저한 조사와 대책이 필요하다.

다. 노동공급자 분석: 종사자 분석

1) 전체, 항목별 비교 분석

가) 종사자 특성

우선 응답자의 성별을 단지별로 정리한 결과는 <표 IV-27>과 같다. 현재 함안군의 인구 성비는 50.4%(31,169명) : 49.6%(30,704명)으로 남성이 1.5% 정도 많으며 이 중 군북면은 49.9%(3,880명) : 50.1%(3,891명)로 여성

<표 IV-27> 성별 비율

성별	군북농공단지		산인농공단지	
	응답수	비율	응답수	비율
남자	132	65.7	132	76.7
여자	69	34.3	40	23.3
전체	201	100.0	172	100.0

<표 IV-28> 연령별 비율

	군북		산인	
	응답수	비율	응답수	비율
10대	0	0.0	0	0.0
20~29	28	13.9	72	42.1
30~39	55	27.4	55	32.2
40~49	55	27.4	36	21.1
50~59	50	24.9	8	4.7
60~69	13	6.5	0	0.0
전체	201	100.0	171	100.0

이 초과, 산인면은 51.3%(1,569명) : 48.7%(1,492명)로 남성이 초과이지만 대체적으로 성비 차이는 크지 않다. 그러나 양 공단 지역 모두 도시와 마찬가지로 남성 고용이 여성 고용보다 높다. 그런 가운데 「군북」의 여성 종사자가 34.3%로 「산인」의 23.3%보다 높다. 이는 도시와 먼 거리일수록 농촌 자체인력을 활용하고 있고, 또 앞서 보았듯이 「군북」이 섬유 업종이 중심인 데 비해 「산인」은 기계 업종이 중심이기 때문이다. 농촌에서 여성노동력이 남성에 비해 더욱 유휴인력이므로 「군북」이 더욱 지역 이상적임을 알 수 있다.

응답자를 연령별로 정리해 보면 <표 IV-28>과 같다. 농촌에 10대가 없다고 말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군북」과 「산인」 모두 10대 종사자는 없었다. 20대의 비중은 「산인」이 42.1%인 데 비해 「군북」이 13.9%였는데 「산인」은 도시와 붙어 있어 외지인, 즉 마산·창원의 20, 30대가 출근하고 있기 때문이며 젊은 층이 적은 오늘날 현실 농촌의 구조를 보여주는 곳은 「군북」이다. 농촌에 더 가까운 「군북」의 경우 30, 40대는 똑같은 27.4%씩이며 이들 비율은 「산인」의 32.2%, 21.1%와 비교적 유사하다. 그러나 50

대의 경우 「군북」은 24.9%로 20대에 비해 월등히 높은 반면 「산인」은 4.7%에 불과하고, 60대는 「군북」이 6.5%이지만 「산인」은 전혀 없다. 농촌 지역일수록 보다 고령인구의 고용을 늘리는 방법을 연구할 필요가 있음을 보여준다. 이는 기업 대표들과의 인터뷰에서도 확인되었는데 기업 대표들은 농촌의 경우 이용가능한 중심인력이 점점 60대가 되어가고 있음에도 여러 규제가 오히려 고령자의 고용을 방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나) 종사자 환경

응답자 이전 직업을 정리한 것이 <표 IV-29>이다. 설문지의 기타로 해당되는 것은 학생, 직업탐색을 포기한 무직자, 실망실업자, 주부 등 비경제활동인구와 실업자를 의미한다. 따라서 전체 응답자 중 순고용창출 효과는 「군북」과 「산인」 두 지역에서 각각 31.5%, 34.5%이다. 농업, 임업, 자영업 등으로 답한 비율 중 상당수가 잠재실업(disguised unemployment) 혹은 불완전고용 형태를 가지고 있었을 것으로 생각되므로 순고용창출 효과는 이보다 더 높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군북」의 경우 68.5%가, 「산인」의 경우 65.5%가 이전 직업을 갖고 있던 사람으로 응답한 것은 농공단지가 직업창출보다는 직업이동의 기회제공 효과가 더 클 가능성을 보여준다. 더구나 1차산업과 자영업만이 아닌 회사원, 공무원, 교사 등의 직업을 가졌던 사람도 「군북」의 경우 40.5%, 「산인」의 경우 53.2%로 높게 나타난 것은 농촌 농공단지가 단순히 농촌의 유희노동력을 흡수하는 효과만 있는 것이 아니라 농촌 역류와 직업이동 면에서 효과가 크다는 것을 보여준다.

비경제활동인구와 실업자를 제외하고 이전에 취업자 중 농업자의 비중

<표 IV-29> 이전 직업

	군북		산인	
	응답수	비율	응답수	비율
농업	26	13.0	7	4.1
농업, 임업, 자영	56	28.0	21	12.3
회사원, 공무원 등	81	40.5	91	53.2
비경제활동, 실업	63	31.5	59	34.5
전 체	200	100.0	171	100.0

주: 농업, 임업, 자영업은 농업을 포함하므로 단순 합은 100을 넘음.

은 「군북」이 19.0%, 「산인」이 6.3%였다. 즉 이전 농업자 비중은 「군북」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나 1차산업 인구의 흡수 효과는 「군북농공단지」가 「산인농공단지」보다 매우 높았다. 반면 「산인」은 회사원, 공무원 등 비교적 도시지향적 직업을 가졌던 사람들을 흡수하는 효과가 매우 컸다. 이러한 차이는 도시와의 근접도에 의한 것이다.

응답자를 자가, 회사 숙소, 자취, 하숙 등 주거 형태에 따라 분류하면 <표 IV-30>과 같다. 현재 주거는 도시에 가까운 「산인」의 경우 대부분 자기 집이 83.1%로 도시에서 먼 「군북」의 74.4%보다 크게 높았다. 이는 오히려 농촌지역일수록 혼자 떨어져 지내는 것을 반영하며, 도시에 가까운 경우 출퇴근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회사 숙소에서 지내는 비율이 농촌지역에 가까운, 즉 도시에서 많이 떨어진 「군북」의 경우 17.1%나 되었지만 「산인」은 7.6%에 불과했다. 자취와 하숙, 친척집 기거를 포함할 경우 「군북」은 25.6%, 즉 1/4 이상이 자가 외의 곳에서 머물러 「산인」의 16.9%와 대비된다.

따라서 기존의 선형적 인식과 달리 농촌지역일수록 기숙사가 필요하지 않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한편 농촌지역일수록 농촌내 교통수단이 매우 불편하다. 그러므로 농촌지역일수록 고용을 늘리는 방법 중의 하나는 숙소 문제를 해결해 주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점은 이제까지 전혀 지적된 바 없고 또한 잘못 이해되어 왔으며 따라서 이는 농촌 고용정책에서 중요한 측면이지만 간과하였던 것이다.

<표 IV-30> 현재 주거 형태

	군북		산인	
	응답수	비율	응답수	비율
자가	148	74.4	143	83.1
회사 숙소	34	17.1	13	7.6
자취	7	3.5	11	6.4
하숙	6	3.0	0	0.0
친척집	4	2.0	4	2.3
친구집	0	0.0	1	0.6
전 체	199	100.0	172	100.0

응답자를 학력별로 정리하면 <표 IV-31>과 같다. 도시에 가까운 지역일 수록 도시인들이 많고 학력수준이 높는데, 「산인」과 「군북」의 차이를 이를 잘 보여준다. 「군북」의 경우 초졸이 0.6%였으나 「산인」은 5.9%였고, 반면 대졸은 「군북」이 14.1%였으나 「산인」은 38.8%에 달했다. 물론 섬유 업종이 「군북」에 많은 등 업종별 차이도 반영되어야 하겠지만 그럼에도 결국 고학력자들은 도시와 도시 접근성이 높은 곳을 선호하고 있음을 다시 한번 확인해 준다. 따라서 단기적으로는 도시에서 먼 농촌지역일수록 자동화·평균화된 공업 업종을 배치해야 하고 장기적으로는 이러한 지역일수록 기술교육 등 평생교육의 필요성이 더욱 크므로 이를 강화해야 한다.

응답자를 결혼 여부에 따라 분류 정리한 것이 <표 IV-32>이다. <표 IV-28>의 연령 비교에서 보았듯이 도시에 가까운 지역일수록 젊은층이 많고 따라서 「산인」이 미혼자가 많았다. 「산인」의 경우 결혼자와 미혼자의 비율이 49.4% 대 50.6%으로 거의 유사했지만 「군북」은 결혼한 자가 75.1%로 압도적이었다. 나중에 검토하겠지만 「군북」은 ‘1년 이내 안 떠난다’고 응답한 종사자가 63.2%인 데 비해 「산인」은 안 떠난다고 응답한 사람이

<표 IV-31> 학력 비율

	군북		산인	
	응답수	비율	응답수	비율
초졸	19	0.6	1	0.6
중졸	46	23.2	13	7.6
고졸	105	53.0	90	52.9
대재, 대졸	28	14.1	66	38.8
전 체	198	100.0	170	100.0

<표 IV-32> 결혼 여부

	군북		산인	
	응답수	비율	응답수	비율
했다	145	75.1	84	49.4
안한 상태(이혼)	48	24.9	86	50.6
전 체	193	100.0	170	100.0

52.7%로 차이가 나타나는데, 이러한 결혼 유무도 이들이 농촌을 떠나고자 하는 중요한 이유 중의 하나가 된다. 농촌 총각의 문제는 모든 경제 문제와 직결되어 존재함을 알 수 있다.

현지인이란 현지 주소를 함안에 두고 있는 사람이지만 고용이라는 면에 초점을 맞추어 '현지인 고용창출'이라고 할 경우 엄밀한 의미에서 이는 전 주소가 「함안」이었던 사람을 의미한다. 따라서 현재 함안농공단지에 있는 종사자들에게 이곳 농공단지에 근무하기 전 있었던 과거 거주지를 물어보았다. 답변을 정리한 것이 <표 IV-33>이다.

「군북」의 경우 원래 함안군 출신이었던 사람의 비율은 41.5%로 높지만 「산인」의 경우는 18.0%로 낮았으며, 함안군 외 농촌인을 포함한 농촌인구 전체로 해도 20.9%로 낮았다. 「군북」의 경우 함안군 외 농촌인까지 포함하는 과거 거주지 기준 농촌인 고용효과를 보면 52.6%로 이는 「산인」에 비해 2.5배나 높다.

<표 IV-33> 과거 거주지

	군북		산인	
	응답수	비율	응답수	비율
함안군	83	41.5	31	18.0
함안군 외 농촌	22	11.0	5	2.9
마산·창원	45	22.5	124	72.1
경남 외 도시	50	25.0	12	7.0
전 체	200	100.0	172	100.0

<표 IV-34> 현 거주지

	군북		산인	
	응답수	비율	응답수	비율
함안	138	70.4	45	26.8
마산·창원	22	11.2	116	69.0
마산·창원 외 경남시	26	13.3	6	3.6
함안 외 경남군	6	3.1	1	0.6
경남 외 시	4	2.0	0	0.0
경남 외 군	0	0.0	0	0.0
전 체	196	100.0	168	100.0

현재 주소로 계산하는 통상적인 현지인 고용률을 보기 위해 현재 거주지를 정리한 것이 <표 IV-34>이다.

우선 2005년 7월 말 현재 현지인 비율은 6월 말에 비해 모두 높아진 것으로 나타난다. <표 IV-5>에서 보았듯이 2005년 6월 말 현재 현지인 비율은 「군북」이 64.2%, 「산인」이 18.4%였다. 한 달 사이의 이러한 급등은 일단 표본 차이에 따른 것으로 6월 말 조사는 경영자에게 군청 지역경제과에서 물어본 것이고 7월말 조사는 종사자 표본조사에 따른 것이다. 그러나 표본의 차이를 인정한다고 해도 그 차이가 매우 크다는 점에서 7월 들어 현지인 채용비율이 높아졌음을 짐작할 수 있다. 따라서 농촌공업에서 농 한기에 현지인 비율이 높아질 것이라는 일반적 인식과는 다른 현상이 존재함을 알 수 있다. 즉 농촌공업 피고용인구가 농업 주기와는 상관성이 작으며 농가 인구가 아닌 비농가 현지 농촌인 인구 비중이 매우 높음을 보여준다. 실질적으로 2005년 6월 30일 조사에 의하면 현지인 중 현지인 비농가 비율은 「군북」이 47.8%에 달하고 있었고 「산인」은 82.2%까지 이르고 있었다. 그러므로 오히려 7월에 계절적 요인으로 외지인 변화가 많아 나타난 현상으로 현지인이 더 안정적인 데 따른 것이다. 6, 7월 차이가 「산인」에서 더 큰 것도 「산인」이 외지인 비율, 비농가 현지인 비율이 매우 높은 사실과 일치한다.

<표 IV-34>의 현 거주지 응답 비율을 <표 IV-33>의 이전 거주지 비율과 비교해 볼 때 농촌으로 역류하는 인구는 매우 적으리라는 일반적 예상과 달리 「군북」이나 「산인」 모두 농촌으로의 역이주, 역류 효과를 가짐을 알 수 있다. 「군북」은 현재 함안에 70.4%, 경남 군 지역에 73.5%가 살고 있어 이전 주소가 함안이었던 비율 41.5%를 생각하면 함안으로의 이주효과가 매우 컸음을 알 수 있다. 「산인」의 경우도 27.4%가 현재 농촌인, 26.8%가 함안인으로 역시 이주효과가 있었다. 도시와 먼 농촌일수록 오히려 농촌으로의 이주효과가 더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여기에는 교통불편 요인도 작용하였을 것이다.

결국 현지 고용효과 측면에서도, 농촌으로의 역류 이주효과 면에서 보더라도 농공단지 위치가 도시와 먼 경우 효과가 높았고 도시와 가까운 경우 효과가 낮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이러한 사실은 농촌 공업이 거시적으

로도 실업문제 해결, 자원 재배분에 도움이 됨을 보여주며 따라서 미시적으로 순수 농촌을 위해서가 아니라 거시경제적으로 농촌 개발을 위한 동기가 존재함을 확인할 수 있다.

다) 노동공급 선택과 조건

현재 농촌 농공단지에 있는 이유를 물어본 결과가 <표 IV-35>이다. 왜 농촌 농공단지에 근무하는가라는 질문에 대해 ‘다른 곳에 갈 수 없어서’가 「군북」이 32.0%, 「산인」이 32.7%로 양 지역의 차이가 별로 없다. ‘다른 곳에 취업하지 못한 사람은 결국 일하고자 하는 의욕이 없는 사람’이므로 농촌공업에도 안 올 것이다’는 기업경영자들의 주장과 달리 농촌공업은 다른 곳에 취업할 수 없는 사람들을 취업시키는 효과가 매우 크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농공단지에 근무하고 있는 이유 중 ‘회사가 좋거나 월급 등 다른 여러 가지를 고려하면 다른 직장보다 나아서’의 회사 요인은 「산북」이 19.3%로, 「산인」의 31.4%에 비해 매우 낮다. 반면 「군북」의 경우 ‘고향이어서’가 20.3%로 매우 높았다. 도시에 가까운 「산인」의 경우 ‘고향이어서’의 응답은 5.0%에 불과했다. 이는 물론 현지인 비율보다 매우 낮은 수치이다. ‘고향이어서’와 ‘부모·가족이 여기에 있어서’라고 답한 응답자를 합하면 「군북」이 32.5%인 데 비해 「산인」은 18.2%에 불과하다. 나아가 「군북」의 경

<표 IV-35> 농촌 농공단지에 있는 이유

	군북		산인	
	응답수	비율	응답수	비율
고향이어서	40	20.3	8	5.0
부모님이나 가족이 있어서	24	12.2	21	13.2
여기 일이 좋아서	30	15.2	18	11.3
친구들이 있어	2	1.0	10	6.3
회사가 좋아	14	7.1	29	18.2
월급 등 여러가지를 고려하면 다른 직장보다 나아서	24	12.2	21	13.2
다른 곳에 갈 수 없어서	63	32.0	52	32.7
전 체	197	100.0	159	100.0

우 ‘부모님이나 가족 때문에’, ‘고향이어서’, ‘일이 좋아서’, ‘친구’ 등 비경제적 요인이 48.7%로 월급·회사 등의 경제적 이유 19.2%에 비해 매우 높다. 「산인」은 이 비율이 35.8%이다.

결국 도시 근교의 경우 훨씬 더 종사자들이 회사 요인 등 2차적 관계, 경제적 이익을 고려하고 움직이는 데 반해 농촌지역일수록 고향, 부모가족 등 1차적 관계 그리고 비경제적 요소가 더 중시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도시에 먼 지역일수록 가족, 고향문제 등을 더 중시하는 비경제적 문제에, 도시에 가까운 지역일수록 월급, 복리후생 등 대우 문제에 높은 가중치를 줌으로써 현재 노동공급 병목시장으로서의 농촌시장에 노동공급을 늘리도록 하여야 한다.

한편 특징으로 발견되는 것은 「군북」, 「산인」 모두에서 ‘부모님이나 가족 때문에 농촌 농공단지에 있다’는 응답과 ‘월급 등 다른 여러 가지를 고려하면 다른 직장보다 나아서’의 대답 비중이 동일하다는 것이다. 이미 농촌 농공단지에서도 지역과 상관없이 종사자 전체로 보면 직장 조건에 대한 중요도가 가족에 대한 중요도와 같아지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농촌지역에서도 직장 문제로 가족과 떨어져 지내는 소위 ‘기러기 가족’의 문제가 일어나고 있고 또 일어날 수 있음을 지역과 상관없이 응답자들은 보여주고 있다.

1년 이내에 농공단지를 떠날 것인가라는 질문에 대해 양 지역의 종사자들은 <표 IV-36>과 같이 응답했다.

두 지역 모두 안 떠날 사람이 떠날 사람보다 많았다. 「군북」은 물론이고 도시와 가까운 「산인」 지역 사람들도 농촌공업 부분에 상당 부분 머물러 있을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었다. 그러나 「군북」의 경우 1년 이내에 떠날

<표 IV-36> 1년 이내 농공단지를 떠날 사람

	군북		산인	
	응답수	비율	응답수	비율
떠난다	70	36.8	79	47.3
안 떠난다	120	63.2	88	52.7
전 체	190	100.0	167	100.0

〈표 IV-37〉 1년 이내 떠나는 사람 : 성별 구별

	남자				여자			
	군북		산인		군북		산인	
	응답수	비율	응답수	비율	응답수	비율	응답수	비율
떠나겠다	49	38.6	63	50.0	20	32.3	16	40.0
안 떠나겠다	78	61.4	63	50.0	42	67.7	24	60.0
전 체	127	100.0	126	100.0	62	100.0	40	100.0

사람은 36.8%로 「산인」의 47.3%보다 많이 적었다. 「산인」은 1년 이내에 떠날 사람보다 안 떠날 사람이 조금 더 많았다. 즉 도시에서 먼 지역일수록 현지인 비율이 높고 또 종사자 이동성도 안정적임을 보여준다. 기업들이 종사자들의 높은 이동성으로 비용과 효율에서 매우 곤혹을 치르고 있다는 점을 생각하면 도시와 가까운 공장보다 오히려 도시에서 먼 농촌지역이 훨씬 더 기업에도 이익되는 효과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번에는 성별로 구분하여 물어보았다. 남자와 여자 각각에게 1년 이내에 농공단지를 떠나겠느냐고 물어보았고 그 응답이 <표 IV-37>이다. 응답 결과를 보면 두 지역 모두 남자들이 떠나겠다는 비율이 높았다. 지역적으로는 「산인」의 경우 떠나겠다는 응답자가 「군북」보다 높았는데 남녀별로 보아도 차이 없이 모두 「산인」이 높았다. 여자의 경우 「군북」과 「산인」은 7.7%포인트 정도의 차이가 있는 데 비해 남자는 「산인」이 11.4%포인트 더 높아, 「산인」 여자보다 「산인」 남자들의 떠나겠다는 의지가 높은 것, 그리고 남자가 「산인」이 많은 것이 「산인」의 높은 이동률에 영향을 끼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지역 내에서 떠나겠다는 사람들의 남녀 차이를 보아도 「산인」이 10%포인트 차로 남자가 높다. 「군북」은 6.3%포인트 정도 더 높았다.

양 지역 모두 남자들이 떠나겠다는 비율이 더 높은 것은 농촌공업 지역에서 상대적으로 남성들의 연령이 낮기 때문이다. 남성과 여성의 연령별 조사 내용을 정리한 것이 <표 IV-38>이다. 여기에서 20~30대가 차지하는 비율은 남성의 경우 「군북」에서는 43.2%, 「산인」은 80.9%였는데 여성은 「군북」이 36.2%, 「산인」이 53.8%로 남성이 여성에 비해 연령층이 매우 낮음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산인」 남성들이 떠나겠다는 의지가 더욱 적

<표 IV-38> 1년 이내 떠나는 사람 : 성별·연령별 구성

	남성				여성			
	군북		산인		군북		산인	
	응답수	비율	응답수	비율	응답수	비율	응답수	비율
10대	0	0.0	0	0.0	0	0.0	0	0.0
20대	21	16.0	56	42.7	7	10.1	16	41.0
30대	37	28.2	50	38.2	18	26.1	5	12.8
40대	35	26.7	23	17.6	20	29.0	13	33.3
50대	33	25.2	2	1.5	16	23.2	5	12.8
60대	5	3.8	0	0.0	8	11.6	0	0.0
전 체	131	100.0	131	100.0	69	100.0	39	100.0

극적이었던 것은 「산인」 남성의 경우 대부분 외지인이었기 때문이다. 「군북」에서 남성의 외지인 비율은 42.4%였지만 「산인」은 남성 중 외지인 비율이 81.8%에 이르렀다. 같은 여성들 내에서도 「산인」이 떠나겠다는 비율이 「군북」의 여성보다 많은 것은 역시 <표 IV-38>에서 보듯이 여성 종사자의 연령이 「군북」의 경우가 더 높기 때문이다. 「군북」은 여자 69명 중 40대가 20명, 50대가 16명, 60대가 8명으로 40대 이상이 63.8%인 반면 「산인」은 40명 중 40대가 13명, 50대가 5명, 60대가 없어 40대 이상이 45.0%를 차지하고 있다.

라) 노동이동과 공급자 전략

1년 이내에 떠나겠다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왜 떠나려고 하는지를 물었다. 그 응답이 <표 IV-39>이다. 농촌 농공단지를 떠나겠다는 사람 중 「군북」의 29.5%는 월급이 적어서라고 대답했는데 이는 「산인」의 31.0%와 매우 유사하다. 종사자들에게 부정적 요인으로 가장 많이 지적되는 것은 지역과 관계없는 낮은 임금이다. 이는 인터뷰에서도 확인된다. 그러나 기존에 통상적으로 일컬어지고 선형적으로 인식되고 있는 바와 같이 ‘그냥 농촌이기 때문에 싫어서 떠난다’는 사람은 「군북」이 1명, 「산인」이 2명이어서 사실상 거의 없는 것과 마찬가지다. 또한 농촌 지역인 「군북」이 ‘농촌이어서 떠난다’는 비율이 더 낮았다. 도시에서 멀어질수록 종사자들에게서 농촌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없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조사 결과는 경영

자나 전문가들의 얘기와 달리 경제적으로 적정한 보장이 이루어지고 경제 외적인 면에서도 만족도를 높일 수 있다면 농촌에서도 노동공급이 개선될 수 있음을 뜻한다. ‘이미 농촌 이탈은 무조건적인 것이고 따라서 대책이 있을 수 없다’는 그간의 주장들이 과장된, 무책임한 것임을 보여주며, 원인은 반드시 존재하고 있고 그 원인을 찾으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보여준다.

‘장래 희망이 없어 떠나겠다’는 사람이 양 지역 모두 두 번째로 많았다. 「산인」이 20.7%로 「군북」 14.8%보다 높았는데 그 이유는 도시와 가깝고 도시 외지인이 많아 종사자들이 도시에서 보다 큰 기회가 있으리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어쨌든 개인의 장래성이 농촌공업단지 이탈의 주요 원인이라는 점은 분명하며 이러한 점에서 장래 전문기술자로 성장하고 또 전문기술을 가진 사람으로 이직할 수 있는 전문기술교육의 필요성이 농촌

〈표 IV-39〉 1년 이내 떠나는 이유(떠나는 사람 중)

	군북		산인	
	응답수	비율	응답수	비율
그냥 농촌이어서	1	1.1	2	2.3
부모님이나 가족이 있는 곳으로 가려고	6	6.8	6	6.9
일이 힘들어서	12	13.6	7	8.0
친구 등 인간관계가 없어서	3	3.4	3	3.4
회사가 싫어서	5	5.7	3	3.4
월급이 적어서	26	29.5	27	31.0
숙소문제로	1	1.1	2	2.3
장래 희망이 없어서	13	14.8	18	20.7
자식 교육 문제	5	5.7	0	0.0
자신이 다닐 교육기관(고교, 대 학)이 없어	7	8.0	6	6.9
출퇴근 교통	4	4.5	4	4.6
기술이 부족해서	1	1.1	4	4.6
가족들이 싫어해서	0	0.0	0	0.0
근무시간이 길어서	3	3.4	3	3.4
극장, 백화점 등 문화환경이 부 족해서	1	1.1	2	2.3
전 체	88	100.0	87	100.0

지역의 경우 모두 존재하고 있음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다.

‘일이 힘들어서 떠나겠다’는 사람이 양 지역 모두 응답비율 3위를 차지하였지만 「군북」의 경우 13.6%로 「산인」의 8.0%에 비해 매우 높았다. 역시 「군북」의 입지상 도시와 멀리 떨어져 있어 교육의 기회가 적었고 또 현재에도 지역 입지의 업종과 지역 업종의 자동화 진전에 따라 기술교육이 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나머지 응답비율은 매우 적은 비율로 나타났지만 ‘내 자신이 다닐 교육기관이 적어서’가 「군북」이 8.0%로 「산인」의 6.9%와 유사한 비율을 보이면서 양 지역 모두 공동 4위의 떠나고자 하는 이유를 차지했다. 결국 장래 희망과 관련하여 「군북」이 22.7%, 「산인」은 27.5%가 자신의 상향이동을 위한 교육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음을 보여준다.

역으로 이번에는 안 떠나는 사람들에게 왜 머물려고 하는지 그 이유를 물어본 결과 <표 IV-40>의 응답을 얻었다. 「군북」, 「산인」 지역의 종사자 모두 이곳을 떠나지 않겠다고 한 사람들은 떠난다고 답한 사람들만큼 명확하고 차별적인 이유를 제시하지 못했다. 즉 함안 농공단지에서 떠날 사람들은 떠나고 싶은 이유가 명확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남아 있는 이유는 떠나겠다는 이유에 비해 매우 뚜렷한 우세적인 이유가 존재하지 않았다.

그런 중에 그래도 남아 있겠다고 생각하는 가장 큰 이유는 「군북」의 경우 ‘고향이어서’가 21.3%로 가장 높고, 「산인」은 이 비율이 현지인 비율보다도 월등히 낮은 8.4%에 불과하다. 단순히 「산인」이 「군북」보다 현지인 비율이 낮아서 이러한 결과가 나온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 분명히 도시와 가까운 「산인」이 도시와의 근접성 차이로 「군북」과는 차별적인 결과를 보여주는 것이다. 한편 ‘여기 일이 좋아서’와 ‘갈 데가 없어서’가 「군북」이 각각 19.7%의 이유를 차지하고 있고 「산인」에서는 각각 18.1%를 차지해 매우 유사하면서도 양 지역에서 모두 이 응답이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농촌으로 들어갈수록 고향 농촌에 머물러 있고자 하는 사람들이 존재하고 있으며 또한 자신들의 일이 좋거나 혹은 갈 데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상당수 농촌공업에 남겠다고 하는 것은 농촌 농공단지 모두에서 확인된다. 그러므로 이들을 위해 농촌 농공단지는 주요한 역할을 할 것을 예상할 수 있고 또한 현재 공급부족이라고 하지만 항구적

〈표 IV-40〉 안 떠나는 이유(안 떠나는 사람 중)

	군북		산인	
	응답수	비율	응답수	비율
고향이어서	26	21.3	7	8.4
부모님, 가족이 있어서	17	13.9	11	13.3
여기 일이 좋아서	24	19.7	15	18.1
친구들이 있어서	0	0.0	3	3.6
회사가 좋아서	2	1.6	15	18.1
월급 등 여러가지를 고려하면 다른 직장보다 나아서	20	16.4	8	9.6
숙소가 해결되어서	4	3.3	3	3.6
기술을 배우거나 장래 창업 등 장래 희망이 있어서	5	4.1	6	7.2
갈 데가 없어서	24	19.7	15	18.1
전 체	122	100.0	83	100.0

으로 경제활동 기회의 수요가 계속 존재할 것을 예상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경제활동 기회의 공급을 발전시킬 필요성과 당위성이 존재한다. 나아가 ‘갈 곳이 없어 잔류하겠다’는 사람들이 20%로 기술이 없어 농촌을 떠나지 못하는 이들 사람들에게는 마지막 피난처 역할을 농촌 공업단지라고 하고 있으며, ‘여기 일이 좋아서’를 합한 각 지역의 39.4%(「군북」), 36.2%(「산인」)의 사람들에게 농촌 공장은 농촌 잔류 이유가 됨을 알 수 있다.

한편 ‘월급이 적어 떠나겠다’는 경제적 동기가 이주 희망자의 경우 이주 원인 1위였지만, 그 반면 도시와 멀어질수록 1차적 관계가 주요한 정착 동기로 작용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예컨대 「군북」은 도시와 인접한 「산인」과 달리 비교적 도시에서 떨어져 있는 농촌지역인데 그곳을 떠나지 않겠다는 사람의 머물러 있고 싶은 이유는 ‘고향이어서’가 21.3%에, ‘부모, 가족이 있어서’가 13.9%로 이 둘을 합하면, 이 1차적 관계가 농촌 농공단지 잔류 이유의 35.2%를 차지한다. 여기에 선호적인 일거리만 공급해 줄 수 있으면 그 비율은 54.9%로 높아진다. 더구나 이들 농촌지역 사람들은 ‘월급 등 여러 가지를 고려하면 경제적으로도 이 농촌 농공단지에 머무는 것이 낫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16.4%나 되었다. 이는 「산인」과 뚜렷한 인식의 차이를 보여준다.

「산인」의 경우 그래도 떠나지 않겠다는 가장 큰 이유는 앞서 지적한 ‘갈

데가 없어서'와 '일이 좋아서'와 함께 '회사가 좋아서'가 모두 각각 18.1%로 공동 1위였다. 결국 도시 근교이든 아니든 향후 고실업 사회로 가면서 농공단지는 거시경제적으로도 실업자 흡수에 일정한 역할을 할 것을 예상할 수 있고 특히 취업이 어려운 기술적 실업자나 구조적 실업자의 취업에 도움이 될 것이므로 거시적 역할도 중요함을 알 수 있다. 한편 「산인」도 '월급이 적어 떠나겠다'는 사람이 이주 희망 원인 1위였지만, 그 반면 월급이 적어도 회사가 좋거나 일이 좋은 경우 남겠다는 비율이 높음을 알 수 있다. 즉 「산인」은 「군북」만큼 1차적 관계를 농촌에 남겠다는 이유로 많이 선택하지 않았지만, 그래도 농촌에 남겠다는 사람은 월급 등의 경제적 요인보다 3.8배나 많은 응답자가 회사, 일 그 자체로 남아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남아 있는 이유로 '부모님이나 가족이 있어서'가 13.3%로 다음 순위로 높고 '월급 등 여러 가지를 고려하면 다른 직장보다 나아서'라는 이유는 불과 9.6%에 불과한 데서도 알 수 있다. 즉 외지인 비율이 높은 「산인」에서도 농촌공업에 머물겠다고 한 사람만을 보면 가족을 월급 등 경제적 동기보다 중요하게 생각했다. 이는 <표 IV-35>에서 보았듯이 「산인」 전체 종사자들은 이를 동등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과는 좋은 대조가 된다.

그러나 머물겠다고 한 사람들도 「군북」과 비교하여 「산인」이 더 회사 요인 등 2차적 관계를 1차적 관계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동일하다. 이는 머물겠다고 답한 사람 중에서도 '고향이어서'와 '부모·가족이 여기에 있어서' 머물겠다고 응답자와 '회사가 좋아서'와 '월급 등 조건이 좋아서' 머물겠다고 응답자 비율이 「군북」은 35.2% 대 18.0%인 데 비해 「산인」은 21.7% 대 27.7%로 나타난 것에서 알 수 있다.

떠날 의사가 있는 사람과 머무를 의사가 있는 사람의 특성과 차이를 보다 잘 파악하기 위해 몇 가지 제약조건을 주었다.

우선 첫 번째 제약으로 가족이 함안군에 있는 사람만을 추출하여 떠날 의사를 물어보았다. 그 응답 결과는 <표 IV-41>과 같다. 가족이 함안군에 있는 경우에는 「군북」이나 「산인」이나 1년 이내에 안 떠나겠다는 사람이 각각 63.0%, 62.1%로 「군북」의 경우 전체 종사자 응답비율과 차이가 없었고, 「산인」은 전체 종사자의 안 떠난다는 응답비율 52.7%보다 대폭 높아졌다. 그 결과 전체 종사자를 대상으로 조사하면 「군북」과 「산인」

〈표 IV-41〉 가족이 함안군에 있는 사람 중 떠날 의사

	군북		산인	
	응답수	비율	응답수	비율
떠나겠다	34	37.0	11	37.9
안 떠나겠다	58	63.0	18	62.1
전 체	92	100.0	29	100.0

이 떠나겠다는 의지에서 차이가 있었으나 가족이 함안군에 있는 사람만을 조사하면 양 지역의 위치에 상관없이 안 떠나겠다는 응답비율이 거의 같아지게 된다. 따라서 현지인 비율이 높고 도시와의 접근성이 떨어지는 경우에는 별로 큰 영향이 없지만 도시와 근접하고 있는 경우 가족 주거가 농촌에의 안정적인 정착 혹은 이동에 큰 변수가 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산인농공단지」의 경영자들이 노동공급이 부족하고 종사자의 잦은 이동으로 도시에서 점점 더 많은 사람을 데려오는데 이는 노동공급 부족 문제를 개선시키지 못하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도시와 가까울수록 가족이 함안에 있는 사람을 뽑는 것이 결국 노동공급을 안정화시키는 방법이 된다.

두 번째 제약조건으로 학력과 관계를 알아보았다. 우선 1년 이내에 농촌 농공단지를 떠나겠다는 사람들의 학력을 물어본 결과는 <표 IV-42>와 같다. 1년 이내에 떠나겠다고 응답한 사람의 학력을 보면 고학력자들이 많았다. 특히 도시와 가까운 「산인」의 경우 고학력자의 비율이 매우 높았다. 「군북」의 경우 1년 이내에 떠나겠다고 답한 사람 중 고졸이 47.8%, 대재 혹은 대졸이 23.2%였고 「산인」의 경우 고졸이 50.6%, 대재 혹은 대졸이 42.9%였다.

〈표 IV-42〉 1년 이내 떠나겠다고 하는 사람의 학력

학력	군북		산인	
	응답수	비율	응답수	비율
초졸	8	11.6	0	0.0
중졸 이하	12	17.4	5	6.5
고졸	33	47.8	39	50.6
대재, 대졸	16	23.2	33	42.9
전 체	69	100.0	77	100.0

<표 IV-43> 학력별 떠나겠다는 의지 여부

	1년 이내 떠나겠다						안 떠나겠다					
	군북		산인		전체		군북		산인		전체	
	응답수	비율	응답수	비율	응답수	비율	응답수	비율	응답수	비율	응답수	비율
초졸	8	53.3	0	0.0	8	50.0	7	46.7	1	100.0	8	50.0
중졸	12	26.7	5	41.7	17	29.8	33	73.3	7	58.3	40	70.2
중졸이하	20	33.3	5	38.5	25	34.2	40	66.7	8	61.5	48	65.8
고졸	33	33.0	39	44.3	72	38.3	67	67.0	49	55.7	116	61.7
대재,대졸	16	57.1	33	51.6	49	53.3	12	42.9	31	48.4	43	46.7
전체	69	36.7	77	46.7	146	41.4	119	63.3	88	53.3	207	58.6

주: 중졸 이하는 초졸과 중졸을 합한 것으로 중복되는 항목임.

학력이 미친 영향을 보다 정확히 확인하기 위해 학력별로 농공단지를 떠나겠는가 안 떠나겠는가를 물어보았는데 그 결과는 <표 IV-43>과 같다. 「산인」의 경우 초등학교 졸업이 응답자 중 1명뿐이었으므로 저학력을 중졸이하로 다시 묶어 보았고, 각각 지역별·학력별 응답을 조사한 후 이를 통합해 전체로서도 조사해 보았다.

중졸 이하의 경우 안 떠나겠다고 「군북」 66.7%, 「산인」 61.5%로 비슷한 비율로 높다. 고졸의 경우 「군북」은 안 떠나겠다고 67.0%이지만 「산인」의 경우 안떠나겠다고 55.7%로 차이가 있다. 고졸 이하에서는 「군북」이 노동력 이동에서 보다 안정적임을 알 수 있다. 결국 「군북」이 전체적으로 1년 이내에 안 떠나겠다고 하는 응답비율이 「산인」에 비해 높은 것은 학력수준이 낮은 것도 한 변수가 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앞에서 조사한 항목들과 결합하면 「군북」 종사자가 1년 이내에 안 떠나겠다고 하는 비율이 높은 것은 현지인이 많고 종사자가 더 고령이며 학력이 낮기 때문이다. 물론 이는 이미 젊고 학력이 높은 사람들이 도시 혹은 도시근교로 이주한 결과에 기인한다.

또 다른 특이한 것이 초졸자와 대졸자의 응답이다. 초졸자의 경우 「산인」은 1명뿐이어서 의미가 없지만 「군북」에서 15명 중 1년 이내에 농공단지를 떠나겠다고 사람이 8명, 안 떠나겠다고 사람이 7명으로 오히려 떠나겠다고 사람이 많았다. 이는 초졸자들이 오히려 농공단지에 적응하지 못하고 있는 데 기인한다. 즉 농공단지가 높은 기술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지만 최근 노동집약적 업종에서도 자동화가 진행되면서 외국어 문자 해

독의 최소 능력 등이 필요하자 스스로 농공단지를 떠나겠다는 의지이다. 응답한 「군북」의 초등학교 졸업자를 연령별로 보면 60대가 3명이고 나머지 15명은 50대 이하였는데 현재 노동공급 부족으로 이들이 중요한 노동력 보완층이고 또 이들 스스로가 공업 부문에 취업한 것은 다른 산업 부문보다 공업에 선호도를 가지고 있음을 의미하므로 인력 활용이나 인적자원 배분 효율성 측면에서도 초등학교 졸업자에 대한 보완 혹은 평생기술 교육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대졸자의 응답비율 역시 중요한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 농촌 지역인 「군북」에서 대졸자 중 1년 이내에 떠나겠다는 비율이 「산인」에 비해 더 높아 고졸 이하 전 학력수준에서 1년 이내에 떠나겠다는 응답비율이 「산인」이 더 높은 것과는 대조가 된다. 그 결과 「군북」은 중졸 이하와 고졸 모두 안 떠나겠다는 응답이 많았으나 대졸의 경우 떠나겠다는 응답자가 더 많았다. 이는 도시에서 먼 농촌지역일수록 대졸자가 적을 뿐만 아니라 그나마 이들 대졸자들이 상대적으로 도시로 이동하려는 욕구가 매우 강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전체로 보아도 중졸 이하 학력을 가진 사람 중 떠나겠다는 사람의 비율은 34.2%, 고졸의 경우 38.3%로 안 떠나겠다는 사람이 더 많으나 대재 혹은 대졸의 경우는 떠나겠다는 사람이 53.3%로 1년 이내에 떠나겠다는 사람이 더 많다.

고학력자의 농촌 지역 이탈은 모든 지역에서 심각하며 이는 도시와 먼 농촌지역일수록 더욱 그러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인적자본의 문제가 매우 심각한 것이 오늘날 지역사회의 문제이고 지역균형 발전이란 물적자본(physical capital)이 아니라 인적자본(human capital)의 문제가 근본적임을 생각할 때(박영구, 2002), 이미 전국적으로는 고학력자가 과잉공급인 상황에서 농촌지역일수록 고학력 인적자본에 대한 유인책이 필요하다.

중사자들에게 “귀하가 농공단지에 계속 머물도록 정부가 도와준다면 무엇을 도와주면 좋겠습니까”라고 물어보았다. 그 응답 결과는 <표 IV-44>와 같다.

정부가 무엇을 도와주면 농공단지에 계속 남겠는가에 대한 응답에서 「군북」, 「산인」 모두 임금인상을 1위로 꼽았는데 「군북」은 66.5%가, 「산인」은 56.6%가 이렇게 대답했다. <표 IV-39>에서 보았듯이 양 지역 모두 떠나

〈표 IV-44〉 정부가 무엇을 도와주면 농공단지에 남겠는가

	군북		산인	
	응답수	비율	응답수	비율
임금인상	143	66.5	112	56.6
숙소	2	0.9	5	2.5
교통	19	8.8	28	14.1
교육시설	19	8.8	8	4.0
백화점 등	5	2.3	5	2.5
도서관	1	0.5	3	1.5
체육시설	11	5.1	16	8.1
기술교육	15	7.0	21	10.6
전 체	215	100.0	198	100.0

는 이유 1위는 임금이었다. 따라서 떠나려는 사람은 물론, 머물러 있겠다고 한 사람도 일단 정책에 대한 기대는 임금이 가장 크다는 것이 계속 확인되었고 정부가 이에 대해 도와주기를 기대했다.

비록 비율은 낮았지만 그 다음 많은 응답은 「군북」에서 교육과 교통시설, 그리고 이어 기술교육이었는데 특히 교육시설을 정부가 개선하면 농촌 농공단지에 남겠다는 응답률이 「산인」에 비해 특징적으로 높은 것은 도시 인접의 「산인」보다 교육 혜택에서 더 소외되어 있는 것에 대한 반응이다. 「군북」의 경우 체육시설 역시 숙소나 백화점 등 문화시설 그리고 도서관보다 높게 나타났다. 한편 「산인」은 비록 비율은 낮았지만 두 번째로 많은 응답이 교통의 14.1%였고 3위 응답이 기술교육의 10.6%, 그리고 그 다음이 체육시설로 8.1%였다. 「산인」은 도시에서 통근하는 데 어려움이 있고, 「군북」은 농촌 내의 도로가 낙후되어 역시 통근에 어려움이 있다고 함으로써 모두 교통시설의 문제를 중요하게 지적했다. 또한 기술이 점점 발달하면서 기술교육에 대한 수요가 농촌에 전반적으로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양 지역에서 모두 농공단지 종사자들이 백화점 등 문화·상업시설 보다는 오히려 체육시설을 선호하고 있는데 이는 기존의 선형적 지식과 달리 최근 건강에 대한 관심이 최근 높아지고 있는 것과 연관성이 있다. 숙소에 대한 응답률이 낮았던 이유를 다시 확인한 결과 종사자들 입장에서는 이것이 회사가 할 일이지, 정부가 할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2) 현지인(함안군 거주자) 분석

가) 현지인 종사자 환경

응답자 중 현재 주소를 함안군에 둔 현지인만 추출해 분석해 보자. 우선 현지인들의 주거 형태에 대한 조사 응답 결과는 <표 IV-45>와 같다.

대표이사들과의 인터뷰에서 대표이사들은 대부분 현지 거주자는 자기 집에서 다닐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현지 거주자만을 조사한 결과 「군북」은 21.5%가, 「산인」은 20.0%가 자가에서 다니지 않고 있었다. 현지인 개념을 확대하여 현지 거주지 주소를 함안만이 아니라 함안 외의 군 지역으로까지 확대하면 「군북」의 경우 22.7%가 자가 외에서 주거하고 있었다.²⁷⁾ 즉 농공단지에 있는 현지인 종사자들은 지역과 상관없이 1/5 이상이 기숙사가 필요한 것을 알 수 있다. 현지 거주자의 경우 현재 자가 주거는 「산인」이 「군북」보다 약간 높았으나 그 차이는 크지 않았다. 앞서 확인하였듯이 기숙사의 필요성이 농촌지역으로 갈수록 더 커지고 있는 것은 농촌으로 갈수록 사회간접자본의 부재, 교통시설의 불편이 더욱 심각한 것에 기인한다.

한편 현지 거주자만을 볼 경우 「군북」의 기숙사 주거비율은 전체 종사자의 기숙사 거주 비율 28.3%보다 아주 낮은데 「군북」만을 가지고 보면

<표 IV-45> 주거 형태

	군북		산인	
	응답수	비율	응답수	비율
자가	106	78.5	36	80.0
친척집	4	3.0	1	2.2
친구집	0	0.0	0	0.0
하숙	2	1.5	0	0.0
자취	6	4.4	1	2.2
회사숙소	17	12.6	7	15.6
전 체	135	100.0	45	100.0

27) 「산인」은 19.6%였는데 「군북」이나 「산인」 모두 현지인의 개념을 함안만이 아니라 경상남도의 군 지역 모두를 포함하여 보아도 전체적으로 각 항목의 응답비율과 내용에서 유의적인 차이는 없었다.

외지인이 주로 기숙사를 쓰기 때문이라고 쉽게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산인」은 현지인 중 기숙사 주거비율이 15.5%로 이는 전체 「산인」 종사자의 회사 숙소 거주비율 7.6%보다 매우 높다. 이러한 비교는 「군북」의 현지거주자를 위한 회사 숙소가 부족하다는 것을 보여주는데, 「군북」 지역 대표이사들과의 인터뷰에서 확인되었듯이 「군북」 대표이사들이 「군북」은 농촌지역이고 그래서 회사 숙소가 필요하지 않을 것이라는 잘못된 판단에서 연유한 것이다. 기존의 선형적 인식과 달리 농촌지역일수록, 현지 거주자일수록 기숙사가 필요하지 않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농촌지역으로 들어갈수록 농촌내 교통수단이 발달되어 있지 못하며 또 자가에서 출퇴근하기 위한 여러 조건이 갖추어져 있지 않다. 그러므로 농촌지역에서 고용을 늘리고 특히 안정적인 현지인 고용을 늘리는 방법 중의 하나는 숙소 문제를 해결해 주어야 한다. 이 점은 매우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현지 기업경영자들에게서도, 공무원, 연구자들에게서도 이제까지 잘못 이해되고 있는 부분이다.

나) 현지인 노동공급 선택과 조건

현지인들에게 농공단지에서 근무하는 이유를 물어보았고 그 이유는 <표 IV-46>과 같았다.

함안군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만 따로 물어본 결과 현재 농공단지에 근

<표 IV-46> 농공단지에 있는 이유(현지인)

	군북		산인	
	응답수	비율	응답수	비율
고향이어서	35	25.5	4	9.1
부모님이나 가족이 있어서	21	15.3	8	18.2
여기 일이 좋아서	16	11.7	2	4.5
친구들이 있어	2	1.5	2	4.5
회사가 좋아	8	5.8	6	13.6
월급 등 여러가지를 고려하면	15	10.9	10	22.7
다른 직장보다 나아서	40	29.2	12	27.3
다른 곳에 갈 수 없어서				
전 체	137	100.0	44	100.0

무하는 이유는 ‘다른 곳에 갈 수 없어서’가 「군북」이나 「산인」이나 가장 높았지만 그 비율은 차이가 거의 없었다. 다만 「군북」의 경우 ‘다른 곳에 갈 수 없어서’가 29.2%로 이는 외지인을 포함한 전체 응답자 비율 32.0%보다 적고 「산인」의 경우도 이 이유가 응답자의 27.3%로 전체 종사자 응답자의 응답비율 32.7%보다 적다. 결국 도시 근교이든 아니든 간에, 현지인이든 아니든 간에 농촌공업은 취업할 수 없는 사람들을 취업시키는 효과가 크고 미미하나마 현지인보다 외지인에게 그 효과가 더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회사가 좋아서’라거나 ‘월급 등 다른 여러 가지를 고려하면 다른 직장보다 나아서’의 회사 요인이 「군북」의 현지인 중 응답비율은 16.8%로 역시 외지인을 포함한 전체 종사자 응답비율 19.3%보다 낮지만 큰 차이는 없었다. 그런데 이는 「산인」 현지인의 같은 이유 응답비율 36.4%의 53%에 불과하다. 도시에 가까운 지역일수록 현지인들도 회사 요인을 보다 많이 고려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데 이는 물론 도시화의 영향 때문이다. 반면 현지인인 경우 「군북」에서 농촌 농공단지에 들어온 이유 중 두 번째로 높았던 이유인 ‘고향이어서’가 25.5%로, 외지인을 포함한 전체 응답비율 20.3%보다 높고 또 도시에 가까운 「산인」의 9.1%에 비해 2.2배로 매우 높다. 「산인」의 경우 ‘월급 등 여러 가지를 고려하여 다른 직장보다 나아서’가 22.7%로 두 번째로 높았고, 외지인을 포함한 전체 응답자의 이 이유 응답자 비율 13.2%보다 크게 높았다. 「군북」의 경우 현지인 중 ‘월급 등 여러 가지를 고려하면 다른 곳보다 나아서’라는 응답자는 10.9%로 「산인」의 22.7%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농촌지역일수록 1차적 관계를 중시하는 것은 앞에서 확인하였는데 현지인으로 좁혀 볼 경우 「군북」은 1차적 관계를 더욱 중시하지만 「산인」은 월급 등 2차적 경제적 요인을 중시하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사실은 1차적 관계를 보다 정확히 반영하는 ‘고향이어서’와 ‘부모님이나 가족이 여기에 있어서’를 합하여 보면 현지인 중 「군북」은 40.8%, 「산인」은 27.3%가 이렇게 대답하고 있어, 외지인을 포함한 전체 종사자의 이 이유 응답비율 32.5%, 18.2%를 크게 추월하고 있다. 또 2차적 관계의 다른 변수인 ‘회사가 좋아서’라고 답한 응답자는 「산인」에서 현지인의 경우 13.6%로, 이는 전체 종사자 응답자의 이 항목 응답비율

18.2%보다 낮다. 따라서 농촌지역일수록, 특히 현지인일수록 1차적 관계를 더욱 중시하는 것은 분명히 확인된다. 실질적으로 ‘부모님이나 가족이 여기에 있어서’ 이 농공단지에 있다는 응답이 「군북」과 「산인」 모두 세 번째로 높은 이유로 뽑혔다. 전체 종사자를 대상으로 했을 때는 「군북」의 경우 응답은 ‘일이 좋아서’라는 응답비율보다 낮았고 ‘월급 등 여러 가지를 고려하여 다른 직장보다 나아서’라는 응답비율과 같았다. 「산인」도 유사해 결국 현지인일수록 1차적 관계가 더욱 중요해짐을 알 수 있다.

특징적인 것은 ‘부모님이나 가족이 여기에 있어서’라는 응답비율이 「군북」이 15.3%였고 「산인」은 이보다 높은 18.2%라는 점이다. 「산인」이 보다 도시와 생활권이 가까워지면서 현지인들에게서도 핵가족화에 따라 고향 등 지역적 선호보다 가족 중심의 사고방식이 발전하는 경향을 볼 수 있다. 현지인 개념을 함안군만이 아니라 경상남도 군 지역에 주소를 둔 사람 전체로 확대해 보아도 이러한 경향은 유사하다.²⁸⁾

1년 이내에 농공단지를 떠날 의사에 대해 현지인들에게 물어보았다. 그 대답이 <표 IV-47>이다. 현지인으로 하면 당연히 두 지역 모두 안 떠날 사람이 떠날 사람보다 많다. 특히 전체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경우 안 떠난다가 52.7%로 떠난다와 매우 유사한 비율로 나왔던 「산인」은 현지인의 경우 농촌공업 부분에 더 머물러 있겠다는 사람이 59.1%로 높았다. 역시 도시와 근접한 지역에서는 주소를 옮기고 정착한 현지 거주자일수록 더욱 이동안정성이 높음을 알 수 있다. 즉 외지에서 농촌 농공단지에 취업되어 오는 경우 농촌지역으로 깊이 들어와 있는 농촌공단에 취업하는 사람은 현지인과 차이 없이 장기체류의 의사가 있는 반면, 도시와 인접한 농공단지는 외지인이 취업을 해도 단지 일시적 체류를 선호하고 있고 현지인보

<표 IV-47> 1년 이내 농공단지를 떠날 의사

	군북		산인	
	응답수	비율	응답수	비율
떠난다	50	38.2	18	40.9
안 떠난다	81	61.8	26	59.1
전 체	131	100.0	44	100.0

28) 함안군 외 경남 군거주자는 「군북」에 5명, 「산인」에 1명 있었다.

다는 더 많이 이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기업들이 종사자들의 높은 이직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도시에서 먼 농촌지역을, 그리고 도시와 인접한 공단의 경우에는 현지 거주자를 선택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임을 확인해 준다.

다) 현지인 노동이동과 공급자 전략

1년 이내에 떠나겠다고 답한 사람 중에서 현지인들을 대상으로 떠나고자 하는 이유를 물어보았다(표 IV-48). <표 IV-48>에서 보듯이 현지 거주자 중 농공단지를 떠나겠다고 하는 사람만 추출해 그 원인을 물어본 결과 역시 전체 종사자 응답자와 똑같이 ‘월급이 적어서’가 양 지역 모두 1위를 차지했다.

<표 IV-48> 떠나고자 하는 이유(떠나겠다고 답변한 사람만 응답)

	군북		산인	
	응답수	비율	응답수	비율
그냥 농촌이어서	1	1.7	1	4.2
부모님이나 가족이 있는 곳으로 가려고	2	3.4	1	4.2
일이 힘들어서	9	15.3	2	8.3
친구 등 인간관계가 없어서	1	1.7	1	4.2
회사가 싫어서	3	5.1	0	0.0
월급이 적어서	20	33.9	6	25.0
숙소 문제로	0	0.0	1	4.2
장래 희망이 없어서	10	16.9	5	20.8
자식 교육 문제	4	6.8	0	0.0
내 자신이 다니고 싶은 교육기관(고등학교, 대학)이 없어서	4	6.8	3	12.5
출퇴근 교통	1	1.7	2	8.3
기술이 부족해서	1	1.7	1	4.2
가족들이 싫어해서	0	0.0	0	0.0
근무시간이 길어서	2	3.4	0	0.0
극장, 백화점 등 문화환경 부족해서	1	1.7	1	4.2
전 체	59	100.0	24	100.0

그런데 ‘월급이 적어서’라는 1위 이유를 답한 비율이 「군북」의 현지인 중 33.9%로, 이는 「군북」 전체 종사자 응답 중 1위인 ‘월급이 적어서’ 떠난다고 답한 사람의 29.5%보다 높았다. 반면 「산인」의 경우 응답비율은 25.0%로 나와 이는 「산인」 전 종사자의 떠나겠다는 원인 1위, ‘월급이 적어서’의 31.0%보다 적다. 이렇게 다르게 나타난 것은 「산북」 현지인의 경우 다른 조건에 만족도가 높기 때문에 떠나는 이유로 ‘월급’이 높게 나타난 것이고 「산인」의 경우 다른 조건에 대한 만족도가 낮아 상대적으로 월급이 가장 불만이 되어 떠난다는 사람 비율이 줄었기 때문이다. 이는 현지인들 중 떠나는 이유에서 「군북」은 두 번째 이유가 16.9%로 첫 번째 이유와의 응답비율 격차가 17.0%포인트인 반면, 「산인」은 이 차이가 불과 4.2%포인트 밖에 차이가 안 나는 데서 알 수 있다. 즉 현지 거주자의 경우 도시와 가까울수록 다른 불만요인도 많았던 대신 농촌지역으로 갈수록 현지 거주자는 비교적 상대적으로 안정성을 보여주고 여기에 월급만을 더 올려주면 더욱 안정성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기존에 말하여지고 있고 선형적으로 인식되고 있는 바와 같이 농촌이어서는 떠나겠다는 사람은 현지 거주자 중에서는 「군북」, 「산인」 모두 1명씩 응답해 매우 낮았다.

‘장래 희망이 없어 떠나겠다’는 사람이 「군북」 현지인 중 16.9%로, 「산인」 현지인의 응답비율 20.8%보다 적었지만 두 번째 비중이라는 점에서 공통적이었다. 장래 전문인으로 이직하고 성공할 수 있는 기회 제공의 필요성이 양 지역 현지 거주자에게도 다시 한번 확인된다. 「산인」이 이 응답비율에서 조금 높은 것은 비거주자를 포함한 이유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도시와 가까운 관계로 보다 큰 기회가 있으리라고 생각하고 연령이 낮고 학력이 높기 때문이지만 양 지역 모두 현지인과 외지인의 차이는 매우 적다.

‘일이 힘들어서 떠나겠다’는 현지인 응답비율이 「군북」에서 15.3%로 「산인」의 8.0%에 비해 매우 높았는데 역시 외지인과 큰 차이가 없다. 나머지는 매우 적은 비율로 나타났지만 「군북」의 경우 ‘내 자신이 다닐 교육기관이 적어서’와 ‘자식 교육 문제’가 각각 6.8%로 나타나, 도시에서 먼 농촌의 경우 현지 거주자들은 교육 문제의 빈곤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음을 보여주

는데 외지인과의 큰 차이는 없었다. 그런데 「산인」 현지인의 경우 ‘내 자신이 다닐 교육기관이 적어서’ 떠난다는 사람이 12.5%로 떠나는 이유 세 번째로 뽑혔는데 이는 모든 종사자의 이 항목 응답비율 6.9%에 비해 매우 높다. 특징적인 것은 종사자 자신이 다닐 교육기관의 문제를 이렇게 지적하면서도 「산인」의 경우 현지인이나 외지인이나 모두 떠나는 이유로 ‘자식 교육’ 문제를 지적한 사람은 한 명도 없었다는 점이다. 도시와 인접한 「산인」은 현지인이든 외지인이든 자식 교육에 관해서는 별문제가 없다고 보고 있으나 「산인」 현지인들은 고학력의 외지인과 달리 자신들의 재교육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자신들의 교육기관 문제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군북」 현지인이 자신들의 교육 문제를 떠나는 이유로 꼽은 비율은 6.8%에 불과한데 이러한 양 지역의 차이는 「산인」 현지인의 연령이 더 낮고 업종에서 「산인」이 기계 등 기술필요 업종이 많아 그만큼 자극을 더 받기 때문이다. 교육 문제에서 「군북」의 현지 거주자들은 자식 교육과 자신의 교육 문제를 같은 비중으로 대답하고 있는 반면 「산인」의 현지 거주자들은 ‘자식 교육’ 문제가 아닌 ‘자신의 교육 문제’에만 관심을 나타낸 것은 「군북」의 경우 상대적으로 중고령층이 많아 자식 교육 문제에, 「산인」은 젊은 층이 많아 자신의 교육 문제에 더욱 관심을 가진 차이와 함께, 더 농촌 지역인 「군북」의 아동교육시설과 질이 더 뒤떨어져 있는 현실을 반영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번에는 안 떠나겠다는 사람 중 현지인만 골라 왜 안 떠나는지 그 이유를 물어보았고 그 결과는 <표 IV-49>와 같다. 떠나지 않겠다는 현지인 중 떠나지 않겠다고 한 이유를 묻은 결과 「군북」 현지인은 ‘고향이어서’가 30.1%, 「산인」의 경우 부모님·가족이 있어서가 29.2%로 나타났다. 즉 현지 거주자의 경우 고향과 부모님·가족 등 1차적 관계 때문에 떠나지 않겠다는 응답이 분명했다. 이는 전체 종사자에게 묻은 결과 떠나지 않겠다고 한 사람들은 떠난다고 답한 사람들만큼 명확하고 차별적인 이유를 제시하지 못한 것과 대조가 된다.

흥미로운 것은 도시와 가까운 지역인 「산인」의 현지 거주자의 경우 고향이어서 남겠다는 사람 비율이 8.3%에 불과하고 오히려 ‘부모님, 가족이 있어서’ 이유가 외지인 포함 전체 응답자의 비율 13.3%에서 29.2%로 매우

〈표 IV-49〉 안 떠나는 이유(현지인 중 안 떠나는 사람만 응답)

	군북		산인	
	응답수	비율	응답수	비율
고향이어서	25	30.1	2	8.3
부모님·가족이 있어서	13	15.7	7	29.2
여기 일이 좋아서	15	18.1	5	20.8
친구들이 있어서	0	0.0	1	4.2
회사가 좋아서	1	1.2	4	16.7
월급 등 여러 가지를 고려하면 다른 직장보다 나아서	9	10.8	2	8.3
숙소가 해결되어서	3	3.6	2	8.3
기술을 배우거나 장래 창업 등 장래 희망이 있어서	4	4.8	0	0.0
갈 데가 없어서	13	15.7	1	4.2
전 체	83	100.0	24	100.0

높아졌고, 「군북」은 현지 거주자의 경우 ‘고향이어서’ 남겠다는 비율이 외지인 포함 전체 응답자 비율 21.3%에 비해 급등한 점은 「군북」과 「산인」의 입지 특성을 더욱 분명히 보여준다. 즉 현지인들에게 있어 「산인」의 경우 도시와 가까워 도시적 특징이 많이 도입되고 있으며 단순히 지역적인 특성, 즉 고향이라는 지역적 특성이 주요한 요소가 되지 못하고 인적 특성 즉 부모님·가족이 더 중시되는 데 비해, 도시와 떨어져 있어 농촌 특성을 유지하는 「군북」의 경우 고향이라는 지역적 특성이 더욱 중요한 지배 요소가 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향후 농촌 현지인 연구에서 매우 중요한 시사점을 제시하고 있다.

현지 거주자의 경우 남아 있겠다고 생각하는 두 번째 가장 큰 이유는 「군북」과 「산인」 모두 ‘여기 일이 좋아서’가 각각 18.1%, 20.8%로 여전히 높았고 응답비율도 비슷했으며 전체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응답비율과도 큰 차이가 없었다. ‘갈 데가 없어서 머물겠다’는 사람은 외지인 포함 전체 종사자의 경우 각각 19.7%, 18.1%에 해당되었으나 현지인만을 대상으로 했을 때 그 비율은 「군북」은 15.7%로 낮아졌고 「산인」은 한 명만 그렇게 대답해 사실상 「산인」의 현지인들은 갈 때가 없어 농공단지에 머무는 사람은 없었다. 「산인」에서 갈 데가 없어 머문다는 사람은 외지인들이었다. 갈 데가 없다고

생각하고 농촌 농공단지에 머무는 사람 비율이 외지인이 현지인보다 훨씬 높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농촌 농공단지에 머무는 외지인에 대한 관심과 연구가 사회적 측면에서 더욱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한편 월급이 적어 떠나겠다는 것이 이주 1위 원인이었지만 도시와 멀어질수록, 현지 거주자일수록 1차적 관계에 더욱 의존하는 형태를 보이고 있다. 즉 「군북」은 「산인」과 달리 도시에서 떨어져 있는 농촌 지역인데 현지인의 경우 그곳에 머물러 있고 싶다는 사람의 머물러 있고 싶은 이유 중 ‘고향이어서’ 30.1%와 ‘부모·가족이 있어서’ 15.7%를 합하면 45.8%로 그냥 「군북」 종사자 전체의 이 항목 응답비율 35.2%보다도 더욱 높아진다. 여기에 선호적인 일거리만 공급해 줄 수 있으면 현지인의 경우 그 비율은 63.9%로 매우 높아진다(전 종사자 대상으로 하면 54.9%). 더구나 「군북」 현지 거주자들은 ‘월급 등 여러 가지를 고려하면 경제적으로도 이 농촌 농공단지에 머무는 것이 낫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10.8%나 된다.

도시와 가까운 특징으로 「군북」의 이러한 특징이 약화되어 나타나지만 「산인」도 현지 거주자만으로 좁혀 볼 경우 이러한 1차적 관계에 더욱 의존하는 특징이 외지인 포함 전체 종사자를 대상으로 했을 때보다 훨씬 높게 나타난다. 「산인」의 현지 거주자의 경우 머물겠다는 이유 중 ‘고향이어서’가 8.3%, 여기에 ‘부모·가족이 있어서’의 29.2%를 합하면 37.5%로, 이는 그냥 「산인」 종사자 전체에서 이렇게 응답한 비율 21.7%보다도 대폭 높아진다. 사실상 1차적 관계를 가장 잘 보여주는 ‘고향이어서’와 ‘부모·가족이 있어서’로 답한 응답자의 「군북」과 「산인」의 격차는 현지인만을 대상으로 했을 경우 전체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13.5%포인트에서 8.3%포인트로 줄어든다. 여기에 선호적인 일거리만 공급해 줄 수 있으면 현지인의 경우 그 합계 응답비율은 58.3%로 매우 높아진다(외지인 포함 전 종사자로 하면 39.7%). 외지인 포함 전체 종사자의 경우 남아 있겠다고 생각하는 가장 큰 이유는 「산인」의 경우 ‘갈 데가 없어서’와 ‘회사가 좋아서’, 그리고 ‘일이 좋아서’가 각각 18.1%로 공동 1위였지만 현지 거주자로 한정해 볼 때 ‘회사가 좋아서’나 ‘월급 등’ 다른 회사적 요인을 합한 25.0%보다 부모님·가족이 훨씬 중요한 요소로 바뀌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월급이 적어 떠나겠다는 사람이 이주 희망 1위 원인이었지만 그 반면 월급이 적

어도 ‘회사가 좋거나 일이 좋은 경우 남겠다’는 비율은 현지 거주자나 외지인의 경우 큰 차이가 없었다.

결국 현지인의 경우 1차적 관계를 더욱 중시하며, 갈 데가 없어서 농공단지에 있다는 비율은 외지인보다 낮다. 현지인을 「군북」과 「산인」을 비교해 보면 역시 「군북」이 농촌 농공단지에 머무는 이유로 「군북」이 더 1차적 관계를 중시하고 있는 것이 발견되는데 「산인」에서 현지인들은 회사가 좋아서 떠나지 않겠다는 응답이 16.7%나 있었으나 「군북」의 경우 이렇게 응답한 사람은 현지인 중 1명뿐이었던 것도 이를 반영한다. 하지만 두 지역간 1차적 관계를 중시하는 격차는 전체 종사자를 대상으로 했을 때보다 대폭 줄어드는 현지인간 동질성이 발견된다.

마지막으로 현지인들에게 정부가 무엇을 도와주면 농공단지에 남겠는가를 물어보았고 응답 결과가 <표 IV-50>이다.

농공단지에 정부가 무엇을 도와주면 남겠는가에 대한 응답에서는 현지 거주자의 경우 「군북」이나 「산인」 모두 전체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것보다 훨씬 집중도가 높게, 그리고 압도적으로 임금인상을 선택했다. 현지 거주자만을 대상으로 한 결과 「군북」에서는 72.7%가, 「산인」에서는 68.2%가 임금인상이라고 답해서 외지인을 포함한 전 종사자가 임금인상이라고 답한 응답비중 66.5%, 56.6%보다 더 높았다. 그러나 역시 현지인만을 대상으로 한 결과 양 지역의 응답비율 격차는 줄어들어 현지인이라는 동질

<표 IV-50> 정부가 무엇을 도와주면 농공단지에 남겠는가

	군북		산인	
	응답수	비율	응답수	비율
임금인상	40	72.7	15	68.2
숙소	0	0.0	0	0.0
교통	3	5.5	4	18.2
교육시설	6	10.9	0	0.0
백화점 등	1	1.8	1	4.5
도서관	0	0.0	1	4.5
체육시설	0	0.0	0	0.0
기술교육	5	9.1	1	4.5
전 체	55	100.0	22	100.0

성이 발견된다. 임금인상이라는 응답이 이렇게 양 지역에서 압도적인 것은 현지 거주자들의 경우 상대적으로 다른 요인에 대한 만족도가 그만큼 높기 때문이다. 이는 두 번째 정부에 바라는 점으로 지적한 사항들이 양 지역에서 각각 10.9%, 18.2%인 점에서 잘 나타난다.

따라서 양 지역 현지 거주자에게 도움을 준다면 그것은 정부가 임금보조로 임금상승을 유도하는 것임이 확인되었으며 현지인들은 정부가 이에 대해 도와주기를 기대했다. 앞으로 농촌인들에게 단순 농가소득 보존이나 보상보다 직업을 가지는 경우 이에 대한 임금보조가 훨씬 더 경제적 정의에도 맞고 또 효율성을 높일 수 있으며 향후 개방사회에 대비하는 보다 선진적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비록 비율은 낮았지만 현지 거주자의 경우 그 다음 많은 응답은 「군북」에서 교육시설과 기술교육이었는데 전체 종사자를 대상으로 했을 때보다 이 부분 응답비율이 더 높아져 도시와 떨어진 농촌일수록 현지인의 이에 대한 높은 관심을 보여준다. 동시에 「산인」의 현지인들에게 물어본 결과 이러한 교육에 대한 답변이 매우 낮았던 점은 「군북」의 현지 거주자들이 도시 근교의 「산인」보다 이러한 혜택에서 더 소외되어 있고 더 걱정하고 있음을 반영한다. 반면 「산인」은 현지 거주인들이 문화·사회생활을 위한 도시와의 교통, 그리고 군내 교통 등 교통 문제를 다음 중요한 요소로 꼽았는데 「군북」 현지인 역시 교통 문제를 정부에 도와주기를 바라는 우선 순위 중 임금인상, 교육 문제 다음으로 중요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정부가 도시와 떨어져 있는 농촌지역일수록 현지인들을 위한 교육투자에 더욱 주의를 기울이고 전반적으로 농촌의 경우 현지인들을 위한 전반적인 교통 문제의 개선정책을 시행할 필요가 있음을 알 수 있다.

7. 함안 사례조사 결론: 요약과 정책시사점

가. 전 농공단지 사례조사

전체 농공단지 사례조사에서 확인된 것은 다음과 같다.

첫째, 도시와의 근접성에 의해 현지고용인 비율이 결정된다. 도시에서

멀리 떨어진 지역일수록 현지인 고용비율이 높다. 둘째, 현지 인구가 현지인 고용비율에 미친 영향은 작다. 즉 주위 인구가 이동되고 있다. 이는 제 2장의 전국조사 결과와 일치한다. 셋째, 입주 업체수 혹은 가동 업체수와 고용인원의 연관성은 없다. 생산 실적과 고용인원의 상관관계도 적으며 생산실적과 현지인 고용관계, 현지인 고용비율도 관계가 없는 것이 확인된다. 입주 업체가 많아도 고용효과가 적은 업종이거나 소규모 기업의 경우 농촌에서의 고용효과는 적었다. 이는 제2장의 전국조사 결과와 일치한다. 고용을 늘리는 데에는 업종, 기술 그리고 추가적인 외부 조건이 필요하다. 여기에 정책적 문제가 있다. 넷째, 수출액이 높은 지역·업종일수록 현지인 고용이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정책적으로 농촌의 기업 유치시 현지인 고용을 늘리려면 수출 업종을 유치해야 하는 것을 보여준다. 다섯째, 가동률과의 관계를 보면 현지인 비율이 높은 곳일수록 가동률이 높은 상관관계가 발견된다. 따라서 안정적 노동력을 확보하고자 하는 기업들일수록, 노동력 이동이 커서 불안정성이 높은 업종일수록 농촌지역의 현지인을 이용한 사업을 행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적절함을 알 수 있다. 여섯째, 부지조성 사업비 자부담이 전혀 없었고 정책적으로 진입을 유도한 단지의 현지인 고용효과가 가장 높았다. 따라서 지가 부담의 대폭적인 인하가 이루어지고 현지인 사용이 용이한 지역에 공장 입지를 유도하는 것이 효율적임을 알 수 있다. 일곱째, 최근 변화를 보면 도시에 가까운 지역일수록, 외지인 비율이 높을수록 전체 고용과 현지인 고용의 감소비율이 크다. 도시의 흡입효과가 더욱 커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여덟째, 현지인 고용이 전체적으로 전체 고용감소보다 더 크게 나타나고 있다. 현지인 고용에 대한 실태조사와 조치가 필요함을 알 수 있다.

특히 농촌 현지 고용을 늘리려면 다음의 전략과 정책이 필요하다.

첫째, 업종에서 높은 수준의 기술보다 평균화된 기술 혹은 자동화된 기술을 사용하는 섬유·의류 등의 공업을 농촌에 유치하는 것이 좋다. 둘째, 내수시장보다 발전도상국의 해외시장을 겨냥한 생산품목 공업이 좋다. 셋째, 도시와 바로 근접해 있지 않고 어느 정도 떨어져 있는 농촌지역으로 기업을 지가, 임금, 조세 등 유인으로 유도하는 것이 좋다. 넷째, 지역자치단체가 전략 업종을 선택한 후 부지조성 사업비 자부담을 대폭 내려 정책

적으로 유도하면서 현지 고용을 증용하는 것이 효과를 가진다.

나. 대표이사 조사

대표이사와의 인터뷰에서 공통적으로 지적된 인력 문제는 구인난과 기술난, 높은 피고용자 이동률이었다. 기업 애로를 해결해 나가는 것이 장기적으로 농촌에서의 경제활동 기회를 늘려 나갈 수 있는 길이 됨은 물론이다. 따라서 우선 농촌 공업지역 기술자 병역특례를 다시 늘려야 한다. 이를 통해 기업 수지가 개선되고 고용효과가 증가하게 될 것이다.

설문지 조사와 분석에서 그 내용과 정책적 함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는 임금, 근로시간 분석과 정책 함의이다. 근무시간은 업종보다 같은 단지별로 유사한 경향을 보였다. 기업의 위치, 업종, 현지인 비율 등의 차이와 상관없이 농촌 단기간 임금은 평균화되어 가고 있었다. 남녀 임금은 기능, 연령에 따른 보상격차(compensating wage differential)를 인정한다고 해도 여자들의 임금이 남자에 비해 매우 낮았고 조사 지역 모두 그 차이가 비슷하게 낮았다. 향후 농촌노동력의 주요한 부분이 40~50대의 주부라고 생각할 때 노동의 질과 함께 가격 측면에서 전반적으로 논의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전체적으로 평가해 보면 농공단지의 임금은 도시보다 낮다. 농촌 노동공급 병목시장하에서 농공단지의 임금을 시장 평균 임금으로 보다 정상화시킬 필요가 있다. 하지만 농공단지의 기업들은 이러한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노동공급자, 수요자 모두의 파레토 최적을 달성하기 위한 임금보전정책이 유효할 것으로 판단된다.

둘째는 노동수요자인 기업관련 설문과 분석이다. 도시에서 멀리 떨어진 지역이 상대적으로 고연령, 여자, 저학력자를 이용하기 쉬운 섬유업 비중이 높고, 도시에 가까운 지역에 기계공업이 압도적 지위를 차지하고 있었다. 기술수준을 대변하는 판매시장에서 볼 때 현지인 고용을 늘리는 데에는 자동화가 많이 이루어져 기술 요구가 적은 생산 과정이 주로 진행되는 업종이 좋은 것이 확인되었다.

입주 이유를 조사해 보면, 기존 인식과 달리 농촌에 경제활동 기회를 창출하는 기업을 유치하는 데에는 '저렴한 지가'와 함께 '정책적 보조'가 큰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도시의 배출(push) 요인보다 농촌의 견인(pull) 요인이 보다 큰 기업이동 요인임이 확인된다. 결국 기업 유치는 농촌의 내재적 요인으로 설명가능하며 또한 내재적 요인의 개선에 의해 이루어질 수 있다.

향후 선호 노동력은 현지인 고용이 많은 곳은 현지인 선호가 높았다. 농촌 현지인이 더 기술이 좋다고 생각하는 기업은 양 지역 모두에서 한 기업도 없었고 기술을 보다 더 요구하는 업종을 가진 지역에서는 현지인보다 외지인을 가능한 고용하고자 하고 있었으므로 농촌 현지인에 대한 기술교육의 필요성이 확인된다.

대표이사들에게 농촌에 들어오는 기업을 늘리기 위해 정부가 어떤 역할을 하면 좋겠는가라는 질문에 모두 '숙소와 도로 등 시설건설 보조'를 가장 높은 응답비율로 답했다. 이는 기존에 전혀 인식되거나 지적되지 않았던 것으로, 농촌지역 공업의 종업원 숙소 문제와 도로 등 교통체계에 대한 보다 전면적인 조사와 연구가 필요함을 제시한다.

현지인 고용이 더 많이 주는 이유는 모두 '농촌 현지인을 구할 수 없어서'라는 대답이 압도적 1위였다. 현재 흡수가능한 주인원은 40대 이상의 여자라고 대답했다. 향후 농촌 고용을 늘리기 위해서는 이 층을 대상으로 할 수 있는 업종과 조건을 갖춘 기업이 필요하다. 기술 사용적인 지역에서는 현지인 고용이 더 많이 주는 이유로 기술부족을 들었다. 따라서 외지인과 대비해 농촌 노동력을 위한 기술교육의 필요성은 매우 높다. 현지인 고용을 더 늘리기 위해서는 어떤 정부 정책이 필요한지 물어본 결과 도시에 가까운 지역일수록 세금정책을, 농촌에 가까운 지역일수록 임금보조정책이 유효하다는 것을 발견했다.

향후 3년 이내에 농촌을 떠날 것인가에 대해 물은 결과 도시와의 거리와 비례하여 안 떠난다고 대답했다. 떠나는 이유는 역시 '인력을 구할 수 없어 인력을 구하기 쉬운 도시로 가야겠다'가 많았다. 농촌에 사람이 없다는 것은 이제 오늘날의 농촌만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농촌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제2장의 전국조사에서도 나타난바 있다. 역으로 3년 이내에 이곳을 안 떠나겠다는 기업은 그 이유로 '지가 문제 때문'이라는 답이 모든 지역에서 가장 많았다. 공단 부지조성 사업비

부담 보조, 지가가 공단 입주에 미친 영향에 대해 물어본 결과 기업 유치를 위해서는 도시에서 먼 경우 지가를 싸게 해주어야 하며, 도시와 가까워 지가를 많이 낮출 수 없는 경우는 조세 등 정책적 보조를 시행할 필요가 있음을 보여주었다.

외국인 근로자 비율을 각 기업에 물어본 결과 이미 외국인 근로자의 비율이 농촌공업에서는 10% 이상의 높은 비중을 점하고 있었다. 외국인 근로자가 이미 정형화되고 그 비중이 높은 이상 보다 철저한 조사와 대책이 필요하다.

다. 노동공급자(피고용자) 조사

전체 피고용자와 현지인을 따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1) 전체 피고용자

전체 응답자의 성별을 보면 모든 지역에서 도시와 마찬가지로 남성 고용이 여성 고용보다 높다. 도시와 먼 지역일수록 여성 종사자 비율이 높다. 응답자를 연령별로 정리해 보면 농촌에는 10대 노동자가 없고 도시와 가까울수록 젊은 층이 많음으로써 농촌지역일수록 보다 고령인구의 고용을 늘리는 방법을 연구할 필요가 있음을 보여준다.

전(前)직업 조사에서 농촌 농공단지는 유희노동력을 흡수하는 효과만 있는 것이 아니라 농촌 역류와 직업이동 면에서 효과가 크다는 것을 확인했다. 주거 형태를 보면 선형적 인식과 달리 농촌지역일수록 기숙사가 필요하지 않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며, 농촌지역일수록 고용을 늘리는 방법 중의 하나는 숙소 문제를 해결해 주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학력별로 보면 도시에 가까운 지역일수록 도시인들이 많고 학력수준이 높다. 따라서 단기적으로는 도시에서 먼 농촌지역일수록 자동화·평준화된 기술사용 공업 업종을 배치해야 하고 장기적으로는 이런 지역일수록 기술교육 등 평생교육의 필요성이 더욱 크므로 이를 강화해야 한다. 결혼 유무에 따라 분류하면 도시에 가까운 지역일수록 젊은이가 많고 미혼 상태가 많아 그만큼 이동이 높았다.

농공단지에 근무하기 전 과거 거주지를 보면 농촌지역일수록 농촌인 고용효과가 매우 높음을 알 수 있다. 또 농촌공업에서 농한기에 현지인 비율이 높아질 것이라는 일반적 인식과는 달리 이미 농촌공업 피고용인구는 농업 주기와 상관성이 작았다. 현 거주지와 전 거주지를 비교해 볼 때 일반적 예상과 달리 농촌으로의 역이주, 역류효과를 발견할 수 있으며, 도시와 먼 농촌일수록 오히려 농촌으로의 이주효과가 더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결국 현지 고용효과 측면에서도, 농촌으로의 역류 이주효과 면에서 보더라도 농공단지 위치가 도시와 먼 경우 효과가 높았고 도시와 가까운 경우 효과가 낮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이런 사실은 농촌공업이 거시적으로도 실업 문제 해결, 자원 재배분에 도움이 됨을 보여주며 따라서 거시경제적으로 농촌 개발을 위한 동기가 존재함을 확인할 수 있다.

농촌 농공단지에 근무하는 이유는 ‘다른 곳에 갈 수 없어서’가 모두 높게 나타나 농촌공업은 다른 곳에 취업할 수 없는 사람들을 취업시키는 효과가 매우 크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도시에 가까울수록 피고용인들이 회사 요인 등 2차적 관계, 경제적 이익을 고려하고 움직이는 데 반해, 농촌지역화할수록 고향, 부모가족 등 1차적 관계 그리고 비경제적 요소가 더 중시되고 있다. 따라서 도시에 먼 지역일수록 가족, 고향 문제 등을 더 중시하는 비경제적 문제에, 도시에 가까운 지역일수록 월급, 복리후생 등 대우 문제에 높은 가중치를 줌으로써 현재 노동공급 병목시장으로서의 농촌시장에 노동공급을 늘릴 수 있다.

농공단지에 사람이 모자라는 원인을 피고용자에게 물어본 결과 일차적으로 급여가 가장 중요한 요인임은 모든 곳에서 확인된다. ‘단순히 농촌이기 때문에 싫어서’라는 대답은 실질적인 조사 결과 그 응답비율이 매우 낮았다. 그동안 잘못된 인식으로 농촌 노동시장 문제의 올바른 해결책이 모색되지 못하고 대부분 농민수혜, 보상 차원의 정책에만 머물렀다는 한계가 분명히 지적되어야 할 것이다.

1년 이내에 농촌 농공단지를 떠나지 않을 사람 비율이 모든 지역에서 떠날 사람보다 많았다. 그러나 도시와 가까울수록 1년 이내에 떠날 사람 비율이 높았다. 장기적인 안정성에서 볼 때 도시와 가까운 공장보다 오히려 도시에서 먼 농촌지역이 훨씬 더 기업에도 이익되는 효과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성별로는 모든 지역에서 남성들이 떠나겠다는 비율이 높았다. 여성들 내에서도 연령이 낮을수록 떠나겠다는 비율이 높았다. 1년 이내에 떠나겠다는 사람들의 떠나는 이유는 지역과 관계없이 언제나 낮은 임금이 가장 중요했다. 역시 선형적으로 인식되고 있는 바와 같이 ‘그냥 농촌이기 때문에 싫어서 떠난다’는 사람은 사실상 거의 없었다. 경제적으로 적정한 보장이 이루어지고 경제 외적인 면에서도 만족도를 높일 수 있다면 농촌에서도 노동공급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음을 뜻한다. ‘이미 농촌 이탈은 무조건적인 것이고 따라서 대책이 있을 수 없다’는 그간의 주장들이 얼마나 무책임한 것인가를 보여준다. ‘장래 희망이 없어 떠나겠다’는 사람이 모든 지역에서 두 번째로 많았다. 개인의 장래성이 농촌 공업단지 이탈의 주요 원인이라는 점은 분명하며, 이런 점에서 장래 전문기술자로 성장하고 또 전문기술을 가진 사람으로 이직할 수 있는 전문기술교육의 필요성이 농촌지역의 경우 모두 존재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역으로 안 떠나겠다는 사람들의 이유는, 도시와 멀어질수록 1차적 관계가, 도시와 가까울수록 월급 등 경제적 동기가 중요한 정착 동기로 작용하는 것을 볼 수 있다. 떠날 의사가 있는 사람과 머무를 의사가 있는 사람의 특성과 차이를 보다 잘 파악하기 위해 몇 가지 교차 제약조건을 주었다. 우선 첫 번째 제약으로 가족이 함안군에 있는 사람만을 보면 가족 주거가 이동에 큰 변수가 되고 있음이 발견된다. 두 번째 제약조건으로 학력과의 관계를 보면 1년 이내에 떠나겠다고 응답한 사람은 고학력자가 많았다. 대졸자의 응답비율 역시 중요한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 도시에서 먼 농촌 지역일수록 대졸자가 적을 뿐만 아니라 그나마 이들 대졸자들이 상대적으로 도시로 이동하려는 욕구가 더 강했다. 고학력자의 농촌 지역 이탈은 모든 지역에서 심각하며 이는 도시와 먼 농촌지역일수록 더욱 그러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인적자본의 문제가 매우 심각한 것이 오늘날 지역사회의 문제이고 지역균형 발전이란 자본이 아니라 인적자본의 문제에 보다 근본적인 문제가 있음을 생각할 때, 이미 전국적으로는 고학력자가 과잉공급인 상황에서 농촌지역일수록 고학력 인적자본에 대한 유인책이 필요하다.

정부가 무엇을 도와주면 농공단지에 계속 남겠는가에 대해서는 지역 모두 임금인상을 1위로 꼽았다. 이는 대표이사와의 인터뷰에서도 확인되는

제안이었으므로 이에 대한 적정성, 비용 문제 등 세밀한 검토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비록 비율은 낮았지만 도시에서 먼 지역일수록 교육과 교통시설, 그리고 이어 기술교육 응답이 높았다. 통근의 어려움으로 모두 교통시설의 문제를 중요하게 지적했다. 순위적 차이는 존재하지만 현지인 고용을 늘리기 위한 정책 수단에 대해 전반적으로 기업경영자나 종업원들 간에 인식 차가 크지 않았다. 이 결론은 합리적 정책대안이 충분히 가능함을 시사하는 것이다.

2) 현지인(함안군 거주자) 피고용자

현지인 피고용자는 지역과 상관없이 1/5 이상이 기숙사가 필요하다고 하였다. 농촌지역에서 고용을 늘리고 특히 안정적인 현지인 고용을 늘리는 방법 중의 하나는 숙소 문제의 해결이다. 이 점은 매우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이제까지 주목된 바 없고 잘못 이해되고 있다.

현지인들이 농촌 농공단지에서 근무하는 이유는 ‘다른 곳에 갈 수 없어서’가 가장 높아 농촌공업이 다른 곳에 취업할 수 없는 사람들을 취업시키는 효과가 큼을 알 수 있다. 농촌지역일수록, 현지인일수록 1차적 관계를 더욱 중시하는 것은 분명히 확인된다. 농공단지에 사람이 부족한 이유, 즉 취업을 안 하는 이유를 현지인에게 물어본 결과 이들에게서도 월급이 적기 때문이라는 답이 가장 많았다. 도시와 떨어진 지역일수록 ‘일이 힘들어서’ 사람이 부족하다는 현지인 대답이 높는데 현지인, 특히 도시와 더 떨어진 농촌지역의 현지인이 더 기술교육에서 소외되어져 있음을 반영하는 것이다.

현지 거주자일수록 더욱 이동안정성이 높아졌다. 기업들이 현지 거주자를 선택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안정적임을 보여준다. 현지인 중 1년 이내에 떠나겠다는 원인은 역시 전체 종업원 응답자와 똑같이 ‘월급이 적어서’가 모두 1위를 차지해 외지인과 차이가 없음을 보여준다. 선행적으로 인식되고 있는 바와 같이 ‘농촌이어서 떠나겠다’는 사람은 현지인 중에는 모든 지역에서 1명씩 응답해 거의 없었다. 현지인 중에서도 ‘장래 희망이 없어 떠나겠다’는 사람이 두 번째 비중으로 모든 지역에서 공통적이었다. 장래 전문인으로 이직하고 성공할 수 있는 기회 제공의 필요성이 모든 지역

현지 거주자에게도 다시 한번 확인된다. 특징적인 것은 교육 문제에서 농촌지역으로 들어갈수록 자식교육 문제에, 도시와 가까울수록 자신의 교육 문제에 더욱 관심을 가진 차이가 나타나 정책대안의 차이를 보여준다.

농촌 농공단지를 떠나지 않겠다는 현지인의 떠나지 않는 이유는 ‘고향과 부모, 가족 등 1차적 관계’가 분명했다. 현지인에게는 도시와 가까운 지역일수록 인적 특성, 즉 부모·가족이 더 중시되는 데 비해, 도시와 떨어진 지역일수록 고향이라는 지역적 특성이 더욱 중요한 지배 요소가 되고 있었다. 이는 향후 농촌 현지인 연구에서 매우 중요한 시사점을 제시하고 있다. ‘갈 데가 없어서 머물겠다’는 사람은 외지인이 현지인보다 훨씬 높았다. 이런 점에서 농촌 농공단지에 머무는 외지인에 대한 연구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농촌 농공단지에 정부가 무엇을 도와주면 남겠는가에 대한 현지인 응답은 전 지역에서 전체 종업원을 대상으로 한 것보다 훨씬 집중도가 높게, 그리고 압도적으로 임금인상을 선택했다. 앞으로 단순 농가소득 보존이나 보상보다 직업 임금보조가 훨씬 더 경제적 정의에도 맞고 또 효율성을 높일 수 있으며 향후 개방사회에 대비하는 보다 선진적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비록 비율은 낮았지만 현지인은 도시와 떨어진 지역일수록 현지인은 교육시설과 기술교육을, 반면 도시와 가까운 지역일수록 교통 문제를 정부가 다음으로 도와주길 기대했다. 정부가 도시와 떨어져 있는 농촌지역일수록 현지인들을 위한 교육투자에 더욱 주의를 기울이고 전반적으로 농촌의 경우 현지인들을 위한 전반적인 교통 문제의 개선정책을 시행할 필요가 있음을 알 수 있다.

V. 결론 : 농촌지역의 고용기회 확대를 위한 제언

이 연구는 도농간 소득격차의 완화와 해소에 고용기회의 창출이 중요한 결정요인으로 보는 기존의 연구와 견해를 같이한다. 이에 따라 이 연구는 농촌지역 노동시장의 특성을 살펴보고, 농촌지역이 도시지역과 비교할 때 고용기회의 창출과 소멸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실태를 파악한 다음 미시적 차원에서 경남 함안군과 충남 당진군의 사례분석으로부터 앞으로 필요한 정책 방향을 모색하였다.

연구를 진행하면서 가장 힘들었던 것은 일자리 창출과 소멸이라는 재배분(reallocation) 기능이 뛰어나거나 순고용이 증가하는 등 양호한 지역을 어떤 공통된 특징으로 묶기가 어렵다는 사실이었다. 게다가 일자리 창출과 소멸 그리고 순고용변화를 결정하는 지역적 특성을 추출하기는 불가능함을 확인하였다. 이는 일자리 창출률과 소멸률 그리고 순고용변화를 종속변수로 하고, 지역적 특성을 설명변수로 한 회귀분석에서 유효한 결과를 얻지 못하였다는 사실과, 사례조사 대상인 경남 함안군과 충남 당진군의 차이 그리고 경남 함안군 내에서도 군북농공단지과 산인농공단지의 차이에서 여실히 드러나고 있다. 이상의 사실은 지역별로 적합한 전략을 독립적으로 선택하여야 함을 간접적으로 증명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한계를 인정하는 가운데 이 연구의 분석 결과로부터 얻을 수 있는 몇 가지 시사점을 정리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고용기회의 확보가 농촌지역 개발의 중요한 전제조건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인구가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효과에 못지않게 일자리가 인구를 불러오는 효과가 존재한다는 분석 결과가 이를 지지한다. 그리고 경남 함안군의 사례와 충남 당진군의 사례 모두 이 사실이 확인되고 있다.

문제는 농촌지역의 인적자본 축적 수준이 낮아 사업체의 이주를 유인하기가 결코 쉽지 않다는 점이다. 이 연구 분석 결과로 볼 때, 장기적으로는 인적자본의 축적을 통하여 고용기회를 확대하고, 확대된 고용기회를 기반

으로 인구의 정주화를 유도하여야 한다. 분석 결과에서 고학력자 비중이 높은 지역에서 일자리도 많았으며, 이에 따라 인구도 비례하게 됨을 확인하였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함안군 사례에서 지적하고 있듯이 병역특례 제도의 활용을 통한 고학력자 확보도 한 가지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인적자본 투자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방자치단체가 확보하기가 쉽지 않은 만큼 정부의 지원이 요구된다고 볼 수 있다. 특히 고용보험제도의 직업능력개발사업을 사업주가 활용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것도 필요하다. 다만 고용보험 피보험자의 신분이 아닌 잠재적 노동력에 대해서는 정부의 일반회계에서 지원을 검토하여야 할 것이다. 이는 단순히 사업주 개인에게 맡길 것이 아니라 지자체 차원에서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직업능력개발 훈련을 실시하되 지역의 노동력 수요에 맞추도록 훈련을 통한 고용기회 확대를 수반하도록 하여야 한다. 따라서 지자체와 사업주가 연계되도록 사업이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현재 농촌지역의 저학력자와 고령 여성노동력에 대한 활용을 중단기적으로 검토하여야 할 것이다. 특히 무역자유화의 영향이 이들 계층에 크게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이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이 향후 농촌정책에서 중요한 임무가 될 것으로 보인다. 최근 산업공동화 대책이 정부 차원에서 추진되고 있음을 감안하여 산업공동화 대책과 농촌의 단순노동력 활용을 연계하는 정책의 수립을 모색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연구 결과에서 한 가지 확인된 사실은, 기존의 연구에서 낙후 지역으로 분류된 농촌지역은 제조업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지 않으며, 아울러 대규모 사업체가 이들 지역에 기반을 두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이를 역으로 해석한다면, 농촌지역 개발에는 이 두 가지 사실이 전제조건이 될 수 있다는 점이다. 곧 관광자원이나 특산물 등 차별전략이 불가능한 농촌지역의 경우에는 고용효과가 상대적으로 큰 제조업을 지역에 유치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이처럼 제조업을 중심으로 고용이 확대될 경우 서비스업 등 소비 관련 업종의 고용확대로 전달될 가능성이 크다. 경남 함안군 농공단지외 사례에서 볼 수 있었듯이 숙소나 도로건설, 세금감면, 임금보조정책 등 정책적 지원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충남 당진군의 적극적 조치로 공장 유치를 성사시킨 것은 좋은 사례라 할 수 있다.

그리고 대규모 사업체가 역내에 기반을 두도록 하는 것이 고용기회 창출과 관련하여 중요하다. 특히 이는 중소기업의 사업체와 연계를 가지도록 하여 생산네트워크를 형성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의 협조가 수반되어야 한다.

그렇지만 이러한 일반적 요건이 충족된다고 해서 개별 농촌지역 개발이 바로 성공으로 연결되는 것은 아니다. 분석 결과에서 볼 수 있듯이 대규모 사업체가 존재하는 농촌지역에서도 고용기회의 정체나 감소를 경험하고 있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충남 당진군이 경험하였듯이 대규모 사업체에 노출된 위험이 실현되는 경우에는 지역에 미치는 영향은 막대하다. 이러한 사실을 고려할 때, 대규모 사업체와 생산네트워크를 형성하는 것은 필요조건이지 충분조건이라 하기는 어렵다. 이 생산네트워크란 지역의 중소기업이 서로 위험을 분산하도록 형성되어야 하고, 이 네트워크가 대규모 사업체와 상호 연결되는 방식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함안 사례조사에서 의견으로 제시되기도 하였다. 경남 함안군과 충남 당진군의 사례조사는 한국의 경우 여전히 이러한 지역 생산네트워크가 형성되어 있지 않으며 그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지역내 중소기업이 주축이 되는 생산네트워크의 형성이 지역의 고용기회 창출과 어떠한 연관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향후의 연구과제로 남겨 두기로 한다.

두 지역을 직접 비교하기는 곤란하다고 하더라도 두 지역의 사례가 보여주는 시사점은 명확하다. 이는 경남 함안군의 사례와 같이 기업이 도시 지역에서 밀려남으로써 농촌에 고용기회가 창출되는 경우에는 기업이 상황의 변화에 따라 농촌지역을 떠날 수도 있다는 사실이다. 말하자면, 충남 당진군의 사례와 같이 농촌지역이 기업을 끌어당겨야 한다는 것이다. 그렇지 못한 경우 기업은 지속적인 투자를 감행하지 않게 되고, 따라서 농촌지역에 착근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아울러 농촌의 유희노동력을 활용하는 방안으로만 기업의 농촌지역 진입을 도모하는 정책이 아니라 도시의 유희노동력을 연계하는 것도 생각하여야 할 것이다. 이는 경남 함안군 사례가 증명하고 있다. 말하자면 특정 농촌지역을 중심으로 형성이 가능한 노동시장을 포괄하는 고용기회 창출정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농촌 노동력 - 도시 자본’의 틀에 엮매일

것이 아니라 ‘농촌 노동력-도시 노동력’의 결합이 가능한 형태의 도시 자본 유치가 향후 농촌지역의 고용기회 창출에서 고려하여야 할 점이라 하겠다.

이외에 전국조사와 사례조사를 통해 확인된 추가적인 농촌 고용기회의 창출을 위한 정책시사점으로는 다음이 있다. 첫째, 농촌의 기업 유치시 내수시장보다 발전도상국의 해외시장을 겨냥한 생산품목 공업을 유치해야 한다. 둘째, 업종에서 높은 수준의 기술보다 평준화된 기술 혹은 자동화된 기술을 사용하는 섬유·의류 등의 공업을 농촌에 유치하는 것이 좋다. 셋째, 지역자치단체가 전략 업종을 선택한 후 부지조성 사업비 자부담을 대폭 내리고 현지인 사용이 용이한 지역에 공장 입지를 유도해야 한다. 특히 도시에서 먼 경우 지가를 싸게 해주어야 하며 도시와 가까워 지가를 많이 낮출 수 없는 경우는 다른 정책보조를 시행해야 한다. 넷째, 도시에 가까운 지역일수록 세금정책을, 농촌에 가까운 지역일수록 임금보조정책을 보완적으로 쓰는 것이 효과적이다. 다섯째, 외국인 근로자가 이미 정형화되고 그 비중이 높은 이상 보다 철저한 조사와 대책이 필요하다. 여섯째, 교육 문제에서 농촌지역으로 들어갈수록 자식교육 문제에, 도시와 가까울수록 피고용자 자신의 교육 문제에 더욱 관심을 가진 차이가 나타나므로 이에 맞춘 정책이 필요하다. 일곱째, 도시와 떨어져 있는 농촌지역일수록 농촌 현지인들을 위한 교육투자에 더욱 주의를 기울이고 전반적인 농촌지역 내, 도농간 지역간 교통 문제의 개선정책을 시행해야 한다.

참고문헌

- 박시현 외(2005), 『경제활동기회의 농촌지역간 차이 분석』,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박영구(2002), 「부산지역 노동시장 특징과 지역정책」, 한국노동연구원, 『노동정책연구』 2(1), pp.109~123.
- 산업자원부·중소기업진흥공단(2004), 『농공단지현황』.
- 이동필 외(2004), 『도농간 소득 및 발전 격차의 실태와 원인 분석』,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Carlino, Gerald A. and Edwin S. Mills(1987), “The Determinants of County Growth,” *Journal of Regional Science* 27(1), pp.39~54.
- Davis, Steven J. and John Haltiwanger(1999), “Gross Job Flows,” in Ashenfelter, O. and D. Card (eds.), *Handbook of Labor Economics* 3, Amsterdam: Elsevier Science, pp.2711~2805.
- Edmiston, Kelly D.(2004), “The Net Effects of Large Plant Locations and Expansions on County Employment,” *Journal of Regional Science*, 44(2), pp.289~319.

부 록

종사자 설문지

안녕하십니까. 국무총리실 산하 연구기관들이 지역 성공사례로 이곳 함안단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응답하신 종이는 조사 직후 섞어서 누가 답한지 알 수 없도록 하며 절대로 불이익이 되도록 사용되거나 공개되지 않습니다. 다만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만 이용하겠습니다. 선생님의 귀하신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 질문을 한 페이지로 압축했으니 잠깐만 시간을 내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 1.1. 귀하의 성별은 무엇입니까? ()

(1) 남자	(2) 여자
--------	--------
- 1.2. 귀하의 연령은 얼마입니까? () 세
- 1.3. 본 농공단지에 종사하기 전에 어디에 살았습니까? ()

(1) 함안군 내	(2) 함안군 이외 농촌
(3) 마산·창원 등 인접 도시	(4) 경남 이외의 도시
- 1.4. 귀하는 여기에 직장을 갖기 전에 무엇을 했습니까? ()

(1) 농업	(2) 회사원
(3) 자영업	(4) 어업, 임업, 광업
(5) 공무원, 교사	(6) 기타

2.4. 위에서 떠나실 분은 2.4.1.을, 안 떠나실 분은 2.4.2를 각각 하나만 선택해 답해 주십시오.

2.4.1. (떠나실 분은) 떠나실 것이라면 왜 그렇습니까? ()

- (1) 그냥 농촌이어서
- (2) 부모님이나 가족이 있는 곳으로 가려고
- (3) 일이 힘들어서
- (4) 친구 등 인간관계가 없어서
- (5) 회사가 싫어서
- (6) 월급이 적어서
- (7) 숙소 문제로
- (8) 장래 희망이 없어서
- (9) 자식 교육 문제
- (10) 내 자신이 다니고 싶은 교육기관(고등학교나 대학)이 적어서
- (11) 출퇴근 교통
- (12) 기술이 부족해서
- (13) 가족들이 싫어함
- (14) 근무시간이 김
- (15) 극장, 백화점 등 문화환경이 부족함
- (16) 기타

2.4.2. (안 떠나실 분은) 안 떠나실 것이라면 왜 그렇습니까? ()

- (1) 고향이어서
- (2) 부모님·가족이 있어서
- (3) 여기 일이 좋아서
- (4) 친구들이 있어서
- (5) 회사가 좋아서
- (6) 월급 등 여러 가지를 고려하면 다른 직장보다 나아서
- (7) 숙소가 해결돼서
- (8) 기술을 배우거나 장래 창업 등 장래 희망이 있어서
- (9) 갈 데가 없어서

2.5. 귀하가 농공단지에 계속 머물도록 정부가 도와준다면 무엇을 도와주면 좋겠습니까? ()

- (1) 임금인상
- (2) 숙소
- (3) 교통
- (4) 교육시설
- (5) 백화점 등
- (6) 도서관
- (7) 체육시설
- (8) 기술교육

2.6. 귀하가 농촌 현지인이라고 생각하고, 어차피 사람을 구하기 힘들다면 기업이 농촌 현지인 고용을 늘리도록 하는 정부정책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 | | |
|------------|--------------------|
| (1) 세금감면 | (2) 임금보조 |
| (3) 분양가 내림 | (4) 숙소 등 보조 |
| (5) 기술교육 | (6) 농촌개발(학교, 도로 등) |

감사합니다. 저는 부산외국어대학교의 교수 박영구입니다.

051-640-3164.

대표이사 설문지

사장님

안녕하십니까. 국무총리실 산하 연구기관들이 지역 성공사례로 이곳 함안단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응답하신 종이는 조사 직후 섞어서 누가 답한지 알 수 없도록 하며 절대로 불이익이 되도록 사용되거나 공개되지 않습니다. 다만 귀 기업체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만 사용하겠습니다. 사장님의 귀하신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 한 페이지로 압축해 만들었으니 답변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1. 귀하의 업종은 무엇입니까? ()

(1) 섬유·의류	(2) 기계·금속
(3) 석유·화학	(4) 1차금속
(5) 전기·전자	(6) 농산물가공
(7) 목재·종이	(8) 기타
2. 귀하가 생산한 품목의 주판매시장은 어디입니까? ()

(1) 경남	(2) 경남 외 전국
(3) 미국, 일본, 유럽	(4) 중국
(5) 동남아	(6) 남미, 아프리카
(7) 기타	
3. 이곳 농공단지에 입주하신 지는 얼마나 되셨습니까?
()년 ()개월
4. 왜 여기 농공단지에 들어오셨습니까? ()
 - (1) 땅을 다른 곳에 구할 수 없어서
 - (2) 지가가 싸서
 - (3) 이곳의 임금이 싸서
 - (4) 현지인 인력을 쓰기 위해서
 - (5) 조세 등 정책적 도움 때문에

5. 향후 사람을 고용할 때 가능하다면 다음 중 누구를 많이 고용하고 싶습니다? ()
- (1) 가능하다면 농촌 현지인 (2) 가능하다면 한국인 외지인(비농촌사람)
(3) 가능하다면 외국인 (4) 상관없다
6. 위에서 가능하다면 그렇게 어떤 지역 사람을 고용한다고 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
- (1) 구하기 쉬워서 (2) 임금이 싸서
(3) 일을 더 성실히 함 (4) 퇴직자가 적음
(5) 기술이 더 좋음
7. 정부가 농공단지를 위해 무엇을 해주면 단지에 입주 기업체가 늘어나겠습니까? ()
- (1) 세금 감면 (2) 임금 보조
(3) 분양가 하락 (4) 숙소, 도로 등 시설건설 보조
(5) 교통비 보조
8. 농촌 현지인 고용이 줄고 있습니다. 농촌 현지인 고용이 더 많이 주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
- (1) 농촌 현지인을 구하지 못해서
(2) 농촌 현지인이 임금을 더 달라고 해서
(3) 농촌 현지인 기술수준이 더 낮아서
(4) 농촌 현지인들이 결근 등 근무태도가 더 나빠서
9. 정부가 무엇을 해주면 농촌 현지인 고용을 늘리겠습니까? ()
- (1) 세금 감면 (2) 임금 보조
(3) 분양가 내림 (4) 숙소 등 보조
(5) 기술교육 (6) 농촌개발(학교, 도로 등)
10. 지금 월급은 총액으로 얼마를 주고 있습니까(남녀, 대졸, 고졸 표시해 주십시오)? ()
- 초봉: 월 ()원, 상여금 포함하면 1년 총 ()원
1년 이후: 월 ()원, 상여금 포함하면 1년 총 ()원

11. 현재 직원들의 근무시간은 하루 1인당 평균 몇 시간 됩니까?
()시간
12. 이 농공단지에 사람이 계속 모자란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 (1) 농촌에 사람이 없어서
 - (2) 농촌에 사람은 있지만 도시에서 일하려고 해서
 - (3) 일이 힘들어서
 - (4) 월급이 적어서
 - (5) 장래성이 없고 불안해서
13. 앞으로 3년 이내에 이 농공단지를 떠날 생각이 있으십니까? ()
- (1) 있다. (2) 없다.
14. 3년 이내에 여기를 떠날 생각이 있으시거나 혹은 떠날 생각이 없으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
- (1) 인력 구하는 문제 때문에
 - (2) 인건비(월급) 문제 때문에
 - (3) 원료 문제 때문에
 - (4) 지가 문제 때문에
 - (5) 정부보조 때문에(떠나는 경우는 보조가 적기 때문에)
 - (6) 시장판로 관련 때문에
15. 현재 외국인 노동자는 몇 명 있습니까? 전체 인원 ()명 중 ()명
16. 부지조성 사업비 부담을 보조해 준 것, 낮은 지가가 공단 입주에 영향을 많이 미쳤습니까? ()
- (1) 땅값이 중요하므로 많이 미친다
 - (2) 조금 영향을 미친다
 - (3) 영향이 거의 없다

감사합니다. 저는 부산외국어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박영구입니다.

051-640-3164